

연구보고 2017-08



KICE
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정원 이윤진 김희수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08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정원 이윤진 김희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국가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 5년마다 국가 수준의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06년 7월, 당시 보육정책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을 수립하여 보육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시작된 이래, 보육 주관부처의 변경으로 인해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수정판인 '아이사랑 플랜(2009-2012)',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보육정책을 이끌었던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올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종료를 앞두고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서의 사명을 띠고 추진되었다. 보육정책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촉진에 기여하며, 저출산 시대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정책의 과거 발전 과정과 현황, 미래 보육정책의 수요 전망 등 보육의 과거·현재·미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 보육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 산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보육정책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이 가장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의 처우 개선이나 전문성 제고는 부족하며,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시설 간, 지역 간 격차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모든 영유아와 부모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직무대행 **이미화**

차 례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4. 선행연구	25
II. 연구의 배경	32
1. 보육 현황 및 보육정책 현황	32
2. 보육계획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57
3. 중기 보육 수요 관련 사회·정책 환경	76
4. 소결	97
III.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및 정책 평가	99
1. 2차 계획에 따른 평가 지표 달성도 분석	99
2.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자체평가 결과	101
3. 전문가 조사에 나타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달성도 평가	104
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의 보육정책 체감도	117
5.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관련 의견 및 평가	123
6. 소결	126
IV.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요구	131
1. 보육정책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요구	131
2. 보육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140
3. 소결	189
V. 중장기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97
1.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198
2.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의 추진과제	203

3.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안)	218
참고문헌	221
Abstract	227
부 록	231
부록1. 전문가 의견 조사지(1차조사)	233
부록2. 전문가 의견 조사지(2차조사)	247
부록3. 대국민 의견 조사지	267
부록4. 보도자료를 통한 보육정책 동향(2004년-2017년 11월)	279

표 차례

〈표 I-3- 1〉 전문가 조사 내용	20
〈표 I-3- 2〉 전문가 조사 참여자 분포	21
〈표 I-3- 3〉 학계전문가 전공 분포	21
〈표 I-3- 4〉 표본 설계(인구비례 할당)	22
〈표 I-3- 5〉 대국민 조사 최종 응답자 특성	23
〈표 I-3- 6〉 전문가 워크숍 및 부모 간담회	24
〈표 I-3- 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일정(안)	25
〈표 II-1- 1〉 어린이집 일반 현황(2016. 12. 기준)	33
〈표 II-1- 2〉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2016. 12. 기준)	34
〈표 II-1- 3〉 보육아동 중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비율	34
〈표 II-1- 4〉 보육교직원 일반 현황(2016. 12. 기준)	35
〈표 II-1- 5〉 보육교직원 상세 현황	36
〈표 II-1- 6〉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37
〈표 II-1- 7〉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연혁(2012-2016)	38
〈표 II-1- 8〉 전체 보육료(기본보육료 제외)	39
〈표 II-1- 9〉 영아법정보육료 및 영아보육료 지원현황	40
〈표 II-1-10〉 장애아보육료 및 다문화보육료 지원 현황	41
〈표 II-1-11〉 누리보육료 및 방과후보육료 지원현황	41
〈표 II-1-12〉 만0-2세 및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현황	42
〈표 II-1-13〉 보육료 지원 단가(2017)	42
〈표 II-1-14〉 연도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추이	43
〈표 II-1-15〉 국공립어린이집 연도별 확충 목표 및 확충 현황(2012-2016)	44
〈표 II-1-16〉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및 이용 비중 추이(2012-2016)	45
〈표 II-1-17〉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예산 추이(2007-2017)	46
〈표 II-1-18〉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현황(총괄표)	47
〈표 II-1-19〉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2017. 9.)	47
〈표 II-1-20〉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현황	48
〈표 II-1-2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49

〈표 II-1-22〉 공공형어린이집 유지 현황(2017. 4. 기준)	50
〈표 II-1-23〉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2017. 4. 기준)	50
〈표 II-1-24〉 연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예산 추이	51
〈표 II-1-25〉 연령별 양육수당	52
〈표 II-1-26〉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2010-2016)	53
〈표 II-1-27〉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사업 예산 추이	54
〈표 II-1-28〉 2013-2017 연도별 보육예산(국비기준)	56
〈표 II-2- 1〉 탁아사업 실시기 주요 내용 요약(1920-1990)	59
〈표 II-2- 2〉 보육사업 태동기 주요 내용 요약(1991-2003)	60
〈표 II-2- 3〉 육아정책 지원 사업 시작기 주요 내용 요약(2004-2005)	62
〈표 II-2- 4〉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중 보육 관련 내용 정리	63
〈표 II-2- 5〉 중장기 보육계획 비교	72
〈표 II-2- 6〉 더불어민주당 보육(아동) 관련 정책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보육 (아동) 관련 국정 과제	74
〈표 II-3- 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5)	77
〈표 II-3- 2〉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2017-2050)	77
〈표 II-3- 3〉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 (2017-2050)	78
〈표 II-3- 4〉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추이(연령별, 2008-2016)	80
〈표 II-3- 5〉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개소 및 비율 추이(2008-2016)	81
〈표 II-3- 6〉 설립유형별 재원 영유아 수 및 비율 추이(2008-2016)	83
〈표 II-3- 7〉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추이(2008-2015)	84
〈표 II-3- 8〉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추이(2008-2015)	85
〈표 II-3- 9〉 출산전후 휴가자 수와 육아휴직자 수 변동 추이	91
〈표 III-1- 1〉 보육정책의 분야별 지표 및 달성 현황	99
〈표 III-2- 1〉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및 자체 평가 결과	102
〈표 III-2- 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자체 평가 결과	103
〈표 III-3- 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6대 추진과제의 목표달성 정도와 중요도	105
〈표 III-3- 2〉 제2차 중장기보육 추진과제의 미흡성	106
〈표 III-3- 3〉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 달성 정도 및 중요도	107
〈표 III-3- 4〉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107

〈표 III-3- 5〉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달성정도 및 중요도	108
〈표 III-3- 6〉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109
〈표 III-3- 7〉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달성정도 및 중요도	110
〈표 III-3- 8〉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111
〈표 III-3- 9〉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의 달성도 및 중요도	112
〈표 III-3-10〉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113
〈표 III-3-11〉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달성 정도와 중요도	114
〈표 III-3-12〉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114
〈표 III-3-13〉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달성도와 중요도	115
〈표 III-3-14〉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116
〈표 III-4- 1〉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정책 체감도	117
〈표 III-4- 2〉 이용 중인(마지막으로 이용했던) 어린이집의 만족/불만족했던 부분	120
〈표 III-4- 3〉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만족하는 부분	121
〈표 III-4- 4〉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불만족하는 부분	123
〈표 III-5- 1〉 보육교사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124
〈표 III-5- 2〉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	125
〈표 III-5- 3〉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만족도	125
〈표 IV-1- 1〉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환경	132
〈표 IV-1- 2〉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 방향성	133
〈표 IV-1- 3〉 현재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도	134
〈표 IV-1- 4〉 새정부가 영유아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	135

〈표 IV-1- 5〉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영유아 부모)	137
〈표 IV-1- 6〉	연령별 가정양육과 기관 양육 선호도	137
〈표 IV-1- 7〉	연령별 적당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1일 기준)	138
〈표 IV-1- 8〉	보육정책 효과의 중요도에 관한 의견(영유아 부모)	139
〈표 IV-2- 1〉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	141
〈표 IV-2- 2〉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42
〈표 IV-2- 3〉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42
〈표 IV-2- 4〉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43
〈표 IV-2- 5〉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44
〈표 IV-2- 6〉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45
〈표 IV-2- 7〉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46
〈표 IV-2- 8〉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47
〈표 IV-2- 9〉	보육과정·프로그램 관련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48
〈표 IV-2-10〉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중복응답)	149
〈표 IV-2-11〉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중복응답)	152
〈표 IV-2-12〉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54
〈표 IV-2-13〉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과 중장기 보육에의 계획 방안(중복응답)	155
〈표 IV-2-14〉	아동 수당 시행과 관련하여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56
〈표 IV-2-15〉	새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중복응답)	157
〈표 IV-2-16〉	어린이집 이용 경험	160
〈표 IV-2-17〉	이용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161

〈표 IV-2-18〉 어린이집 이용(했던) 이유	163
〈표 IV-2-19〉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1순위)	163
〈표 IV-2-20〉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2순위)	164
〈표 IV-2-21〉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1+2순위)	166
〈표 IV-2-22〉 이용 중인(이용했던) 어린이집 선택 이유	167
〈표 IV-2-23〉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선택 이유(1순위)	168
〈표 IV-2-24〉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선택 이유(2순위)	169
〈표 IV-2-25〉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선택 이유(1+2순위)	170
〈표 IV-2-26〉 영유아 가정에 가장 도움 되는 지원	171
〈표 IV-2-27〉 보육지원 분야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173
〈표 IV-2-28〉 맞춤형 보육 인지 여부	173
〈표 IV-2-29〉 맞춤형 보육 이용 현황	175
〈표 IV-2-30〉 맞춤형 보육 이용 만족도	175
〈표 IV-2-31〉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불만 이유	176
〈표 IV-2-32〉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76
〈표 IV-2-33〉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유자녀 가구 대상)	177
〈표 IV-2-34〉 문재인 정부 보육정책 관련 공약의 인지도와 추진필요도(일반 국민) ..	181
〈표 IV-2-35〉 문재인 정부 보육 관련 국정과제 인지도(일반 국민)	183
〈표 IV-2-36〉 보육 환경 개선 재정 마련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일반 국민) ..	184
〈표 IV-2-37〉 대국민집단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 차이	186
〈표 IV-2-38〉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된 개선 요구 사항(중복응답) ..	187
〈표 IV-2-39〉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정책적 지원(중복응답): 근무환경 ..	188
〈표 IV-2-40〉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정책적 지원(중복응답): 제도관련 ..	189
〈표 V-2- 1〉 추진과제 중복성 비교(기존-제안)	217
〈표 V-3- 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요청(안) ..	218

그림 차례

[그림 I-3- 1] 전문가 조사 절차도	19
[그림 II-1- 1] 연도별 국고지원 보육료 예산 추이(2011-2016)	43
[그림 II-1- 2] 가정양육수당 지원아수 변동 추이(2010-2016)	53
[그림 II-1- 3] 양육수당 수급자 비율 추이(2010-2015)	54
[그림 II-1- 4] 보육예산 중 양육수당 예산 비중(%)(2009-2016)	55
[그림 II-1- 5] 2013-2017 연도별 보육예산 추이	57
[그림 II-3- 1]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5)	77
[그림 II-3- 2]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2017-2050)	78
[그림 II-3- 3]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 (2017-2050)	79
[그림 II-3- 4]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추이(2008-2016)	81
[그림 II-3- 5]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개소 및 비율 추이(2008-2016)	82
[그림 II-3- 6] 설립유형별 재원 영유아 수 및 비율(2008-2016)	83
[그림 II-3- 7]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연령별, 2008-2015)	85
[그림 II-3- 8]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추이(연령별, 2008-2015)	86
[그림 II-3- 9] 가구 규모별 비율 향후 전망(2010-2035)	87
[그림 II-3-10] 한부모가족 미취학 자녀 돌봄 형태 유형	88
[그림 II-3-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89
[그림 II-3-12]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여성	90
[그림 II-3-13] 경력단절 사유	90
[그림 II-3-14]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사유	91
[그림 II-3-15]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92
[그림 II-3-16]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업체(업종 및 규모별)	93
[그림 II-3-17]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월)	94
[그림 V-1- 1] 중장기 보육 발전 방안 도출 절차	197
[그림 V-1- 2]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안)	203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 매 5년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보건복지부) 수준의 '보육계획' 수립의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목적을 지님.
-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보육계획은 짧게는 5년의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5년간 추진되는 보육정책의 결과는 한 아동과 가족의 생애를, 나아가 국민 생활과 국가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이에 향후 5년간의 보육계획은 이전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변화된 환경, 정책 요구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와 추가적인 정책 요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근거 자료에 기반한 보육정책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보육정책의 발전 과정과 주요 정책의 내용을 고찰하여, 주요 정책 목표, 정책과제의 내용, 실적과 평가 내용을 검토함.
- 관련 문헌, 보도자료, 통계자료를 통해 출산율과 출생아수 변화, 보육서비스 이용률 추이, 여성고용률, 가족구조 변화, 보육수요자의 일-가정 양립 등 근로 환경 변화 등 향후 국내 중기보육 수요를 전망할 수 있는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의 정책 환경을 검토함.
- 선행연구 및 선행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와 정책수요자의 요구 내용을 정

리하며, 보육정책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육 발전방향에 대한 기대와 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조사 실시 결과를 분석.

- 기존 보육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 발전방향,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보육이 중장기 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함.
- 보육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도출.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전문가 조사
 - 지난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육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아동(가족)·보육학, 유아교육학, 사회·사회복지(아동복지)학, 행정학, 경제학 등) 전문가 및 시·도청 보육담당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어린이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조사' 실시.
- 대국민 조사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조사 실시. 이중 최소 1,000사례는 현재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포함되도록 할당함.
 - 조사의 내용은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국민이 원하는 보육정책의 방향, 효과, 수요 및 요구, 보육정책을 위한 납세 부담의향 등임.
- 자문회의
 -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지 검토, 정책 제언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
- 전문가 워크숍 및 영유아 부모 간담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 연구의 배경

가. 보육현황 및 보육정책 현황

- 2016년 12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 총 41,08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1,767,224명이며, 그 중 현원은 1,451,215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2.1%로 집계됨.
 -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수는 평균 35.3명임.
 - 전국 보육교직원의 수는 총 321,766명이며, 보육교직원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는 4.5명임.
- 국비 지원에 의한 보육정책은 현재 크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장, 어린이집 관리로 구분됨.
 - 2013년에는 만3-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취학전 영유아 전연령, 전계층 대상 무상보육 시행이 완성되어 이 시기 동안의 가장 뚜렷한 성과로 평가됨.
 -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 전면 시행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라 '종일반 보육료', '맞춤반 보육료'로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가 차등화하여 지원됨.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전체 보육 이용 아동 중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이용 아동 비율을 2013년 26%에서 2017년 33% 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2016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2,859개소로 2012년 대비 656개소가 증가함. 2017년도 예산 계획에 의하면, 총 180개소 확충을 추진하므로, 2017년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2년 대비 총 836개소가 확충되므로 확충목표인 780개소에 도달할 가능성이 큼.

나. 보육계획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 1920년대 이후 구빈적 성격을 가진 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의 보육계획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음.
 - 1962년부터 1981년까지 보건사회부가 주관하여 탁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691개소로 증가하여 운영하였고, 그 이후 1981년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되면서 탁아소 사업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함.

- 1991년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사업은 보건사회부가 본격적으로 담당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탁아에서 보육으로 그 기능이 확대·발전됨.
- 2004년에 영유아보육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주관부서가 이관되었고, 보육정책국 하에 보육지원과와 보육기획과 신설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 특히 영유아보육법의 2004년 전면 개정으로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2004년 6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제 1차 유아지원정책방안' 이 마련됨.
- 2006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시됨(2006-2020).
- 2006년 7월 여성가족부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 수립하였고,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아이사랑플랜(2009-201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등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진수된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와 '아동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여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함.

다. 중기 보육 수요 관련 사회·정책 환경

□ 양적 측면의 보육 수요 관련 현황

- 출생인구수는 2015년 약 43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집계됨.
- 장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20명으로 나타나, 2026년까지 1.2명대를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2027년에는 1.30명에 진입하여 2050년까지 1.38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17년 전체 영유아 인구수는 2,639,254명으로 전망되며, 2040년까지는 2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감소하나, 이후 200만명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기준, 핵가족은 부부(21.8%), 부부와 미혼자녀(44.9%), 편부모와 미혼자녀(15.0%)로 구성되어 있고, 5인 이상 가구 비율은 8% 미만으로 급속히 감소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일-가정 양립정책, 근로시간 등이 보육 수요와 관련된 환경으로 고려됨.
- 질적 측면의 보육 수요 관련 현황
- 인적자원에 대한 조기투자, 보육서비스가 지니는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입증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대됨.

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및 정책 평가

가. 제 2차 계획에 따른 평가 지표 달성도 분석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보편적 보육·양육 지원 내실화’,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상호 신뢰하는 보육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고자함.
-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분야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수요자 맞춤 보육 양육 지원’의 분야의 목표 달성이 된 것으로 파악.
 - 반면에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부분에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및 재정연계’가 시행되지 않아 달성이 미진.
 -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분야는 ‘14년 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 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상향되어 재정 분야 개선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전달체계 개선은 목표치 대비 미비.

나.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자체평가 결과

- 목표치는 매년 상향되었고 실적도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
-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육·양육지원 대상 확대’ 과제는 ‘우수’ 평가.

-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은 지속적으로 평가가 상승.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도 2014년 이후 상승하여 '보통'으로 평가.
- 전반적으로 '양적 기반 확충' 부분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서비스 질 제고와 연결되는 성과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다. 전문가 조사에 나타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달성도 평가

□ 목표 달성 정도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이 달성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임(어느 정도 달성됨 60.0%, 달성됨 8.9%, 3.73점).
-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26.7%, 3.00점),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20.0%, 2.76점)와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13.3%, 2.78점)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추진과제의 달성정도는 20% 이하로 나타남.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미흡성

- 전문가의 87.1%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68.8%, 3.82점), '유보통합 추진'(66.6%, 3.93점), '보육서비스 공공성 제고'(64.5%, 3.78점) 순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 중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 세부과제별 달성도 평가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영역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전문가의 75.6%가 달성되었다고 응답.
-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영역은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전문가의 20.0%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응답.
 -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기반의 미흡'에 전문가의 82.2%가 동의.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관리 강화」 영역은 '평가인증 강화'를 전문가의 44.2%가 달성되었다고 응답.

- 전문가가 인식한 현 시점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55.6%의 가장 높은 응답비중.
-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을 전문가의 22.2%가 달성되었다고 응답.
-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영역은 전문가의 48.9%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가 달성되었다고 평가.
-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 체계 개선」 영역은 전문가의 44.5%는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가 달성되었다고 응답.
- 전체 중 88.9%인 대다수의 전문가는 ‘유보통합 추진 미흡’에 동의.

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 현실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총 699명을 대상으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과제의 달성 정도가 현실에서 체감되고 있는지를 질문.
-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적다’였으며, 5점 만점에 3.40점에 해당.
-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범주 중에서는 ‘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 등에 따른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체감도가 평균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설치 및 이용 기회), 직장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의 접근성 등은 낮은 체감도를 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세부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게 집계됨.

4.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요구

가. 보육정책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요구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보육정책 환경

- ‘저출산·고령화(4.56점)’,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4.42점)’,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아동 행복 수준(아동행복과 권리 중심 접근 요구 증대)(4.42점)’, ‘사회구성원간 소득불평등 등 양극화 심화(4.31점)’, ‘가족 구조의 다양화 추세(4.24점)’, ‘직장,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요구 증대’(4.18점), ‘유보통합(4.16점)’이 중장기보육 계획 수립 시 현재 중시되어야 할 정책 환경으로 높은 동의를 얻음.

□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 전문가 조사 결과,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 방향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아동 행복 우선)(4.82점)’은 제2차 계획에서 전략으로 중시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나,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은 4점(동의함)에 다소 못 미치는 동의를 얻음.
 - ‘아동간 생애 초기 경험의 형평성 제고(취약계층에 대한 보육 지원 강화)(4.44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4.42점)’, ‘부모양육역량 및 책임 강화(4.36점)’, ‘연령에 적합한 양육 지원(4.33점)’, ‘교사가 행복한 보육 기반 조성(4.09점)’이 45명의 전문가로부터 ‘동의함(4점)’ 이상의 동의도를 얻는 방향성임.
- 부모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80.7%가 바람직하다고 응답)에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여 전문가 조사와 차이를 보임.
 - 가구 소득과 무관한 무상보육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60.7%).
 - 이외 부모들은 ‘부모의 취업활동을 우선 지원하는 보육’(바람직함 69.7%: 다소 바람직 37.8%+매우 바람직 31.9%)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응답함.
- 부모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이상적인) 양육 형태는 자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24개월 미만 영아는 가정양육, 25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이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

- 문제인 정부의 보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유보통합 완결’,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 발달에 적합한 보육정책 설계’, ‘보육에 대한 국가-부모 역할과 책임 조정’, ‘보육-양육지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의 8가지에 대한 전문가 동의도가 4점(동의함)이상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목표로는 1순위 응답에서 ‘유보통합 완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순으로 응답됨.
 -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국가-부모역할과 책임조정’의 경우 1순위보다는 2, 3순위의 높은 응답률에 힘입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상위 5개의 목표에 포함.

나. 보육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 추가 과제에 대한 요구

- 전문가 조사를 통해 향후 추가되어야 할 과제로 5개 추가 과제 제안됨.
 - 제안된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 체계 구축’, ‘행복 육아를 위한 부모역할 수행 지원’, ‘보육 수요 변화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개선’, ‘아동 양육·보육정책 간 연계와 정합성 제고’, ‘보육지원의 형평성 제고’의 5개 과제에 대해 모두 ‘동의함(4점)’이상의 높은 동의를 얻었음.
- 2차 계획의 각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과제가 추가 제안됨.
 - ‘추진과제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에서 추가 제안된 세부과제 ‘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 ‘공보육 시설 확충 및 부실 어린이집 퇴출의 수급조절’, ‘공공형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 체계 구축’이 평균 4점 이상의 지지를 얻음.
 - ‘추진과제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분야에서는 ‘보육인력 자격관리 체계 개편’, ‘우수 인력 보육 현장 유인을 위한 기반 조성’, ‘부적격 교사 조기 발견·관리체계 구축’이 높은 지지를 얻은 세부과제임.
 - ‘추진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부모,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확대 기반 조성', '어린이집 정보공개 내실화'가 높은 지지를 얻은 세부과제임.

- '추진과제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분야에서는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안정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보육·양육 지원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이 높은 지지를 얻은 세부과제임.

□ 보육계획 시 고려해야 할 쟁점 논의 결과

○ 보육공공성 확보의 지향점

- 단순한 공보육 시설 확충 차원의 논의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지원(보육료,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의 방향성, 일정 수준 서비스 질 담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이어야 함.

○ 보육과정·프로그램 관련 제3차 계획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

- '질 제고, 시설유형별 격차 해소'를 지향 목표로 국가 보육과정은 일정 수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되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시설 환경에서 실행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함.

○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

- 보육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지원하고 비용 지원을 차등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부분 보완과 부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수렴됨.

○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 양성·자격체계의 강화, 양성 뿐 아니라 '현직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 양질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처우 개선 등이 어우러져야 함이 제시됨.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 급여, 근무시간, 근로복지, 신분보장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처우 개선의 기반으로 '표준보육료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됨.

○ 유보통합

-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 의견 속에서 유보통합의 추진력을 위해 목적의 명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문재인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 보육정책 공약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봄.
 -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이용 비율 확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모두 높았음.
 - 정책 효과와 방향성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기존의 유사 정책과의 정합성, 재정 확보와 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시됨.
 -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게 나타남.

다.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

□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분석

-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 국민들의 추가 납세 의향은 낮게 나타남.
 - 추가 납세의향 ‘있다’ 이상인(4점) 보육환경 개선 분야가 없음.
 - 가장 납세 의향이 높은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이며, 세부적으로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추가 납세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3.44점).
 - 이외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3.42점)’, ‘물리적 환경·인적 환경 개선(3.39점)’,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3.38점)’, ‘보육교사 처우개선(3.3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양육수당 인상’을 위한 납세 의향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5. 중장기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가.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정립

□ 보육정책의 비전 제시

- ‘아동 행복, 부모 신뢰, 교사의 자긍심이 균형을 이루는 보육’을 제시함.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보육의 이상향은 아동과 부모, 보육교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결과적으로 모두 행복한 균형점의 상태여야 함을 제안함.

□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 제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강화’, ‘부모의 행복 육아 실현’, ‘교사의 비전과 자긍심 제고’,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의 4개 전략을 제시함.

나.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의 추진과제 제안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 지속 필요 과제

- 전문가의 평가 결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 중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3개 과제가 현 시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조사의 추가 제안 과제

- ‘보육의 공공성 제고’,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교사 전문성 제고’, ‘격차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 ‘아동 발달에 적합한 양육 지원’,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여건 조성’,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 조성’, ‘체계적 보육서비스 설계 체계 구축’ 등 8개 추진 과제를 제안함.

□ 과제 중복성을 고려한 최종 추진과제 제안

- 제2차 계획에서 지속 추진이 필요한 3개 과제가 추가 제안 과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추진 과제명으로 제안함.

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안)

□ 반영 필요성이 높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제안함.

추진 과제명	2차계획 내 존속 세부과제 및 추가 제안 세부과제	전문가 및 부모 요구에 근거한 세부과제	세부 과제 (일련번호)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1. 보육의 공공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존속)	-	1-1	○
		· 지역 육아지원 공공 인프라	1-2	

추진 과제명	2차계획 내 존속 세부과제 및 추가 제안 세부과제	전문가 및 부모 요구에 근거한 세부과제	세부 과제 (일련번호)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어린이집 수급 조절(부실어린이집 퇴출 구조)(추가) · (1-3-2)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컨설팅 연계, 피드백 강화)(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주요 서비스 제공 분소 설치 확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제고를 위한 비용 지원 내실화(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내실화) 	1-4	○
2.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근로환경 및 급여 개선(존속) · (2-1-2)우수인력 보육현장 유인 기반 강화(보육인력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근로복지 환경 개선(근무시간, 휴가, 유연근무, 시간의 근무수당 보장, 최저임금 이상 급여 인상) 	2-1	○
3. 교사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인력 자격관리체계 개편(비대면 온라인 교육 양성 과정 축소, 자격갱신제 등)(추가) · 보육인력 역량 지원 강화(존속) · (3-3-1)부적격 교사 조기발견·관리체계 구축(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자격체계 강화(유치원 교사 수준의 강화 지향, 보육교사·보조교사 양성 체계 구분)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교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강화, 역량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교사 스트레스 관리) 	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2) 지속적 전문성 지원·관리 강화(교사 교육, 이력관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3-3	
4. 격차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현장의 격차 해소 기반 조성(공통보육과정 실행 기반 확보, 유·보간 우수 실행 사례 공유, 정보 공유, 유·보 공통의 장학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유·보간 시설 환경 등 격차 해소) 	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양육환경 격차 해소(발달환경 평가 수행, 양육 환경 취약가구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4-2	
5. 아동 발달에 적합한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을 고려한 지원체계 설계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 지원 강화 	5-2	
6.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의무화(보육서비스 이용, 양육수당 수령전 등)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양육역량 지원체계 조성(부모교육, 정보 제공) 	6-2	

추진 과제명	2차계획 내 존속 세부과제 및 추가 제안 세부과제	전문가 및 부모 요구에 근거한 세부과제	세부 과제 (일련번호)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확대 등)		
7.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 조성		· 안심할 수 있는 영아보육 여건 조성	7-1	
		· 맞춤형 보육 모형 개선 (종일반 입소 자격 기준 보완)	7-2	
8. 체계적 보육 서비스 설계 체계 구축		· 보육수요 변동 요인의 정기적 점검 및 수요 예측	8-1	
		· 정책의 아동 행복(권리) 영향 평가 실시	8-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 매 5년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보건복지부) 수준의 '보육계획' 수립의 '지원'¹⁾이라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목적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구빈적 성격의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196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구빈사업적 성격에서 아동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 변화·발전되었다(이미화·여종일·엄지원, 2012: 32). 또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되게 되었다(이미화 외, 2012: 33).

한편, 보육사업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로 제도화·체계화되는 기회를 맞게 된다.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가정 내 돌봄 기능 약화,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의 필요성·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0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여성가족부, 2006: 3) 국가의 보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이끌게 된다(여성가족부, 2006: 91).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으로(2005년 1월 시행) 국가 보육계획수립이 의무화됨으로써(여성가족부, 2006: 91)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이미화 외, 2012: 33).

이처럼 2004년 법령 개정 후 2006년 7월 우리나라의 최초 보육계획인 「제1차 중장기보육 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이 발표되어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을 비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06: 9). 2006년 수립된 '새싹플랜'의 추진중 정권 교체로 인해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보육정책 추진 방향이 재설정되어 수정·보완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 마련되었다(보건

1)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로, 보건복지부 수탁과제인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수립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수행되었음. 본 기본과제를 통해 수합한 조사 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지원함.

복지가족부, 2009: 5). 「아이사랑플랜」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구축’을 3대 전략으로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고(보건복지가족부, 2009: 28), 「새싹플랜」에 비해 보육료 지원 확대로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수당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반면, 국공립 확충은 취약지역 위주로 축소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수준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변경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7).

한편,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그간 국가 차원의 보육 기본계획(「새싹플랜(2006-2010)」,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 외형상 지원 대상 확대에 집중하여 재정 투자에 상응하는 인프라 투자나 시스템 정비가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충보다는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보건복지부, 2013: 1).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 「국민 행복, 행복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최우선’하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6대 과제 추진(보건복지부, 2013, 1: 23)을 이끌었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2017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구빈을 위한 탁아사업으로 시작한 보육 사업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인적자원육성을 위한 투자 전략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 전략으로 중시될 만큼 그 위상과 중요성이 변화하였다.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보육계획은 짧게는 5년의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5년간 추진되는 보육정책의 결과는 한 아동과 가족의 생애를, 나아가 국민 생활과 국가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향후 5년간의 보육계획은 이전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변화된 환경, 정책 요구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와 추가적인 정책 요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근거 자료에 기반한 보육정책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제3차 중장기보

육 기본계획' 수립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보육서비스의 근원적인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보육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제2차 중장기보육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서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선별하고, 보육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그간의 보육정책 및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18-2022년 5년간의 보육정책의 기본 계획으로 기능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산출과 정책 방향 제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의 발전 과정과 주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기 시작한 이래의 보육계획인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아이사랑플랜(2009-201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목표, 정책 분야와 정책과제의 내용, 실적과 평가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관련 문헌, 보도자료, 통계자료를 통해 출산율과 출생아수 변화, 보육서비스 이용률 추이, 여성고용율, 가족구조 변화, 보육수요자의 일-가정 양립 등 근로 환경 변화 등 향후 국내 중기보육 수요를 전망할 수 있는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중장기보육 계획 수립의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다.

셋째, 보육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관련 요구를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선행 연구 및 선행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와 정책수요자의 요구 내용을 정리하며, 보육정책 관련 학계 전문가(아동·보육, 사회,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현장 전문가(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육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학계, 현장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는 기존 보육계획의 성과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소득

계층, 학력, 자녀특성, 결혼특성, 취업 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보육정책 방향성과 보육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보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보육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전략 등 발전방향,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보육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존 보육계획과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필요성이 있는 과제와 중단·폐지, 보완 과제를 선별하고,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여 과제 간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도출하였다.

여섯째,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국가와 주요 지자체의 중장기 보육계획 정책 자료 분석,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육계획 및 세부 보육정책 평가를 수행한 관련 연구, 보육 수요자의 정책 요구 분석을 수행한 연구 등 선행연구 분석, 보육 관련 사회 정책적 환경 변화 관련 통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보육정책 개선 방안, 중기 보육수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전문가 조사

1) 조사 대상 및 규모

아동(가족)·보육학, 유아교육학, 사회·사회복지(아동복지)학, 행정학, 경제학 등 보육정책 관련 선행연구, 발표·토론, 기고, 언론활동 등 관련 활동 경험 있는 유관 분야 전문가 45인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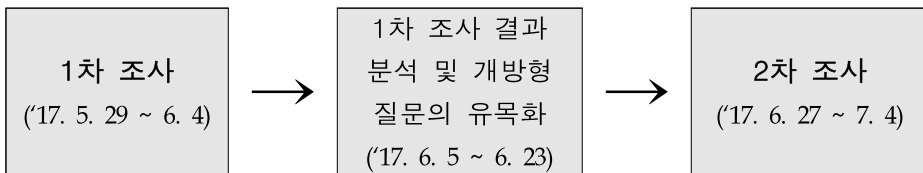
2) 조사 방식 및 내용

조사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 및 현황 진단,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평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과 쟁점 등 과거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육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의 결과를 2차 조사에 다시 제시해 재응답 하도록 하여, 최종 의견수렴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또한 1차 조사에서 개방형으로 제시된 질문의 응답은 유목화 하여, 2차 조사에서 주요응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에는, 1차 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하는 기간으로 약 2주가 소요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향후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과 보육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의 의견을 유목화하여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및 중요도, 개선 필요성 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전문가 조사의 절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 [그림 1-3-1]과 같다.



[그림 1-3-1] 전문가 조사 절차도

전문가 조사 설문 내용은 외부 전문가 4인에게 서면 검토를 받았고, 전문가 조사 설문 내용 검토를 위한 원내 멘토링 2회 개최를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표 I-3-1〉 전문가 조사 내용

구분	세부 내용
I. 현재 보육정책 및 현황 진단	-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 -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
II.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평가	- 6대 추진과제 목표 대비 보육현실의 수준 체감도(추진과제 목표 달성 정도) - 6대 추진과제의 현시점에서의 중요도, 추진과제의 미흡성,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과제 - 6대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과제 목표달성정도, 현시점에서의 중요도, 미흡성과 문제점, 추가되어야 할 세부과제
III. 보육계획 수립에 고려할 정책 환경	- 2차 계획 대비 추가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 - 보육정책의 목표에 대한 동의도, 추가 목표
IV. 보육계획 수립에 고려할 쟁점	- 보육의 공공성 확보 지향점 - 보육과정·프로그램 관련 반영해야 할 사항 - 맞춤형 보육의 개선 방안 -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에 가장 필요한 방안 -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가장 필요한 방안 -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지속 추진 필요성 여부,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 - 아동수당 도입 방안 - 새정부 보육정책 공약의 기대사항/우려사항

이러한 내용의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며, 2차 조사 시 1차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의견 조정과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유관 학계 전문가 및 보육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관계자²⁾의 명단 및 소속 기관에 공개된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여, 조사 참여 의향을 조사한 후 최종 참여 전문가를 확정하였다.

조사 거부, 조사지 미회신, 중도 탈락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는 최초 총 10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는 학계전문가 33명, 공무원 1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7명, 현장전문가 5명 총 55명이다. 총 55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표를 배포하여, 최종 45명이 응답하였다.

최종 참여 전문가의 분포 및 학계 전문가 전공은 다음 표 <표 I-3-2>, <표 I-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최종 조사 참여자는 학계전문가 31명, 보육 담당 공무원 5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6명, 현장전문가 3명이다.

2) 어린이집 관계자의 경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의뢰하여 분과대표 등 조사 참여자를 추천받음.

〈표 1-3-2〉 전문가 조사 참여자 분포

단위: 명

전공영역	대상인원	조사 참여 희망	최종 조사 참여
학계전문가	60	33	31
보육 담당 공무원 (17개 광역시도청)	17	10	5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센터)	18	7	6
현장 전문가 ^{주)}	5	5	3
계	100	55	45

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분과별 대표(어린이집 원장) 추천받음.

조사에 최종 참여한 학계전문가의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아동학(아동가족, 보육) 13명, 유아교육학 4명, 사회/사회복지학(아동복지) 9명, 행정학 1명, 경제학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3〉 학계전문가 전공 분포

단위: 명

전공영역	대상인원	최종 조사 참여
아동(아동가족, 보육)	23	13
유아교육	6	4
사회/사회복지(아동복지)	23	9
행정	5	1
경제	3	4
계	60	31

현장 전문가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추천받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5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 3인은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구성되었다.

3) 조사 결과의 활용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수렴된 결과는 제3장과 제4장의 보육정책 평가 및 보육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부분에 제시되었다.

다. 대국민 조사

보육정책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국민이 원하는 보육정책의 방향, 효과, 수요 및 요구, 보육정책을 위한 납세 부담의향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육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를 포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규모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총 3,000사례이며, 이중 최소 1,000사례는 현재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포함되도록 표본설계 시 할당하였다. 성, 연령, 지역에 따른 인구비례에 따라 사례를 할당해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 내용은 성별, 최종학력, 응답자(부모)연령, 취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연령, 지역규모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1-3-4〉 표본 설계(인구비례 할당)

단위: 명

전체		만20세 ~29세	만30세 ~39세	만40세 ~49세	만50세 ~59세	만60세 이상	합계
계		620	680	797	775	128	3,000
서울	남	66	74	76	70	12	298
	여	67	74	77	74	13	305
경기/강원권 (경기, 강원, 인천)	남	111	120	147	133	20	526
	여	100	115	137	128	20	501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남	33	35	41	39	7	155
	여	28	32	38	37	6	141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남	35	35	45	45	7	167
	여	30	33	42	42	7	154
경북권 (경북, 대구)	남	32	31	39	41	7	150
	여	26	29	38	40	7	140
경남권 (경남, 부산, 울산)	남	50	53	61	63	11	238
	여	42	49	60	63	11	225
계	남	327	348	404	391	64	1,534
	여	293	332	393	384	64	1,466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자 조사의 최종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 1-3-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51.1%, 여자 48.9%의 분포를 나타냈고, 연령은 40대가 26.6%로 가장 많고, 50대 25.8%, 30대 22.7%, 20대 20.7%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며 만60세 이상은 4.3%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다. 취업상태인 경우 취업중

인 응답자가 73.8%(취업중+휴직중)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미취업인 응답자는 26.2%(학업중+미취업)이었다. 결혼 상태로는 기혼인 응답자가 75.0%로 많고, 미혼 22.4%, 이혼 2.1%, 사별 0.6% 으로 집계되었다.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74.1%,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25.9%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78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 연령은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국민 집단을 무자녀 가구와 영유아 자녀 가구, 초등 이상 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주요 응답에 대한 집단별 비교를 하기 위함이었다. 막내 자녀의 연령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30.3%로 가장 많고, 영아 29.1%, 유아 21.4%, 중고등 11.1%, 초등 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5〉 대국민 조사 최종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빈도	구분	비율	빈도
전체	100.0	(3,000)			
성별			학력		
남자	51.1	(1,534)	고등학교졸 이하	19.7	(590)
여자	48.9	(1,466)	2~3년제 대학졸	17.8	(535)
연령			4년제 대학졸	51.9	(1,556)
만20~29세	20.7	(620)	대학원 이상	10.6	(319)
만30~39세	22.7	(680)	월평균 가구 소득		
만40~49세	26.6	(797)	200만원 미만	13.8	(415)
만50~59세	25.8	(775)	200만원~300만원 미만	17.6	(528)
만60세 이상	4.3	(128)	300만원~400만원 미만	18.9	(568)
취업상태			400만원~500만원 미만	18.9	(566)
취업중	67.9	(2,038)	500만원 이상	30.8	(923)
휴직중	5.9	(178)	지역규모		
학업중	6.9	(206)	대도시	55.8	(1,675)
미취업	19.3	(578)	중소도시	36.0	(1,080)
현재 직업(취업+휴직, n=2216)			읍면지역	8.2	(245)
관리자	14.7	(325)	결혼여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5.0	(333)	기혼	75.0	(2,249)
사무종사자	44.4	(983)	미혼	22.4	(672)
서비스종사자	6.8	(150)	이혼	2.1	(62)
판매직종사자	3.5	(77)	사별	0.6	(1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1	(90)	(후속)출산계획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31)	있음	24.8	(745)
단순노무종사자	2.5	(55)	없음	75.2	(2,255)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및 기타	6.1	(135)			
무급가족종사자	1.7	(37)			

(표 I-3-5 계속)

구분	비율	빈도	구분	비율	빈도
자녀 유무			막내 자녀 연령(유자녀 가구, n=2,223)		
있음	74.1	(2,223)	영아	29.1	(647)
없음	25.9	(777)	유아	21.4	(476)
자녀 수(유자녀 가구, n=2,223)			초등	8.1	(179)
1명	34.0	(756)	중고등	11.1	(247)
2명	55.7	(1,239)	성인 이상	30.3	(674)
3명이상	10.3	(228)			
평균 자녀수		1.78명			

라. 전문가 서면 자문 실시

설문지 검토, 정책 제언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학계 전문가 총 11인을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검토에 대해 총 4인, 정책 제언에 대해 총 7인의 전문가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마. 전문가 워크숍 및 영유아 부모 간담회 개최

보육 분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 및 보육현장전문가·일반국민조사를 통해 수립된 보육정책 방향,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보육중장기 발전방안(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부모의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 및 개선방향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I-3-6〉 전문가 워크숍 및 부모 간담회

구분	일정	주제	참석자
1차	2017. 9. 26	전문가 조사 결과 검토 및 의견 수렴 (학계)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아동보육학과 교수 2인 -아동보육상담과 교수 1인 -보육학과 교수 1인
2차	2017. 10. 17	주요 쟁점 전문가 조사 결과 공유 및 최종 의견 수렴 (현장 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3인 -어린이집 원장 3인 (민간, 법인, 직장)

(표 I-3-6 계속)

구분	일정	주제	참석자
3차	2017. 11. 7	대국민 조사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영유아 부모 간담회	-민간어린이집(민3세), 전업주부, 만44세 -민간어린이집(민3세), 전업주부, 만35세 -가정어린이집(0세), 취업(육아휴직), 민30세 -가정어린이집(0세), 전업주부, 만32세 -직장어린이집(민1, 3세), 전업주부, 만32세 -직장어린이집(민4세), 취업(육아휴직), 민31세

바.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추진 단계별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과의 정책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사안 등을 협의하였다.

〈표 I-3-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일정(안)

구분	일정	안건	비고
1차	2017. 5. 23	- 연구 방향, 전문가 조사, 설문 포함 내용 논의	서면으로 진행함
2차	2017. 10. 17	- 전문가 조사, 대국민조사 결과 전달 및 부처 의견 청취	서면으로 진행
3차	2017. 10. 17	- 맞춤형 보육 관련 전문가 조사, 대국민조사 결과 전달 및 부처 의견 청취	서면으로 진행

4. 선행연구

가.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정책 개편을 위한 연구

2006년-2010년으로 계획되었던 「새싹플랜」은 2008년 정권교체와 함께 새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가 수행되었다(서문희·안재진·이세원·유희정, 2009). 이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양육수당,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금융조사 등 신규 법제화 내용을 검토하고, 각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 보육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및 전체 영유아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 체계 개편 방안, 제반 규정의 정비 방안을 검토하였다(서문희 외, 2009: 3).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아이사랑플랜」 종료 후 2013년-2017년 5년간의 보육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이미화 외, 2012). 이 연구에서는 보육 정책 현황 및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이전 보육계획 및 보육정책 평가, 보육분야 전문가(학계, 공무원, 현장) 및 학부모 대상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보육 중장기 정책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이미화 외, 2012: 154). 이 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보호자의 배경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보육’을 기본 보육 이념으로 제시,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육의 질 관리 체계 마련, 적정보육시간 및 보육방법 제시, 보육환경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이미화 외, 2012: 155-159).

나. 보육계획 및 보육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한편, 수립된 보육계획 또는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0~2015년의 6년에 걸쳐 정책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보육정책의 매년 성과를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매년 그해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2015)’를 수행하였다(서문희·최혜선, 2010; 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서문희·김혜진, 2012; 서문희·이혜민, 2013; 이정원·이혜민, 2014; 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이 연구를 통해 2010년에는 ‘공인어린이집 운영 효과’, 2011년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지원 사업 검토’, 2012년에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 검토’, 2013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모니터링 및 평가’, ‘가정양육수당 수혜와 관련 인식’, 2014년에는 ‘가정양육수당 효과와 만족도’,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만족도와 개선 요구’, 2015년에는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서문희·최혜선, 2010; 서문희 외, 2011; 서문희·김혜진, 2012; 서문희·이혜민, 2013; 이정원·이혜민, 2014; 유해미 외, 2015).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의 연구에서는 2010~2015년간의 보육정책 성과를

평가하였는데, 보육정책 현황 분석과 수요자 만족도 측정을 통해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과 중간 점검을 포함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였다(유해미 외, 2015). 이 연구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 영역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지역 기관 확충,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부문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거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공보육인프라 확충 실적과 지역별 균형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으며, ‘서비스 질 제고’ 영역에서는 평가인증 유지율의 기관유형별 격차가 존재하고, 학점은행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양산, 1급 교사의 기관유형별 격차 등 서비스 형평성 차원에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유해미 외, 2015: 175-178). 영유아 부모 대상 ‘보육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어린이집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희망기관의 이용가능성은 미흡하다고 인식되어 성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어린이집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 시간이나 프로그램의 질에 비해 낮은 평가를 얻었으며, 서비스의 질적 관리 및 제고 영역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유해미 외, 2015: 173-174).

한편, 2014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선별적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으로 시작된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부문 재정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주목하여 2004-2014년 간의 재정지원 효과를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양상, 기관 이용과 이용시간,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모비용 부담 수준에 미친 영향, 여성 취업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7-8).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 대상 확대로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이 확대되어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시킨 효과가 있고, 부모의 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무상보육교육의 가장 큰 성과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비용지원 확대는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를 이끌어, 종일제 중심의 획일적 보육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1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분석을 통해 0~5세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이 가구의 추가적 보육·교육 지출을 증가시켰으므로써 결과적으로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0~5세 보육·교육비 지원은 소득 집단 간 지출 격차는 감소시켰으며 이 또한 추가적 지출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 2013).

어린이집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대상의 연령범위’, ‘무상보육의 교육 내용’, ‘양육수당의 지원규모’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혜민·임성환·박병식, 2016: 483). 만족도 요인을 8가지로 구분하여 각 만족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무상보육의 연령범위’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평균 3.82점), ‘무상보육의 지불방식’(3.73점), ‘무상보육의 교육 내용(3.55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양육수당 지원 규모’(2.93점), ‘무상보육 기관 수’(3.03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혜민 외, 2016: 478-479). 연구자는 이에 대해 영유아 학부모가 교육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내실화를 추진해야 하며, 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하며, 공공보육기관의 비중의 확대, 무상보육 지원대상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김혜민 외, 2016: 483-484).

다. 보육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보육정책이 특정 정책 기조 하에 추진되는 중에는 이에 대한 성과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2013년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향’ 연구를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 출산율 증진을 위한 보육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이혜원, 2013). 이 연구에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출산 후 노동시장을 즉각 이탈한 그룹과 노동참여 지속 그룹을 비교한 결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한 그룹은 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보육 인프라의 품질제고를 통해 대리양육의 만족도 증진이 주효함을 제안하였다(이혜원, 2013: 242).

2014년에는 무상보육 이후의 보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이미화·유해미·최효미·조아라, 2014). 이 연구에서는 세 차례의 정책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육정책의 일반적 진단과 향후 과제 제안, 영아보육의 방향성 제안,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크게 3개 주제에 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이미화 외, 2014). 이 연구에서는 향후 보육정책의 목표로 ‘아동발달’과 ‘부모의 취업’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필수 지원 시간과 선택 지원 시간으로 보육비 지원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

다는 점, 어린이집 유형을 국공립 및 공공형으로의 단일화 필요성, 컨설팅 개념이 포함된 평가인증을 발전과제로 제안하였고, 향후 보육정책에서 '육아정책'으로 종합 진단하며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미화 외, 2014: 54).

세부 정책 과제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제외하고, 보육정책 또는 보육정책을 포괄하는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방향성 제시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가 수행한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 육아지원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2006년 이후 각종 기본계획과 해당 기간 내 근거 규정 및 관련 정부자료의 검토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유해미 외, 2015: 61). 또한, 동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를 '사회적 돌봄지원 기반 구축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가정과 지역사회 돌봄지원의 확장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유해미 외, 2015: 163), 향후 육아지원의 목표는 '부모권의 보장'과 '아동 중심성 회복', 남성을 적극적으로 포괄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유해미 외, 2015: 173).

한편, '영아보육'에 한정된 보육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에서는(유해미·이규림·이민경, 2016) 0-1세, 2세의 보육 수요에 차이가 있음을 착안하여, 향후 영아 대상 기관보육의 발전방향으로 0-1세, 2세간 보육의 목표와 접근방식을 세분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유해미 외, 2016: 174).

이외 연구기관 보고서가 아닌 일반 학계 전문가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당시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전면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이전의 논의에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의 선별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보육료 지원 대상의 보편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김영미, 2011: 104; 김현진, 2012: 440). 이 연구들에서는 예산제약에 의해 전면 무상보육이 어렵다면 영아보다는 유아(만3세 이상)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김영미, 2011: 105) 0-2세 영아부터 무상보육이 확대된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정치적 에너지를 투입한 결과로 해석하며, 영유아 보육의 문제는 부모와 영유아의 욕구와 정신적, 신체적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김현진, 2012: 441).

김현숙과 이수진(2012)의 연구에서는 2012년 영아무상보육 도입 시기 가정양

육수당에 비한 영아보육료 지원액의 수준이 높아 영아의 시설보육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보육료 지원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대한 합의 부재로 보육예산 부족 문제 발생, 획일적인 종일제 보육 시스템으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선택권의 제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부모선택권을 고려한 보육 및 양육시스템’을 제안하였다(김현숙·이수진, 2012: 26-27). 보육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전계층 아동양육수당의 도입으로 시설보육지원과 가정 내 양육의 균형을 이룰 것, 반일제, 일시보육서비스 도입 등 보육시설의 이용시간 다양화로 부모의 선택권 제고, 가정 내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질 개선과 대상 확대를 제안하였다(김현숙·이수진, 2012: 27).

김수정(2015)의 연구에서는 그간 ‘한국 보육레짐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였음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보육은 영리추구가 금지되고 가격상한이 적용하는 비영리서비스이지만 영리 추구형 행위자가 주요 행위자이며, 보편적 무상보육의 과제는 정작 보수주의 정권에 의해 달성되었고, 해외의 보육서비스 확대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동시에 확대되는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김수정, 2015: 65). 이 논문은 서비스 질, 접근성, 예산제약이라는 과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한국은 접근성 확대(커버리지 확대)와 양육비용 지원에 집중하여(김수정, 2015: 70-71), 보육예산 규모와 서비스 적용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 안전사고와 아동 인권 문제 발생 등 ‘한국보육의 고질적 병폐’(송다영, 2014: 130; 김수정, 2015: 73에서 재인용)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민간시설에 의존한’ 공급 확대에서 ‘민간보육공급자’의 정체성은 ‘정부지원을 받는 시장행위자’ 쪽으로 정착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보육 패러다임에 대한 경로변경 가능성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김수정, 2015: 87-88).

이서영·정효정(2016)의 연구에서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민간어린이집의 특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한층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① ‘보편적’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의 전환, ② 민간어린이집은 12시간의 기본 운영을 8시간 운영으로 전환, ③ 보육비용(표준보육료)의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화, ④ 보육료 지원을 학부모(아동) 직접 지원에서 어린이집 시설 지원으로 전환, ⑤ 보육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근무

원칙과 시간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 적정화, 민간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이서영·정효정, 2016: 265-268). 이서영과 정효정(2016)의 연구는 민간어린이집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특성상 어느 정도 이윤도 추구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들고 있는 점에서 김수정(2015)의 논의와 동일하나, 민간어린이집의 축소 방향이 아닌, 민간어린이집 위주 인프라 유지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특히 보편적 무상보육과 선별적 보육 지원과 같은 보육비용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선별적 보육 지원 시기에는 보편적 무상보육으로의 확대를, 보편적 무상보육시기에는 선별적 보육 지원으로의 조정(축소)을 주장하는 논의가 발견됨이 흥미롭다. 보육정책의 철학적 관점과 실제 시행 후의 발생 현안에 따라 어떤 정책이 적정한가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보육 현황과 보육정책 현황 및 보육계획의 발전과정, 중기 보육 수요 관련 사회정책 환경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보육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중기 보육 수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보육 현황 및 보육정책 현황

가. 보육 현황

보육 현황에서는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등 보육 현장의 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1) 어린이집 현황

2016년 보육통계(2016. 12. 31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총 41,084개소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50.1%), 민간어린이집(34.8%), 국공립어린이집(7.0%),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3.4%), 직장어린이집(2.3%), 법인단체등(2.0%), 부모협동어린이집(0.4%)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1,767,224명이며, 그 중 현원은 1,451,215명으로서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2.1%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9.1%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9%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수를 살펴보면, 평균 35.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70.7명으로 1개소 당 아동수가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16.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보육정책의 변동이 있었던 2011년, 2012년의 어린이집 이용률과 1개소 당 아동수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이용률의 경우, 2011년 83.2%이고 2012년 86.4%로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84.9%

에서 2012년 90.9%의 증가를 나타냈다. 1개소 당 아동수를 살펴보면, 2011년 33.9명에서 2012년 35.0명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도 약 35명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1-1 참조).

<표 II-1-1> 어린이집 일반 현황(2016. 12.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어린이 집수	개소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비중)	100.0%	7.0%	3.4%	2.0%	34.8%	50.1%	0.4%	2.3%	
아동수	정원	1,767,224	197,365	134,189	58,511	927,517	374,907	5,052	69,683	
	(비중)	100.0%	11.2%	7.6%	3.3%	52.5%	21.2%	0.3%	3.9%	
	현원	계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남	750,122	91,124	52,038	23,638	385,046	168,970	2,197	27,109
		여	701,093	84,805	47,075	21,736	360,617	159,624	2,043	25,193
	(비중)	100.0%	12.1%	6.8%	3.1%	51.4%	22.6%	0.3%	3.6%	
	이용률	2016	82.1%	89.1%	73.9%	77.5%	80.4%	87.6%	83.9%	75.1%
2012		86.4%	91.8%	80.3%	83.0%	84.9%	90.9%	83.5%	77.8%	
2011		83.2%	90.8%	82.1%	79.4%	82.0%	84.9%	83.9%	76.8%	
1개소당 아동수	2016	35.3	61.5	70.7	56.4	52.1	16.0	27.0	55.2	
	2012	35.0	67.9	78.3	59.7	53.2	16.2	25.8	57.1	
	2011	33.9	67.6	58.2	77.1	50.0	14.9	25.7	55.7	

주: 1) 아동수는 현원(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기준임.

2) 이용률은 현원/정원 비율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현황. p.5.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현황. p.4.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현황. p.4.

2)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은 <표 II-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6년 12월 기준, 만6세 이상을 제외한 취학전 만0~6세 영유아는 총 1,451,215명이다. 약 145만명의 보육 아동 중, 만0~2세 영아는 845,984명(58.3%)이며, 만3~6세 유아는 605,231(41.7%)명으로 영아가 유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아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아동수가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아의 경우, 영아와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아동수가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순서로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적다.

<표 II-1-2>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2016. 12.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만0세	141,013	4,866	2,958	1,199	41,054	88,626	159	2,151	
만1세	318,245	24,490	13,998	5,528	131,911	131,783	574	9,961	
만2세	386,726	38,541	22,734	9,437	197,978	104,775	980	12,281	
만3세	263,652	39,560	23,824	10,766	173,991	2,356	1,017	12,138	
만4세	180,255	35,265	17,897	8,993	107,757	630	768	8,945	
만5세	153,893	31,604	15,555	8,070	90,833	381	727	6,723	
만6세 이상	7,431	1,603	2,147	1,381	2,139	43	15	103	
영아(만0-2세)	845,984	67,897	39,690	16,164	370,943	325,184	1,713	24,393	
유아(만3세 이상)	605,231	108,032	59,423	29,210	374,720	3,410	2,527	27,909	
	2016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계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2011	1,348,729	143,035	50,676	112,688	706,647	308,410	2,286	24,987

주: 아동연령은 보육연령 기준임.

-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p.98.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p.89.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p.70.

한편, 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모 취업’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한 전체 영유아 중 53.2%가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였다.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취업모 가정 영유아 보육 비중은 2009년 조사 시 41.8%, 2012년 49.9%에서 2015년 53.2%로 지속 증가하여 왔다(유희정 외, 2009: 153; 이미화 외, 2012: 180; 2016: 248)³⁾.

<표 II-1-3> 보육아동 중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2	2015
취업모 가정 영유아	41.8	49.9	53.2 ³⁾

주: 전체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100% 중 취업모 가정의 영아 36.1%, 취업모 가정 유아 17.1%를 합한 수치임.

- 자료: 1)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이영환·백혜리·이순영·최혜영·송영주·강정원·최은영(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방문면접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53 <표 III-2-9>.
 2)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80 <표 IV-1-4>.
 3)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48 <표 V-1-2>.

3) 영, 유아로 구분하여 재분석한 비율임.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수는 총 321,766명이며, 민간어린이집(45.3%), 가정어린이집(31.7%), 국공립어린이집(10.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5.9%), 직장어린이집(4.0%), 법인단체등어린이집(2.6%), 부모협동어린이집(0.3%)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육교직원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는 4.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3.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현황의 상세 사항은 다음 <표 II-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1년, 2012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비중의 특징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은 각 5.4명, 5.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은 4.5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II-1-4> 보육교직원 일반 현황(2016. 12.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보육 교직원 (비중)	계	321,766	32,937	18,920	8,436	145,609	101,891	979	12,994
	남	14,124	941	1,928	726	9,013	1,330	29	157
	여	307,642	31,996	16,992	7,710	136,596	100,561	950	12,837
	2016	100%	10.2%	5.9%	2.6%	45.3%	31.7%	0.3%	4.0%
	2012	100%	8.3%	6.3%	2.8%	44.4%	35.6%	0.2%	2.2%
	2011	100%	8.9%	3.1%	7.0%	45.4%	33.3%	0.2%	2.0%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2016	4.5	5.3	5.2	5.4	5.1	3.2	4.3	4.0
	2012	5.2	6.3	6.3	6.4	6.1	3.7	4.7	4.8
	2011	5.4	6.4	6.6	6.4	6.3	3.7	4.7	5.0

주: 1)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운영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임.

2) 아동수는 현원(종일, 맞춤, 야간, 24시간, 방과후)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현황. p.5.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현황. p.4.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현황. p.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별 상세 현황은 다음 <표 II-1-5>와 같다. 2016년 12월 기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기타교직원을 포함한 전체 보육교직원의 수는 약 321,766명이다. 그 중 어린이집원장은 40,901명이며, 보육교사는 229,548명이고, 특수교사 2,115명, 치료사 567명, 영양사 934명, 간호사/간호조무사 1,296명, 사무원 1,142명, 조리원 28,999

명, 기타교직원이 16,264명이다(표 II-1-5 참조).

〈표 II-1-5〉 보육교직원 상세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6
총 계		321,766
원장	20인 이하 어린이집	20,910
	40인 미만 어린이집	6,179
	40인 이상 어린이집	13,812
	소계	40,901
보육 교사	담임교사	198,631
	대체교사	1,694
	방과후 교사	301
	시간연장 보육교사	6,124
	24시간 보육교사	244
	시간제 보육교사	129
	보조교사	13,379
	누리과정 보조교사(30시간이상)	4,427
	누리과정 보조교사(30시간이하)	4,619
	소계	229,548
특수교사		2,115
치료사		567
영양사		934
간호사	간호사	605
	간호조무사	691
	소계	1,296
사무원		1,142
조리원		28,999
기타 교직원		16,264

주: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운영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p.164.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은 다음 <표 II-1-6>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총 인원은 32,937명이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18,920명,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8,436명, 민간어린이집은 145,609명, 가정어린이집 101,891명, 부모협동어린이집은 979명, 직장어린이집 12,994명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과 일치하게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우, 원장과는 달리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이어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았다. 특수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장 많으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기타보육교직원은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표 II-1-6〉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기타	
국공립	32,937	2,821	23,253	962	156	128	192	168	3,679	1,578	
사회복지법인	18,920	1,399	12,478	836	330	93	129	149	1,876	1,630	
법인단체등	8,436	801	5,561	90	16	41	54	94	941	838	
민간	145,609	14,261	106,546	217	63	500	762	511	13,475	9,274	
가정	101,891	20,519	71,553	2	1	2	-	43	7,364	2,407	
부모협동	979	158	643	2	-	2	1	3	116	54	
직장	12,994	942	9,514	6	1	168	158	174	1,548	483	
소계	2016	321,766	40,901	229,548	2,115	567	934	1,296	1,142	28,999	16,264
	2012	284,237	42,164	204,946	1,717	520	771	1,118	1,138	22,866	8,997
	2011	248,635	39,546	180,247	1,341	550	706	891	934	17,457	6,963

주: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운영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p.167.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p.153.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p.116.

나. 보육정책 현황

여기서는 2013-2017년의 보육정책을 보육예산⁴⁾에 나타난 구분에 따라 제시하였다. 국비 지원에 의한 보육정책은 현재 크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장,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구분되며, 여기서는 각 구분별 주요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 2013-2017 간 변화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를 우리나라에서는 일

4) 각년도 보육통계 참조

정 자격을 갖춘 자에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번호를 불가피하게 부여받지 못한 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에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294). 단,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종일제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7a: 294).

보육료 지원은 2012년 이전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 만5세를 시작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 커리큘럼인 누리과정의 도입·시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편화된 연혁이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9. 5). 2012년에는 만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도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 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 중인 2013년에는 만3~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취학전 영유아 전연령, 전계층 대상 무상보육이 완성되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6. 11; 2013. 2. 1) 이 시기 동안의 가장 뚜렷한 성과라 평가된다. 이러한 지원 대상 확대 및 보편화는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2. 30).

〈표 II-1-7〉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연혁(2012-2016)

연혁	내용
2012. 3. 1	- 만5세 누리과정 도입: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 무관하게 지원 - 영아 무상보육 도입
2013	- 만3~4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을 통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 및 무상보육 완성
2016	- 만0~2세 맞춤형 보육 시행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6. 28).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7. 14). 「이제 ‘5세 누리과정’으로 불러주세요」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5). 「5세 누리과정’ 고시」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 「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3). 「보육료·유아학비 신청하세요 -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6. 1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2. 1).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2. 30).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나) 보육료 지원 현황

<표 II-1-8>, <표 II-1-9>, <표 II-1-10>, <표 II-1-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별 보육료 지원 현황은 영아법정보육료(①), 영아보육료(②), 장애아보육료(③), 다문화보육료(④), 만5세 보육료(⑤), 방과후 보육료(⑥), 기본보육료(⑦, 만 0~2세 및 장애아)의 7개 부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12월 기준 기본보육료 부분을 제외하고, 보육료 지원 전체 아동은 약 1,433,789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세가 383,287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만1세(315,244명), 만3세(260,673명), 만4세(178,387명), 만5세 이상(156,974명), 만0세(139,2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2011년은 991,310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며, 2012년은 약 35만명 가량 증가한 1,351,232명이 보육료를 지원받았다.

<표 II-1-8> 전체 보육료(기본보육료 제외)

단위: 명

년도	보육료 지원 현황(①~⑥)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2016	1,433,789	139,224	315,244	383,287	260,673	178,387	156,974
2012	1,351,232	175,352	320,003	371,409	185,173	142,523	156,772
2011	991,310	112,933	188,198	244,469	196,531	133,908	115,271

- 주: 1) 보육료 지급 총계는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중 보육료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 수입.
 2) 연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 등록되어있는 보육연령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230.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200.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157.

또한 2016년 12월 기준, 영아법정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10,447명이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세가 5,800명으로 가장 많고, 만1세(3,412명), 0세(1,23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11년과 2012년은 영유아법정보육료로 규정되어 모든 연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1년은 27,955명, 2012년은 24,247명의 영유아가 법정보육료를 지원받았다.

한편, 2016년 영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801,058명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세가 364,869명으로 가장 많고, 만1세(302,089명), 만0세(134,097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3세의 경우 2명, 4세의 경우 1명의 유아가 영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2011년의 경우, 27,955명의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며, 2012년

에는 1,130,652명의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영아법정보육료 및 영아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명

영아(만0~2세)법정(①)					영아(만0~2세)(②)						
년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2016	10,447	1,235	3,412	5,800	801,058	134,097	302,089	364,869	2	1	-

영유아법정(①)								영유아(②)						
년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2012	24,247	1,571	3,697	5,516	6,509	6,891	63	1,130,652	169,108	306,410	354,841	170,399	129,224	670
2011	27,955	2,182	4,301	6,749	7,521	7,201	1	27,955	2,182	4,301	6,749	7,521	7,201	1

- 주: 1) 연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 등록되어있는 보육연령임
 2) 영아(만0~2세)는 '종일형영아(만0-2세)', '맞춤형영아' 자격 아동 포함됨.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p.230-231.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p.200-201.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p.157-158.

2016년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11,872명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5세 이상이 5,686명으로 가장 많고, 만4세(2,504명), 만3세(2,176명), 만2세(1,008명), 만1세(302명), 만0세(196명)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은수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은 14,405명, 2012년은 13,022명의 아동이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았으며,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41,476명이며, 만2세가 11,60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1세(9,441명) 만3세(5,989명), 만4세(5,478명), 만5세 이상(5,265명), 만0세(3,696명)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2011년과 2012년의 다문화보육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은 26,209명, 2012년은 35,224명으로 나타나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수는 감소하였다.

<표 II-1-10> 장애아보육료 및 다문화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명

년도	장애아보육료(③)							다문화보육료(④)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2016	11,872	196	302	1,008	2,176	2,504	5,686	41,476	3,696	9,441	11,607	5,989	5,478	5,265
2012	13,022	298	403	1,252	2,281	2,612	6,176	35,224	4,375	9,493	9,800	5,984	3,795	1,777
2011	14,405	548	699	1,681	2,501	2,294	6,682	26,209	5,438	8,042	5,978	3,747	1,933	1,071

주: 1) 장애아보육료는 '장애아', '장애아방과후', '누리(만3~5세장애아)' 자격 아동 포함됨.
 2) 다문화보육료는 '누리(만3~5세대문화)', '영아다문화(만0~2세)', '종일형영아(만0~2세대문화)' 자격 아동 포함됨.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p.231-232.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p.201-202.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p.158-159.

2016년 누리보육료의 경우, 법정지원이 16,543명, 일반지원이 550,858명으로 총 567,401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방과후 보육료는 법정지원이 812명, 일반지원 723명으로 총 1,53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표 II-1-11> 누리보육료 및 방과후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명

년도	누리(만3~5세)(⑤)			방과후(⑥)		
	계	법정	일반	계	법정	일반
2016(누리 3~5세)	567,401	16,543	550,858	1,535	812	723
2012(만5세)	142,772	6,396	136,376	5,315	2,122	3,193
2011(만5세)	99,334	7,335	91,999	8,177	3,219	4,958

주: 1) 누리(만3~5세)⑤는 '누리(만3~5세법정)', '누리(만3~5세)' 자격 아동이 포함됨.
 2) 방과후⑥는 '방과후(법정)', '방과후' 자격 아동 포함됨.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232.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202.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159.

기본보육료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다(이미화·여종일·엄지원, 2012: 20).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이에 포함되며, 장애아 통합 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 종일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미화 외, 2012: 20).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 보육연령 만0, 1, 2세인 장애아의 경우 연령을 우선 적용하여 각 연령별에 포함한 지원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1-12>와 같다. 2016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 전체 아동 수는 671,361명이고, 그 중 만0세아는 124,055명, 만1세 253,510명, 만2세 293,588명,

장애아 208명이다. 2011년과 2012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은 576,361명이 지원 받았으며, 2012년은 675,929명이 지원 받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I-1-12〉 만0-2세 및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명

기본보육료(⑦)											
년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장애아
		소계	보육료 지원	마자원	소계	보육료 지원	마자원	소계	보육료 지원	미지원	
2016	671,361	124,055	121,481	2,574	253,510	249,714	3,796	293,588	289,034	4,554	208
2012	675,929	163,945	161,841	2,104	247,000	245,856	1,144	264,586	263,749	837	398
2011	576,361	133,889	102,416	31,473	193,625	146,969	46,656	248,166	177,965	70,201	681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233.
 2)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203.
 3)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p.160.

다) 맞춤형 보육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 전면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2. 30.). ‘맞춤형 보육’은 보육료 지원 대상 중 만0~2세반 이용 영아에 대해 보육 수요에 따른 ‘자격 기준’을 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 12시간(07:30~19:30)을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7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구분하고⁵⁾, 이용 시간에 따라 ‘종일반 보육료’, ‘맞춤반 보육료’로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도 차등하여 지원하는 체계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11).

〈표 II-1-13〉 보육료 지원 단가(2017)

단위: 원

자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30,000	344,000	430,000	645,000
			만1세반	378,000	302,000	378,000	567,000
			만2세반	313,000	250,000	313,000	469,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자료: 보건복지부(2017a). 보육사업안내. p.308.

5)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가 큰 아동’은 종일반보육료, 그 외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2017a: 307).

라) 관련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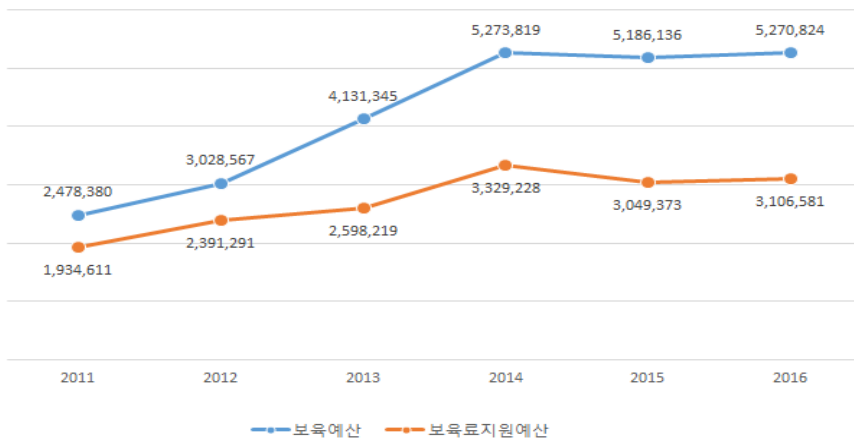
2012년 영아무상보육 시행 및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증가로 2011년 대비 2014년까지 보육료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보육료 지원 예산도 3조원 초반 대에서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II-1-14 참조). 이는 2013년 양육수당 보편적 지원 등으로 2012년 급증하였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가정 내 양육으로 일부 전환함에 따라 감소하고, 전반적인 출생아수 감소경향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 수요의 정체 내지 감소 경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14〉 연도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예산(A)	2,478,380	3,028,567	4,131,345	5,273,819	5,186,136	5,270,824
보육료 예산액(B)	1,934,611	2,391,291	2,598,219	3,329,228	3,049,373	3,106,581
지원 B/A(%)	78.1	79.0	62.9	63.1	58.8	58.9

자료: 보건복지부(2011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자료: 보건복지부(2011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그림 II-1-1] 연도별 국고지원 보육료 예산 추이(2011-2016)

보육료 지원 예산은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육에

산 내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인건비), 어린이집 지원(공공형 등) 관련 예산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총 보육예산이 2011년 대비 2016년에 2.13배 증가하여, 보육료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8.1%에서 2016년 58.9%로 약 20%p 감소하였다(표 II-1-14 참조).

2) 어린이집 기능 보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 2013-2017년간 변화

그간 어린이집 인프라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직장 등 우수한 품질의 공공인프라가 부족하며,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 품질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25). 이에 따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전체 보육 이용 아동 중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이용 아동 비율을 '13년 26%에서 '17년 33%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7-38).

특히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7년까지 총 78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8)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공립 신축·리모델링 등 확충 목표 및 매년 확충 현황은 다음 <표 II-1-15>와 같다.

<표 II-1-15> 국공립어린이집 연도별 확충 목표 및 확충 현황(2012-2016)

단위: 개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진행중)
확충 목표		-	신축 75개소/ 리모델링 19개소	신축 150개소/ 리모델링 19개소	신축 150개소/ 리모델링 19개소	신축 135개소/ 리모델링 19개소	신축 90개소/ 리모델링 90개소
결과	전국(개소)	2,203	2,332	2,489	2,629	2,859	-
	서울시(개소)	690	750	844	759	1,071	
	증감(전국)	-	157	140	140	230	

자료: 보건복지부(2012b-2016b). 각 년도 보육통계. 어린이집 현황(시·군·구)

<표 II-1-15>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2,859개소로 2012년 대비 656개소가 증가하였다. 2017년도 예산 계획(보건복지부, 2016b)에 따르면 총 180개소 확충을 추진하므로, 2017년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2년 대비 총 836개소가 확충되므로 확충목표인 780개소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매년도 확충 내역을 시도별로 살펴볼 경우, 2016년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중 58.1%인 381개소가 서울시에서의 확충으로 편중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2016b).

나)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및 이용 현황

<표 II-1-16>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집 개소수는 2013년까지 증가하고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는 매년 증가하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2%에서 2016년 6.9%까지 약 1.7%p 증가하였다.

이용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는 2012년 1,487,361명에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는 지속 증가하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중 국공립 이용 영유아는 2012년 약 10.1%에서 2016년 12.1%로 2.0%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2b-2016b).

<표 II-1-16>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및 이용 비중 추이(2012-2016)

단위: 개소, 명, %

구분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2012	42,527	2,203	5.2%	1,487,361	149,677	10.1%
2013	43,770	2,332	5.3%	1,486,980	154,465	10.4%
2014	43,742	2,489	5.7%	1,496,671	159,241	10.6%
2015	42,517	2,629	6.2%	1,452,813	159,241	11.0%
2016	41,084	2,859	6.9%	1,451,215	175,929	12.1%

자료: 보건복지부(2012b-2016b). 보육통계.

다)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아이사랑플랜 적용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저조하였던 국공립 확충 예산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진수된 2013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2015년 314억원에 달하였다(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56-57).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목표가 전년도 135개소에서 90개소로 감소하면서(표 II-1-15 참조) 전년 대비 96억원이 감소한 187억인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6c).

〈표 II-1-17〉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예산 추이(2007-2017)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진행중)
국공립 신축(전환 포함)	20,216	1,982	14,865	31,430	31,400	28,300	18,700
리모델링	4,925	475	475	475	500	500	2,200
장애아 전담 신축	2,166	476	476	503	500	500	500

주: 유혜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56 <표 II-1-11>에 추가 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c; 2016c).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어린이집 관리

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1) 2013-2017년간 변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어린이집 위주로 구성된 보육시설의 공급 구조 속에서 민간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수단으로 평가된다(서문희·이혜민, 2014: 75). 평가인증의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제외)으로 어린이집 정원·운영형태별 3종(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 전문)의 인증지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증과정은 참여 확정, 현장관찰, 심의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7a: 235).

우리나라는 호주의 국가인증제도나 미국의 민간인증제도 등을 준거로 지표 개발, 체계 구축,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제도를 도입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75). 2003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등 준비작업 실시,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4: 75).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후 평가인증 참여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참여 시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로의 발생이 우려되며, 평가인증 결과가 실질적인 질 관리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과 불요불급한 평가인증 기준·절차에 대한 현장의 불만 등을 고려하여(보건복지부, 2013: 16),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추진과제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의 세부과제로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퇴출 등 연계’를 추진, 평가인증의 질 관리 기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40).

이를 위해, 성과·수요자 중심의 지표 마련, 평가 의무화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자 하였고(보건복지부, 2013: 42), 평가인증 의무화 및 재정연계를 달성 지표로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7). 2017년에 기존의 자발적 참여 방식에서 평가인증 참여 의무화,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행예정이다.6)

한편, 2014년 12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체계를 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합지표’의 시범 사업과 수정 작업을 거쳐(권미경·이미화·배운진·윤지연, 2016: 11) 2017년 10월 평가인증 참여 확정하여 11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가 적용되게 되었다(한국보육진흥원, 2017).

(2)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2017년 9월 기준 전체 평가인증 기관은 40,264개소이며, 통과어린이집은 32,257개소로 인증유지율은 80.1%로, 2013년 9월 기준 73.8%의 인증유지율에 비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18〉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현황(총괄표)

단위: 개소, (%)

구분	2013. 9	2016	2017. 9
전체	43,770	41,084	40,264
인증유지(%)	32,285(73.8)	32,795(79.8)	32,257(80.1)

자료: 1) 한국보육진흥원(2017. 9). 연도별 평가인증 유지 현황(총괄표). www.kcpi.or.kr에서 인출(2017. 11. 17), 재구성

2)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51 <표 II-5-1> 내용 추가.

2017년 9월 기준 설립유형별 인증율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인증 유지율이 91.0%로 가장 높고, 법인·단체 90.5%인 반면 직장 59.5%, 협동 42.9%로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표 II-1-19〉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2017. 9.)

단위: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40,264	3,109	1,397	776	14,0774	19,703	163	1,042
인증유지	32,257	2,829 (91.0)	1,264 (90.5)	670 (86.3)	11,031 (78.4)	15,773 (80.1)	70 (42.9)	620 (59.6)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7. 9). 연도별 평가인증 유지 현황(총괄표). www.kcpi.or.kr에서 인출(2017. 11. 17), 재구성

6)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등급제 시행」(KTV 국민방송, 2017. 10. 29 보도)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 2013-2017년간 변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 상담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 지원기관이다(보건복지부, 2017a: 419)7).

「아이사랑플랜(2009-2012)」의 추진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등 보육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인프라는 구축된 반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의 부족이 한계로 지적됨에 따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과제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산을 계획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2; 60; 62).

종전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을 하던 ‘보육정보센터’에서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2013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이 확대·개편되어, 지역 내 One-stop 육아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었다(보건복지부, 2017a: 419).

(2)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현황

2012년 기준 48개소에서 2017년 전국 227개 시군구 확대로 전국적 전달체계 구축을 계획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3: 62), 2017년 3월 기준 전국 94개소(중앙 + 시·도 18 + 시·군·구 75개소)에 불과하다(표 II-1-20참조). 특히 2012-2016년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48개소에서 73개소로 최초 227개소 확대 목표의 32.2% 달성에 그친 성과를 보였다. 한편, 같은 기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사업(분소)은 66개소에서 121개소로 증가폭이 컸다.

〈표 II-1-20〉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현황

단위: 개소(분소수)

구분	계	중앙	시·도	시·군·구	부속사업장 ⁷⁾
2012(보육정보센터)	66	1	17(8)	48(56)	(66)
2013	69	1	17(12)	51(57)	(69)
2014	76	1	18(10)	57(84)	(94)
2015	87	1	18(4)	68(104)	(108)
2016	92	1	18(5)	73(116)	(121)

7) 영유아보육법 제 7조

(표 II-1-20 계속)

구분	계	중앙	시·도	시·군·구	부속사업장 ^{주)}
2017. 3	94	1	18	75	-

주: 부속사업장: 장난감 도서관, 체험실 등의 육아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분소).

자료: 1) 보건복지부(2012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v.kr/dl_1000/dl_1000.jsp)에서 인출(2017. 10. 31)

이와 같이 전반적 확충 목표 달성 미흡과 함께 지역별 배치의 격차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군·구 수준의 설치 및 분소 설치에 지역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00% 설치되고, 분소도 36개소로 구별 평균 1.44개의 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는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에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II-1-21 참조).

〈표 II-1-2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시·도	2013		2016	
	설치 시·군·구 수	분소 수	설치 시·군·구 수 (전체 대비 비율)	분소 수
서울	25개 구	25	25개구(100%)	36
부산	-	-	4개 군·구(25%)	1
대구	-	-	1개 구(12.5%)	1
인천	3개 구	4	5개 구(50%)	7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개 구	1	3개 군·구(60%)	1
세종	-	-	-	-
경기	17개 시	23	23개 시(74.2%)	64
강원	1개 시	-	1개 시(5.6%)	-
충북	-	-	1개 시(9.0%)	1
충남	1개 시	1	1개 시(6.7%)	1
전북	-	-	4개 시(28.6%)	-
전남	-	-	-	-
경북	2개 시	1	2개 시(8.7%)	-
경남	1개 시	1	3개 시(16.7%)	4
제주	-	-	-	-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6b). 보육통계. 자료 일부 추출 및 재구성.

4)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가)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및 확충 현황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것을 목적으로(보건복지부, 2017a: 408)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유해미·김아름·박기원, 2015: 58).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선정된다(보건복지부, 2017a: 408).

2011년 679개소에서 매년 증가하여(유해미·김아름·박기원, 2015: 28) 2017년 4월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총 2,051개소가 선정·운영되고 있고⁸⁾, 2017년 말까지 전체 2,300개소 내외 운영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7b).

절대 개소수로는 경기 지역에 가장 많아, 전체의 27.9%가 몰려 있다.

〈표 II-1-22〉 공공형어린이집 유지 현황(2017. 4. 기준)

단위: 개소(%)																
합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51	122	101	111	73	136	83	14	582	109	83	103	104	64	139	147	112
(100.0)	(5.9)	(4.9)	(5.3)	(3.5)	(6.5)	(4.0)	(0.7)	(27.9)	(5.2)	(4.0)	(4.9)	(5.0)	(3.1)	(6.7)	(7.0)	(5.4)

자료: 한국보육진흥원(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www.kcpi.or.kr)에서 인출(2017. 6. 1.).

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 분담

2017년 4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 중 약 7.1%인 94,906명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23〉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2017. 4. 기준)

단위: 명(%)					
구분	가정	민간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전체
전체보육아동수	277,521	683,894	42,269	91,900	1,338,475

8)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공공형어린이집 유지 현황.

(표 II-1-23 계속)

구분	가정	민간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전체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14,503 (5.2%)	79,666 (11.6%)	688 (1.6%)	49 (0.1%)	94,906 (7.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www.kcpi.or.kr)에서 인출(2017. 6. 1.).

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 추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에 따라(보건복지부, 2013: 25)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확대되었고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예산도 매년 증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2011년에는 79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듬해인 2012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총 보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II-1-24 참조).

〈표 II-1-24〉 연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예산(A)	2,478,380	3,028,567	4,131,345	5,273,819	5,186,136	5,270,824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액(B)	7,984	16,942	30,049	38,528	44,071	48,730
	B/A(%)	0.3%	0.6%	0.7%	0.7%	0.8%	0.9%

자료: 보건복지부(2011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5) 가정 내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2013년 취학전 영유아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가) 2013-2017 간 변화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7월 도입되었다.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양육수당은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한정됨에 따른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⁹⁾. 한편 당시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의 영아(만0~1세; 24개월 미만)에 한정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 5. 6)

9)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9. 5. 6).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0~1세)에게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은 도입 이후 지원 대상(연령, 소득계층) 및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에는 연령대상이 생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일괄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10~20만원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 12. 30).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조에 따라 당초 2013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계획하였으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 18), 2013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취학전 영유아 전계층으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격적으로 확대함을 밝혔다¹⁰⁾. 또한 한국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에게도 2013년 3월부터 국내 체류 영유아와 동일하게 양육수당이 지원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3. 11).

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소득계층을 불문하고(전계층)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a: 327). 이러한 조건의 영유아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는 ‘농어촌양육수당’을 지원하며(보건복지부, 2017a: 327) 양육수당 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표 II-1-25〉 연령별 양육수당

단위: 원, 개월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만원	12~23	177천원		
24~35	10만원	24~35	156천원		
36개월	10만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천원
10만원	48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7a). 보육사업안내. p.327.

도입 이후 지속적인 지원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 등의 확대·상향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수는 2010년 51,838명에서 2011년 89,756명, 그리고 대상이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3. 11). 「한국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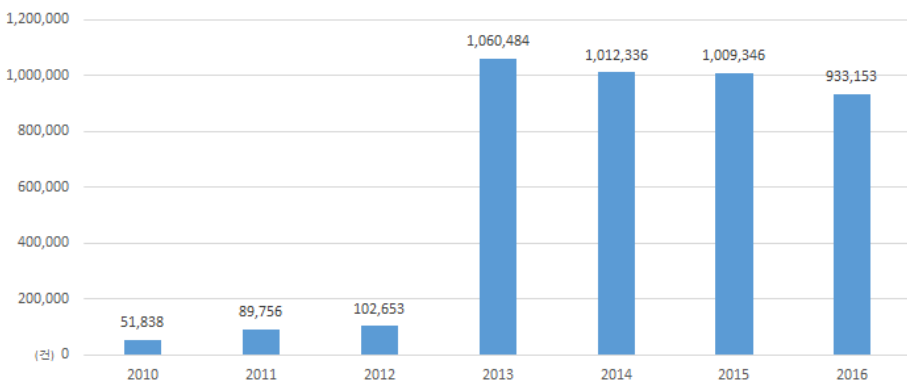
취학 전 전연령, 전소득 계층으로 확대된 2013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서 2015년 1,009,346명, 2016년 기준 933,153명의 아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전연령 계층으로 확대된 후에도 36개월 이상 유아보다는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수급 아동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양육수당은 주로 영아의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표 II-1-26〉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2010-2016)

단위: 명(%)

구분	전체	0~11 개월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71 개월	72개월 이상
2010	51,838 (100.0)	24,447 (47.2)	27,391 (52.8)	-	-	-	-	-
2011	89,756 (100.0)	36,662 (40.9)	38,450 (42.8)	14,644 (16.3)	-	-	-	-
2012	102,653 (100.0)	37,727 (36.7)	44,128 (43.0)	18,486 (18.0)	1,178 (1.1)	573 (0.6)	381 (0.4)	180 (0.2)
2013	1,060,484 (100.0)	385,585 (36.4)	346,952 (32.7)	145,049 (13.7)	63,164 (6.0)	38,360 (3.6)	40,445 (3.8)	40,929 (3.9)
2014	1,012,336 (100.0)	383,389 (37.9)	309,908 (30.6)	145,075 (14.3)	60,126 (5.9)	39,152 (3.9)	34,803 (3.4)	39,883 (3.9)
2015	1,009,346 (100.0)	386,361 (38.3)	310,212 (30.7)	132,195 (13.1)	66,546 (6.6)	40,139 (4.0)	37,894 (3.8)	35,999 (3.6)
2016	933,153 (100.0)	363,178 (38.9)	305,911 (32.8)	117,302 (12.6)	47,840 (5.1)	34,711 (3.7)	30,609 (3.3)	33,602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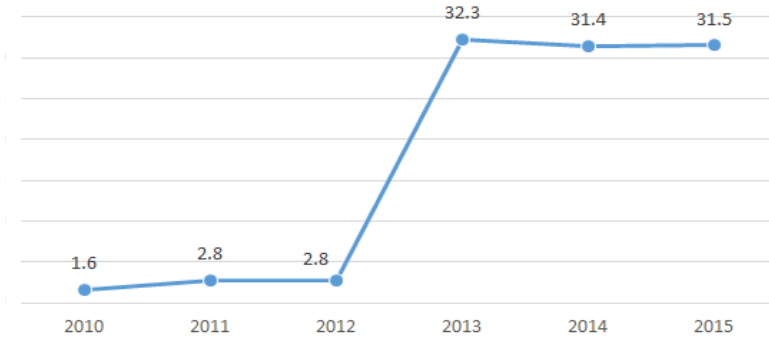
주: 일반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수급아동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주: 일반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수급아동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그림 II-1-2] 가정양육수당 지원아수 변동 추이(2010-2016)

2013년 이전 양육수당은 만0~2세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내 양육 지원 수단이었으나, 2013년 3월부터 취학 전 전연령 영유아에 대한 소득계층 무관한 보편적 지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양육수당 수급 아동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II-1-3]에 제시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양육수당 수급 아동수는 영유아 주민등록인구의 2.8%에 불과하였으나 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2013년에는 수급아동 비율이 32.3%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2010b-2015b). 각년도 보육통계.

[그림 II-1-3] 양육수당 수급자 비율 추이(2010-2015)

다) 관련 예산 현황

양육수당 수급 대상 및 지급 수준 확대에 따라 보육 예산 중 양육수당 지원 사업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 도입 초기인 2009년 32,390백만원에 불과하였던 양육수당 지원예산은 2010년 65,664백만원, 2013년 880,950백만원으로 급증한 후 2016년 기준 1,219,200백만원으로 37.6배 증가하였고, 보육예산 대비 비중도 2009년 1.9%에서 2016년 23.1%로 증가하였다(권미경 외, 2016: 66-67).

<표 II-1-27>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사업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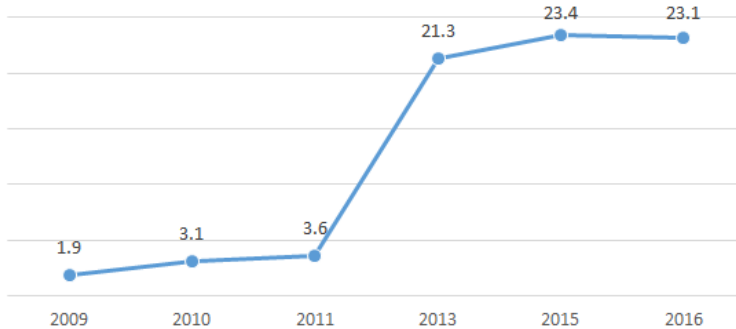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3	2015	2016
보육예산(A)	1,710,430	2,127,510	2,478,480	4,131,345	5,186,136	5,270,824
양육수당 예산액(B)	32,390	65,664	89,794	880,950	1,211,510	1,219,200
B/A	1.9	3.1	3.6	21.3	23.4	23.1

자료: 1)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1 <표 II-75> 인용함.

2) 보건복지부(2009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3) 권미경 외(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7 <표 III-2-4> 축약함.



자료: 보건복지부(2009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그림 II-1-4] 보육예산 중 양육수당 예산 비중(%) (2009-2016)

6) 보육예산

보육통계 자료에 의하면(보건복지부, 2016b), 2017년 총 보육예산은 5,373,45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와 시간차등형보육을 포함하는 '보육료 지원 부문'은 총 3,138,01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4%를 차지한다. 또한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환경개선과 어린이집 확충을 포함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28,817백만원으로 전체의 0.5% 수준이다.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원 양성 지원, 부모모니터링 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등 '어린이집 관리' 예산은 28,817백만원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체의 17.8%인 957,679백만원 투자된다. 마지막으로 '가정양육지원 사업' 예산은 1,224,184백만원으로 전체의 22.8%의 비중을 나타낸다(표 II-1-28 참조).

2013년부터 2017년의 국비기준 보육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총 예산의 경우, 2014년에 2013년 대비 약 1,000,000백만원 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4년 이후부터 약 5,000,000백만원 이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II-1-28 참조).

세부 부문별 보육예산 추이는 [그림 II-1-5]와 같다. 먼저 보육료 지원의 경우, 2014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이 대폭 상승하여 3,000,000백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이 2014년 도입되어 2014년 3,800백만원, 2015년 7,507백만원, 2016년 11,959백만원, 2017년 8,771백만원 예산으로 편

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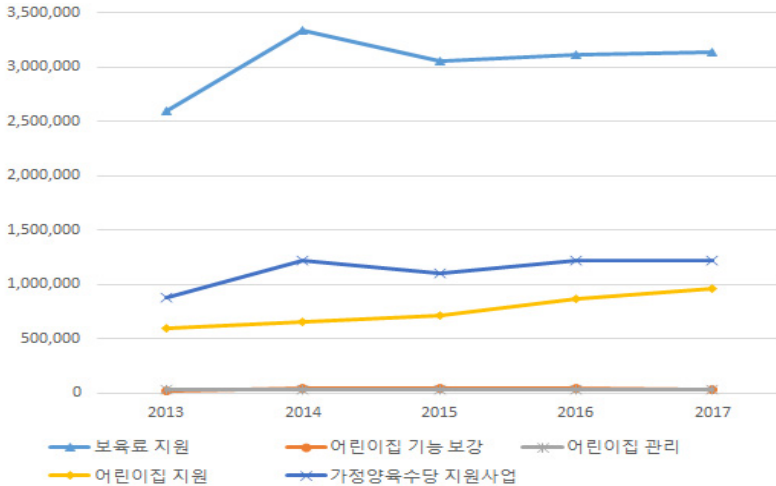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문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어린이집 관리부문 역시 2013년 대비 2017년 예산이 소폭 감소되었다. 반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 역시 2014년 대폭 증가하여 2017년까지 1,200,000백만원 대로 편성되고 있다(표 II-1-28 참조).

〈표 II-1-28〉 2013-2017 연도별 보육예산(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율)
전체	4,131,345	5,273,819	4,943,994	5,270,824	5,373,451	(100.0)
-보육료 지원	2,598,219	3,333,028	3,056,880	3,118,540	3,138,013	(58.4)
영유아보육료 지원	2,598,219	3,329,228	3,049,373	3,106,581	3,129,242	
시간차등형보육 지원	-	3,800	7,507	11,959	8,771	
-어린이집 기능 보강	23,610	42,432	40,233	36,681	28,817	(0.5)
어린이집 기능보강	23,610	7,144	6,787	6,447	6,447	
어린이집 확충	-	35,288	33,446	30,234	22,370	
-어린이집 관리	36,014	26,868	26,461	30,855	28,817	(0.5)
보육사업관리	4,059	1,645	1,405	7,822	3,30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636	5,662	4,792	11,267	9,508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5,054	2,054	1,956	2,731	2,727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02	208	-	-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11,395	6,911	6,192	-	-	
보육실태조사	-	-	792	-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1,288	1,324	1,192	1,192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	500	200	190	174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6,668	8,600	9,800	7,653	7,856	
-어린이집 지원	594,908	656,172	718,652	865,548	957,679	(17.8)
보육돌봄서비스(중사자안전비)	444,463	467,111	496,945	612,316	901,852	
어린이집 지원	120,396	150,533	177,636	204,502	-	
공공형 어린이집	30,049	38,528	44,071	48,730	55,827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80,950	1,215,319	1,101,768	1,219,200	1,224,184	(22.8)

자료: 보건복지부(2012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보육예산.



자료: 보건복지부(2012b-2016b). 각년도 보육통계, 보육예산.

[그림 II-1-5] 2013-2017 연도별 보육예산 추이

2. 보육계획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한국의 보육정책은 1920년대 이후 구빈적 성격을 가진 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미화 외, 2013: 37).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인 1962년부터이다. 그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아동의 복리 증진, 저출산 해결이라는 사회적 흐름 하에 사업 내용이 조금씩 진일보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관련 법령 및 중앙 정부 주도의 보육계획을 중심으로 한국 보육계획의 발전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가. 탁아사업기 (1920-1990)

1) 내용¹¹⁾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962년부터 탁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탁아사업은 현재 보육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11) 본 절은 새싹플랜(여성가족부, 2006)의 부록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요약 및 정리한 것임.

정책발전에 있어 시초라 할 수 있다. 물론 1921년 사회사업을 최초로 실시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태화여자관)에서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탁아라기보다는 구빈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미화 외, 2012: 32).

1962년부터 1981년까지 보건사회부가 주관하는 탁아사업은 어린이집 691개소로 증가하여 운영하였고, 그 이후 1981년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탁아사업 역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다. 이는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여성 취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것으로 해당 15년간 탁아증설시행계획에 의한 것이다(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2013: 384). 그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어린이집을 새마을유치원으로 흡수하면서 문화교육부가 관리운영주체가 되어 탁아사업을 운영한다. 이때는 법 제정과 장학지도는 교육부에서, 시설운영과 관련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주관 운영하도록 탁아사업의 관리 주체가 세분화되어 있었다(이미화 외, 2012: 32).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탁아제가 도입되었는데 직장탁아제는 노동부가 관리운영주체로 기능한다. 그 이후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사업의 실시 근거를 다시 규정함으로써 보건사회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이미화 외, 2012: 32-33).

2) 평가

한국 보육사업은 1990년대 이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한 탁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1962년 이후 본격적으로 탁아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 관리운영주체가 문교부와 보건사회부로 순환적으로 이관되면서 운영의 근거에 있어 혼동이 시작되었다.

아동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원화 되면서 각각 다른 개념으로 이해된 것 역시 이러한 역사에서 시작한다. 특히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에 보육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틀 안에 보육이 포함되면서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의 개념인 보육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을 가진다. 아울러 보육 욕구의 지속적 증가로 직장탁아제가 도입되었으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보육사업 관리운영주체의 잦은 변동과 다양화는 보육사업의 종합적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2-1>와 같다.

<표 II-2-1> 탁아사업 실시기 주요 내용 요약(1920-1990)

구분	탁아사업 실시기 특징
기본방향	· 1962년 이후 여성 취업의 증가에 대응
관련법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보육료 지원	· 없음
일가정양립	· 여성 취업 지원
전달체계	· 노동부에서 보건사회부로 관리 운영 이관
한계	· 보육시설과 유지원 이원화 역사의 시작 · 관리운영주체의 잦은 변동 · 저소득층 위주 탁아

나. 보육사업 태동기 (1991-2003)

1) 내용¹²⁾

1991년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보육사업은 전격적 태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동 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은 보건사회부가 본격적으로 담당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탁아에서 보육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때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으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놀이방이 법적인 보육시설로 범주화되게 되었다(김지현 외, 2008; 조복희 외, 2013: 386에서 재인용). 한편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하에 무료 또는 실비로 기본서비스 제공과 그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 하에 복지육구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공포하였는데(정혜선 외, 2003; 조복희 외, 2013: 387에서 재인용), 이에 상응하여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공보육 시설이 1,673개, 민간 7,134개, 직장보육시설이 121개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보육 사업이 팽창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미치지 않는 민간 시설의 확충이 대다수를 이룬 결과를 가

12) 본 절은 조복희 외(2013)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요약 및 정리한 것임.

져왔다(보건복지부, 2009; 조복희 외, 2013: 387에서 재인용).

그 이후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1998년 영아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을 강화하고 민간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비 지원 강화, 보육료 특별 소득 공제 신설 등을 실시하면서 보육정책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조복희 외, 2013: 387).

2) 평가

동 시기는 보육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단계로 보육 사업의 확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보육시설의 양적 확장과 함께 질적 향상까지 도모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의 개념이 확립되었고 기존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탁아 개념에서 탈피하여 보육의 국가 책임을 일부 인식하게 된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팽창 하에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라는 계획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였다. 단순한 양적 팽창은 국가 미지원 시설인 민간 시설의 확장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무차별적인 확장은 서비스 질의 저하 및 보육 공급 구조의 민영화를 촉발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보육 사업이 시작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이 시기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2-2>와 같다.

<표 II-2-2> 보육사업 태동기 주요 내용 요약(1991-2003)

구분	보육사업 태동기 특징
기본방향 및 의의	· 탁아에서 보육으로 인식 전환 및 기능 확대 ·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보육료 지원	· 소득계층별 차등적 지원
일가정양립	· 인식 정립 시작
전달체계	· 보건사회부 주관 · 민간 및 공공 보육 사업 확대 및 다양화
한계	· 민간시설 위주 확충으로 공급구조의 민영화 · 서비스 질 저하

다. 육아지원정책 정책적 계획 수립 시작(2004-2005)

1) 내용¹³⁾

노무현 정부 이후 영유아보육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선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주관부서가 이전되었고 보육 정책국 하에 보육지원과와 보육기획과 신설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 되었다(서문희 외, 2009: 7). 특히 영유아보육법의 2004년 전면 개정으로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2004년 6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제 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이 마련되었다(이미화 외, 2012: 33). 구체적으로는 시설설치와 종사자 배치기준의 강화, 보육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소득수준별 육아비용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다(이미화 외, 2012: 33).

2005년 5월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2차 육아지원정책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동 방안은 1차와 달리 출산을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이미화 외, 2013: 33), 보육과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육아지원정책을 구체화 하였다. 표준보육료 산정,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 이후 동 년도 12월부터는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의 전문화를 도모하였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이미화 외, 2013: 33).

2) 평가

2004년은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본격적으로 보육정책이 수립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존과 달리 보육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책 사업으로의 확대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의제로 보육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이 시기에는 최초로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각 연도별로 두 차례 수립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였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중심의 지원 강화로 보육 수요자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이

13) 본 절은 세씩플랜(여성가족부, 2006)의 부록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요약 및 정리한 것임.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육의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로 보육교사 수준과 질 관리,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화 등의 기초적 작업을 수행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육아정책 지원 사업 시작기 주요 내용 요약(2004-2005)

구분	육아정책 지원 사업 시작기 특징
기본방향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의 공공화 및 전문화 추구 · 육아지원정책의 정책적 계획 수립,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육아지원정책 방안(2004)’ · ‘제2차 육아지원정책 방안(2005)’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료 산정, 기본 보조금 신설 · 소득수준별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의 전제로 보육이 자리매김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운영 · 공공보육 확대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중심 지원 · 수요자에 대한 인식 미비

라.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수립 시작: 저출산과 보육정책 연계 (2006-현재)

1) 내용¹⁴⁾

2006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시되었다. 동 계획의 실시와 함께 보육 내실화를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보육과 관련된 과제는 총 96개 과제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분야에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가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20).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차 계획을 실시하였고 저출산 분야를 더욱 구체화하여 1) 일가정 양립 일상화, 2) 결혼 및 출산부담 경감,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가정 양립 일상화와 관련

14) 본 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6)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요약 및 정리한 것임.

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 형태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고, 가정에서 부모가 육아를 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 결혼 및 출산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보육 및 교육비 전액 지원 확대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20).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 3차 계획에서는 기존의 2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출산에 대해 거시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보육 투자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육아를 지원하며 단순히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배려를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보육계획으로는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교육 개혁을 병행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성평등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주력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55). 특히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함께 확대하면서, 국공립과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81-82). 더욱이 3차 계획부터는 민간 베이비시터의 질 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대한민국정부, 2016: 86)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보육의 질 제고에도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2-4〉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중 보육 관련 내용 정리

구분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돌봄 관련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확대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방과후 학교 확충		초등돌봄 질 제고 및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비율 37%
일가정양립 관련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남성 육아 참여 일상화
		유연한 근로 형태 확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저출산 예산(조원)	19.7	60.5	108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p. 20, p.50, pp79-102참고하여 정리함.

2) 평가

동 계획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보육' 및 돌봄 정책을 활용하였다. 즉,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기조 하에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이후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상보육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로써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21).

그러나 부모의 근로 형태를 고려한 세밀한 서비스 제공체계 미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 미흡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대한민국정부, 2016: 21). 특히, 취업모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과 근로시간의 불일치로 보육서비스 만족도 저하와 별도의 사적 양육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초래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21). 그 밖에도 무상보육의 전면화를 내세우면서 서비스 질 관리는 미흡하여, 아동학대 및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상존함에 따라(대한민국정부, 2016: 22) 부모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의 마련이 향후 요구된다.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역시 보육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성과로는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를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22). 그러나 장시간 근로 관행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스템 접근은 문화적 한계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대표적 일·가정양립정책인 육아휴직은 근로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이용 격차가 나타나며, 직장어린이집 이용도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정부, 2016: 24-25).

마.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기: 보육계획 내실화 (2006-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정기적인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의무가 명시된 후 한국의 보육계획은 체계적으로 그 외형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한다. 2006년 7월 여성가족부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 수립 이후 보건복지부

주도로 「아이사랑플랜(2009-201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등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1) 새싹플랜 (2006-2010)¹⁵⁾

가) 내용

「새싹플랜」은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정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회 구조,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와 맞물려 보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나온 한국 최초의 보육 중장기 계획이다. 동 계획은 영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중요성은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한다는 요구와 함께 수립되었는데(이미화 외, 2012: 39), 향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다. 새싹플랜의 기본 방향은 1)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소로 확충하고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을 2005년 46%에서 2010년 60%로 확대, 2)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 확대로 보육 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 아동을 전체의 80.8%까지 상향, 3) 아동수에 따른 기본보조금 지원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4)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 5)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11). 특히, 전체 보육 아동의 70%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는데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11).

더욱이 만5세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에게는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를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고 법정 및 차상위계층은 2006년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그 이외 계층은 소득 수준별 20~80% 지원으로 보육료 지원의 소득 규모별 차등화를 명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21).

한편 동 계획으로 영아반 운영비를 상향 조정하고 만0세아의 교사 대 아동

15) 본 절은 새싹플랜(여성가족부, 2006)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요약 및 정리 한 것임.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여성가족부, 2006: 26), 기존 1:5였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조정하여 개별 아동들에 대한 보살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영아 보살핌 확대 차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소규모화를 검토하면서도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26).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 시설 입소 순위 고려 시 취업부모에게 우선적인 입소권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보육 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 차등화를 계획에 담았다(여성가족부, 2006: 28).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보육교사 지원을 매년 1천명 이상 확대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34).

그 외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안전 및 영양 관리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장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57). 표준보육과정 역시 법제화하면서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전문적인 과정이 도입된 것이다(여성가족부, 2006: 65). 그 밖에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행정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72).

나) 평가

새싹플랜은 한국 최초의 보육중장기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보육 체계 확립 지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 공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보육지원 정책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표준보육과정을 도입하여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함께 도모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보육의 의미를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육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였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시스템 도입, 보육 교사에 대한 질 관리, 보육 행정 업무의 체계화 등 보육의 내용 뿐 아니라 관리운영체계를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함에 있어 현대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는 상이함을 가진다. 이 중 보육교사 자격 관리, 행정력 강화 등은 OECD의 정책 권고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이미화 외, 2012: 41-42)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새싹플랜 이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모두 포함한 정책 데이터의 수집

과 영유아보육과 교육 관련 정책 연구기관을 설치하여(여성가족부, 2005; 이미화 외, 2013: 43에서 재인용)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 아이사랑플랜 (2009-2012)¹⁶⁾

가) 내용

아이사랑플랜은 새싹플랜의 추진 기간 중(2006-2010)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참여정부의 공보육에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새롭게 보육중장기 방향을 개편한 계획이다(이미화 외, 2012: 44).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보완된 아이사랑플랜은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하여 영유아중심, 국가책임제보육, 신뢰구축의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1)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2) 수요자 맞춤 지원, 3)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4)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5) 전달체계 효율화, 6)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틀이 마련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9).

특히 동 계획으로 인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2011년 보육료를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여 2008년 차상위(소득하위 15%), 2009년 소득하위 50% 보다 폭 넓은 보육료 지원을 감행하였다. 양육수당 역시 2009년 도입한 이후 지원 대상 및 그 금액을 확대하였다. 이에 324억원이 소요되던 금액이 2012년 기준 1,123억원이 소요되었고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 및 만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으로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8).

또한 보육시설 확충 역시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뿐 아니라 국공립 수준의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었다(2012년 기준, 778개소). 이와 같은 성과는 동 계획이 보육 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육인프라 구축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3: 8). 또한 2011년에는 평가인증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 참여 확대 및 인증 결과와 지원을 연계하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보건

16) 본 절은 주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3)의 내용 중 'Ⅲ.아이사랑 플랜의 성과와 한계' 부분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요약 및 정리한 것임.

복지부, 2013: 11). 이와 더불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되었다. 2009년 응급처치 관련 시설 도입, 2010년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관리, 2011년 급식 운영, 2012년 건강관리 매뉴얼 도입으로 보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여 질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12).

수요자맞춤지원이라는 계획은 가구 여건별 수요자 맞춤 지원 확대로 실현되었다. 맞벌이 우선입소 기준이 2순위에서 2010년 1순위로 조정되었고 위촉계약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도 취업 증명 서류로 인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였다. 다문화 가정과 장애아 보육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 지원을 강화하였고,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강화, 긴급한 상황에 파견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는 등 철저히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9).

이 시기에는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이사랑카드라는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기관 지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부모에게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보육진흥원을 2010년 설치하여 보육교직원 자격을 관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보육지원과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었다(보건복지부, 2013: 13).

나) 평가

아이사랑플랜은 우선 보육의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보건복지부, 2013: 8) 기존의 계획보다 진일보한 특징을 가진다. 아이사랑플랜 도입 전에 양적인 재정 지원 확대에는 큰 진전이 있었으나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이 여전히 많고, 보육 정책 대상이 시설 아동에 한정되며,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의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1-24). 그러나 아이사랑플랜은 공공형어린이집 도입 및 평가인증 확대로 보육의 질 제고, 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를 동시에 실행하여 보육 지원의 틀을 확립하였다고 평가된다(보건복지부, 2013: 8).

다만 동 계획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보육서비스 질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어 향상되지 못하였다. 특히 각종 비리와 부조리 등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수요자와 정부간 불신을 초래하였고 대규모 재정 투입과 서비스 질의 향상의 괴리를 가져왔다(보건복지부, 2013: 14).

아이사랑플랜 실시 이후 영아의 시설 보육 의존이 심화되었다는 것 역시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모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지방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결국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은 무상보육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보다 앞서 나간 것이었고, 결국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저하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15).

종일제 보육이 중심이 되어 획일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12시간 종일제 지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저하시키는데 일조하였고(보건복지부, 2013:15) 영아의 발달 시기에 기관 생활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민간 중심의 보육시장 형성은 낮은 진입 규제로 생계형 시설이 증가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의 둔화로 이어졌다. 결국 보육 예산 증가로 인해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보다는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온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16). 이와 더불어 그간 보육교사 질 향상과 관리를 위해 애써왔으나 인터넷을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장시간 근로 등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보건복지부, 2013: 17)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생활의 질 역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은 행정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으나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인프라 구축에는 실패하였다. 보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행정인프라는 갖추어졌으나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능은 정작 없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 19). 결국 기관 간 중복, 기관 기능 미흡 등의 문제는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다.

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3-2017)¹⁷⁾

가) 내용

아이사랑플랜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동 계획은 아이사랑플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충보다는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부모선택권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1).

‘아이의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하에 ‘안심보육’

17) 본 절은 주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3)」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요약 및 정리한 것임.

을 표방하게 되는데 1)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최우선 하고, 2)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며, 3)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국가 책임 보육이라는 것은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을 반영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2. 31.) 이에 정책의 지원 대상을 시설 이용 영유아 중심에서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가정양립 정책과 함께 가계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였는데 기존의 선별적 지원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가보육, 국가양육의 틀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적 확대가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향상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 수혜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4).

구체적으로는 소득 구분없이 0-5세 전계층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아동, 부모,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육 여건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4).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직장 등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보육교직원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한국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5).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의 추가부담 경감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함으로서 변화한 보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단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특별활동비 역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획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0).

특히 동 계획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는데 실수요와 상관없이 종일제 시설 서비스로 몰리고 있는 것을(보건복지부, 2013: 31) 방지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확대, 보육료 등의 차등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4). 즉, 종일제 무상보육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업주부, 맞벌이,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하여 보육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4).

행정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원스탑으로 보육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온라인으로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2014년부터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능 여

부 및 현황을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2-33). 그 외에도 하원체계 및 전염병 관리 등을 위한 영유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등(보건복지부, 2013: 50) 전산 인프라 강화에도 집중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체 보육 아동 중 직장 및 국공립, 공공형 이용 아동 비율을 2013년 6월 기준 26%에서 2017년 33%까지 확대하도록 하였고 지역별 균형 배치를 도모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8). 2013년 국공립 75개소, 매년 150개소씩 확충하여 총 675개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참여를 유인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집중하였는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와 가족 친화기업 인증에 반영하여(보건복지부, 2013: 39) 전반적인 평가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형 어린이집’을 계획하였는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9).

나) 평가

2013년 전 소득계층 무상보육 실시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보건복지부, 2013: 1)라는 아젠다 실현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우선 무상보육 실시, 수요자 맞춤형 보육 실시라는 정책적 변동을 수요자 입장에서 혼동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 집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였다. 동 계획의 여러 가지 실현 과제 중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라는 무상보육이 먼저 실현된 후,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구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적 노선에 대해 혼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종일반, 맞춤반 운영의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자는 눈치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보육재정을 서비스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취지였으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6. 3)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 무상보육이라는 프레임으로 형성된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부모 입장에서 서비스에 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

으로 연결되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으로 인해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이라는 계획이 무색하게 되리만큼 수요자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미흡하였다.

4) 보육계획의 비교

이상 보육계획 수립 시기의 3차례의 보육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II-2-5>와 같다.

<표 II-2-5> 중장기 보육계획 비교

구분	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	제2차 중장기 기본계획 (2013-2017)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정부 재정 분담 강화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다양한 수요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아동중심 보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 수요자 맞춤 지원 ·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전달체계 효율화 ·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우선시 · 보육 국가 책임 실현 ·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별 차등보육료 지원 ·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지원 확대 · 양육수당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전 소득계층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적정화: 표준보육비용 계속 ·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적 확대
일가정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시 취업모 우선 배려 · 시간연장보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입소 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완화 · 시간연장보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와 홀벌이 보육시간 차등화: 맞춤형 보육 실시
전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담당 공무원 확충 및 보육행정시스템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공제회 설립 · 인건비 지원과 연계한 서비스 계약제 도입 검토 · 보육진흥원 설립하여 보육교직원 자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적 확산

자료: 1)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2)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3)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바. 문재인 정부 보육(아동) 관련 정책 분석

여기서는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진수된 문재인 정부의 보육(아동)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은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교육정책 공약이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 교육정책 관련 주요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전 제시하였던 대부분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유지되었으나,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 및 지원 상향’,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은 국정과제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발표 전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 공약 중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정부부처와 지자체간의 책임 소재를 ‘국가(중앙부처)’ 책임 확대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었다¹⁸⁾.

‘아동수당’ 도입 또한 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아동 관련 정책으로,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¹⁹⁾ 만0~5세아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발표되었는데(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4; 81), 현재 교육정책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만0~5세아를 대상으로 한 ‘가정양육수당’과의 성격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등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점과 양육수당 수혜 가정에는 중복적 현금지원 성격이 있어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연령대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경감하여야 할 대상인지,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효과성과 정책간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40%라는 명확한 잣대로 제시하였는 바(표 II-2-6 참조), 그간 공공형, 직장, 사회복지 법인 등의 유사공공성을 갖춘 국공립 외 시설을 포함하여 추진되었던 공공성 확대 정책이(보건복지부, 2013: 27) ‘국공립’ 위주로 확실히 전환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밖에 명확히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라는 표현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18) 2017년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설명함(「교육부“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유보통합은 아직: 파이낸셜 뉴스, 2017. 5. 25)

19) 「내년 중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신설」(중앙일보, 2017. 5. 25)

서 제시되고 있고, 세부 실천과제로 교사 처우개선, 자질 향상, 자격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부처통합 단계로 완결보다는 이전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공고히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사회서비스 공단의 직원으로 보육교사 등을 채용, 지역 내 사회서비스 시설(예: 국공립어린이집)에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인데, 이는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총체적 개편과 맞물린 문제로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보육교직원을 여타의 사회서비스 인력과 동일하게 보고 사회서비스 공단의 인력으로 채용,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 배치를 하겠다는 발상은 '유보격차' 해소 중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 자격체계 개편'과 이로 인한 교사 수준의 격차 해소와는 정확히 배치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국정과제 내에서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유사하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보육서비스는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언급되지 않는데(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1), '일-가정 양립 지원'의 형태로 직접 표현되지 않더라도 맞벌이 취업 가구가 보육 서비스의 실수요자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2-6〉 더불어민주당 보육(아동) 관련 정책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보육(아동) 관련 국정 과제

보육(아동) 관련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보육(아동) 관련 국정과제	공약 → 국정과제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p>☑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양육 지원 강화 -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 '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현실화 삭제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 공단 관련 내용으로 이동

(표 II-2-6 계속)

보육(아동) 관련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보육(아동) 관련 국정과제	공약 → 국정과제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채용하고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배치 •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을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상향 	<p>㉞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보육인력(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 및 지원 내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로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를 통해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p>㉟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 -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교사 자질 향상, 교사 처우개선('18),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삭제

자료: 1) 더불어민주당(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발췌, 요약.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사. 소결

한국의 보육계획은 보육이라는 개념이 관련법상 명시된 이후 최근 약 10여년간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사항인 정기적인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 의무로 한국의 보육계획은 구체화되고 진일보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보육이 영유아를 포괄한 아동 중심의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보육정책이 같은 맥락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전제를 가짐과 동시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한국의 보육계획은 현재 저출산 해소라는 국가 아젠다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모두 포괄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계획에서 수없이 지적되어 온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정치적, 사회 환경적 이유로 달성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되 변화한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즉각 반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지난 10년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보육계획을 요약하면 1)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2) 국가의 양육 책임 강화, 3) 수요자 맞춤형 보육의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양육 책임 강화라고 하기엔 시장의 참여가 무제한적 확대되었으며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목적 달성을 평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이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들의 장단점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증 자료를 근거로 수립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중기 보육 수요 관련 사회·정책 환경

가. 양적 측면의 보육 수요 관련 환경

1) 영유아 인구 전망

가)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5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2017a, b)에 따른 2007년부터 2015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3-1>, [그림II-3-1]과 같다.

먼저 출생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493,189명이 출생하였으며, 2009년 444,849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0년 470,17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484,55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출생인구는 감소하여 2015년까지 약 43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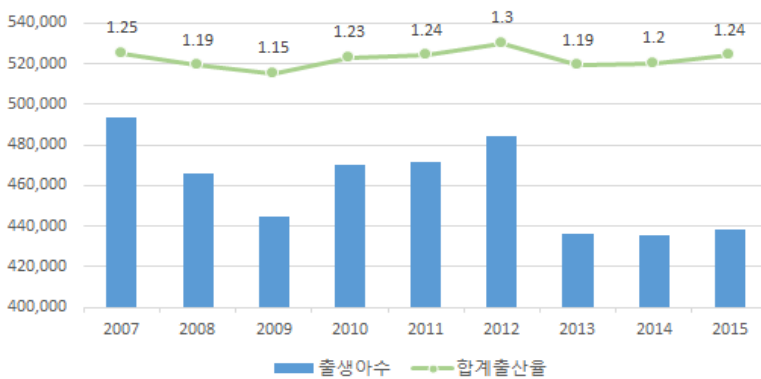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5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2007년에서 2015년까지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 1.15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1.19명으로 다시 감소, 2015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1.24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II-3-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5)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생인구	493,189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남자 (명)	253,999	240,119	229,351	242,901	242,121	248,958	223,883	223,356	224,906
여자 (명)	239,190	225,773	215,498	227,270	229,144	235,592	212,572	212,079	213,514
합계 출산율	1.25	1.19	1.15	1.23	1.24	1.30	1.19	1.20	1.24

자료: 1) 통계청(2017a). 인구동향조사. 전국 성/월별 출생.
 2) 통계청(2017b). 인구동향조사. 전국 합계출산율.



자료: 1) 통계청(2017a). 인구동향조사. 전국 성/월별 출생.
 2) 통계청(2017b). 인구동향조사. 전국 합계출산율.

[그림 II-3-1]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 추이(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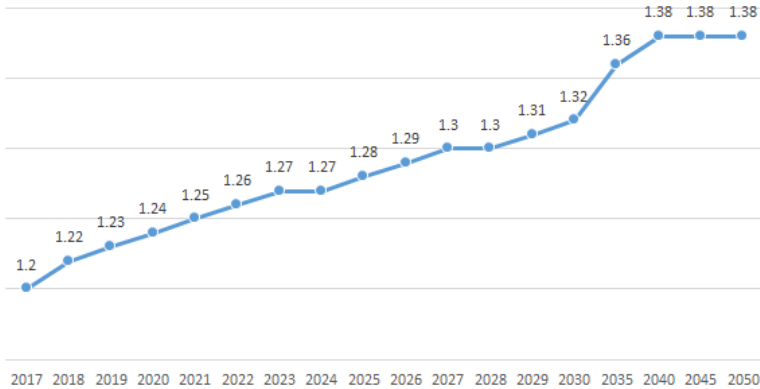
나) 장래 합계 출산율 및 영유아 인구 전망

통계청(2017c)에서 공표한 장래 합계출산율은 다음 <표II-3-2>와 [그림 II-3-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장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20명으로 나타나, 2026년까지 1.2명대를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2027년에는 1.30명에 진입하여 2050년까지 1.38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I-3-2>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2017-2050)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출산율	1.20	1.22	1.23	1.24	1.25	1.26	1.27	1.27	1.28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5	2040	2045	2050
합계 출산율	1.29	1.30	1.30	1.31	1.32	1.36	1.38	1.38	1.38

주: 1)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중위 가정별 추계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7c). 장래인구추계. (전국) 장래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2017c). 장래인구추계. (전국) 장래 합계출산율.

[그림 II-3-2] 장래 합계 출산율 전망(2017-2050)

다음은 통계청(2017d)에서 전망한 장래 연령별 영유아 인구수이다. <표 II-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7년 전체 영유아 인구수는 2,639,254명으로 전망되며, 2040년까지는 2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감소하나, 이후 200만명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매년 출생아수인 만0세아 인구수를 살펴보면 2017년 410,949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2045년에는 약 30만명, 2050년에는 약 29만명으로 전망되었다. 장래 영유아 인구(만0~5세 합계)는 2017년 대비 2050년에는 2017년 영유아 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는 약 85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3-3>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 (2017-2050)

구분	단위: 명						
	만0~5세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7	2,639,254	410,949	422,726	439,093	434,196	462,214	470,076
2018	2,576,232	410,770	409,221	422,110	438,754	433,776	461,601
2019	2,520,020	409,075	409,032	408,623	421,764	438,338	433,188
2020	2,490,742	407,623	407,310	408,420	408,285	421,343	437,761
2021	2,456,234	407,013	405,833	406,673	408,071	407,876	420,768
2022	2,439,080	407,440	405,193	405,172	406,300	407,656	407,319
2023	2,436,641	408,807	405,582	404,505	404,778	405,868	407,101
2024	2,436,281	410,788	406,906	404,865	404,088	404,331	405,303
2025	2,439,714	412,917	408,838	406,155	404,424	403,623	403,757
2026	2,446,296	414,658	410,918	408,052	405,686	403,942	403,040
2027	2,454,312	415,521	412,609	410,095	407,555	405,184	403,348

(표 II-3-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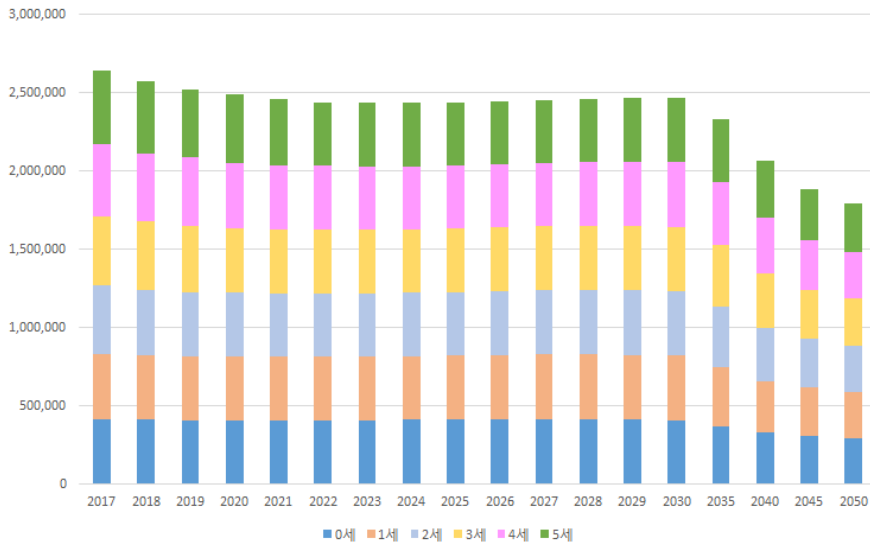
구분	만0~5세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28	2,461,467	415,113	413,428	411,750	409,569	407,030	404,577
2029	2,465,310	413,169	412,982	412,535	411,194	409,022	406,408
2030	2,463,577	409,549	411,010	412,058	411,951	410,625	408,384
2035	2,333,640	370,474	378,243	386,420	393,874	400,024	404,605
2040	2,067,939	326,566	331,737	339,071	347,637	356,817	366,111
2045	1,881,691	307,452	308,604	310,887	313,957	317,896	322,895
2050	1,789,176	292,612	294,289	296,822	299,457	301,892	304,104

주: 1)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3)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7d). (전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자료: 통계청(2017d). (전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그림 II-3-3] 장래 영유아 인구 전망 (2017-2050)

2)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추세 및 경향

가) 연령별 어린이집 자원 영유아 추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집 자원 영유아 추이와, 전체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연령별, 연도별 추이는 다음 <표 II-3-4>와 [그림 II-3-4]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8년에 전국 어린이집에 재원한 영유아는 약 1,135,502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451,215명으로 약 32만명 정도 증가하였다. 재원 영유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 120만명대, 2011년에 130만명대에 진입하였으며 2012년에 140만명대에 진입하여 2016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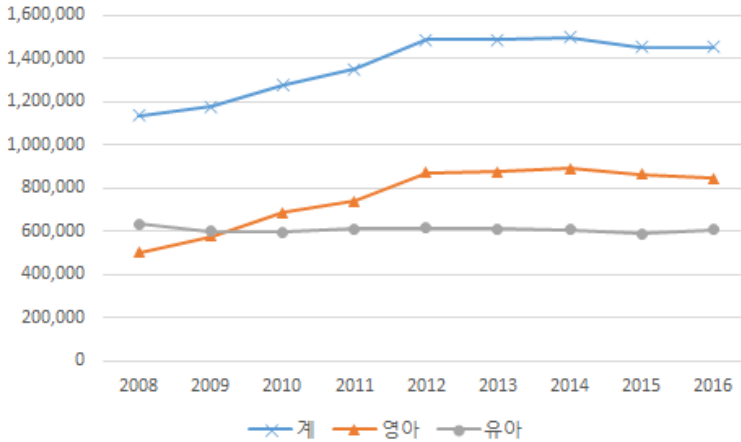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2008년 501,889명 이었고, 2016년 845,984명으로 약 34만명 정도 증가하였다. 반대로 유아의 경우, 2008년 633,613명이었으며, 2016년 605,231명으로 약 3만명 정도 감소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영아 재원아 수는 비교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유아 재원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표 II-3-4>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추이(연령별, 2008-2016)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135,502 (100.0)	1,175,049 (100.0)	1,279,910 (100.0)	1,348,729 (100.0)	1,487,361 (100.0)	1,486,980 (100.0)	1,496,671 (100.0)	1,452,813 (100.0)	1,451,215 (100.0)
만0세	99,245 (8.7)	107,525 (9.2)	125,133 (9.8)	146,666 (10.9)	177,757 (12.0)	148,273 (10.0)	138,563 (9.3)	137,117 (9.4)	141,013 (9.7)
만1세	160,320 (14.1)	198,831 (16.9)	229,486 (17.9)	249,787 (18.5)	321,716 (21.6)	325,921 (21.9)	342,056 (22.9)	308,227 (21.2)	318,245 (21.9)
만2세	242,324 (21.3)	268,038 (22.8)	331,637 (25.9)	342,879 (25.4)	372,811 (25.1)	400,781 (27.0)	409,954 (27.4)	419,252 (28.9)	386,726 (26.6)
만3세	229,424 (20.2)	227,966 (19.4)	243,264 (19.0)	272,034 (20.2)	259,112 (17.4)	255,786 (17.2)	265,338 (17.7)	253,294 (17.4)	263,652 (18.2)
만4세	192,668 (17.0)	193,934 (16.5)	180,542 (14.1)	182,999 (13.6)	194,413 (13.1)	184,513 (12.4)	177,014 (11.8)	180,249 (12.4)	180,255 (12.4)
만5세	175,323 (15.4)	152,380 (13.0)	149,278 (11.7)	137,349 (10.2)	149,522 (10.1)	161,877 (10.9)	155,510 (10.4)	147,278 (10.1)	153,893 (10.6)
만6세	36,198 (3.2)	26,375 (2.2)	20,570 (1.6)	17,015 (1.3)	12,030 (0.8)	9,829 (0.7)	8,236 (0.6)	7,396 (0.5)	7,431 (0.5)
영아	501,889 (44.2)	574,394 (48.9)	686,256 (53.6)	739,332 (54.8)	872,284 (58.6)	874,975 (58.8)	890,573 (59.5)	864,596 (59.5)	845,984 (58.3)
유아	633,613 (55.8)	600,655 (51.1)	593,654 (46.4)	609,397 (45.2)	615,077 (41.4)	612,005 (41.2)	606,098 (40.5)	588,217 (40.5)	605,231 (41.7)

자료: 보건복지부(2008b-2016b). 각 년도 보육통계.



자료: 보건복지부(2008b-2016b). 각 년도 보육통계.

[그림 11-3-4] 어린이집 자원 영유아 추이(2008-2016)

나)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기관수 및 자원 영유아 추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집 기관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11-3-5>와 [그림 11-3-5]과 같다. 전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46.3~54.0%)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33.7~39.7%)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2014년까지 5.2%에서 5.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6.7%, 2016년 7.0%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편이나, 2008년 1.0%에서 2016년 2.3%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1-3-5>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개소 및 비율 추이(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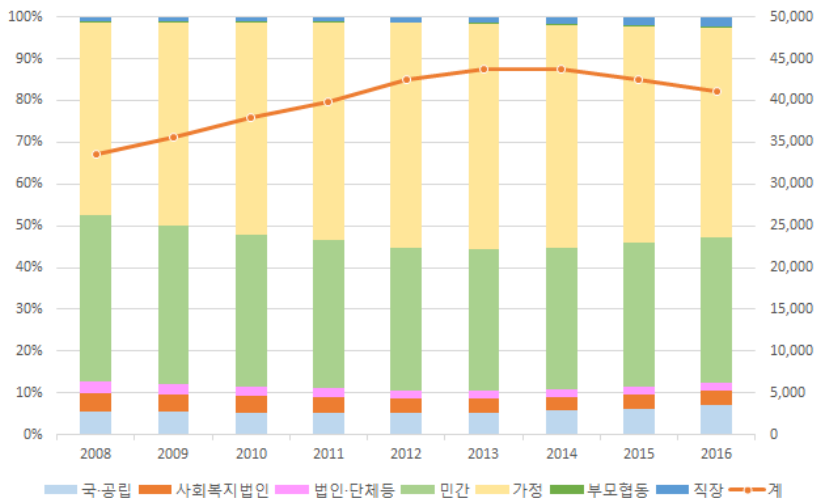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08	33,499 (100.0)	1,826 (5.5)	1,458 (4.4)	969 (2.9)	13,306 (39.7)	15,525 (46.3)	65 (0.2)	350 (1.0)
2009	35,550 (100.0)	1,917 (5.4)	1,470 (4.1)	935 (2.6)	13,433 (37.8)	17,359 (48.8)	66 (0.2)	370 (1.0)
2010	38,021 (100.0)	2,034 (5.3)	1,468 (3.9)	888 (2.3)	13,789 (36.3)	19,367 (50.9)	74 (0.2)	401 (1.1)
2011	39,842 (100.0)	2,116 (5.3)	1,462 (3.7)	870 (2.2)	14,134 (35.5)	20,722 (52.0)	89 (0.2)	449 (1.1)
2012	42,527 (100.0)	2,203 (5.2)	1,444 (3.4)	869 (2.0)	14,440 (34.0)	22,935 (53.9)	113 (0.3)	523 (1.2)

(표 II-3-5 계속)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43,770 (100.0)	2,332 (5.3)	1,439 (3.3)	868 (2.0)	14,751 (33.7)	23,632 (54.0)	129 (0.3)
2014	43,742 (100.0)	2,489 (5.7)	1,420 (3.2)	852 (1.9)	14,822 (33.9)	23,318 (53.3)	149 (0.3)
2015	42,517 (100.0)	2,629 (6.2)	1,414 (3.3)	834 (2.0)	14,626 (34.4)	22,074 (51.9)	155 (0.4)
2016	41,084 (100.0)	2,859 (7.0)	1,402 (3.4)	804 (2.0)	14,316 (34.8)	20,598 (50.1)	157 (0.4)

자료: 보건복지부(2008b-2016b). 각 년도 보육통계.



자료: 보건복지부(2008b-2016b). 각 년도 보육통계.

[그림 II-3-5]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개소 및 비율 추이(2008-2016)

이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설립유형별 재원 영유아 비율은 다음 <표 II-3-6>와 [그림 II-3-6]과 같다. 전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재원 영유아(51.4~54.2%)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5~25.0%). 민간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비중은 과반 수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나, 그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마찬가지로 가정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역시,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는 10.1%에서 12.1%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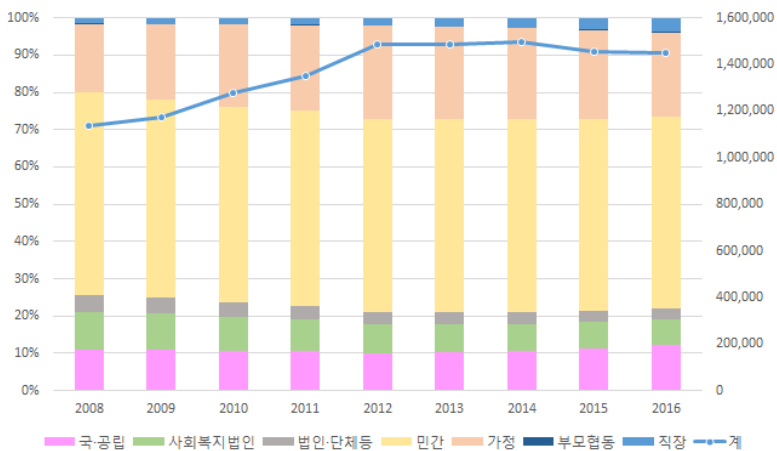
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표 II-3-6〉 설립유형별 재원 영유아 수 및 비율 추이(2008-2016)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08	1,135,502 (100.0)	123,405 (10.9)	113,894 (10.0)	53,818 (4.7)	615,647 (54.2)	210,438 (18.5)	1,491 (0.1)	16,809 (1.5)
2009	1,175,049 (100.0)	129,656 (11.0)	112,338 (9.6)	52,718 (4.5)	623,045 (53.0)	236,843 (20.2)	1,655 (0.1)	18,794 (1.6)
2010	1,279,910 (100.0)	137,604 (10.8)	114,054 (8.9)	51,126 (4.0)	671,891 (52.5)	281,436 (22.0)	1,898 (0.1)	21,901 (1.7)
2011	1,348,729 (100.0)	143,035 (10.6)	112,688 (8.4)	50,676 (3.8)	706,647 (52.4)	308,410 (22.9)	2,286 (0.2)	24,987 (1.9)
2012	1,487,361 (100.0)	149,677 (10.1)	113,049 (7.6)	51,914 (3.5)	768,256 (51.7)	371,671 (25.0)	2,913 (0.2)	29,881 (2.0)
2013	1,486,980 (100.0)	154,465 (10.4)	108,834 (7.3)	51,684 (3.5)	770,179 (51.8)	364,113 (24.5)	3,226 (0.2)	34,479 (2.3)
2014	1,496,671 (100.0)	159,241 (10.6)	104,552 (7.0)	49,175 (3.3)	775,414 (51.8)	365,250 (24.4)	3,774 (0.3)	39,265 (2.6)
2015	1,452,813 (100.0)	165,743 (11.4)	99,715 (6.9)	46,858 (3.2)	747,598 (51.5)	344,007 (23.7)	4,127 (0.3)	44,765 (3.1)
2016	1,451,215 (100.0)	175,929 (12.1)	99,113 (6.8)	45,374 (3.1)	745,663 (51.4)	328,594 (22.6)	4,240 (0.3)	52,302 (3.6)

자료: 보건복지부(2008b-2016b). 각 년도 보육통계.



자료: 보건복지부(2008b-2016b). 각 년도 보육통계.

[그림 II-3-6] 설립유형별 재원 영유아 수 및 비율(2008-2016)

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의 전체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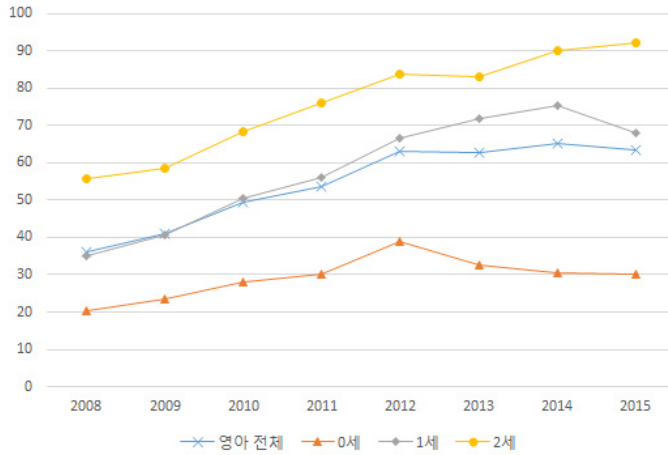
먼저, <표 II-3-7>, [그림 II-3-기]과 같이 어린이집 이용 영아를 살펴보면, 2008년 전체 영아인구 1,384,600명 중, 501,889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36.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체 영아인구 1,361,626명 중 864,596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63.5%의 이용률을 보였다.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8년 36.2%에서 2015년 63.5%로 약 27%p 가량 증가되었으며, 영아의 전계층 무상보육료 지원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0%이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3-7>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추이(2008-2015)

단위: 명(%)

구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2008 영아인구	1,384,600 (100.0)	489,504 (100.0)	458,970 (100.0)	436,126 (100.0)
2008 어린이집이용아동	501,889 (36.2)	99,245 (20.3)	160,320 (34.9)	242,324 (55.6)
2009 영아인구	1,400,739 (100.0)	455,458 (100.0)	487,067 (100.0)	458,214 (100.0)
2009 어린이집이용아동	574,394 (41.0)	107,525 (23.6)	198,831 (40.8)	268,038 (58.5)
2010 영아인구	1,388,207 (100.0)	448,853 (100.0)	453,115 (100.0)	486,239 (100.0)
2010 어린이집이용아동	686,256 (49.4)	125,133 (27.9)	229,486 (50.6)	331,637 (68.2)
2011 영아인구	1,381,290 (100.0)	483,662 (100.0)	445,705 (100.0)	451,923 (100.0)
2011 어린이집이용아동	739,332 (53.5)	146,666 (30.3)	249,787 (56.0)	342,879 (75.9)
2012 영아인구	1,383,570 (100.0)	455,708 (100.0)	482,230 (100.0)	445,632 (100.0)
2012 어린이집이용아동	872,284 (63.0)	177,757 (39.0)	321,716 (66.7)	372,811 (83.7)
2013 영아인구	1,392,340 (100.0)	455,854 (100.0)	454,341 (100.0)	482,145 (100.0)
2013 어린이집이용아동	874,975 (62.8)	148,273 (32.5)	325,921 (71.7)	400,781 (83.1)
2014 영아인구	1,363,854 (100.0)	455,129 (100.0)	454,469 (100.0)	454,256 (100.0)
2014 어린이집이용아동	890,573 (65.3)	138,563 (30.4)	342,056 (75.3)	409,954 (90.2)
2015 영아인구	1,361,626 (100.0)	453,515 (100.0)	453,731 (100.0)	454,380 (100.0)
2015 어린이집이용아동	864,596 (63.5)	137,117 (30.2)	308,227 (67.9)	419,252 (92.3)

자료: 보건복지부(2008b-2015b). 각 년도 보육통계.



자료: 보건복지부(2008b-2015b). 각 년도 보육통계.

[그림 11-3-7]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연령별, 2008-2015)

이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추이를 살펴 보았다. 2008년 전체 유아인구 1,404,927명 중, 42.5%인 597,415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7.8%인 530,548명은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체 유아인구 1,379,695명 중 42.1%인 580,821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며, 49.4%인 681,855명이 유치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가 더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더 많아졌다. 2012년은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해로서, 무상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어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13년부터는 만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어 유아 전연령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의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표 11-3-8>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추이(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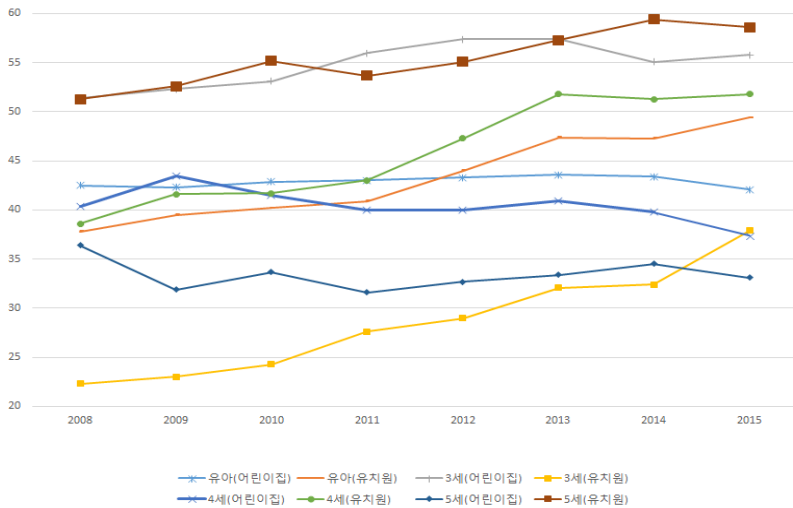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계	3세	4세	5세	
유아인구	1,404,927 (100.0)	446,488 (100.0)	477,140 (100.0)	481,299 (100.0)	
2008 어린이집이용아동	597,415 (42.5)	229,424 (51.4)	192,668 (40.4)	175,323 (36.4)	
유치원이용아동	530,548 (37.8)	99,499 (22.3)	184,178 (38.6)	246,871 (51.3)	

(표 II-3-8 계속)

구분	계	만3세	만4세	만5세
2009 유아인구	1,358,215 (100.0)	435,775 (100.0)	445,357 (100.0)	477,083 (100.0)
2009 어린이집이용아동	574,280 (42.3)	227,966 (52.3)	193,934 (43.5)	152,380 (31.9)
2009 유치원이용아동	536,668 (39.5)	100,406 (23.0)	185,195 (41.6)	251,067 (52.6)
2010 유아인구	1,336,928 (100.0)	457,869 (100.0)	435,476 (100.0)	443,583 (100.0)
2010 어린이집이용아동	573,084 (42.9)	243,264 (53.1)	180,542 (41.5)	149,278 (33.7)
2010 유치원이용아동	537,577 (40.2)	111,482 (24.3)	181,441 (41.7)	244,654 (55.2)
2011 유아인구	1,378,526 (100.0)	486,123 (100.0)	457,392 (100.0)	435,011 (100.0)
2011 어린이집이용아동	592,382 (43.0)	272,034 (56.0)	182,999 (40.0)	137,349 (31.6)
2011 유치원이용아동	564,312 (40.9)	133,986 (27.6)	196,602 (43.0)	233,724 (53.7)
2012 유아인구	1,394,242 (100.0)	451,642 (100.0)	485,687 (100.0)	456,913 (100.0)
2012 어린이집이용아동	603,047 (43.3)	259,112 (57.4)	194,413 (40.0)	149,522 (32.7)
2012 유치원이용아동	612,794 (44.0)	130,986 (29.0)	229,911 (47.3)	251,897 (55.1)
2013 유아인구	1,381,726 (100.0)	445,343 (100.0)	451,222 (100.0)	485,161 (100.0)
2013 어린이집이용아동	602,176 (43.6)	255,786 (57.4)	184,513 (40.9)	161,877 (33.4)
2013 유치원이용아동	654,821 (47.4)	143,069 (32.1)	233,926 (51.8)	277,826 (57.3)
2014 유아인구	1,377,455 (100.0)	481,822 (100.0)	444,915 (100.0)	450,718 (100.0)
2014 어린이집이용아동	597,862 (43.4)	265,338 (55.1)	177,014 (39.8)	155,510 (34.5)
2014 유치원이용아동	651,802 (47.3)	156,097 (32.4)	228,129 (51.3)	267,576 (59.4)
2015 유아인구	1,379,695 (100.0)	453,942 (100.0)	481,348 (100.0)	444,405 (100.0)
2015 어린이집이용아동	580,821 (42.1)	253,294 (55.8)	180,249 (37.4)	147,278 (33.1)
2015 유치원이용아동	681,855 (49.4)	172,114 (37.9)	249,197 (51.8)	260,544 (58.6)

주: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 3세 미만과 6세 이상 이용 아동은 제외시킨 통계자료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08b-2015b). 각 년도 보육통계.
2) 교육통계연보(2008-2015). 각 년도 교육통계(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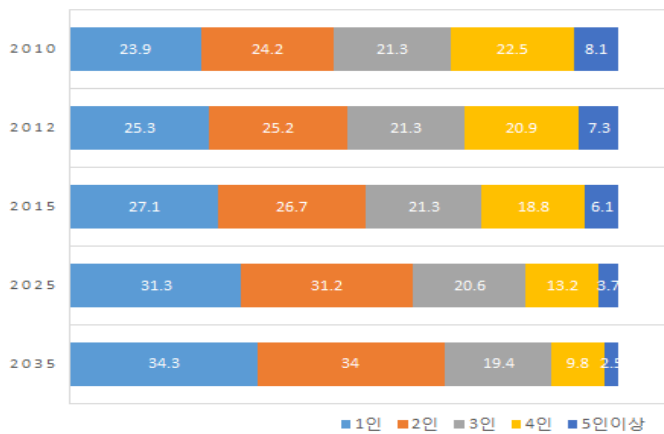
자료: 1) 보건복지부(2008b-2015b). 각 년도 보육통계.
2) 교육통계연보(2008-2015). 각 년도 교육통계(4월 기준).

[그림 II-3-8]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추이(연령별, 2008-2015)

3)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1인 가구의 빠른 증가, 한부모, 무자녀, 동거비혼,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이에 수반하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 중 두드러진 점은 4인 이상 가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1-2인 가구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1인 가구가 매우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²⁰⁾(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4). 한국의 가족형태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데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는 감소하고 있으나 무자녀 부부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7).

또한 가구 규모의 축소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2015년에는 1인 가구 비율 27.1%, 2인 가구 26.7%인 반면 5인 이상 가구 비율은 6.1%에 불과할 것이며, 2035년에는 1인가구와 2인 가구 비율이 약 70%에 육박하며, 4인 가구는 9.8%, 5인 가구는 2.5%로 대폭 축소되어 가구 규모의 축소 경향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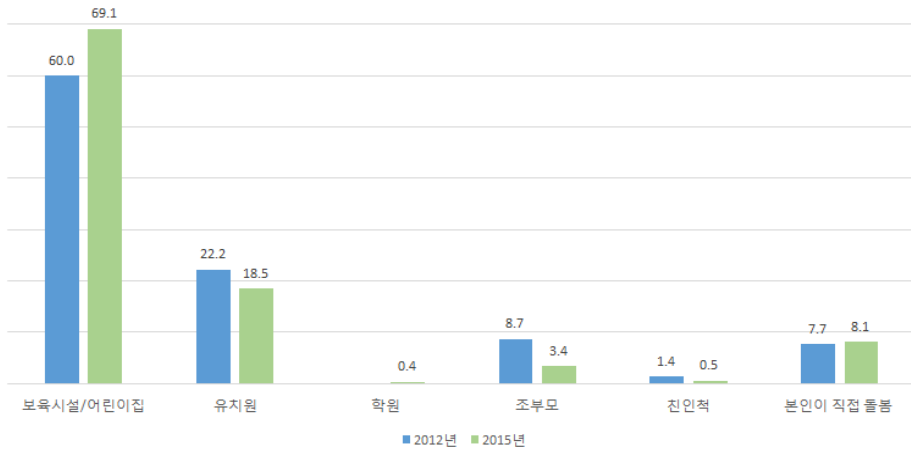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그림 II-3-9] 가구 규모별 비율 향후 전망(2010-2035)

20) 동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 비율은 1980년 4.8%에서 2010년 23.9%로 30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함.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보육 환경 변화에 있어 특히 주목할 부분이다. 정책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이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므로 변화하는 가족구조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5: 361-362)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의 평균연령은 43.1세, 자녀 수는 평균 1.6명, 모자 가구가 43.7%를 차지하고 있다. 구성 사유와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 77.1%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89.6만원이며(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은 389.8만원), 임시 일용 근로자가 36.7%를 차지하였는데 이같은 단편적인 결과를 통해 볼 때도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II-3-10] 에서 볼 수 있듯이 한부모 가족의 미취학 자녀 돌봄 및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69.1%인 것으로 조사되어 시설보육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은지 외, 2015: 56) 한부모가구는 시설보육에 자녀 돌봄 의존률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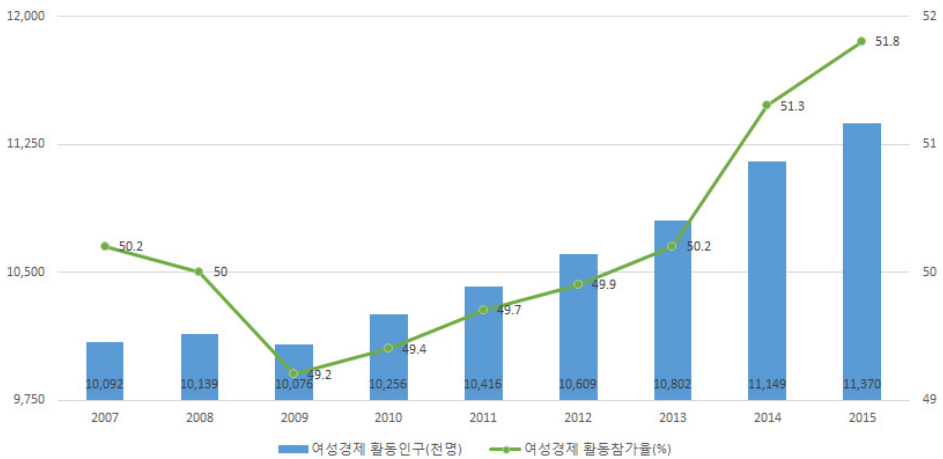
[그림 II-3-10] 한부모가족 미취학 자녀 돌봄 형태 유형

한편 다문화 가정 역시 주목하여야 할 가족 형태이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정해숙 외, 2016: 2)에 의하면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273,036가구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3.16명으로 2012년에 비하여 세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근로 환경 변화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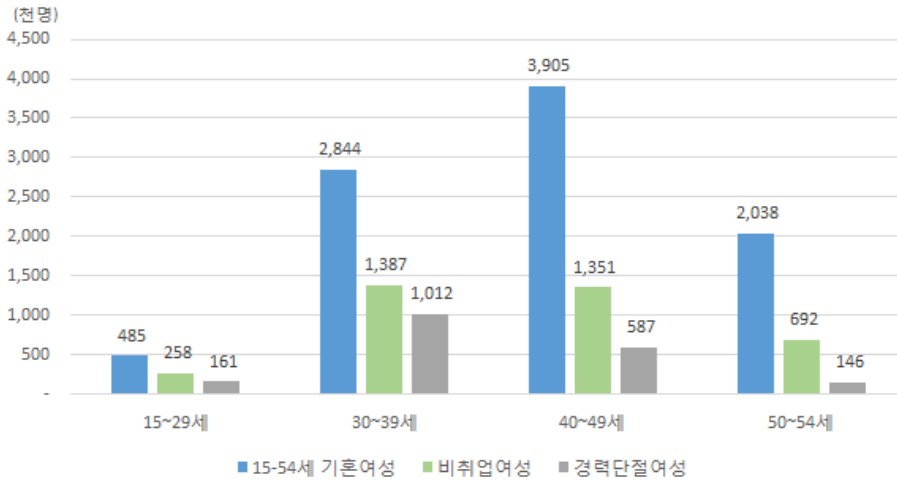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50.2%였던 비율이 2015년에는 약 52%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7)에 의하면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20.6%로 전년 대비 1.2%가 하락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39세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료: 통계청(201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에서 인출(2017.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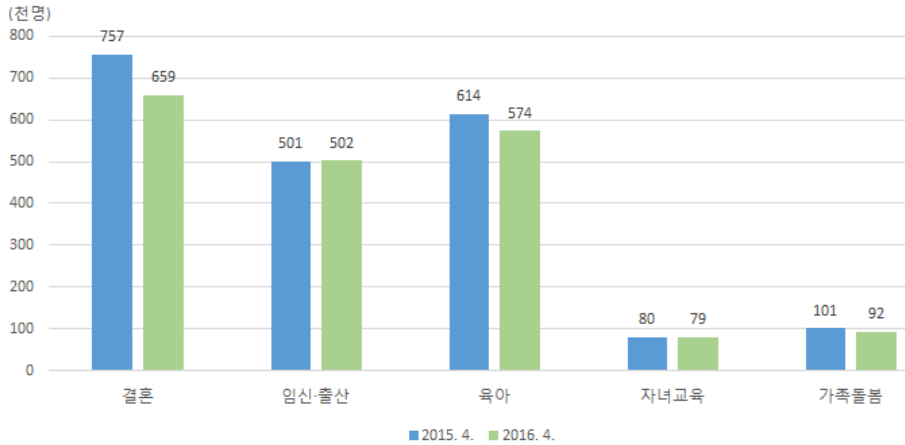
[그림 II-3-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8세 미만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을 조사한 결과, 2명이 48.6%,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3명 이상이 37.0%, 자녀연령별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103만 2천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여성대비 비중도 6세 이하가 44.2%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그만 둔 사유로는 결혼(34.6%), 육아(30.1%), 임신 및 출산(26.3%)의 순으로 나타나(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7) 결혼과 육아, 출산이라는 사건은 여성의 경력 단절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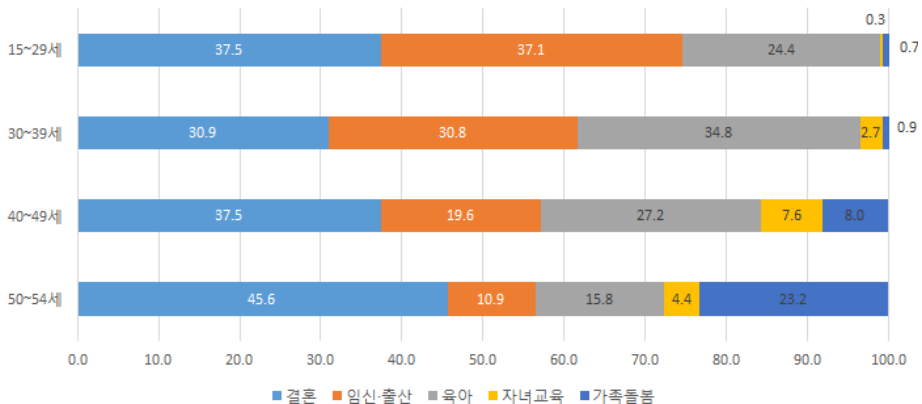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7).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II-3-12]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여성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7).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II-3-13] 경력단절 사유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7).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II-3-14]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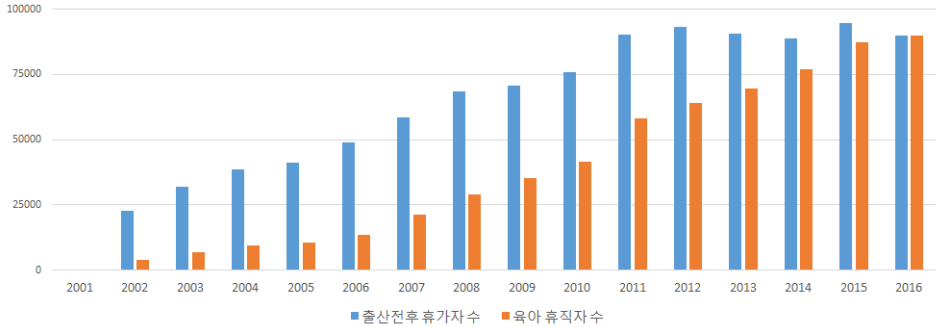
나) 일가정양립: 육아휴직 및 기타 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으로 대표되는 일-가정양립정책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도록 한다. 2016년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여성 82,179명(남성 7,616명), 출산전후 휴가 사용자 수는 89,834명이었다(표 II-3-9 참조). 육아휴직이 법정화 된 이후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인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에는 2015년 4,872명 대비 30%이상 증가하였다.

<표 II-3-9> 출산전후 휴가자 수와 육아휴직자 수 변동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산전후 휴가자 수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89,834
육아 휴직자 수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여성근로자 수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남성근로자 수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자료: 통계청(201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s/indexMain/selectPage.do?search.do?idx_cd=1504에
서인출(2017.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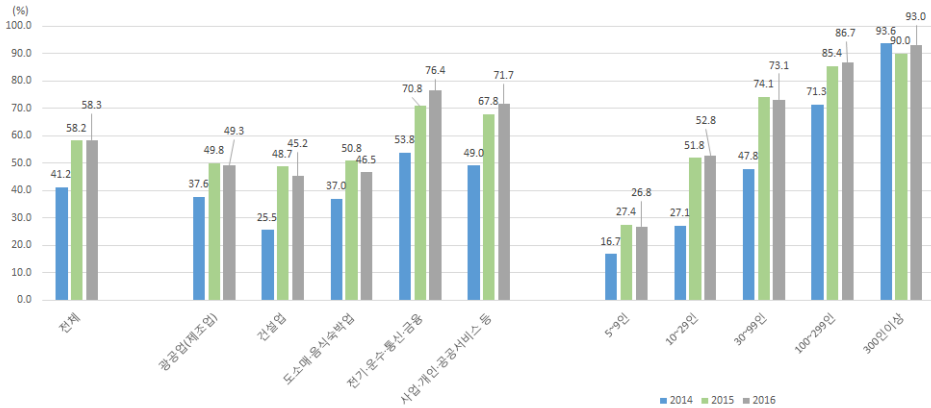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s/idxMain/selectPcStsId/Search.do?idx_cd=1504에서 인출(2017. 6. 2)

[그림 11-3-15]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그러나 현행 법정화된 제도를 사용하는 현실은 근로형태별, 사업규모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김영옥·이승현·이선행, 2016)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68.0%,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기업체는 35.7%로 파악되었다(김영옥 외, 2016: 50-51). 즉, 법에 마련되어 있는 일가정양립 제도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대다수가 아니며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비율 역시 46.1%로(김영옥 외, 2016: 60) 사용 기업이 50% 이하밖에 안 되는 현실은 보육정책 환경 조성에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다.

특히 동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육아휴직 도입비율이 58.3%였으나 5-9인 소기업의 도입 비율은 26.8%로 기업 규모 간 육아휴직 도입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김영옥 외, 2016: 67). 특히 비정규직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는 70.0%였으나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사용 가능 비율이 함께 증가하였고 이때도 1년 이상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체가 47.9%로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김영옥 외, 2016: 70). 즉, 사업장 규모별로 육아휴직 도입, 사용 여부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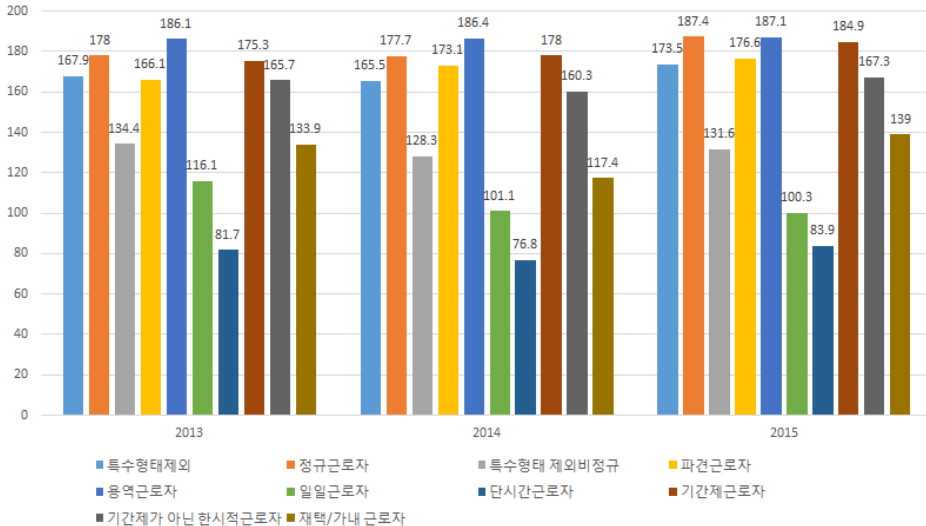
자료: 김영옥·이승현·이선행(2016).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p.68. [그림 IV-2]

[그림 II-3-16]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업체(업종 및 규모별)

그 밖에 동 조사에 의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체 37.8%, 1명이라도 동 제도를 사용한 기업은 27.2%, 가족돌봄 휴직제도 도입은 27.8%, 유연근로제 도입 업체 비율은 21.9%로(김영옥 외, 2016: 95-125) 아직 정책의 확산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유시설 제공 사업체 12.7%, 수유시간 제공 사업체 16.8%로(김영옥 외, 2016: 55-57) 영아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근로조건 중 하나다. 본 절에서는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정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영옥 외, 2016)의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조사대상 사업체의 전일제 근무자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5.1일 근무를 하며 일평균 8.1시간,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이 43.4시간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주당 실 근로시간이 44.8시간, 44.6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의 경우 42.4시간으로 여타 업종에 비해 주당 실 근로시간이 짧았다(김영옥 외, 2016: 26). 한편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자의 경우 2015년 기준 187.4시간(월)으로 파견근로자 176.6시간(월), 용역근로자 187.1시간(월) 등 근로형태별로 약간의 상이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3-17 참조).



자료: 통계청(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9에서 인출(2017. 6. 2.)

[그림 II-3-17]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월)

그 밖에 동 조사에서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유연근로제도²¹⁾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21.9%로 2015년 조사의 결과(22.0%)와 비슷하다(김영옥 외, 2016: 125). 한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근무제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업체 내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로제도 도입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질적 측면의 보육 수요 관련 환경: 인적 자원에 대한 조기 투자 및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증가

보육서비스 지원은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는 핵심적인 사회정책이다(보건복지부, 2013: 1).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조기투자 및 보육서비스가 지니는 효과, 사회적 편익 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영유

21)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등으로 구분된다.

아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종단연구인 Perry Preschool Project(Schweinhart, 2003)는 아동 조기투자의 효과에 대하여, 1달러 투자 시 16.14달러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기 중 영유아기의 공적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음을 밝히고 있다(Schweinhart, 2003; 천세영·류지은·김병운, 2010: 207에서 재인용). Heckman(2006) 역시 영유아기가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절호의 시기이며, 생애 주기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 시기는 투자 대비 회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밝힘으로서, 영유아기 발달 및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Heckman, 2006, 이운선·이영신·김보연, 2013: 190에서 재인용). 또한 영국의 대표적인 종단연구인 EPPE(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프로젝트는, 한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약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7,000파운드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ylva, Melhuish, Sammons, Siraj-Blatchford, Taggart, & Elliot, 2003; 이운선 외, 2013, 에서 재인용). 그리고 미국의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2008)는 보육서비스(daycare) 지원이 2배 상승 할 시, 합계출산율이 0.13명 상승 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1).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민 경제에 대한 보육 산업이 지니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송승민(2010)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 산업은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승민, 2010: 2729).

이와 같은 인적자원의 조기 투자로 인한 사회적 편익, 국가의 이익 발생에 대한 관심 뿐 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및 조기 교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미국의 Pre-K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Pre-K에 참여한 아동의 읽기와 수학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agnusun, Ruhm, & Waldfogel, 2004, 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진미, 2014: 28에서 재인용). 또한 인지, 사회성 발달 효과에 관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Pre-K가 해당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졌다(Camilli, Vargas, Ryan, & Barnett, 2010,

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진미, 2014: 28에서 재인용).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인한 괄목할만한 성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났다. 0세부터 5세까지 Carolina Abecedarian Preschool Program에 참여하여 교육, 영양관리, 가족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은 취약 계층의 아동은 지원을 받지 못한 아동보다 높은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대학진학률 및 취업률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인경, 2012: 6-7). 미국의 대표적인 저소득 가정 대상 종합적 복지프로그램인 Head Start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인지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입증하였다(Puma, Bell, Cook, & Heid, 2010, 이정원 외, 2014: 28에서 재인용).

국내의 경우, 김기현·신인철(2012)은 보육 및 유아교육의 경험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회성 발달과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청소년패널(KYPS)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사회성 발달과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김기현·신인철, 2012: 28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 조기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아동 발달이 입증되면서, 공평한 출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 6)는 누리과정 도입배경에서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된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누리과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년 이상 유아교육기관 경험을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PISA) 점수가 높았다는 점을 들어, 유아기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4).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평하고 포괄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을 확립과 서비스접근성 보장 실행을 위해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를 평등성 보장, 공적 책임과 투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평한 출발선에 대한 요구를 살펴볼 수 있다(OECD, 2012; 정혜욱·이지영, 2016: 300에서 재인용).

4. 소결

제2장에서는 보육의 현재(현황 분석)와 과거(보육정책 및 계획의 발전 과정 고찰), 미래 전망(중기 보육수요 관련 사회·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역사적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중장기보육 계획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우리 한국 사회는 보육정책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요구 혹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보육정책의 방향성과 내용, 정책 대상과 우선순위,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간의 경향을 보면 보육정책의 목표는 사회 환경과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육 사업 또는 정책은 시대 상황에 따라 구변, 주로 저소득층의 근로지원을 위한 탁아로부터, 보다 보편적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아동발달 지원, 저출산 대응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앞으로의 사회가 '보육정책'을 어떠한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책으로 활용하며 어떠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보육정책의 목표와 성격, 내용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보육'의 근본적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에 핵심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보육수요의 정체 또는 감소를 전제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수요(어린이집 수요)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해야 한다. 현재 영아인구 중 약 6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유아는 약 40% 초반대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을 포함할 경우 만3-5세 유아 중 90% 이상이 이미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영아 보육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용 인구의 증가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래 인구추계를 고려하여도 매년 절대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육 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곧 제1, 2차 계획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던 보육 인프라의 양적 확대가 제3차 계획에서 더 이상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미 어린이집 이용률이 거의 유아 수준에 도달한 만2세를 제외하면 만0-1세 보육 수요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휴가·휴직제도의 확대와 활성화, 유연근무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영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만한 대체 서비스나 제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현재 영아 보육 수요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완성된다면 또 다른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원아 경쟁 관계에 있고 유아교육계의 변화는 보육 수요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짧게는 앞으로 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영유아와 그 가정을 위한 대표적 양육 지원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육은 그간 미흡하였던 서비스의 질 제고와 수요자의 신뢰 회복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Ⅲ.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및 정책 평가

제3장에서는 주무부처의 자체평가, 전문가 조사, 영유아 부모의 보육정책 체감도, 보육교사의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대상에 의한 다방면의 평가를 통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및 보육정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았다.

1. 2차 계획에 따른 평가 지표 달성도 분석

본 절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분야별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달성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2013-2017년간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보편적 보육·양육 지원 내실화’, ‘보육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상호 신뢰하는 보육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7). 이러한 국가책임보육이 실현되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분야별 지표와 제2차 계획 추진 전의 현황과 현재의 상황은 다음 <표 Ⅲ-1-1>에 제시하였다.

<표 Ⅲ-1-1> 보육정책의 분야별 지표 및 달성 현황

분야	지표명	2012년	2017년 (목표)	달성현황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0-2, 5세 총계중/3-4세 하위70% (128만명)	총계중('13년 달성) (138만명)	총계중 (143만명) (‘16.12)
	▪ 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차상위(11만명)	전계중('13년 달성) (120만명)	전계중 (92.7만명)
	▪ 누리과정 단가 인상	17.7~20만원	30만원	22만
수요자 맞춤 보육·양육 지원	▪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서울시	전국시행 (‘14)	전국시행
	▪ 일시보육서비스 확산	시범사업(‘13)	전국시행	시간제보육 (368개소)
	▪ One-card(통합영유아 복지카드)	사업별 중복 발급	통합카드 발급	아이행복카드

(표 III-1-1 계속)

분야	지표명	'12년	'17년 (목표)	달성현황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직장·공공형 이용아동 비율(개소수)	26%(5,791개소) (13.6)	33% (7,383개소)	31.6% ^{주1)} (17.5기준)
	▪ 평가인증 의무화 및 재정 연계	자율	의무, 재정 연계	의무, 재정연계미시행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0-2세 12만원 3-5세 30만원('13)	0-5세 동일 수준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제외 22만원('17.1)
	▪ 대체 인력 지원	1.5만건	2.15만건	4.23만건 (16.12기준)
	▪ 급식 관리 지원센터	22개소	전국 확대	207개소
	▪ 영유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13)	전국 확대	부분적 시행주2)
신뢰·투명 한 보육생태 계 구축	▪ 평가인증 결과 공표, 정보공시제, 법 위반 명단 공표	자율 또는 미시행	의무화('13)	시행
	▪ 부모모니터링단	전면 실시('13)	안정적 정착	26,237개소 시행중('16)
	▪ 아이사랑 보육지원단	-	전국 확대	미실시
보육서비 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 육아종합지원센터	47개소	전국 확산	92개소
	▪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기구	한국보육진흥원 (민간위탁)	기능 개편 및 명칭 변경	변화 없음
	▪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평균 50%	평균 60%('14)	'14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상향주3)

주: 1) '17년 5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 1,349,665명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181,880명),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용아(92,438명), 직장어린이집 이용아(57,203명),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아(95,222명: 사회복지법인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아수 제외) 합산으로 비율 산정(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kcpi.or.kr>에서 인출(2017. 6. 23.)).

2) '학교안정공제중앙회'에서 각급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정보만을 제공 함. 운영자 운전자 교육수료 여부, 법적 안전장치 구비 여부, 통학차량 보험가입 여부, 안전기준 적합 여부만을 제공하며 영유아 가정과의 등하원 알림, 안전사고 조 기정보 등 종합적 안전관리 시스템은 아님.

3) 2014. 1.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지원'사업 국고 보조율 서울 35%, 지방 65%로 기존 서울 20%, 지방 50%에서 상향.

자료: 1) 보건복지부(2017a).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2017c). 2017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3)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central.childcare.go.kr).

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변화하는 보육의 미래를 예측·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지표에 의하면, 누리과정 단가 인상(22만→30만원 인상)을 제외하

고는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분야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수요자 맞춤 보육·양육 지원'의 분야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 '수요자 맞춤 보육·양육 지원'의 경우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과 기반 조성 등의 지표가 아닌 입소대기관리시스템 도입, 보육료 지원 통합 카드 도입 등 일부분의 성과로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부분에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및 재정 연계'가 시행되지 않아 달성이 미진한 것으로 사료된다.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의 경우 통학안전을 중심으로 가정과 기관이 연계된 '영유아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진한 상황으로 달성도가 높지 않은 분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통합정보공시'를 통해 평가인증 결과와 범 위반 사실 등의 공표는 목표 달성이 되었으나, '아이사랑 보육지원단'은 진행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분야는 2014년 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상향되어 재정 분야 개선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전달체계 개선은 목표치 대비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약 2배 정도 확충 설립되었으나 주요 대도시 위주로 확충되어 애초의 227개 시군구 구축 목표에는 미달하였고,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기구로서 한국보육진흥원의 국가적 질 관리체계로서의 기능 개편과 명칭 변경 등에 있어 변화가 없어 전달체계 쪽의 개선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2013-2016)에 의하면 2013-2016년간의 보육정책 관련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평가 결과는 다음 <표 III-2-1>, <표 III-2-2>과 같다.

2013-2016년의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2013년을 제외하면 어린이집 시설 이용 만족도 점수이며, 목표치는 매년 상향되었고 실적도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1〉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및 자체 평가 결과

과제 수행 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2013	보육·양육지원 대상 확대 및 투명하고 품질 높은 보육시스템 구축	보육부담 인식 정도(%)	46	
		어린이집 시설 이용 만족도(점)	3.76	3.85
2014	품질 높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확대	어린이집 시설 이용 만족도(점)	3.87	3.90
2015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	어린이집 시설 이용 만족도(점)	3.97	3.97
2016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	어린이집 시설 이용 만족도(점)	4.05	-

주: 1) 당해년도 실적은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제시된 실적임.

2) 각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내에 구체적인 실적치는 미제시 됨.

자료: 보건복지부(2013d-2016d), 성과관리 시행계획(각년도).

다음으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자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2013년도 전소득계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육·양육지원 대상 확대’ 과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보육·양육지원 대상 확대’는 2014년 이후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으로 관리과제명이 변경되고 성과지표가 추가 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은 2014년 ‘보통’, 2015년 ‘다소 우수’, 2016년 ‘우수’로 지속적으로 평가가 상승하였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도 2013년 이후 관리과제가 동일하게 지속되었으며, 2013년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2014년 이후 상승하여 ‘보통’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리과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는데 2013년 6만명 목표에 8만명이 이용해 목표치를 초과하였고, 2014년 8.5만명 목표에 8.6만명, 2015년 9.6만명 목표에 9.3만명이 이용해 달성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체평가 결과에서 나타나는 보육정책의 수행은 보육료·양육수당의 대상 확대, 맞춤형보육체계 개편 추진율,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수 등 ‘양적 기반 확충’ 부분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서비스 질 제고와 연결되는 성과지표는 보통 이하에 머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I-2-2〉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자체 평가 결과

과제 수행 연도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자체 평가 결과
2013	보육 양육지원 대상 확대	·보육료지원 만족도(%)	55	62.9	우수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72	72.8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월평균 상시 지도점검 어린이집 수(개소)	22.7	-	보통
2014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	·공공형 이용 아동수(만명)	6	8	미흡
		·평가인증 부모만족도(점)	72	-	
	효율적·체계적인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	·보육료 지원 만족도(만족 이상 비율)(%)	65	67.9	보통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점수(점)	74	74.0		
	·시간제 보육반 이용자 만족도(만족 이상 비율)(%)	63	-	보통	
·관련 제도개선 및 시스템 추진율	100(%)	-			
2015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가능 아동 수(만명)	8.5	8.6	보통
		·평가인증 유지 시설 비율(%)	73.7	75.5	
	효율적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지원 만족도 (만족 이상 비율)(%)	65.4 ²⁾	72.7	다소 우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점수	73(점) ³⁾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수(개)	230 ⁴⁾	243	부진	
·전환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30(개)	-			
2016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만명)	9.6	9.3	보통
		·평가인증 유지 시설 비율	79.9(%)	79.9	
	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평가인증시설 부모만족도(점)(신규)	76.2	76.2	보통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보육료 지원 만족도(%)	69.9	우수		
	·맞춤형보육체계 개편 추진율(%)	100			
2016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수(개)	380	우수	
		·보수교육이수자의 교육이수역량 (이수자 평가 점수 평균)(점)	85		
	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확충 대상 선정 개소수)(개)	150 ⁵⁾	부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만명)	9.7	보통		
	·평가인증유지율(%)	77.5 ⁶⁾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점)(최근 3년 실적 평균치)	75.6 ⁷⁾				

주: 1) 당해년도 실적은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제시된 실적임. 각년도 자체평가 보고서 내에 구체적인 실적치는 미제시 됨.

2) 지난 2년간 실적의 중간값으로 제시.

3) 2011년 이후 양육수당 지원 단가 동결 및 '13년 전계층 지원 대상 확대 이후 제도 변경이 없어 목표치 상승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목표치 조정. '14년 실적은 74점.

4) 2014년 대비 지표를 '이용자 만족도'에서 '제공기관 수'로 변경함.

5) 2015년 실적으로 2016년 목표치 설정.

6) 2015년도 실적보다 하향함.

7) 2015년도 실적보다 하향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4e). 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 보건복지부(2015e).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3) 보건복지부(2016e).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4) 보건복지부(2017e).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5) 보건복지부(2013d). 201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6) 보건복지부(2014d).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7) 보건복지부(2015d).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8) 보건복지부(2016d).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3. 전문가 조사에 나타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달성도 평가

가. 6대 추진과제 달성도 평가

1) 목표 달성 정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하였던 6대 추진과제의 목표에 대비하였을 때, 전문가는 우리의 보육 현실 수준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체감하는지 '추진과제 목표 달성 정도'를 통해 답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진과제들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6대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이 달성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9%(어느 정도 달성됨 60.0%, 달성됨 8.9%)로 높게 나타나,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동의하였으며, 5점 만점의 평균 3.73점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26.7%, 3.00점),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20.0%, 2.76점)와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13.3%, 2.78점)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달성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추진과제의 달성정도(어느 정도 달성됨+달성됨)는 20% 이하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달성 정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제2차 보육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6대 추진과제의 현시점에서의 중요도를 1~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6개 과제 중 현시점에서의 중요도 1순위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관리 강화'가 53.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이 22.2%,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이 11.1%로 나타났다. 1~3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추진과제의 현시점에서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1~3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1순위 6.7%, 1~3순위 합산 18.6%),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1순위 2.2%, 1~3순위 30.2%),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1순위 4.4%, 1~3순위 합산 37.3%)은 현 시점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표 III-3-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6대 추진과제의 목표달성 정도와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6대 추진과제 목표 달성 정도						중요도(현시점)	
	전혀 달성되지 못함	별로 달성되지 못함	보통	어느 정도 달성됨	달성됨	평균(SD)	1순위	1+2+3 순위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	4.4	26.7	60.0	8.9	3.73(.69)	6.7	18.6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2.2	22.2	48.9	26.7	-	3.00(.77)	2.2	30.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6.7	35.6	37.8	15.6	4.4	2.76(.96)	53.3	90.8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4.4	35.6	51.1	6.7	2.2	2.67(.77)	22.2	74.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2.2	37.8	53.3	6.7	-	2.64(.65)	4.4	37.3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2.2	35.6	48.9	8.9	4.4	2.78(.82)	11.1	48.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미흡성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미흡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차 조사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2017년)까지 시행중인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와 관련해 달성도가 특히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를 10개 항목으로 유목화하여 추진과제의 미흡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의 87.1%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미흡함 51.1%, 매우미흡함 35.6%)이 미흡하고 보였으며,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16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68.8%, 3.82점), '유보통합 추진'(66.6%, 3.93점), '보육서비스 공공성 제고'(64.5%, 3.78점) 순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미흡한 추진과제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31.8%의 전문가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보통합 추진'이 29.5%의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10%이하의 개선 필요도가 나타났다.

〈표 III-3-2〉 제2차 중장기보육 추진과제의 미흡성

단위: %, 점

구분	제2차 중장기보육 계획 추진의 미흡성					평균(SD)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미흡하지 않음	미흡하지 않음	보통	미흡함	매우 미흡함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	15.6	20.0	35.6	28.9	3.78(1.04)	31.8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	6.7	6.7	51.1	35.6	4.16(.82)	9.1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	13.3	31.1	40.0	15.6	3.58(.92)	2.3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만족도 제고	-	13.3	26.7	46.7	13.3	3.60(.89)	6.8
유보통합 추진	-	17.8	15.6	22.2	44.4	3.93(1.16)	29.5
신뢰성 있는 민관협력 기반 조성	-	17.8	40.0	24.4	17.8	3.42(.99)	4.5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	11.1	20.0	44.4	24.4	3.82(.94)	9.1
보육제정의 안정성 확보	-	15.6	33.3	33.3	17.8	3.53(.97)	-
이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추진과제	-	13.3	40.0	37.8	8.9	3.42(.84)	4.5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	11.1	53.3	31.1	4.4	3.29(.73)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나. 세부과제별 달성도 평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별 세부과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체감하는 달성 정도와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 추진과제별 달성도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점과 문제점에 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를 통하여 1차 조사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1) 추진과제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첫 번째 추진과제인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의 세부 과제에 대해 전문가가 체감하는 달성정도를 살펴보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전문가의 75.6%(어느정도 달성됨 35.6%, 달성됨 40.0%)가 달성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의 평균 4.13점으로 나타내 가장 높은 달성정도를 보였다. ‘보육료 적정화’는 24.4%(평균 2.80점), ‘부모 추가 경비 부담 경감’은 22.2%(평균 2.84점)의 응답비율을 나타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도를 나타냈다. 이 중, 전문가가 인식한 현 시점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보육료 적정화’로서 77.8%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3-3〉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달성 정도 및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달성 정도						중요도 (1순위)
	전혀 달성 되지 못함	별로 달성되지 못함	보통	어느 정도 달성됨	달성됨	평균(SD)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	2.2	22.2	35.6	40.0	4.13(.84)	8.9
보육료 적정화	11.1	24.4	40.0	22.2	2.2	2.80(.99)	77.8
부모 추가 경비 부담 경감 (특별활동 등 어린이집 이용부모 필요경비 부담 완화)	2.2	37.8	37.8	17.8	4.4	2.84(.90)	1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1차 조사에서 개방형 문항으로 추출한 추진과제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추진의 미흡성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2차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조사 하였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으로,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 존재’, ‘보육료 지원을 기타 보육·교육 비용 전용으로 양육비 경감에 대한 체감도 저하’, ‘상대적으로 낮은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양육비부담 경감 체감도’, ‘어린이집 보육 이용 시간 전후의 양육을 위한 비용 부담 존재’의 4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을 기타 보육·교육 비용 전용으로 양육비 경감에 대한 체감도 저하(예, 보육료 지원액만큼 사교육, 특별활동 증가)’를 미흡한 점으로 동의하는 전문가가 전체의 80.0%(동의함 40%, 전적으로 동의함 40%, 평균 4.09점)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 존재’는 77.8%(평균 3.93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전문가의 54.5%는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 존재’를 꼽았다.

〈표 III-3-4〉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추진의 미흡성 문제점 동의 정도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 존재	4.4	4.4	13.3	48.9	28.9	3.93(1.01)	54.5

(표 III-3-4 계속)

구분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추진의 미흡성 문제점 동의 정도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보육료 지원을 기타 보육·교육 비용 전용으로 양육비 경감에 대한 체감도 저하 (예, 보육료 지원액만큼 사교육, 특별활동 증가)	-	11.1	8.9	40.0	40.0	4.09(.97)	27.3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양육비부담 경 감 체감도 상대적으로 낮음	-	8.9	28.9	44.4	17.8	3.71(.87)	6.8
어린이집 보육 이용 시간 전후의 양육 을 위한 비용 부담 존재 (예, 파견 인 력 이용 등)	2.2	13.3	26.7	42.2	15.6	3.56(.99)	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2)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두 번째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의 세부 과제 달성 정도를 살펴보면,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전문가의 20.0%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 중 평균 2.76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장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기반 마련(시설, 교사 역량 등), ‘다문화 보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교사 연구 등)은 모두 8.9%(평균 각 2.44점, 2.51점)의 응답률을 나타내, 두 번째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의 세부과제는 다른 추진과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달성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 중, 전문가가 인식한 현 시점에서 인식한 중요한 과제는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서 84.4%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문화 보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을 중요한 과제 1순위로 꼽은 전문가는 없었다.

<표 III-3-5>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달성정도 및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달성정도						중요도 (1순위)
	전혀 달성 되지 못함	별로 달성되지 못함	보통	어느 정도 달성됨	달성됨	평균(SD)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4.4	35.6	40.0	20.0	-	2.76 (.83)	84.4
장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기반 마련(시설, 교사 역량 등)	8.9	46.7	35.6	8.9	-	2.44 (.78)	15.6

(표 III-3-5 계속)

구분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달성정도						중요도 (1순위)
	전혀 달성되지 못함	별로 달성되지 못함	보통	아는 정도 달성됨	달성됨	평균(SD)	
다문화 보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교사 연구 등)	4.4	51.1	35.6	6.7	2.2	2.51 (.7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추진의 미흡성과 문제점에 대해 1차 조사에서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은 다음 <표 III-3-6>와 같이, 미흡한 점을 5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기반의 미흡'에 전문가의 82.2%(동의함 64.4%, 전적으로 동의함 17.8%)가 동의하였으며 평균점수는 3.91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애아, 다문화 아동 보육 지원 미흡'을 동의하는 비율이 73.3%(3.96점)로 나타났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육 수요 대응 미흡'이 71.2%(4.04점)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 중,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문제점으로 전문가의 31.1%가 '장애아, 다문화 아동 보육 지원 미흡'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아, 장애아와 다문화 아동의 보육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개선 요구를 알 수 있다.

<표 III-3-6>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미흡성 문제점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장애아, 다문화 아동 보육 지원 미흡	-	6.7	20.0	44.4	28.9	3.96(.88)	31.1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기반의 미흡 (예,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사 교육, 연수 제공, 시설, 교재·교구 지원 등)	2.2	4.4	11.1	64.4	17.8	3.91(.82)	24.4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미흡	-	2.2	26.7	35.6	35.6	4.04(.85)	15.6
취업모(맞벌이) 가정 보육 수요 대응 미흡	2.2	4.4	31.1	40.0	22.2	3.76(.93)	15.6
수요자별 보육수요의 차이 파악과 조정 미흡	2.3	13.6	25.0	40.9	18.2	3.59(1.02)	1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3)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세 번째 추진과제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관리 강화」 세부 과제의 달성 정도를 살펴보면, ‘평가인증 강화’를 전문가의 44.2%(어느 정도 달성됨 42.2%, 달성됨 2.2%)가 달성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의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는 35.5%(평균 3.13점), ‘부모선호도·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공공형,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은 28.9%(평균 3.13점)의 전문가가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설치·인가 기준 개선’은 20.0%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달성 정도는 13.3%에 그쳐 비교적 낮은 달성도를 나타냈다.

이 중, 전문가가 인식한 현 시점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55.6%의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표 III-3-7〉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달성정도 및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달성 정도						중요도 (1순위)
	전혀 달성 되지 못함	별로 달성되지 못함	보통	어느 정도 달성됨	달성됨	평균(SD)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7.8	37.8	31.1	13.3	-	2.40(.94)	55.6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2.2	20.0	42.2	33.3	2.2	3.13(.84)	4.4
부모선호도·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	2.2	17.8	51.1	22.2	6.7	3.13(.87)	13.3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설치·인가 기 준 개선	2.2	20.0	57.8	13.3	6.7	3.02(.84)	24.4
평가인증 강화	-	13.3	42.2	42.2	2.2	3.33(.74)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추진과제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관리 강화」 추진의 미흡 성과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조사해 보았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으로,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 부재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미흡’, ‘민간어린이집 품질 관리 정책 미흡’, ‘평가인증의 상시 질 관리 체계 기능 미흡’,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미흡’, ‘공보육 개념의 혼란 존재’의 5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품질 관리 정책 미흡’에 동의하는 전문가가 전체의 86.6%(동의함 42.2%, 전적으로 동의함 44.4%, 평균 4.31점)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 부재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미흡', '평가인증의 상시 질 관리 체계 기능 미흡'은 각 77.8%으로 나타났다. '공보육 개념의 혼란 존재(71.1%),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미흡'(57.8%)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문제점으로 전문가의 55.6%는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 부재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미흡'을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보육 개념의 혼란 존재'가 24.4%로 나타났다.

〈표 III-3-8〉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추진의 미흡상문제점

단위: %(명), 점

구분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평균(SD)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 부재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미흡	2.2	4.4	15.6	42.2	35.6	4.04(.95)	55.6
민간어린이집 품질 관리 정책 미흡	-	-	13.3	42.2	44.4	4.31(.70)	15.6
평가인증의 상시 질 관리 체계 기능 미흡	2.2	4.4	15.6	46.7	31.1	4.00(.93)	2.2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미흡	2.2	6.7	33.3	31.1	26.7	3.73(1.01)	2.2
공보육 개념의 혼란 존재	2.2	6.7	20.0	31.1	40.0	4.00(1.04)	2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4)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네 번째 추진과제인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세부 과제의 달성정도를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을 전문가의 22.2%(어느정도 달성됨 20.0%, 달성됨 2.2%)가 달성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의 평균 2.89점으로 나타나, 추진과제 4의 세부과제 중에서 가장 높은 달성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은 17.7%(평균 2.96점), '보육인력의 역량지원 강화(진입, 근무, 퇴출 등 단계별 엄격한 자격관리 및 전문성 지원 강화'는 13.4%(평균 2.38점)의 전문가가 달성하였다고 보았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근로환경 및 급여)'의 달성 정도는 8.8%(평균 2.40점)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의 세부과제의 경우, 다른 추진과제의 세부과제의 달성도 보다 현저히 낮고, 달성되지 못한 비율이 24.2%에서 64.5%까지 나타나, 전문가들의 달성 체감도가 낮은 추진과제로 평가된다.

전문가가 인식한 현 시점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근로환경 및 급여)’으로 53.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보육인력의 역량지원 강화’(28.9%)로서, 전문가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육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표 III-3-9〉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의 달성도 및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중요도 (1순위)
	전혀 되지	달성 못함	별로 달성되지 못함	보통	어느 정도 달성됨	달성됨	
보육인력의 역량지원 강화(진입, 근무, 퇴출 등 단계별 엄격한 자격관리 및 전문성 지원 강화)	17.8	46.7	22.2	6.7	6.7	2.38 (1.07)	28.9
보육교사 처우 개선(근로환경 및 급여)	8.9	55.6	26.7	4.4	4.4	2.40 (.88)	53.3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4.4	26.7	46.7	20.0	2.2	2.89 (.85)	6.7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2.2	22.2	57.8	13.3	4.4	2.96 (.79)	1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추진과제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추진의 미흡성과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조사해 보았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추진의 미흡성을 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 정비 미흡으로 전문성 제고 효과 미흡’에 동의하는 전문가가 전체의 88.9%(동의함 33.3%, 전적으로 동의함 55.6%, 평균 4.48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가시적 성과 미흡’, ‘물리적 환경, 근로조건 등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심보육 여건 조성 미흡’은 각 80.0%로 나타났다.

이 중,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문제점으로 전문가의 44.4%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 정비 미흡으로 전문성 제고 효과 미흡’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가시적 성과 미흡’(40.0%)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III-3-10〉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평균(SD)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가시적 성과 미흡	-	4.4	15.6	35.6	44.4	4.20(.87)	40.0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 정비 미흡으로 전문성 제고 효과 미흡	-	6.7	4.4	33.3	55.6	4.48(.68)	44.4
물리적 환경, 근로조건 등 보육교사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안심보육 여건 조성 미흡	-	6.7	13.3	46.7	33.3	4.07(.86)	2.2
현직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노력 미흡	-	6.7	26.7	42.2	24.4	3.84(.88)	6.7
'안심보육의 개념과 조성 여건에 대한 혼란으로 안심보육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총체적 대책 부재	-	13.3	31.1	31.1	24.4	3.67(1.00)	-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여건 조성 미흡 (보육교직원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미흡한 기준 등)	-	13.3	28.9	37.8	20.0	3.64(.96)	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5) 추진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구축

다섯 번째 추진과제인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세부 과제에 대한 전문가가 체감하는 달성 정도와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의 48.9%(어느 정도 달성됨 40.0%, 달성됨 8.9%)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평균 3.40점으로 달성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33.3%, 3.16점)',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및 소통 기회 확대(28.9%, 3.07점)', '건전한 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15.5%, 2.8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가가 인식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건전한 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으로서 51.1%의 과반수가 넘는 전문가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III-3-11〉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달성 정도와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구축						중요도 (1순위)
	전혀 달성 되지 못함	별로 달성되지 못함	보통	어느 정도 달성됨	달성됨	평균(SD)	
건전한 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2.2	31.1	51.1	13.3	2.2	2.82(.78)	51.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	2.2	13.3	35.6	40.0	8.9	3.40(.91)	22.2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및 소통 기회 확대	-	24.4	46.7	26.7	2.2	3.07(.78)	4.4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효율적 정보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법 위반 의심사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조리 사전 방지 및 효과적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	20.0	46.7	31.1	2.2	3.16(.77)	2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추진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추진의 미흡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6개의 미흡성을 제시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도와 개선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전문가의 77.8%(동의함 40.0%, 전적으로 동의함 37.8%)는 '신뢰에 기반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미흡'에 동의하였으며, 미흡성은 평균 4.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시스템 미흡'에 대한 동의하는 비율은 62.3%로 평균 3.78점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미흡'과 '다양한 경로의 중복적 지도감독으로 인한 보육관리 시스템 구축 미흡'을 약 57%의 전문가가 미흡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이 중, 현시점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33.3%는 '신뢰에 기반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미흡'을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시스템 미흡'(26.7%)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표 III-3-12〉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추진의 미흡성 문제점					평균(SD)	개선 필요성 (1순위)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 함	전적으로 동의함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시스템 미흡 (예,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부족, 소극적 적용, 모니터링, 지도감독 위주의 연계)	2.2	6.7	28.9	35.6	26.7	3.78(1.00)	26.7

(표 III-3-12 계속)

구분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평균(SD)	개선 필요성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신뢰에 기반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미흡 (예, 상호소통, 신뢰기반 부족, 정책수요자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부족)	-	6.7	15.6	40.0	37.8	4.09(.90)	33.3
어린이집 운영 정보공개 불충분 (예, 정보공개범위의 한정, 정확성, 공개방식의 다양성 부족)	2.2	8.9	37.8	31.1	20.0	3.58(.99)	8.9
어린이집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미흡	2.2	8.9	31.1	33.3	24.4	3.69(1.02)	11.1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지원 인프라 미흡 (예, 시설 프로그램, 비품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부족)	-	15.6	42.2	37.8	4.4	3.31(.79)	4.4
다양한 경로의 중복적 지도감독으로 인한 효율적 보육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2.2	11.1	28.9	37.8	20.0	3.62(1.01)	1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6)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여섯 번째 추진과제인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 체계 개선」 세부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체감하는 달성 정도와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의 44.5%는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가 달성되었다고 응답(어느정도 달성됨 37.8%, 달성됨 6.7%)하였으며, 평균 3.20점으로 달성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 합리적 분담 (22.2%, 2.69점)',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11.1%, 2.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 개 세부 추진 과제 모두, 달성되지 못한 비율(24.5%~80.0%)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달성도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전문가가 인식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으로서 60.0%의 전문가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III-3-13〉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달성도와 중요도

구분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평균(SD)	중요도 (1순위)
	전혀 달성되지 못함	별로 달성되지 못함	보통	어느 정도 달성됨	달성됨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 (보육정보센터 개편 및 명칭 변경, 기능 확대)	6.7	17.8	31.1	37.8	6.7	3.20(1.04)	26.7

단위: %, 점

(표 III-3-13 계속)

구분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중요도 (1순위)
	전혀 되지 않음	달성 되지 않음	별로 달성 되지 않음	보통 정도 달성됨	어느 정도 달성됨	평균(SD)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 합리적 분담	11.1	40.0	26.7	13.3	8.9	2.69(1.12)	13.3
비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	24.4	55.6	8.9	6.7	4.4	2.11(1.01)	6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추진과제 6 「보육 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추진의 미흡성과 문제점에 대한 동의도 및 개선 필요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중 88.9%인 대다수의 전문가는 '유보통합 추진 미흡'(동의함 26.7%, 전적으로 동의함 62.2%)에 동의 하였으며, 미흡성은 평균 4.4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중앙-지방간 재정분담 갈등과 혼란 존재'를 82.2%(평균 4.27점)의 전문가가 미흡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의 부처간, 유사 전달체계 간 연계 및 중복성 조정 미흡' 역시 77.8%의 전문가가 동의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중,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66.7%는 '유보통합 추진 미흡'을 지적하였다.

<표 III-3-14>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유보통합 추진 미흡 (예, 형식적·부분적 통합 위주로 추진)	2.2	2.2	6.7	26.7	62.2	4.44(.89)	66.7
중앙-지방간 재정분담 갈등과 혼란 존재	-	6.7	11.1	31.1	51.1	4.27(.91)	8.9
유보통합 정보 공개 및 홍보 부족으로 혼란 증가	2.2	6.7	22.2	37.8	31.1	3.89(1.01)	4.4
보육·양육지원의 실질적 전달체계 구축 미흡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재정 확대 미흡, 육아중 내 역할 분담 및 위계의 미확립)	-	11.1	15.6	37.8	35.6	3.98(.99)	17.8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의 부처간, 유사 전달체계 간 연계 및 중복성 조정 미흡	-	-	22.2	40.0	37.8	4.16(.77)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의 보육정책 체감도

가.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 현실 체감 정도

본 연구를 위해 20대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조사에서,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총 69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과제의 달성 정도가 현실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즉 현 시점에서의 보육정책 체감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²²⁾. 이는 영유아 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는 달리, 이들이 직접 계획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 현실이 어떠한지를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4-1〉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정책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평균(5점)	
	(1)	(2)	(3)	(4)	(5)	(6)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1)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적다.	6.9	20.0	20.9	29.0	22.5	0.7	3.40
	2)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 부담은 적당하다(특별활동비, 입학금 등 기타필요경비)	13.7	26.0	28.2	21.0	10.3	0.7	2.88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3)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4.4	21.2	37.3	24.9	10.0	2.1	3.15
	4) 장애아 보육에 적합한 시설, 설비, 특수교사 등이 마련되어 있다.	14.6	32.2	27.6	13.9	5.7	6.0	2.62
	5) 다문화 영유아 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 교재·교구, 교사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10.4	27.3	33.3	17.9	6.4	4.6	2.8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6)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31.3	33.8	18.9	9.0	5.4	1.6	2.22
	7) 원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지 않다.	48.2	24.5	12.2	8.7	4.6	1.9	1.95
	8) 취업부모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39.6	29.5	16.6	7.4	4.7	2.1	2.06

22) 대국민 대상 조사 문 18번 “다음 제시된 내용은 2013년부터 시행중인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3-2017)」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과제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님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면서 현재의 보육현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표 하여 주십시오”

(표 III-4-1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평균 (5점)
		1	2	3	4	5	6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9) 공공형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36.1	30.2	18.9	8.3	4.1	2.4	2.12
	10)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19.7	24.6	31.9	15.6	6.2	2.0	2.63
	11) 어린이집의 환경, 설비, 시설 등은 전반적으로 좋다.	7.4	18.6	42.8	21.7	8.6	0.9	3.05
	12)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은 믿을만하다.	9.3	18.3	39.9	22.9	8.0	1.6	3.02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13) 보육교사는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4.7	17.2	39.2	28.9	9.4	0.6	3.21
	14)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좋다.	12.6	33.0	32.2	15.2	4.3	2.7	2.65
	15)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1	14.7	43.1	29.6	7.2	1.3	3.21
	16) 시설, 급간식 등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은 안전하다.	3.0	13.3	41.9	31.6	8.9	1.3	3.30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17)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9.7	22.6	36.3	20.0	10.0	1.3	2.98
	18)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6.6	19.2	35.5	26.2	11.9	0.7	3.18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19)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9	19.9	42.5	20.7	5.9	4.1	2.99
	2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접근 용이성).	12.6	24.2	37.9	15.7	6.6	3.0	2.79

주: 1)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각 항목에 대한 '6. 모르겠다' 응답 사례는 평균 산출시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보육의 공공성 및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범주에 대해 2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체감도를 질문하였다. 20개의 세부항목의 추진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적다’이며, 5점 만점에 3.40점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2.88점으로 응답되어 추가 경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범주 중에서는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에 따른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체감도가 평균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장애아 보육,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3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장애아와 다문화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6.0%, 4.6%로 해당 특성의 자녀나 해당 특성의 가구가 아닐 경우 현황을 체감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부분은 세부항목으로 국공립, 공공형, 직장,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이용 가능성의 체감도와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설비에 대한 체감도, 평가인증에 대한 신뢰도 및 체감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설비나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설치 및 이용 기회), 직장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의 접근성 등은 낮게 체감되고 있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자체에 대한 체감도보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더 낮게 체감되고 있었다.

‘양질의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의 세부 항목은 다른 범주에 비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좋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높았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보육프로그램, 시설, 급간식 등 보육 환경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다만 보육교사의 근로 환경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보면,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적 환경으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교사 근로환경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기회 등 2개의 세부 항목에 대해 체감도를 질문한 결과, 정보공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은 2.98점으로 보통에 못미치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원장 및 교사와의 소통 기회는 평균 3.1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체감도를 보였다.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접할 수 없는 행정 전달체계에 대한 체감도는 질문에서 제외하고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실행 중 가정양육 지원까지 기능이 추가되고 명칭이 보육정보센터에서 변경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세부 항목만 제시하여 질문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보통’ 수준 이하로 체감되고 있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세부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어린이집 외 대표적인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인식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나 예전에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1,766명을 대상으로는 현재 이용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이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했던 부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보육 현장에 대한 부모 입장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3.6%의 응답자가 ‘접근성(가까운 위치나 교통 편의성)’을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뒤에서 이어질, 제4장에서 제시한 어린이집 선택 이유에서 ‘집에서 가까워서’(30.7%)와 ‘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10.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이와 같은 어린이집의 선택 이유가,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분위기’(11.5%), ‘교사’(9.6%), ‘보육 프로그램’, ‘특별활동/체험 학습 등 특별프로그램’(각 8.4%)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급간식’(0.5%)을 만족하는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적었다.

한편, 어린이집의 불만족한 부분으로 ‘비용부담’을 응답한 비율이 24.7%로 분석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시설환경’(14.0%), ‘접근성’(8.9%), ‘특별활동/체험 학습 등 특별프로그램’(8.1%) 순으로 높았으며, ‘급간식’, ‘보육프로그램’, ‘교사’, ‘운영의 안정성’, ‘원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6% 미만의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III-4-2〉 이용 중인(마지막으로 이용했던) 어린이집의 만족/불만족했던 부분

단위: %(명)

구분	전체	
	만족한 부분	불만족한 부분
시설환경	8.1	14.0

(표 III-4-3 계속)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취업상태													
취업중	8.9	12.2	6.2	8.6	10.1	28.5	4.9	4.5	10.9	3.9	0.8	0.5	1000 (596)
휴직중	2.7	10.8	5.4	5.4	2.7	32.4	10.8	2.7	21.6	2.7	-	2.7	1000 (37)
학업중	-	16.7	-	-	33.3	16.7	-	16.7	16.7	-	-	-	1000 (6)
미취업	1.7	15.0	11.7	10.0	11.7	26.7	10.0	-	13.3	-	-	-	1000 (60)
$\chi^2(df)$						36.46(3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9	8.6	10.3	1.7	8.6	20.7	12.1	1.7	19.0	8.6	-	1.7	1000 (58)
200만원~300만원 미만	7.7	13.1	6.2	7.7	7.7	34.6	6.2	2.3	10.8	3.8	-	-	1000 (130)
300만원~400만원 미만	8.9	14.8	6.5	11.8	11.2	24.9	4.7	3.0	10.1	3.0	0.6	0.6	1000 (169)
400만원~500만원 미만	4.9	10.4	6.9	7.6	9.0	35.4	4.9	3.5	12.5	2.8	0.7	1.4	1000 (144)
500만원 이상	9.6	12.6	5.6	8.6	11.6	24.7	4.5	7.6	11.1	2.5	1.5	-	1000 (198)
$\chi^2(df)$						50.81(44)							
자녀연령													
영아	7.0	15.3	7.8	6.3	8.5	30.1	4.1	4.9	11.7	3.4	0.2	0.7	1000 (412)
유아	9.1	8.4	4.9	11.5	12.2	26.1	7.7	3.1	11.8	3.5	1.4	0.3	1000 (287)
$\chi^2(df)$						26.75(11)**							
지역 규모													
대도시	8.3	11.2	6.9	10.1	6.9	27.7	6.7	4.5	11.5	4.0	1.1	1.1	1000 (375)
중소도시	5.7	11.4	5.7	8.0	13.7	30.8	4.6	4.2	12.5	3.0	0.4	-	1000 (263)
읍면지역	14.8	24.6	8.2	-	13.1	23.0	3.3	1.6	9.8	1.6	-	-	1000 (61)
$\chi^2(df)$						38.53(22)**							

주: 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①시설환경 ②교사 ③원장 ④보육 프로그램 ⑤특별활동/체험 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⑥ 접근성 ⑦비용 부담 ⑧운영시간 ⑨전반적인 분위기 ⑩운영의 안정성 ⑪급간식 ⑫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 $p < .01$.

한편,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불만족 하는 부분으로 '비용부담'(21.2%)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시설환경'(14.0%), '접근성'(11.6%), '운영시간'(11.3%) 순으로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은 2%대에서 7%대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연령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이 불만족한 부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선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만족 하는 부분으로 '접근성'이 가장 많이 응답된 한편, '접근성'을 불만족한 부분으로 지적한 부모도 적지 않은 수준이므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등하원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4-4〉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불만족하는 부분

단위: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전체	14.0	6.0	3.7	4.3	7.4	11.4	21.2	11.3	2.4	3.0	3.7	11.4	1000 (699)
연령													
만 20~29세	13.2	7.7	3.3	4.4	12.1	5.5	18.7	11.0	4.4	1.1	4.4	14.3	1000 (91)
만 30~39세	14.4	5.4	3.2	3.8	6.1	12.8	22.8	11.9	1.6	3.2	4.5	10.3	1000 (312)
만 40~49세	13.9	6.3	4.5	4.9	7.6	12.2	19.4	10.8	2.4	3.5	2.8	11.8	1000 (288)
만 50~59세	12.5	-	-	-	-	-	50.0	12.5	12.5	-	-	12.5	1000 (8)
$\chi^2(df)$							25.61(33)						
취업상태													
취업중	14.3	6.2	4.0	3.9	7.7	11.1	21.6	10.6	2.7	3.2	3.9	10.9	1000 (596)
휴직중	10.8	2.7	2.7	8.1	5.4	16.2	18.9	10.8	2.7	-	-	21.6	1000 (37)
학업중	16.7	-	-	16.7	-	33.3	-	33.3	-	-	-	-	1000 (6)
미취업	13.3	6.7	1.7	5.0	6.7	10.0	20.0	16.7	-	3.3	5.0	11.7	1000 (60)
$\chi^2(df)$							25.63(3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0	5.2	1.7	6.9	12.1	8.6	20.7	13.8	-	1.7	3.4	6.9	1000 (58)
200만원~300만원 미만	15.4	6.9	3.1	3.8	3.1	11.5	25.4	10.0	3.8	3.8	3.1	10.0	1000 (130)
300만원~400만원 미만	11.8	7.1	3.6	5.3	7.1	13.0	21.3	11.2	1.2	1.2	2.4	14.8	1000 (169)
400만원~500만원 미만	13.9	4.2	3.5	2.1	11.8	7.6	22.9	11.1	2.8	3.5	2.8	13.9	1000 (144)
500만원 이상	13.6	6.1	5.1	4.5	6.1	13.6	17.2	11.6	3.0	4.0	6.1	9.1	1000 (198)
$\chi^2(df)$							40.09(44)						
자녀연령													
영아	13.8	6.6	3.4	3.9	9.5	10.7	18.9	11.7	2.2	3.9	2.4	13.1	1000 (412)
유아	14.3	5.2	4.2	4.9	4.5	12.5	24.4	10.8	2.8	1.7	5.6	9.1	1000 (287)
$\chi^2(df)$							19.49(11)						
지역 규모													
대도시	13.6	7.2	4.0	4.3	9.3	12.5	19.7	10.9	2.4	3.2	3.2	9.6	1000 (375)
중소도시	14.4	4.2	3.0	4.6	4.9	10.3	24.0	12.5	3.0	3.4	4.2	11.4	1000 (263)
읍면지역	14.8	6.6	4.9	3.3	6.6	9.8	18.0	8.2	-	-	4.9	23.0	1000 (61)
$\chi^2(df)$							23.52(22)						

주: 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①시설환경 ②교사 ③원장 ④보육 프로그램 ⑤특별활동/체험 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⑥접근성 ⑦비용 부담 ⑧운영시간 ⑨전반적인 분위기 ⑩운영의 안정성 ⑪급간식 ⑫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5.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관련 의견 및 평가

본 절에서는 최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정책 관련 의견 수렴을 수행한 선행 연구의 조사 결과(이미화 외, 2016)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보육정책에 대

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및 평가

가)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미화 외, 2016)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표 III-5-1>에 제시한 4개 보육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하였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확보(3.70점)’와 ‘어린이집이 갖는 지역사회에의 책무성(3.41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관할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3.36점)’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I-5-1> 보육교사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2015년	2012년
보육은 공공서비스다	2.5	8.5	42.1	46.9	100.0(4,063)	3.33	3.33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 지닌 기관이다	1.4	7.0	41.0	50.5	100.0(4,063)	3.41	3.42
어린이집의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0.9	3.0	21.6	74.5	100.0(4,063)	3.70	3.59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8	9.4	40.0	48.8	100.0(4,063)	3.36	3.27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38.

나)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보육교사의 의견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미화 외, 2016)에 제시된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보육교사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4개 측면에서 지난 3년간 보육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육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경향을 보였으며, ‘보육내용의 충실성(2.85점)’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사업의 공공성(2.73점)’,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2.68점)’,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안정화(2.47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2〉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계(수)	4점 평균	
						2015년	2012년
보육사업의 공공성	3.2	31.4	54.9	10.5	100.0(4,063)	2.73	
보육내용의 충실성	2.5	21.9	63.4	12.2	100.0(4,063)	2.85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안정화	11.1	39.3	40.7	8.9	100.0(4,063)	2.47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4.8	31.3	55.0	8.9	100.0(4,063)	2.68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38.

다)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만족도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미화 외, 2016)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정책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이행복카드(3.11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5세 누리과정(2.91점)', '전자행정시스템(2.88점)', '정보공시제(2.8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인증제도'는 2.2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나, 평가인증에 대한 교사의 불만족도가 가장 컸으며, '양육수당(2.40점)'과 '시간제보육사업(2.43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III-5-3〉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2015년	2012년
평가인증	20.3	42.4	30.6	6.7	100.0(4,062)	2.24	2.60
전자행정시스템	3.8	21.3	57.6	17.3	100.0(4,057)	2.88	-
아이행복카드	2.7	11.8	57.3	28.2	100.0(4,061)	3.11	-
3-5세 누리과정	4.0	20.5	56.4	19.2	100.0(4,041)	2.91	2.82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23.4	28.4	28.7	19.6	100.0(4,060)	2.44	2.58
양육수당	21.5	30.4	34.8	13.3	100.0(4,061)	2.40	-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9.8	32.5	45.9	11.8	100.0(4,051)	2.60	2.68
시간제보육사업	18.6	32.5	36.6	12.3	100.0(4,060)	2.43	-
정보공시제	6.5	24.0	53.0	16.5	100.0(4,056)	2.80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9.9	23.5	46.7	19.8	100.0(4,060)	2.76	-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238-239.

6. 소결

제3장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분야별 성과 지표와 목표치의 달성도 평가, 주무부처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체 평가 결과, 전문가 조사, 영유아 부모의 보육정책 체감도 평가, 보육교사의 보육정책에 관한 평가 등 다방면의 대상과 다양한 방식의 평가 결과를 통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총 6개의 추진과제 중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은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여, 6개 과제 중 상기한 2개 과제의 달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추진과제들은 지표 중 일부의 성과만을 달성하였거나, 일부는 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전혀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과제의 경우, 지표에 의한 공공성확대 목표는 대체로 달성되었으나, 품질 관리의 지표인 평가인증의 의무화와 재정 연계 추진이 미흡하여 성과가 높지 못한 과제로 평가되었다²³⁾. 단, 지표에 의해서는 ‘부모 보육·양육 부담 경감’과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지원’ 분야의 성과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당 분야나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지원’의 경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일시보육 서비스 확산’, ‘통합영유아 복지카드’ 도입 여부인데,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 다문화, 장애아 가구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한 질적 성과를 드러내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보육 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에서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50%→60%)’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보육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또한 성과가 높다고 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

즉, ‘지표 상 성과’가 있더라도 지표가 정책과제의 목표를 평가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3)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등급제로 변경’ 등 개편 방안을 심의, 확정하여 2017년 11월부터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4등급 공개방식으로 공개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신청제로 운영중인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국제신문, 2017. 7. 1).

둘째,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자체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 대비 실적은 대부분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 평가가 우수한 것은 '부모 보육·양육부담 경감' 과제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는 2013년 무상보육으로 조기 달성되어 '우수' 평가를 받아, 성과가 높은 부분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요자 중심 무상보육 기반 구축'의 경우도 관리과제 중 자체적으로 평가가 높은 분야인데, 2014년 '보통' 평가에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수' 확대와 2016년 맞춤형 보육 제도 실시를 통해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추진률'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2015년 '다소 우수', 2016년 '우수'로 상승하였다.

2014년 이후 관리과제 중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부분은 2016년까지 '보통' 평가에 그치고, 국공립 확충 관련 관리과제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의 자체 평가도 주로 양적 지표에 의존하는 평가이며, 목표치가 관리과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적절한 성과인지 재고가 필요하며, 목표치 자체에 지나친 보수성이 엿보이므로 성과관리를 위한 적절한 목표치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문가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평가를 보면, 5점 만점을 기준으로는 '달성' 수준에 도달한 추진과제는 없어, 정부 자체 평가에 비해 엄격한 평가 경향을 보였다. 가장 높게 평가된 추진과제는 역시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이었으나, 평균 3.73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그쳤고, 3점(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추진과제는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과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2개 과제에 그쳐 전문가들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미진한 것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2차 계획에서 추진된 과제들이 현 시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지 살펴 본 결과,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은 현 시점에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지 않았고, 중요도 순으로 1~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이 현시점에서도 중요도가 있는 과제로 응답되었다. 전문가들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만족도 제고', '유보통합 추진', '신뢰성 있는 민관협력 기

반 조성',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보육재정 안정성 확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추진과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이 미흡하였다고 답하였다.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제외하면 제2차 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대부분의 과제가 미흡한 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선 필요도는 '보육서비스 공공성 제고'(31.8%), '유보통합 추진'(29.5%), '보육교사 처우개선(9.1%)',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대 추진과제의 세부과제별로도 달성도를 평가하였는데, 달성 정도가 높았던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의 경우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외에 2개 세부과제(보육료 적정화, 부모 추가 경비 부담 경감)의 달성도는 '보통(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현시점에서의 중요도는 '보육료 적정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과 관련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모두 '보통(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현시점에서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세부과제는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나타났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의 세부과제 중에서는 '평가인증 강화'가 가장 달성도가 높게 평가되었고(3.33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가장 달성도가 낮았던 세부과제로 평가되었다(2.40점).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는 55.6%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 응답하였다.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의 세부과제들은 모두 3점(보통) 미만의 평가를 받아 달성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중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자격관리, 전문성 지원 강화)'의 달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도 비등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제2차 계획에서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인적 환경인 보육교사에 대한 의견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며, 교사가 근무하는 물리적 환경과 근로조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평가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즉, 전문가들은 제3차 계획 추진 시에는, 인적 환경으로서 보육교사의 처우와 전문성 제고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 추진과제인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과제의 세부과제 중에서는 '건전한 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의 달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반면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는 달성도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평가된 세부과제였다. 이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는 달성도가 가장 미흡하게 평가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이 1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신뢰에 기반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며 그 이유는 민관의 상호소통, 신뢰기반 부족, 정책 수요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부족때문이라는 점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다.

마지막 추진과제인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세부과제도 달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바람직한 유보통합 추진'은 가장 달성도가 낮은 과제로 평가되었고, 체감도가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로 가장 달성도가 높은 과제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이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세부과제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 현실이 어떠한지를 질문하여 정책 수요자의 주관적 체감도를 가늠해 본 결과,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체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적다'에 가장 긍정적인 응답 경향을 나타냈고(3.40점), 그 외 어린이집의 시설, 급간식의 안전성,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제공, 보육교사의 전문성 등 '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 관련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육현실을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체감도를 평가하였다. 반면,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된 시설 확충과 접근성 부분의 체감도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충분성, 입소 기회,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 선호하는 유형의 어린이집 충분성과 이용 기회, 즉 접근성에 대한 체감도는 낮게 평가하였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에 대해서도 보통 미만으로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섯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보육교사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및 평가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는 보육의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 어린이집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 회계 관리의 투명성, 관할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 등 4개 보육정책 성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2015년 간 보육정책 추진으로 '보육의 충실성'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았으며, 보육정책 중에서 '아이행복카드' 도입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큰 반면 '평가인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보육 현장에서 평가 강화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평가의 내실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지표 성과 분석, 자체 평가 분석, 전문가 조사, 정책수요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 조사 결과, 보육교사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중에 이루어진 '보편적 무상보육'으로 인해 '부모의 보육·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성과가 있는 부분으로 수렴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체계화에 기여한 성과도 있으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질적 성과'와 '내실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 하겠다.

IV.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요구

제4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전문가 조사'와 '대국민 조사'에서 나타난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성과 목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요구를 담았다.

1. 보육정책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요구

가. 전문가 조사 결과

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시 고려할 보육정책 환경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그 당시의 보육정책이 처한 환경으로 '저출산·고령화 심화',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경제성장',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격차 확대'의 환경을 고려하였다. 보육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철학 또는 이념)을 추구하여 어떤 목표를 수립할 것인지는 '보육'의 본질적 특성 뿐 아니라 보육정책 수립 당시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중요한 정책 환경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을 전문가에게 제안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에서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하였던 정책 환경과, 2차 조사에서 전문가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정책 환경의 동의정도, 그리고 고려되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기존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되었던 정책 환경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동의하는 비율은 93.3%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66.7%)', '낮은 경제성장(57.7%)',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격차 확대(55.5%)' 순으로 고려해야 할 보육 정책환경으로 평가하였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환경으로, 전문가 총 11개의 정책 환경을 제안하였으며, 각 정책 환경 별로 동의도(전적으로

동의함+동의함)를 살펴보면,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 신뢰성, 전문성, 다양성 등)의 응답률이 9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아동행복(아동행복과 권리 중심 접근 요구 증대)’, ‘직장,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요구 증대’, ‘가족구조의 다양화 추세’의 정책 환경에 대하여 모두 86.7%의 전문가가 동의 하였고, ‘사회 구성원 간 소득불평등 확대, 양극화 경향 심화(84.5%)’, ‘유보통합(73.3%)’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전문가들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할 정책 환경으로, 보육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심화, 아동의 행복과 권리 중심 접근 요구 증대,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요구 증대, 가족구조의 다양화를 꼽았다.

〈표 IV-1-1〉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환경
단위: %, 점

구분	3차 계획 시 고려할 정책 환경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저출산 고령화 심화	-	-	6.7	31.1	62.2	4.56 (.62)	24.4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2	6.7	24.4	35.6	31.1	3.87 (1.01)	8.9
낮은 경제성장	-	8.9	33.3	33.3	24.4	3.73 (.94)	-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격차 확대	-	15.6	28.9	33.3	22.2	3.62 (1.01)	4.4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추세	-	11.1	20.0	40.0	28.9	3.87 (.97)	8.9
직장,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요구 증대	-	4.4	8.9	51.1	35.6	4.18 (.78)	2.2
사회구성원간 소득불평등 확대, 양극화 경향 심화	-	2.2	13.3	35.6	48.9	4.31 (.79)	2.2
가족구조의 다양화 추세	-	-	13.3	48.9	37.8	4.24 (.68)	2.2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응 요구	-	13.3	26.7	42.2	17.8	3.64 (.93)	-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보육 환경의 안전성 확보, 신뢰성, 전문성, 다양성 등)	-	2.2	2.2	46.7	48.9	4.42 (.66)	11.1
자녀양육관의 변화(예, 영아기 기관보육 이용에 대한 거부감 약화)	2.2	4.4	24.4	37.8	31.1	3.91 (.97)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아동행복(아동 행복과 권리 중심 접근 요구 증대)	-	4.4	8.9	26.7	60.0	4.42 (.84)	13.3
보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무상, 국가 책임, 형평성, 안전성 등)	4.4	2.2	28.9	37.8	26.7	3.80 (1.01)	-
보육 재정 안정성 확보 요구	2.2	6.7	33.3	13.3	44.4	3.91 (1.12)	2.2
유보통합	2.2	6.7	17.8	20.0	53.3	4.16 (1.09)	20

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고려한 정책환경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2) 보육정책 목표(방향성)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아동 행복)’과 ‘아동 간 생애 초기 경험의 형평성 제고(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포함)’에 동의 한다는 비율이 각 97.7%, 93.3%로 나타나, 대다수의 전문가는 아동 행복과 형평성 제고에 보육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외에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휴직 개선 등 포함)’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88.9%, ‘부모양육역량 및 책임 강화’는 8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보육정책의 목표를 부모양육·가정양육과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교사가 행복한 보육 기반 조성’ 역시 80%대로 높은 비중을 보여, 보육의 수요자 뿐 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도 고려되어, 어린이집 교직원의 행복·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정책 목표도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영유아의 학교 준비도 증진’은 28.9%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1-2〉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 방향성

단위: %, 점

구분	보육정책의 목표(방향성)					평균(SD)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아동 행복)	-	-	2.2	13.3	84.4	4.82(.44)	82.2
연령에 적합한 양육 지원	-	-	11.1	44.4	44.4	4.33(.67)	2.2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	-	6.7	20.0	46.7	26.7	3.93(.86)	6.7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개선 등 포함)	-	-	11.1	35.6	53.3	4.42(.69)	2.2
양육부담 경감으로 출산률 제고	-	8.9	26.7	40.0	24.4	3.80(.92)	-
아동간 생애 초기 경험의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포함)	-	-	6.7	42.2	51.1	4.44(.62)	4.4
부모양육역량 및 책임 강화	-	-	15.6	33.3	51.1	4.36(.74)	2.2
영유아의 학교 준비도 증진	6.7	17.8	46.7	20.0	8.9	3.07(1.01)	-
교사가 행복한 보육 기반 조성	2.2	4.4	13.3	42.2	37.8	4.09(.95)	-
다각적, 생애주기적 양육부담 경감	-	4.4	42.2	44.4	8.9	3.58(.7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3) 현재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도

전문가가 인식하는 현재 우리나라 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차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을 개방형으로 응답하

도록 하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응답 내용을 유목화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우선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을 10개 항목으로 추출하였으며, 동의도와 개선 필요도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IV-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문가 중 97.7%는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동의함 44.4%, 전적으로 동의함 53.3%)'가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인 것에 동의하였으며, 평균점수는 4.5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84.5%가 '교사 양성 경로의 다양성에 의한 전문성 저하(동의함 28.9%, 전적으로 동의함 55.6%)'를 보육의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평균 4.36점을 나타냈다. 즉, 전문가들은 낮은 처우, 전문성 저하 등 보육교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큰 보육의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전체 공급 중 낮은 비중)(77.8%, 4.20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미흡(77.8%, 4.10점)', '보육의 책임과 기능에 대한 혼선(보육정책의 철학 부재)(75.6%, 4.11점)'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부족, 보육의 질, 보육정책의 철학 즉, 원론적 접근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전문가의 35.6%가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전체 공급 중 낮은 비중)'을 응답하였으며, 22.2%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효율성 저하와 혼란'을 응답하였다.

<표 IV-1-3> 현재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도

구분	동의도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전체 공급 중 낮은 비중)	-	6.7	15.6	28.9	48.9	4.20(.94)	35.6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	-	-	2.2	44.4	53.3	4.51(.55)	11.1
교사 양성 경로의 다양성에 의한 전문성 저하	-	4.4	11.1	28.9	55.6	4.36(.86)	8.9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효율성 저하와 혼란	2.2	8.9	17.8	26.7	44.4	4.02(1.10)	22.2
보육정책 수립에 있어 최종수혜자(아동)에 대한 고려 부족(아동발달과 권리 미 고려)	-	8.9	20.0	31.1	40.0	4.02(.99)	4.4
보육의 책임과 기능에 대한 혼선(보육정책의 철학 부재)	-	2.2	22.2	37.8	37.8	4.11(.83)	11.1
보육서비스 질 제고 미흡	-	4.4	17.8	48.9	28.9	4.10(.79)	2.2
자녀양육과 보육 책임에 대한 부모 책임 의식 약화와 기관 의존	-	6.7	26.7	33.3	33.3	3.93(.94)	2.2

단위: %, 점

(표 IV-1-3 계속)

구분	동의도						개선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불안정한 보육 재정	2.2	15.6	35.6	22.2	24.4	3.51(1.10)	-
시설위주의 보육 지원체계에 의한 과도한 시설 이용(특히 영아)	-	13.3	26.7	33.3	26.7	3.73(1.01)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4) 보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

전문가에게 새 정부가 영유아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10개의 항목과, 2차 조사에서의 동의 정도와 추진필요도 우선순위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1-4>와 같다.

먼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목표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95.6%(동의함 37.8%, 전적으로 동의함 57.8%)로 가장 많았고, 동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3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88.9%, 4.55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84.4%, 4.29점)’, ‘보육서비스 질 제고(82.2%, 4.24점)’이 비등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육 재정의 안정화(53.3%, 3.7점)’의 동의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서, 각 목표에 대한 추진 필요도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의 33.3%가 ‘유보통합 완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6.7%)’,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새정부가 영유아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

단위: %, 점

구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 동의도						추진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6.7	8.9	33.3	51.1	4.29(.89)	26.7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	4.4	37.8	57.8	4.53(.59)	15.6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	-	11.1	31.1	57.8	4.55(.62)	4.4
안정적 가정양육환경 기반 조성	-	2.2	31.1	37.8	28.9	3.93(.84)	6.7
유보통합 완결	4.4	8.9	17.8	15.6	53.3	4.04(1.22)	33.3
보육서비스 질 제고	-	2.2	15.6	37.8	44.4	4.24(.80)	2.2
아동 발달에 적합한 보육정책 설계	-	4.4	17.8	40.0	37.8	4.11(.86)	4.4

(표 IV-1-4 계속)

구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 동의도						추진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보육에 대한 국가-부모 역할과 책임 조정	-	4.4	24.4	35.6	35.6	4.02(.89)	4.4
보육재정의 안정화	-	8.9	37.8	22.2	31.1	3.76(1.00)	-
보육·양육지원 정책간 정합성 제고 (부처별·부처간)	-	2.2	24.4	40.0	33.3	4.04(.82)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나. 대국민 조사 결과

1) 영유아 부모의 보육정책 방향성에 관한 의견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대국민 조사에서 현재 취학전 자녀가 있는 영유아 부모에게(1,123명) 현재까지 추진된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영유아 부모들의 의견은 다음 <표 IV-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매우 바람직함(5)’의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보통-3점’을 다소 상회하는 의견을 보였으며, 그중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에 대해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소 바람직함+매우 바람직함 80.7%, 평균 4.13점). 반면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차등 없이 제공되는 무상보육’은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가장 낮아 60.7%로 나타났고, 평균 3.65점이었다. ‘부모의 취업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보육 다음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응답 비율이 높아(다소 바람직함+매우 바람직함 69.7%, 평균 3.91점)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이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당위성을 인정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영유아 부모들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표방하였던 ‘국가책임보육’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가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였던 ‘보편적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보편적 무상보육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도입시행에 따른 보편적 지원, 영아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보편적 지원 등이 2013년부터 완성되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이 한 가정에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 책임 보육'의 실현이 반드시 소득 등 어떠한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무상'으로만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5〉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영유아 부모)

단위: %(명), 점

내용	전혀 바람직 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 지 않음	보통	다소 바람직 함	매우 바람 적함	계(수)	평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0.4	3.4	15.5	43.7	37.0	100.0(1,123)	4.13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차등없이 제공되는 무상보육	4.6	13.9	20.8	32.9	27.8	100.0(1,123)	3.65
부모의 취업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보육 (맞춤형 보육, 맞벌이 부모 입 소우선순위 부여)	2.2	6.1	21.9	37.8	31.9	100.0(1,123)	3.91
영아(0-2세)기는 어린이집 이용보다는 가정 양육 권장	3.0	8.0	26.0	36.0	27.0	100.0(1,123)	3.76

주: 영유아 부모 1,1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한국민용)」의 결과임.

다음으로 영유아의 연령별 바람직한 양육 형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령별로 가정양육과 기관 이용 중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만0세(생후 12개월까지)와 만1세(13~24개월)의 경우는 '가정 양육'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만2세~5세 이상 까지는 기관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만0세의 경우는 가정양육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99.1%로 거의 100%에 가까이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만2세는 가정양육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6%로 기관이용과 가정 양육에 대한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났으나, 만3세 이후부터는 기관 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83.9%, 4세는 95.2%, 만5세 이상은 98.5%로 만0~2세와 큰 편차를 보였다.

〈표 IV-1-6〉 연령별 가정양육과 기관 양육 선호도

단위: %(명)

연령(월령)	가정 양육이 적절함	기관 이용이 적절함	계(수)
만0세(~생후 12개월)	99.1	0.9	100.0(1,123)

(표 IV-1-6 계속)

연령(월령)	가정 양육이 적절함	기관 이용이 적절함	계(수)
만1세(13~24개월)	87.0	13.0	100.0(1,123)
만2세(25~36개월)	44.6	55.4	100.0(1,123)
만3세(37~48개월)	16.1	83.9	100.0(1,123)
만4세(49~60개월)	4.7	95.3	100.0(1,123)
만5세 이상(61개월 이상)	1.5	98.5	100.0(1,123)

주: 영유아 부모 1,1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한편 각 연령별로 ‘기관 이용’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1일을 기준으로 각 연령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조사하였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경우로 구분하여 적절한 시간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 대해 8시간~10시간 미만 이용이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통상 종일제 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응답한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외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2시간 미만부터 10시간~12시간 이용까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단,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가구와 외벌이 가구를 비교하였을 때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 4시간에서 6시간 미만, 6시간에서 8시간 미만 이용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12시간, 12시간 이상 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외벌이 가구의 경우 12시간 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1~2% 이내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7〉 연령별 적당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1일 기준)

단위: %

연령	사례 수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1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12시간 이상
만0세	(10)	-	-	10.0	20.0	40.0	20.0	10.0	10.0	20.0	20.0	20.0	10.0	10.0	-
만1세	(146)	0.7	1.4	12.3	25.3	33.6	18.5	8.2	6.2	16.4	34.9	24.0	11.6	4.8	2.1
만2세	(622)	0.8	2.1	7.2	25.9	43.6	13.8	6.6	4.3	15.9	41.5	27.0	8.4	1.8	1.1
만3세	(942)	0.1	2.1	6.2	27.4	44.7	14.2	5.3	3.3	12.6	37.2	34.7	8.9	2.4	0.8
만4세	(1070)	0.4	1.0	5.2	25.7	46.6	15.0	6.1	2.5	8.5	34.1	38.8	12.1	2.2	1.8
만5세 이상	(1106)	0.2	1.0	3.9	24.8	48.2	14.6	7.3	2.5	6.3	29.3	41.7	15.7	2.3	2.2

주: 1) 영유아 부모 1,1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각 연령에서 '기관 이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례수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2) 영유아 부모가 중시하는 보육정책 효과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그간 보육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였던 정책 효과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 효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육정책을 통한 효과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었으며,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70.6%에 달하였고(평균 4.64점) 제시된 다른 정책 효과보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제시된 모든 보육정책의 효과들에 대해서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환경 조성', '생애초기 동일한 출발선 제공으로 아동 간 형평성 제고', '여성 경제활동 제고',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출산을 제고'라는 그간 추구하였던 정책 목표들에 영유아 부모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전혀 중요하지 않음+별로 중요하지 않음)고 답한 응답 비율은 최고 3.1%(출산을 제고)에 불과하였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정책이 이러한 정책 효과를 위한 것임에 대부분 공감하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일하는 부모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8> 보육정책 효과의 중요도에 관한 의견(영유아 부모)

단위: %,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평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0.2	0.6	4.7	23.9	70.6	100.0(1,123)	4.64
어떤 가정 환경의 아이라도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애초기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1	1.1	9.2	36.8	52.9	100.0(1,123)	4.41
더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5	1.6	15.0	39.5	43.4	100.0(1,123)	4.24
취업부모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1	0.3	7.7	33.5	58.4	100.0(1,123)	4.50

(표 IV-1-8 계속)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평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6	2.5	18.0	30.1	48.8	100.0(1,123)	4.24

주: 영유아 부모 1,1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2. 보육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가. 전문가 조사 결과

1)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

1차 조사에서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에 관하여 개방형 응답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응답 내용을 5개 과제로 유목화하여 그 동의도와 추진 필요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 IV-2-1>과 같이, 전문가는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를 5개로 제안하였으며, 각 정책 과제의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육 수요 변화(예, 출산율 감소, 맞벌이 증가 등)에 대응한 보육 서비스 개선'에 84.5%(동의함 35.6%, 전적으로 동의함 48.9%)의 전문가가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로 동의 하였으며, 5점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4.31점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체계 구축'이 82.2%, 평균 4.29점을 나타내 그 뒤를 이었다. '아동양육·보육정책 간 연계와 정합성 제고'(77.8%, 4.13점), '행복 육아를 위한 부모 역할 수행 지원'(75.6%, 4.13점)과, '보육지원의 (실질적)형평성 제고'(75.6%, 4.11점) 역시 비교적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이어서 5개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의 추진 필요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의 33.3%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 체계 구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1〉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

단위: %, 점

구분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의 과제 동의도						추진 필요도 (1순위)
	전혀 동의 안됨	동의 안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체계 구축	-	2.2	15.6	33.3	48.9	4.29(81)	33.3
행복 육아를 위한 부모 역할 수행 지원	-	8.9	15.6	28.9	46.7	4.13(99)	13.3
보육 수요 변화(예, 출산률 감소, 맞벌이 증가 등)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개선	-	2.2	13.3	35.6	48.9	4.31(79)	24.4
아동양육·보육정책 간 연계와 정합성 제고	-	-	22.2	42.2	35.6	4.13(75)	17.8
보육지원의 (실질적)형평성 제고	-	4.4	20.0	35.6	40.0	4.11(88)	1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2)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세부과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별 향후 추진해야 할 추가적인 세부과제가 있다면 제안하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 요구가 있었다.

가) 추진과제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의 추가 세부과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의 첫 번째 추진과제인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를 제안하도록 하였고, 1차 조사에서 취합된 내용을 2차 조사에 제시하여 동의도와 중요도를 살펴 보았다. 전문가들은 다음 <표 IV-2-2>와 같이 3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그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소득 계층, 보육수요별 차등 지원 도입, 중점 보육시간과 기타 시간 분리 차등지원 등을 포함하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대하여 93.3%(동의함 24.4%, 전적으로 동의함 68.9%)의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55.6%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추가경비 지원을 포함한 무상보육 실현'은 20.0%의 전문가가 동의해 다른 추진 과제에 비해 비교적 낮은 동의도를 나타냈다.

제안된 세부과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 체계 개편'이 86.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전문가들의 보육료 지원 체계 개편 및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예, 소득계층별 보육수요별 차등 지원 도입, 중점보육시간과 기타 시간 분리 차등지원 등 포함)	4.4	-	2.2	24.4	68.9	4.53(.92)	86.7
추가경비 지원을 포함한 무상보육 실현(예,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베이비시터 등 추가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등 포함)	20.0	26.7	33.3	11.1	8.9	2.62(1.19)	4.4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6.7	4.4	33.3	26.7	28.9	3.67(1.15)	8.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나)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의 추가 세부과제

전문가에게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1차 조사), 이를 유목화 하여 2차 조사에서 동의도와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IV-2-3>와 같이, 전문가들은 4개의 세부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다양한 양육·보육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동의함 46.7%, 전적으로 동의함 40.0%, 평균 4.27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기반 구축(동의함 48.9%, 전적으로 동의함 37.8%, 평균 4.22점)'에 전문가의 86.7%가 동의하였으며, '보육·양육 수요에 맞는 지원 및 프로그램 다양화'가 84.4%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육·수요의 세분화'는 51.1%의 비교적 낮은 동의도를 나타냈다.

이 중,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세부과제로 여기는 항목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기반 구축'으로 전문가의 51.1%가 응답하였다.

〈표 IV-2-3〉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기반 구축(예, 인력 양성·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설 구비 등)	-	2.2	11.1	48.9	37.8	4.22(.74)	51.1

(표 IV-2-3 계속)

구분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보육·양육 수요에 맞는 지원 및 프로그램 다양화	-	-	15.6	60.0	24.4	4.09(.63)	8.9
보육·양육 수요의 세분화	2.2	6.7	40.0	31.1	20.0	3.60(.96)	11.1
다양한 양육·보육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	13.3	46.7	40.0	4.27(.69)	28.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다)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의 추가 세부과제

세 번째 추진과제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로, 전문가가 제안한 4개 과제는 다음 <표 IV-2-4>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공보육 시설 확충과 부실어린이집 퇴출의 수급 조절'에 대하여 93.4%(동의함 35.6%, 전적으로 동의함 57.8%)의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였으며, 동의 정도를 5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49점을 나타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 체계 구축'은 84.5%, '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예, 컨설팅 연계, 피드백 강화)'는 80.0%의 전문가가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로 평가하였다. 한편, '평가인증 결과와 부모 지원 연계'는 60.0%의 전문가가 동의하였지만,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20.0%에 달해,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동의도가 낮았다.

추가 제시된 세부과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공보육 시설 확충과 부실어린이집 퇴출의 수급 조절'이 48.9%, '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예, 컨설팅 연계, 피드백 강화)'이 4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IV-2-4>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구분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 (예, 컨설팅 연계, 피드백 강화)	2.2	-	17.8	33.3	46.7	4.22(.90)	40.0
평가인증 결과와 부모 지원 연계	2.2	17.8	20.0	33.3	26.7	3.64(1.13)	4.4
공보육 시설 확충과 부실어린이집 퇴출의 수급 조절	-	2.2	4.4	35.6	57.8	4.49(.69)	48.9

단위: %, 점

(표 IV-2-4 계속)

구분	추진과제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공공형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 체계 구축	-	-	15.6	46.7	37.8	4.22(.70)	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라)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의 추가 세부과제

전문가에게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를 제안하도록 한 결과, 다음 <표 IV-2-5>와 같이 3개 세부과제가 제안되었다. 이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보육인력 자격관리 체계의 개편(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한 양성 비중 축소, 국가시험제 도입, 자격갱신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전문가 모두가 동의(평균 4.67점)하였으며, ‘우수인력 보육현장 유인을 위한 기반 조성(예: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시간선택제 등 보육인력의 일-가정 양립 지원, 자격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93.3%(평균 4.62 점), ‘부적격 교사 조기발견·관리체계 구축(예: 인적성 검사 의무화, 부적절 행위 교사에 대한 징계처리절차 구축)’은 77.7%(평균 4.20점)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추가 제안된 세부과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보육인력 자격관리 체계의 개편’에 대하여 60.0%의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우수인력 보육현장 유인을 위한 기반 조성’이 40.0%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격 교사 조기발견·관리체계 구축’을 1순위로 꼽은 전문가는 없었다.

<표 IV-2-5>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보육인력 자격관리 체계의 개편 (예 :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한 양성 비중 축소, 국가시험제 도입, 자격갱신제도 도입 등)	-	-	-	33.3	66.7	4.67(.48)	60.0
우수 인력 보육 현장 유인을 위한 기반 조성 (예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시간선택제 등 보육인력의 일-가정 양립 지원, 자격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	-	6.7	24.4	68.9	4.62(.61)	40.0
부적격 교사 조기발견·관리체계 구축 (예 : 인적성 검사 의무화, 부적절 행위 교사에 대한 징계처리절차 구축)	-	2.2	20.0	33.3	44.4	4.20(.8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마) 추진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구축의 추가 세부과제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1차 조사에서 다음 <표 IV-2-6>과 같이 3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2차 조사에서 이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확대 기반 조성’에 대하여 84.5%(동의함 48.9%, 전적으로 동의함 35.6%)의 전문가가 추가되어야 할 세부과제로 동의 하였으며, 평균 4.1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부모,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과 ‘어린이집 정보공개 내실화’에 대해서는 각 80.0%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추가 제안된 세부과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부모,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하여 40.0%의 전문가가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6>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부모,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예 : 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기회 제공, 참여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	4.4	15.6	40.0	40.0	4.16(.85)	40.0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확대 기반 조성 (예 : 설환경 개선, 열린어린이집 및 인센티브 확대)	-	2.2	13.3	48.9	35.6	4.18(.75)	28.9
어린이집 정보공개 내실화 (예: 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 부모들이 원하는 정보 제공, 정보공시의 내용 정확도 관리)	-	4.4	15.6	42.2	37.8	4.13(.84)	3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바)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추가 세부과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1차 조사), 이를 유목화 하여 2차 조사에서 동의도와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IV-2-7>과 같이, 전문가들은 3개의 세부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보육·양육 지원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에 각각 전문가의 88.9%(각 평균 4.38

점, 4.42점)가 동의하였으며, ‘안정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은 86.6% (평균 4.49점)로 나타나, 추가된 3개 세부과제 모두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이 중,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세부과제로 여기는 항목은 ‘안정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으로 전문가의 53.3%가 응답하였다.

〈표 IV-2-7〉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단위: %, 점

구분	추진과제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중요도 (1순위)
	전혀 동의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평균(SD)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예, 보육재정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 역할 분담 명확화,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담당 계획의 실질적 추진 방안 마련)	-	4.4	6.7	35.6	53.3	4.38 (.81)	28.9
안정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예, 장기적 청사진 추진 절차와 로드맵 공개, 홍보)	-	2.2	11.1	22.2	64.4	4.49 (.72)	53.3
보육·양육 지원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 (예, 육이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다양화를 통한 확대, 인력·재정 지원 확대, 유사기능의 전달체계(예,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지자체 육이중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간 편차 감축)	-	-	11.1	35.6	53.3	4.42 (.69)	17.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3) 보육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쟁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 내용 중 보육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과 전문가가 제시하는 향후 보육정책의 추가 과제 등 요구를 살펴보았으며, 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전제가 되어야 할 기초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초 근거 자료를 넘어서,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현안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쟁점에 관하여, 전문가가 자유롭게 제시한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가) ‘보육 공공성’ 확보의 지향점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보육정책의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전문가 조사에서는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공보육 시설 확충, (차등)보육료 지원, 관련

인프라 확충, 관리 감독(인증 등) 강화, 서비스 질 향상, 가정 내 양육 지원 등의 응답이 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히 ‘공보육 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무상 보육의 확대가 반드시 공공성 확보에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상당수였다. 그 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 담보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인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또한 일견 보육의 공공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소수의 응답이긴 하지만, 기관 교육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볼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보육의 내실화 다지기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과 함께 보육 공공성 확보는 공보육 기관의 수 늘리기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2-8〉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범주		세부내용	단위: %, 사례		
			응답률	수	
인프라 확충	공보육시설	·공보육 시설 확대 ·민간 및 가정을 공보육으로 흡수	42%	14	16
	관련인프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설	6.0%	2	
비용 지원 확대	보육료	차등 지원	·무조건적 무상보육 반대	15.2%	5
		보편지원 확대	·소득 수준 무관한 보육료 지원 강화	12.1%	4
	인건비	인건비 지원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충	12.1%	4
보육 서비스 질 제고	평가 인증 강화	·관리 감독 강화 ·평가 운영체계 투명화	12.1%	4	11
	질 관리	·시설 확충 보다 질제고 중요 ·품질 관리가 병행되는 시설 확충	21.2%	7	
가정 내 양육 지원		·부모 참여 활성화 ·부모 양육 중요성 인식 제고 ·가정 양육수당 확대	9.1%	3	
기타		·부모 교육 확대 ·회계처리 강화 ·민간과 공공의 경쟁 구도 강화	6.0%	2	

주: 45명 중 총 33명 응답한 결과를 기술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나) 보육과정·프로그램

향후 보육과정·프로그램 관련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본 조사 대상 전문가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 크게 보육과정·프로그램의 ‘구조’, ‘내용(contents)’, ‘운영’, ‘지향점’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조’에 관한 의견이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은 최저기준의 기본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때문에 복잡하 기보다는 단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만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 공히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보육·교육과정 이며 표준(standard)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착’이 중요하며 개정을 하더라도 부분적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보육과정·프로그램에 향후 담아야 할 내용으로 지식 위주가 아닌 ‘인성’, ‘감성’, ‘공감능력’, ‘행복정서 함양’ 등을 영유아에 함양할 수 있는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내용’이 제시되었고, 이밖에도 ‘취약계층’, ‘가족유형’ 등을 고려한 ‘다양화된 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앞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의 구조는 가능한 최소한 지켜져야 할 표준 으로서 단순화가 요청되는 반면, 운영 면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 특성 이나 시설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우수사 례가 공유되는 교사 연수의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공동 연수로 정보 교 류 기회 제공, 책자 제작 등 보육과정·프로그램의 질적인 운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었다.

향후 보육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할 보육과정·프로그램 개선의 지향점에 대해 서는 보육과정·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와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간의 격차해 소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2014년 연구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조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서비스의 질은 주로 ‘교사’, ‘프로그 램’과 관련이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형평성의 구성 요소 중 ‘기회’ 다 음으로 ‘서비스 질’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고려할 때(이정원 외, 2014), 질적으로 내실화된 국가 표준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제공은 다양한 시설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 IV-2-9〉 보육과정·프로그램 관련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범주	세부내용	단위: %, 사례	
		응답률	수
구조	·standard로서의 역할 ·부분 개정(기존 과정의 안착)	39.4%	13
	·단순화 ·연계		

(표 IV-2-9 계속)

범주	세부내용	응답률	수	
답아야 할 내용	·인성 ·취약계층 고려	·4차산업혁명 ·다양화·맞춤형	27.3%	9
운영지원	·실행력 강화 ·사례공유 ·다양한 운영 지원	·연수 ·정보공유	18.2%	6
지향 목표	·시설유형별 격차 해소	·질 제고	12.1%	4
기타	·중점보육시간(국가 수준의 보육과정(누리과정))실행 및 종일반 프로그램		6.0%	2

주: 45명 중 총 33명 응답. 9명 응답은 해당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다) 맞춤형 보육의 개선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인 '맞춤형 보육'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표 IV-2-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문가 조사 대상 45명 중 총 36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총 9명은 맞춤형 보육의 개선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현재의 맞춤형 보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6명 중에서는 전면적인 개정 보다는 부분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표 IV-2-10>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중복응답)

범주	세부내용	단위: %, 사례	
		응답률	수
맞춤형 보육 전면 재조정	·무상보육체계 기본 틀 개편 ·소득계층별 무상보육시간 차등 ·기본시간(무상보육시간) 외 추가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도입	30.5%	11
부분 보완·개선	·맞춤형 보육 취지 공감 ·종일반 자격기준 조정(확대 vs 축소) ·실태조사 ·자율적 운영 지원 ·현장 운영 애로사항 해소(맞춤반 운영 시간, 바우처 조정)	58.3%	22
폐지	·수요자 차별적 제도	11.1%	4

주: 45명 중 36명 응답.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먼저,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 보완' 방안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수요자 욕구에 따라 맞춤반, 종일반을 구분하여 이용 시간과 비용을 차등하

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맞춤형 보육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등 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성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부분으로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 수요가 높은 종일반 보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이 감소되었는지 등이 제시되었다. 전면적이기 보다 제도의 부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는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한 예로 '종일반 자격 기준'에 대해 제시된 의견 중에는 종일반 자격이 지나치게 완화되었으므로 엄격하게 재조정(기준 강화)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잠재수요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였다.

맞춤반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6시간의 제한이 보육 일과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9시~4시까지의 7시간 보육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관 보육이 절실하지 않은 영아(예를 들면, 전업모 가정의 영아)의 맞춤형 이용은 하루 6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으로 영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간을 더욱 줄이고 가정 양육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유사한 취지에서 맞춤형 시간을 오전 3시간(9~12시) 또는 오후 3시간(13~16시)으로 더욱 축소하고 필요에 따라 시간대를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영아를 돌볼 사람이 있어 영아의 기관 보육이 절실하지 않은 가구의 영아에 대해서는 되도록 가정 양육을 유도하고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국가의 전반적인 노동시간 감축 경향, 가정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방향과 일관된 방향으로 일하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영아의 기관 이용 시간을 되도록 줄이고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밖에, 현재 맞춤형은 오후 3시까지 6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활동이나 차량운영 시간은 긴급바우처 이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사항으로 인해 영아의 낮잠 시간 운영, 간식 시간 등 구체적인 보육 일과 운영과 부모의 요구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긴급보육바우처 시간을 줄이고 맞춤형 보육시간을 4시까지 확대한다면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

맞춤형 보육의 부분 개선 및 보완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실태 조사 등 맞춤형 보육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자격기준, 맞춤형 운영 시간, 비용 지원 체계 등에서 보완을 통해 맞춤형 보육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지향할

것과 한편으로는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나타난 보육 현장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맞춤형 보육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성과 보육 현장의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방안은 운영 시간과 비용 지원체계 면에서는 서로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 조정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부분적인 제도 개선을 제시한 응답보다는 낮은 비율이나 현행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현행 맞춤형 보육은 당초 취지에 비해 종일반 자격 기준의 지나친 완화 등 변질된 형태로 보아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긴급보육바우처의 폐지, 종일반 자격 기준 현실화 등 당초 계획된 형태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더 나아가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 없이 제공되는 현행 보육료 지원 체계의 개편, 즉 보육서비스 이용자에 무료로 제공되는 이용 시간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무료 보육 시간 외 추가적 이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도입하자는 무상보육체계 포기와의 연계된 맞춤형 보육 재설계 방안도 제기되었다. 이들은 무상보육체계의 틀 내에서 부분적으로 추가되어 온 정책들의 충돌이 있음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체계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보육 수요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전문가 중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나타나는 것은 맞춤형 보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맞춤형 보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한 국민선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 방안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도 보육 중장기 계획에서 주요 사항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으로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해 조사 대상 전문가 45명 중 41명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IV-2-11>과 같다.

〈표 IV-2-11〉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중복응답)

범주	세부내용	단위: %, 사례	
		응답률	수
양성·자격 체계 개편	·자격체계 강화 (교직이수 등 조건 강화, 유치원 교사 수준 상향) ·학과제 도입 ·국가고시 도입 ·보육교사·보조교사 양성과정 구분	63.4%	26
현직교사 역량강화 지원	·현직보육교사 보수 교육 지원(대체교사, 연수비용 지원 등) ·현장 컨설팅 ·사례회의 ·역량강화에 따른 포상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 ·시도별 보육교사 교육 관장 및 관리 기구 신설 ·보육교사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제공 ·연구시간 부여	36.6%	15
처우개선	·급여수준상향 ·근무시간 단축 ·유치원교사수준으로 복지 체계 보완 ·사회적 인식 제고	31.7%	13
기타	·대학평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업에 대한 차별적 평가 폐지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 경감 ·신분보장	7.3%	3

주: 45명 중 총 41명 응답한 내용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양성·자격체계의 개편', '현직교사 역량 강화 지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범주에 해당하였다.

먼저 '양성·자격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성과정과 자격체계의 '강화'가 구체적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사이버교육과정, 학점은행제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등급의 보육교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교사의 배출경로를 엄격화·단순화하여 일정 수준의 인력만이 보육교사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4년제 대학 이상으로 보육교사 양성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나아가 교직이수 추가, 배출 학과의 제한(학과제 도입), 국가고시제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현직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제안한 의견은 다시 현직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범주,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범주, 자율적 역량 강화 범주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육' 관련 범주에서 제시된 의견들의 공통된 취지는 현직 보육교사에게도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수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현장

에서 교사의 수업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컨설팅',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문제행동 지도 방법 전수 등이 제시되었고 교육 기회가 있더라도 비용과 시간 부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연수비용 지원, 시간확보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교사가 되기 전의 양성과정 만큼 교사가 된 후의 지속적 '보수교육'의 중요성에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뿐 아니라 교사의 스트레스 등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적절히 역량을 드러낼 기회와 포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고, 매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로 연구시간을 매일 일과중 일정 시간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교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교육이력 관리, 지역 내 어린이집에 교사 배치 등을 관리하자는 의견으로 현재 국공립교사 관리 및 배치 기구로 '사회서비스 공단'에 논의가 활발함을 고려할 때,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셋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인력이 보육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급여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이 주로 제안되었고, 이와 함께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복지체계(예, 사학 연금)가 갖추어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타 의견 중에서는 현재 대학 평가에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취업할 경우 점수를 더 부여하여 학과와 학생 모두 어린이집에 대한 비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별한 이유 없는 취업 분야에 따른 차별 관행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의 보육 현장 유입이 쉽지 않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유응답을 받은 결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급여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비슷하게 근무시간 확보도 필요한 과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육교사의 경

우 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근무 현실이 임금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업무량의 증가로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정책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수의 의견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의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도 읽을 수 있었다. 더불어 보육교사를 준공무원 형식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처우를 보장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전문가의 합의가 모아지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현실적으로 임금 상향과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현실적 방안 마련, 관련 업무 경감이 우선 실현된 후에야 사회서비스 공단 등의 논의 역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2-12〉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범주	세부내용	단위: %, 사례 응답률 수
급여 인상	·정부 인건비 지원액 인상 ·보수 안정화	50.0% 20
근무시간 감축	·일 8시간 근무제 확보 ·근무시간 단축	50.0% 20
근로환경 개선 (근로복지)	·연월차 휴가 제공 ·시간외 수당 지급	12.5% 5
업무 경감	·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보조교사 증원	25.0% 10
표준보육료 인상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5.0% 2
기타	·준공무원화 ·사회적 인식 개선	5.0% 2

주: 45명 중 총 40명 응답한 결과 기술.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의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 통합)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유보 통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나 약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부처의 일원화를 통한 형식적 통합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부분적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유보 통합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통합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유보통합의 대 전제인 교사들 간의 격차와 관련하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통과 과정에서의 질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검정제도의 개선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통합을 반대하는 전문가 입장도 눈에 띄었다. 유보 통합을 부정하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유보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통합이 된다면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과연 영유아와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유보 통합이 현 시점에서 그리 중대한 과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 IV-2-13>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과 중장기 보육에의 계획 방안(중복응답)

범주	세부내용	단위: %, 사례		
		응답률	수	
긍정적	·부처 통합	·복지부와 교육부간 어느 한 부처로 통합이 바람직	41.9%	18
	·부분 통합	·복지부-0-2세, 교육부는 3-5세로 통합이 바람직	7.0%	3
	·교사 자격 일원화	·자격 검정 기관 일원화, 평가기준 일원화 필요	27.9%	12
부정적	·통합의 목적 자체가 이해 불가 ·현재처럼 가는 것이 바람직 ·혼란만 야기하는 필요 없는 정책		20.9%	9
기타	·제 3의 기관 설립하여 통합 필요		2.3%	1

주: 45명 중 총 43명 응답한 결과 기술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사) 아동수당 도입 방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월부터 아동 수당 도입이 확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그 방안,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담겼으면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수당에 대한 찬반이 아닌 도입 이후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질문이기에 아동수당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따라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수당들과의 관계에서는, 각 제도의 목적이 상이하지만 아동수당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고, 소득계층별로 선별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표 IV-2-14>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밝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아동수당 자체의 개념과 달리 선별적인 가구별 지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 현금 지급을 선호하였으나 바우처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볼 수 있었고, 지급 수준과 관련해서는 10만원이 매우 적으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지급 대상에 관하여는, 양육수당과의 차별을 위해 그 이상의 연령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아동복지법상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영유아에게 집중적인 현금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고루 분포되었다.

〈표 IV-2-14〉 아동 수당 시행과 관련하여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범주		세부내용	단위: %, 사례 응답률 수	
아동수당으로 일원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등 모두 폐지 ·소득공제 등 폐지	29.7%	11
지급 방식	현금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의견 다양	89.2%	33
	바우처	·아동 양육 비용에 한정, 기관이용비나 육아 관련 비용으로 사용	10.8%	4
지급 수준	10만원 이하	·10만원으로 시작하도록 함	13.5%	5
	10만원 이상	·10만원은 너무 적고,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21.6%	8
지급 대상	영유아	·영유아에게 집중 투자 필요	8.1%	3
	모든 아동	·만 18세까지 지급	10.8%	4
	초중고	·가정양육수당 해당안되는 아동들 대상으로 지급	16.2%	6

주: 45명 중 총 37명 응답한 결과 기술, 선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아) 문재인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문재인 정부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안한 보육정책 공약에 대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IV-2-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문가 45명 중 44명이 본 질문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기대되는 정책으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 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준 40%까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우려되는 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및 보육교사 채용, 배치’가 가장 많이 응답되어 총 44명 응답자 중 15명이 이를 우려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이외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수준 40%까지 확대’,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V-2-15〉 새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중복응답)

단위: 사례

보육정책 공약	기대	우려
1) 놓여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	4
2) 아동수당 도입	5	10
3)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준 40%까지 확대	6	8
4) 보육료 현실화	2	-
5)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9	3
6) 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모 자녀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2	1
7) 광역서비스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채용, 국공립 어린이집 배치	2	15
8)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 및 인력 지원 국공립 시설 수준 상향	-	2
9)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4	3
10)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5	2
11)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안심교육인증제' 도입	1	1

주: 45명 중 총 44명 응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임.

전문가의 기대와 우려가 모두 높았던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이용 비율 확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이었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은 가장 기대되는 보육정책으로 응답되었으나,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려하는 견해에서는 즉, 영유아보육법 상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에 대한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의 업무량 조정, 보조교사 추가 배치 등 인력 조정,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

'아동수당 도입'은 기대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정책이었다. 아동수당을 우려되는 정책으로 꼽은 견해들의 주된 이유는 기존의 양육지원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기되었고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부분(10만원으로 양육비 부담 감소 효과 및 출산율 제고 효과 기대 어려움, 양질의 양육지원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될 수 없음)과 재원 확보의 문제, 일단 도입되

면 중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는 복지의 속성을 들었으며, 도입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 무상보육이 일종의 아동수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유사 제도를 함께 고려한 통폐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도 전계층에 보편적인 수당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기존의 양육정책을 고려한 큰 틀에서 적절한 형태로 계획되어 보다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재정 확보의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 확대'는 기대와 우려가 비등한 수준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또한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 40%까지 확대'라는 목표 수치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우려와 함께, 목표 수치 도달에 급급하여 지역별 특성(아동 인구, 유치원 수급 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시설 확충 등 유연성 없는 실행 계획으로 추진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별 차이로 인해 전국 일괄 적용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체재로서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유치원 공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부처 협업을 통해 '유아교육·보육수요 총량제' 도입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국공립 이용 비율 확충은 곧 국공립 시설 확충과 연계되므로,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국공립 비율 확충에 급급하기 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는 교육청과의 갈등 해소로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국가 재정 부담 급증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단가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기대보다는 현저하게 우려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정책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공단 직원으로 보육교사 채용, 지역내 국공립 시설 배치(이하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견해들에서 제시되는 이유는 ‘보육의 전문성 훼손’과 ‘유·보 격차 해소 어려움 심화’의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사회서비스 공단 내 요양보호사 등 기타 사회서비스 인력과 유사한 ‘서비스 인력’으로 취급되게 됨은 보육교사를 전문가 보다는, 단순 ‘탁아모’로 인식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며, 보육교사를 교직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은 사회적 인식 저하와 서비스 질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가 최초 복지 개념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유치원과 거의 유사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부모로부터의 수요도 이 부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인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대 보다는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곧 신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를 거쳐 우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 대부분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하나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이 시도되는 아동수당과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 수렴과 기존 정책 및 향후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원 확보와 지속성의 확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국민 조사 결과

여기서는 20대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 중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보육정책의 방향과 보육정책의 효과, 정책 수요 및 요구에 대한 설문 결과, 일반국민 대상 새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정책을 위한 납세 부담 의향 등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 이용 경험

가) 어린이집 이용 경험

조사 대상자인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의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2,223명에게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대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2,223명 중 31.4%는 어린이집을 현재 이용 중이며, 48.0%는 과거에 이용 경험이 있고, 20.6%는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약 80%는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2-16〉 어린이집 이용 경험

구 분	현재 이용 중	이전에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단위: %(명) 계(수)
전체	31.4	48.0	20.6	100.0 (2,223)
연령				
만 20~29세	57.2	6.9	35.8	100.0 (159)
만 30~39세	60.6	16.5	22.9	100.0 (515)
만 40~49세	40.2	51.1	8.7	100.0 (716)
만 50~59세	1.1	74.9	24.0	100.0 (712)
만 60세 이상	-	59.5	40.5	100.0 (121)
$\chi^2(df)$		806.92(8)***		
취업상태				
취업중	36.7	45.9	17.4	100.0 (1,622)
휴직중	25.2	49.7	25.2	100.0 (147)
학업중	42.9	35.7	21.4	100.0 (14)
미취업	13.6	55.7	30.7	100.0 (440)
$\chi^2(df)$		100.15(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1	50.0	22.9	100.0 (214)
200만원-300만원 미만	35.6	37.0	27.4	100.0 (365)
300만원-400만원 미만	36.8	42.0	21.1	100.0 (459)
400만원-500만원 미만	31.0	48.3	20.7	100.0 (464)
500만원 이상	27.5	56.6	16.0	100.0 (721)
$\chi^2(df)$		51.45(8)***		
자녀연령				
영아	63.7	7.0	29.4	100.0 (647)
유아	60.3	33.6	6.1	100.0 (476)
초등	-	94.4	5.6	100.0 (179)
중고등	-	91.5	8.5	100.0 (247)
성인 이상	-	69.3	30.7	100.0 (674)
$\chi^2(df)$		1318.28(8)***		

(표 IV-2-16 계속)

구 분	현재 이용 중	이전에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30.6	48.2	21.2	100.0 (1,226)
중소도시	32.6	47.7	19.7	100.0 (807)
읍면지역	32.1	47.9	20.0	100.0 (190)
$\chi^2(df)$		1.24(4)		

주: 유아녀 가구 2,2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 $p < .001$.

이어서,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1,766명을 대상으로 이용한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을 살펴보았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 응답자가 7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가정어린이집(27.2%), 국공립(24.0%), 직장(2.5%), 부모협동(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7〉 이용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구 분	단위: %(명)						(수)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모르겠음	
전체	24.0	76.5	27.2	2.5	0.3	1.0	(1,766)
연령							
만 20~29세	27.5	60.8	42.2	8.8	1.0	1.0	(102)
만 30~39세	19.6	65.0	44.1	3.0	0.5	0.5	(397)
만 40~49세	28.0	77.5	30.3	2.0	0.3	0.9	(654)
만 50~59세	22.0	85.8	10.5	1.5	0.2	1.5	(541)
만 60세 이상	20.8	83.3	11.1	2.8	-	-	(72)
취업상태							
취업중	24.6	76.9	27.4	3.0	0.4	1.0	(1,340)
휴직중	24.5	70.9	23.6	-	-	0.9	(110)
학업중	18.2	72.7	27.3	18.2	-	9.1	(11)
미취업	21.0	76.7	27.9	0.7	-	0.7	(305)
자녀연령							
영아	21.0	62.8	43.1	4.2	0.9	0.7	(457)
유아	26.6	75.2	37.6	1.3	0.2	0.4	(447)
초등	32.5	79.3	26.0	4.1	0.6	-	(169)
중고등	26.1	87.6	11.5	1.8	-	1.8	(226)
성인 이상	20.1	84.8	9.9	1.7	-	1.7	(467)

(표 IV-2-17 계속)

구 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모르겠음	(수)
지역 규모							
대도시	28.6	74.5	26.5	3.0	0.4	1.4	(966)
중소도시	16.7	79.3	29.6	1.9	0.3	0.3	(648)
읍면지역	25.7	77.0	21.7	2.0	-	0.7	(152)

주: 1) 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1,766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나) 어린이집 이용 이유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1,766명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이유를 순위 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1순위를 살펴보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24.7%, '사회성 발달을 위해' 17.7%,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2.5%)'와, '특기교육을 위해(0.1%)'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이용한 경우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는, 1순위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순위에서 14.6%로 나타나 어린이집 이용 이유로 무상보육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순위와 2순위 모두를 고려해 보면,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 응답자가 62.2%,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이용한 응답자가 58.0%로 조사되어 비등한 수준을 보였으며,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도 45.1%로 나타나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없는 대리 돌봄 욕구가 보육 서비스(어린이집)이용의 최우선 이유이지만, 이와 더불어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측면에 가치를 두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2-18〉 어린이집 이용(했던)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1+2순위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49.7	8.3	58.0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24.7	20.4	45.1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5.1	10.0	15.1
특기교육을 위해	0.1	1.0	1.0
사회성 발달을 위해	17.7	44.5	62.2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2.5	14.6	17.1
기타	0.2	1.3	1.5
계(수)	100.0(1,766)	100.0(1,766)	200.0(1,766)

주: 1) 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1,766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1+2순위는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추가적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응답자 69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 1순위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60.9%로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18.3%, ‘사회성 발달을 위해’ 15.9% 순으로 높았고,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는 3.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는 1.1%로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특기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없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취업중, 학업중인 부모는 휴직중, 미취업한 부모보다 ‘돌보기 어려워서’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19〉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교육을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계
전체	60.9	18.3	1.1	-	15.9	3.4	0.3	100.0 (699)
취업상태								
취업중	65.3	16.3	1.2	-	14.1	3.0	0.2	100.0 (596)
휴직중	37.8	29.7	-	-	29.7	2.7	-	100.0 (37)
학업중	66.7	33.3	-	-	-	-	-	100.0 (6)
미취업	31.7	30.0	1.7	-	26.7	8.3	1.7	100.0 (60)
$\chi^2(df)$					43.56(15)***			

(표 IV-2-19 계속)

구 분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 교육을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3.4	22.4	-	-	22.4	1.7	-	100.0 (58)
200만원-300만원 미만	54.6	19.2	0.8	-	18.5	5.4	1.5	100.0 (130)
300만원-400만원 미만	53.8	24.3	1.2	-	17.2	3.6	-	100.0 (169)
400만원-500만원 미만	61.8	18.8	0.7	-	16.0	2.8	-	100.0 (144)
500만원 이상	72.7	11.1	2.0	-	11.1	3.0	-	100.0 (198)
$\chi^2(df)$				35.28(20)*				
자녀연령								
영아	62.6	17.7	0.2	-	15.5	3.4	0.5	100.0 (412)
유아	58.5	19.2	2.4	-	16.4	3.5	-	100.0 (287)
$\chi^2(df)$				9.25(5)				
지역 규모								
대도시	62.1	19.7	0.8	-	13.9	3.2	0.3	100.0 (375)
중소도시	58.9	18.3	1.9	-	17.1	3.8	-	100.0 (263)
읍면지역	62.3	9.8	-	-	23.0	3.3	1.6	100.0 (61)
$\chi^2(df)$				13.44(10)				

주: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이어서 현재 어린이집 이용자의 어린이집 이용 이유 2순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1.3%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가 23.0%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역시 21.6%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여, 일부 부모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20>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2순위)

단위: %(명)

구 분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 교육을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계
전체	9.6	23.0	2.9	0.3	41.3	21.6	1.3	100.0(699)

(표 IV-2-20 계속)

구 분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 교육을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계
취업상태								
취업중	9.2	22.1	2.9	0.3	42.6	21.3	1.5	100.0 (596)
휴직중	16.2	21.6	2.7	-	24.3	35.1	-	100.0 (37)
학업중	-	16.7	-	-	50.0	33.3	-	100.0 (6)
미취업	10.0	33.3	3.3	-	38.3	15.0	-	100.0 (60)
$\chi^2(df)$					15.40(1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7.2	29.3	-	1.7	32.8	19.0	-	100.0 (58)
200만원~300만원 미만	7.7	25.4	2.3	-	39.2	25.4	-	100.0 (130)
300만원~400만원 미만	11.8	20.7	3.0	-	40.2	23.7	0.6	100.0 (169)
400만원~500만원 미만	6.9	19.4	4.9	0.7	46.5	19.4	2.1	100.0 (144)
500만원 이상	8.6	24.2	2.5	-	42.4	19.7	2.5	100.0 (198)
$\chi^2(df)$					29.51(24)			
자녀연령								
영아	10.0	24.0	1.7	0.5	43.2	19.2	1.5	100.0 (412)
유아	9.1	21.6	4.5	-	38.7	25.1	1.0	100.0 (287)
$\chi^2(df)$					10.50(6)			
지역 규모								
대도시	8.8	22.7	2.7	0.5	44.0	19.7	1.6	100.0 (375)
중소도시	11.4	21.7	2.7	-	39.2	24.3	0.8	100.0 (263)
읍면지역	6.6	31.1	4.9	-	34.4	21.3	1.6	100.0 (61)
$\chi^2(df)$					10.50(12)			

주: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어린이집 이용 이유 1순위와 2순위 모두를 고려해 보면, 70.5%의 응답자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57.2%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 41.3%는 전인적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90% 이상의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 촉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취업중, 학업중인 부모는 대리양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미취업중인 부모는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IV-2-21〉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1+2순위)

단위: %(명)

구 분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특기 교육을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타	계
전체	70.5	41.3	4.0	0.3	57.2	25.0	1.6	2000 (699)
연령								
만 20~29세	76.9	40.7	2.2	1.1	51.6	26.4	1.1	2000 (91)
만 30~39세	71.5	40.7	2.2	0.3	61.5	22.4	1.3	2000 (312)
만 40~49세	67.4	41.7	6.6	-	54.5	28.1	1.7	2000 (288)
만 50~59세	75.0	62.5	-	-	50.0	-	12.5	2000 (8)
취업상태								
취업중	74.5	38.4	4.0	0.3	56.7	24.3	1.7	2000 (596)
휴직중	54.1	51.4	2.7	-	54.1	37.8	-	2000 (37)
학업중	66.7	50.0	-	-	50.0	33.3	-	2000 (6)
미취업	41.7	63.3	5.0	-	65.0	23.3	1.7	2000 (6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0.7	51.7	-	1.7	55.2	20.7	-	2000 (58)
200만원~300만원 미만	62.3	44.6	3.1	-	57.7	30.8	1.5	2000 (130)
300만원~400만원 미만	65.7	45.0	4.1	-	57.4	27.2	0.6	2000 (169)
400만원~500만원 미만	68.8	38.2	5.6	0.7	62.5	22.2	2.1	2000 (144)
500만원 이상	81.3	35.4	4.5	-	53.5	22.7	2.5	2000 (198)
자녀연령								
영아	72.6	41.7	1.9	0.5	58.7	22.6	1.9	2000 (412)
유아	67.6	40.8	7.0	-	55.1	28.6	1.0	2000 (287)
지역 규모								
대도시	70.9	42.4	3.5	0.5	57.9	22.9	1.9	2000 (375)
중소도시	70.3	39.9	4.6	-	56.3	28.1	0.8	2000 (263)
읍면지역	68.9	41.0	4.9	-	57.4	24.6	3.3	2000 (61)

주: 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다) 어린이집의 선택 이유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이용 중인 혹은 과거에 이용했던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선택 이유의 1순위는 '집에서 가까워서'(47.2%)가 전체 응답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7.8%,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7.4%, '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항목에서는 6% 이하의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2순위를 살펴보면, '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가 16.0%로 가장 높았으

며, '집에서 가까워서'가 14.0%,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가 10.1%로 순으로 높았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집에서 가까워서'가 61.3%, '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가 21.2%로 나타나, 응답자의 80% 이상이 어린이집의 접근성 측면을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뒤를 이어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18.0%,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14.6%로 나타나, 보육서비스의 질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를 1순위를 응답한 경우가 5.4%이었으며, 2순위로 응답한 경우 역시 8.8%으로 적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2-22〉 이용 중인(이용했던) 어린이집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1+2순위
집에서 가까워서	47.2	14.0	61.3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7.8	10.1	18.0
비용이 저렴하여서	4.2	7.8	11.9
운영시간이 편리하여서	3.2	6.0	9.2
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6.3	5.3	11.6
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	5.2	16.0	21.2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7.4	7.2	14.6
시설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5.5	7.8	13.4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5.4	8.8	14.2
안전한 환경이라 생각되어서	2.8	6.5	9.3
급간식이 잘 제공되어서	0.3	0.7	1.0
주변에서 평판이 좋아서	3.6	9.3	12.9
기타	0.9	0.6	1.4
계(수)	100.0(1,766)	100.0(1,766)	200.0(1,766)

주: 1) 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1,766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1+2순위는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더불어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응답자 69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선택 이유를 살펴보았다.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 1순위는 '집에서 가까워서'로 48.1%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가 9.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다른 항목에서는 7% 미만의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즉,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지리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유아인 경우보다 영아인 경우, ‘집에서 가까워서’와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높고, 반대로 유아 자녀를 둔 응답자 일수록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어린이집을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선택 할 때,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어린 영아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의 지리적 접근성과 교사의 질을 염두하고, 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2-23>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선택 이유(1순위)

단위: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전체	48.1	9.0	3.6	4.1	7.6	3.4	6.9	3.7	6.0	2.1	0.4	3.9	1.1	1000 (699)
연령														
만 20~29세	49.5	12.1	3.3	6.6	6.6	3.3	4.4	2.2	6.6	-	-	4.4	1.1	1000 (91)
만 30~39세	47.8	9.9	3.8	3.5	8.0	2.6	7.1	2.9	7.1	3.2	0.3	2.9	1.0	1000 (312)
만 40~49세	47.6	7.3	3.5	4.2	7.6	4.2	7.3	5.2	4.9	1.4	0.7	4.9	1.4	1000 (288)
만 50~59세	62.5	-	-	-	-	12.5	12.5	-	-	12.5	-	-	-	1000 (8)
$\chi^2(df)$							27.21(36)							
취업상태														
취업중	48.2	8.2	3.4	4.7	7.9	3.5	6.9	3.5	5.9	2.0	0.3	4.2	1.3	1000 (596)
휴직중	43.2	13.5	-	-	8.1	-	8.1	2.7	10.8	5.4	2.7	5.4	-	1000 (37)
학업중	33.3	-	33.3	16.7	-	-	-	-	16.7	-	-	-	-	1000 (6)
미취업	51.7	15.0	5.0	-	5.0	5.0	6.7	6.7	3.3	1.7	-	-	-	1000 (60)
$\chi^2(df)$							47.93(36)							
자녀연령														
영아	50.7	10.9	2.9	3.6	5.8	3.6	3.6	3.2	6.8	2.2	0.5	4.4	1.7	1000 (412)
유아	44.3	6.3	4.5	4.9	10.1	3.1	11.5	4.5	4.9	2.1	0.3	3.1	0.3	1000 (287)
$\chi^2(df)$							32.15(12)**							
지역 규모														
대도시	50.7	10.9	2.9	3.6	5.8	3.6	3.6	3.2	6.8	2.2	0.5	4.4	1.7	1000 (375)
중소도시	44.3	6.3	4.5	4.9	10.1	3.1	11.5	4.5	4.9	2.1	0.3	3.1	0.3	1000 (263)
읍면지역	48.1	9.0	3.6	4.1	7.6	3.4	6.9	3.7	6.0	2.1	0.4	3.9	1.1	1000 (61)
$\chi^2(df)$							31.74(24)							

주: 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 2) ①집에서 가까워서 ②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③비용이 저렴하여서 ④운영시간이 편리하여서 ⑤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⑥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 ⑦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⑧시설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⑨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⑩안전한 환경이라 생각되어서 ⑪급간식이 잘 제공되어서 ⑫주변에서 평판이 좋아서 ⑬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이어서 어린이집 선택 이유 2순위를 살펴보면, ‘집에서 가까워서’ 어린이집을 선택한 경우가 14.3%로 가장 높고, ‘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 13.6%,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12.2%, ‘주변의 평판이 좋아서’ 10.9%,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8.3% 순으로 비교적 고른 비중을 나타냈다.

〈표 IV-2-24〉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선택 이유(2순위)

단위: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전체	14.3	12.2	6.9	5.4	6.3	13.6	8.3	6.2	7.7	6.0	1.3	10.9	1.0	100.0(699)
연령														
만 20~29세	17.6	12.1	9.9	6.6	7.7	11.0	5.5	3.3	5.5	7.7	1.1	12.1	-	100.0(91)
만 30~39세	14.4	10.9	5.4	5.1	6.1	15.7	9.6	4.8	8.3	5.8	1.6	10.3	1.9	100.0(312)
만 40~49세	13.5	13.2	7.6	5.6	5.6	12.5	7.6	8.3	7.6	5.9	1.0	11.1	0.3	100.0(288)
만 50~59세	-	25.0	-	-	25.0	-	12.5	12.5	12.5	-	-	12.5	-	100.0(8)
$\chi^2(df)$														29.42(36)
취업상태														
취업중	14.6	11.7	7.0	5.9	6.4	13.1	8.2	6.2	7.9	5.9	1.2	10.7	1.2	100.0(596)
휴직중	18.9	13.5	8.1	5.4	5.4	21.6	8.1	8.1	2.7	2.7	-	5.4	-	100.0(37)
학업중	16.7	-	16.7	-	-	16.7	-	-	16.7	33.3	-	-	-	100.0(6)
미취업	8.3	16.7	3.3	1.7	6.7	13.3	10.0	5.0	8.3	6.7	3.3	16.7	-	100.0(60)
$\chi^2(df)$														29.29(36)
자녀연령														
영아	13.8	11.9	6.6	5.8	6.1	13.3	8.0	5.6	9.0	5.8	1.2	11.2	1.7	100.0(412)
유아	15.0	12.5	7.3	4.9	6.6	13.9	8.7	7.0	5.9	6.3	1.4	10.5	-	100.0(287)
$\chi^2(df)$														8.49(12)
지역 규모														
대도시	14.7	10.9	7.7	5.9	8.3	15.5	8.0	4.8	8.5	5.3	0.8	9.1	0.5	100.0(375)
중소도시	15.6	13.7	6.1	4.2	2.3	12.5	8.4	7.2	6.5	7.2	1.5	13.3	1.5	100.0(263)
읍면지역	6.6	13.1	4.9	8.2	11.5	6.6	9.8	9.8	8.2	4.9	3.3	11.5	1.6	100.0(61)
$\chi^2(df)$														33.82(24)

주: 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 2) ①집에서 가까워서 ②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③비용이 저렴하여서 ④운영시간이 편리하여서 ⑤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⑥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 ⑦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⑧시설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⑨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⑩안전한 환경이라 생각되어서 ⑪급간식이 잘 제공되어서 ⑫주변에서 평판이 좋아서 ⑬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어린이집 선택이유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에서 가까워서’와 ‘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가 각 62.4%, 17.0%로 나타나, 약 80%의 부모가 지리적 접근성과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전체 부모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25.0%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어린이집을 선택한 경우가 13.9%로 나타나, 이를 통해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IV-2-25〉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선택 이유(1+2순위)

단위: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전체	62.4	21.2	10.4	9.6	13.9	17.0	15.2	9.9	13.7	8.2	1.7	14.7	2.1	200.0 (699)
연령														
만 20~29세	67.0	24.2	13.2	13.2	14.3	14.3	9.9	5.5	12.1	7.7	1.1	16.5	1.1	200.0 (91)
만 30~39세	62.2	20.8	9.3	8.7	14.1	18.3	16.7	7.7	15.4	9.0	1.9	13.1	2.9	200.0 (312)
만 40~49세	61.1	20.5	11.1	9.7	13.2	16.7	14.9	13.5	12.5	7.3	1.7	16.0	1.7	200.0 (288)
만 50~59세	62.5	25.0	-	-	25.0	12.5	25.0	12.5	12.5	12.5	-	12.5	-	200.0 (8)
취업상태														
취업중	62.8	20.0	10.4	10.6	14.3	16.6	15.1	9.7	13.8	7.9	1.5	14.9	2.5	200.0 (596)
휴직중	62.2	27.0	8.1	5.4	13.5	21.6	16.2	10.8	13.5	8.1	2.7	10.8	-	200.0 (37)
학업중	50.0	-	50.0	16.7	-	16.7	-	-	33.3	33.3	-	-	-	200.0 (6)
미취업	60.0	31.7	8.3	1.7	11.7	18.3	16.7	11.7	11.7	8.3	3.3	16.7	-	200.0 (6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0.3	24.1	22.4	1.7	20.7	24.1	5.2	5.2	10.3	10.3	3.4	12.1	-	200.0 (58)
200만원~300만원 미만	70.0	17.7	7.7	9.2	9.2	19.2	14.6	10.8	15.4	10.0	1.5	13.8	0.8	200.0 (130)
300만원~400만원 미만	58.6	25.4	11.2	11.8	14.8	16.0	17.8	7.7	10.1	5.3	1.8	15.4	4.1	200.0 (169)
400만원~500만원 미만	64.6	21.5	9.7	9.0	11.8	15.3	14.6	9.0	18.1	9.0	0.7	15.3	1.4	200.0 (144)
500만원 이상	59.6	18.7	8.6	10.6	15.7	15.7	16.7	13.1	13.6	8.1	2.0	15.2	2.5	200.0 (198)
자녀연령														
영아	64.6	22.8	9.5	9.5	11.9	17.0	11.7	8.7	15.8	8.0	1.7	15.5	3.4	200.0 (412)
유아	59.2	18.8	11.8	9.8	16.7	17.1	20.2	11.5	10.8	8.4	1.7	13.6	0.3	200.0 (287)
지역 규모														
대도시	64.0	18.9	11.5	10.4	18.9	17.9	13.6	7.7	14.7	7.7	1.3	11.7	1.6	200.0 (375)
중소도시	60.8	23.6	9.1	7.6	7.2	16.3	16.7	12.2	13.3	9.5	1.9	18.6	3.0	200.0 (263)
읍면지역	59.0	24.6	9.8	13.1	11.5	14.8	18.0	13.1	9.8	4.9	3.3	16.4	1.6	200.0 (61)

주: 1)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6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 2) ①집에서 가까워서 ②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③비용이 저렴하여서 ④운영시간이 편리하여서 ⑤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⑥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 ⑦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⑧시설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⑨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⑩안전한 환경이라 생각되어서 ⑪급간식이 잘 제공되어서 ⑫주변에서 평판이 좋아서 ⑬기타

3)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2)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요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보육료 등 비용지원이 전체의 5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 및 보육서비스 지원이 11.0%, 지역에서 이용할만한 양육지원 자원 확대(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설 등) 9.4%, 어린이집 증설 8.5%, 공동육아지원 4.6%, 부모교육 지원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로도 남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도 동일하게 보육료 등 비용지원 정책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취업중인 경우와 미취업중인 경우(학업중임을 포함) 모두 비용지원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소득이 200만원~300만원 미만의 경우 64.0%가 비용 지원을 선호하여, 비용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 측면에서는 만0-2세 영아가 만3-5세 유아에 비해 비용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증설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비용 지원 정책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역시 보육료 등 비용지원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으나, 읍면지역에서 지역 내 양육지원 자원 확대를 다른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26〉 영유아 가정에 가장 도움 되는 지원

단위: %, (명)

구 분	보육료 등 비용지원	부모 교육 지원	어린이집 증설	지역내 양육지원 자원 확대	공동 육아 지원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원 서비스	(수)
전체	56.9	4.5	8.5	9.4	4.6	11.0	(1,123)
성별							
남자	57.5	3.7	10.3	10.3	4.7	9.7	(621)
여자	56.2	5.4	6.2	8.4	4.6	12.7	(502)
연령							
만 20~29세	58.9	6.3	7.6	8.9	1.9	12.0	(158)
만 30~39세	61.1	4.5	7.7	7.5	3.1	9.8	(491)
만 40~49세	52.1	3.7	9.0	11.9	7.5	11.9	(455)
만 50~59세	47.4	5.3	21.1	5.3	-	15.8	(19)
취업상태							
취업중(취업중+휴직중)	56.3	4.4	9.1	9.5	4.6	11.2	(987)
미취업(학업중+미취업)	61.0	5.1	3.7	8.8	5.1	9.6	(136)

(표 IV-2-26 계속)

구 분	보육료 등 비용지원	부모 교육 지원	어린이 집 증설	지역내 양육지원 자원 확대	공동 육아 지원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원 서비스	(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9.1	8.0	1.1	9.1	6.8	13.6	(88)
200만원~300만원 미만	64.0	3.2	9.0	9.0	4.1	6.3	(222)
300만원~400만원 미만	60.2	5.3	5.7	9.5	5.7	9.5	(264)
400만원~500만원 미만	52.2	4.7	10.8	9.9	4.7	10.8	(232)
500만원 이상	52.1	3.5	10.7	9.5	3.5	15.1	(317)
자녀연령							
영아	60.4	3.7	7.6	9.1	3.9	10.2	(647)
유아	52.1	5.5	9.7	9.9	5.7	12.2	(476)
지역규모							
대도시	55.5	5.1	9.3	9.6	4.7	10.9	(623)
중소도시	58.0	4.1	8.8	8.3	4.1	11.0	(410)
읍면지역	61.1	1.1	1.1	13.3	6.7	12.2	(90)

주: 1) 영유아 부모 1,1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2)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3) 영유아 부모의 보육 개선 요구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인 영유아 부모 전체의 41.9%가 양육비용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어린이집 공급 관련이 23.0%,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13.3%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같은 비용지원을 양육지원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동시에, 현재 비용 지원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응답 결과 중 영유아 양육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만 30~39세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양육비용 정책 개선에 45.4%, 어린이집 공급체계 개선에 23.2%,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13.6%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점은 대도시의 경우 양육비용 정책 개선 다음으로 어린이집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어린이집 공급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IV-2-27> 보육지원 분야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단위: %(명)

구분	양육비용 정책 개선	부모교육 지원 개선	어린이집 공급 체계 개선	지역사회 양육인프라 개선	지역 공동체 양육지원	보육 서비스 다양화	보육 서비스 질 향상	기타	(수)
전체	41.9	3.4	23.0	6.9	2.0	8.5	13.3	1.0	100.0(1,123)
연령									
만 20~29세	44.9	6.3	17.1	7.0	3.8	10.8	8.9	1.3	100.0(158)
만 30~39세	45.4	3.5	23.2	4.9	1.6	6.7	13.6	1.0	100.0(491)
만 40~49세	36.7	2.2	25.1	9.2	2.0	9.2	14.7	.9	100.0(455)
만 50~59세	47.4	5.3	15.8	5.3	-	21.1	5.3	-	100.0(19)
$\chi^2(df)$				35.30(21)*					
지역구분									
대도시	41.3	3.4	27.8	6.3	1.4	7.9	11.2	.8	100.0(623)
중소도시	43.4	3.4	16.6	7.1	2.9	9.3	16.1	1.2	100.0(410)
읍면지역	38.9	3.3	18.9	11.1	2.2	10.0	14.4	1.1	100.0(90)
$\chi^2(df)$				25.77(14)*					

주: 영유아 부모 1,1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 $p < .05$

다음으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지도, 이용 현황, 만족도, 개선 의견 등을 살펴 보았다. 먼저,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8%,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로 나타났다. 남녀 구분 시 여성은 88.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72.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30~39세의 경우 82.9%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미취업 중인 경우 85.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중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더 높았다.

<표 IV-2-28> 맞춤형 보육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79.8	20.2	100.0(1,123)
성별			
남자	72.9	27.1	100.0(621)
여자	88.2	11.8	100.0(502)
$\chi^2(df)$		40.29(1)***	

(표 IV-2-28 계속)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연령			
만 20~29세	79.1	20.9	100.0(158)
만 30~39세	82.9	17.1	100.0(491)
만 40~49세	76.7	23.3	100.0(455)
만 50~59세	78.9	21.1	100.0(19)
$\chi^2(df)$	5.67(3)		
취업상태			
취업중(취업중+휴직중)	79.0	21.0	100.0(987)
미취업(학업중+미취업)	85.3	14.7	100.0(136)
$\chi^2(df)$	2.91(1)		
자녀연령			
영아(만0~2세)	78.8	21.2	100.0(647)
유아(만3~5세)	81.1	18.9	100.0(476)
$\chi^2(df)$.87(1)		
후속출산계획			
있음	79.8	20.2	100.0(377)
없음	79.8	20.2	100.0(746)
$\chi^2(df)$.01(1)		

주: 영유아 부모 1,1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 $p < .001$.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1,123명 중, 896명이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맞춤형 보육'의 해당 대상인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이며 응답자가 여성인²⁴⁾ 230사례를 선별하여 맞춤형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 중 배우자의 취업을 전제로 여성의 취업형태가 종일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취업중+학업중)가 142사례(61.7%)였으며, 맞춤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휴직중+미취업)는 88사례에(38.3%) 해당하였다.

응답자 전체 중 맞춤형을 이용하는 비율은 22.2%, 종일반을 이용하는 비율은 50.9%, 이용하지 않고 있는 비율은 27.0%로 나타나 종일반 이용 비중이 맞춤형에 비해 높았으나, 종일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중 종일반을 이용하는 비율은

24) 이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자격 조건에 부모 모두의 취업 상태에 대한 확인을 통해 소위 '맞벌이'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보건복지부, 2017:309) 본 조사의 응답 대상 중 영아가 있는 가구의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4사례에 불과할 정도로 한 가구의 맞벌이 자격 여부는 남성 보다는 여성의 취업 상황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70.4%이며 12.7%는 맞춤형, 16.9%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취업 형태로는 맞춤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도 19.3%는 종일반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형태 외 가구특성, 농어업인 등 다른 종일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보건복지부, 2017: 309)로 추측된다.

〈표 IV-2-29〉 맞춤형 보육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재 맞춤형	종일반	이용하지	계(수)
	이용중	이용중	않음	
전체	22.2	50.9	27.0	100.0(230)
취업형태에 따른 종일반 자격 여부				
종일반 자격(취업중+학업중)	12.7	70.4	16.9	100.0(142)
맞춤형 자격(휴직중+미취업)	37.5	19.3	43.2	100.0(88)

주: 영아자녀를 둔 어머니 중 맞춤형 보육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230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다음으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남녀 응답자를 불문하고 영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현재 맞춤형 또는 종일반을 이용중인 사례 총 338명에게 질문하였고, 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가 3.8%, 만족한다는 비율은 34.9%이었으며, 불만족하는 경우는 18.9%(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4.1%+만족스럽지 않음 14.8%), 보통이라는 응답은 4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2-30〉 맞춤형 보육 이용 만족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만족스럽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전체	4.1	14.8	42.3	34.9	3.8	100(338)

주: 현재 맞춤형 보육 이용 중인 영아 부모 338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의 결과임.

맞춤형 보육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6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맞춤형과 종일반 이용 자격의 구분이라는 핵심적 내용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25.0%, 맞춤형과 종일반이 실질적으로 구분 없이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21.9%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종일반 이용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 17.2%, 종일반 프로그램 미비에 대한 불만이 6.3%로 나타났다.

〈표 IV-2-31〉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불만 이유

단위: %

구분	맞춤반 종일반 이용자격 구분	종일반 이용자격 의 엄격함	종일반 이용자격 조건 완화	종일반 자격 증빙 어려움	맞춤반과 종일반 실질적 미구분 운영	종일반 프로그램 미비	맞춤반 이용 시간 부족	기타	계(수)
전체	25.0	17.2	4.7	7.8	21.9	6.3	9.4	7.8	100(64)

주: 맞춤형 보육 이용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영아 부모 64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의 결과임.

다음은 맞춤형 보육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영유아 부모 89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을 세가지 제시하며, 각 안에 대한 찬성 정도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세 가지 안 중에서는 맞춤형 보육을 유지하는 안 중 1) 맞춤형 이용 시간까지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이상의 시간 이용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무상보육 제공 시간에 대한 한정' 및 '추가 이용시간에 대한 자부담 체계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평균 3.40점으로 가장 찬성의견이 높았다. 3)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이전처럼 종일반 기준으로 보편적 무상보육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은 평균 3.25점, 맞춤형보육 유지 의견 중에서는 2) 맞춤형과 종일반을 분리 운영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정도는 3.23점으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각 안에 대한 '찬성(찬성+전적으로 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1)번 의견에 대한 찬성 비율이 5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번 의견 43.8%, 2)번 의견 42.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32〉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개선방안		전적 으로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전적 으로 찬성	평균
맞춤형 보육 유지	1) 맞춤형 이용 시간까지는 정부가 지원하고 그 이상 이용할 경우 부모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어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6.6	12.3	28.1	40.5	12.5	3.40
	2) 맞춤형 이용과 종일반 이용 어린이집 분리 운영	6.1	19.1	32.6	30.2	11.9	3.23

(표 IV-2-32 계속)

개선방안	전적으로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전적으로 찬성	평균
맞춤형 보육 폐지 3) 맞춤형 보육 폐지하고 전계층 중일반 기준으로 무상보육 제공	8.7	18.4	29.1	26.5	17.3	3.25

주: 맞춤형 보육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영유아 부모 896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의 결과임.

4)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가) 일반 국민의 보육정책 인지도

2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체 조사 대상 중 자녀가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정도를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2-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2-33>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유자녀 가구 대상)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으나 내용을 모른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4.0	48.3	44.8	2.8	100.0 (2,333)	2.5
성별						
남자	4.5	51.7	41.7	2.2	100.0 (1,387)	2.4
여자	3.6	44.8	48.1	3.5	100.0 (1,085)	2.5
	$\chi^2(df) / t$		15.02(3)**			3.78***
연령						
20대	5.0	38.4	52.2	4.4	100.0 (159)	2.6
30대	3.7	37.3	54.6	4.5	100.0 (515)	2.6
40대	2.0	43.9	51.5	2.7	100.0 (716)	2.5
50대	6.5	62.2	29.8	1.5	100.0 (712)	2.3
60대 이상	2.5	52.9	42.1	2.5	100.0 (121)	2.4
	$\chi^2(df) / F$		134.20(12)***			30.21***
학력						
고등학교졸 이하	7.3	58.7	32.0	2.0	100.0 (397)	2.3
2~3년제 대학졸	3.9	49.3	44.0	2.9	100.0 (414)	2.5
4년제 대학졸	3.5	45.5	48.6	2.4	100.0 (1,152)	2.5
대학원 이상	1.9	43.5	48.8	2.4	100.0 (260)	2.6
	$\chi^2(df) / F$		55.18(9)***			15.56***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9	50.9	37.4	3.7	100.0 (214)	2.4
200만원~300만원 미만	5.5	51.8	39.2	3.6	100.0 (365)	2.4
300만원~400만원 미만	4.4	49.2	43.8	2.6	100.0 (459)	2.4
400만원~500만원 미만	3.0	50.6	44.6	1.7	100.0 (464)	2.5
500만원 이상	2.6	43.7	50.6	3.1	100.0 (721)	2.5
	$\chi^2(df) / F$		34.01(12)**			4.91**

(표 IV-2-33 계속)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으나 내용을 모른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계(수)	평균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						
현재 이용중	2.4	37.5	55.2	4.9	100.0 (699)	2.6
이전에 이용경험 있음	3.7	55.0	39.5	1.8	100.0 (1,067)	2.4
이용 경험 없음	7.2	49.2	41.4	2.2	100.0 (457)	2.4
$\chi^2(df) / F$			83.04(6) ^{***}			35.23 ^{***}
자녀 연령 (막내)						
미취학	2.9	37.8	55.1	4.2	100.0 (1,123)	2.6
초등 이상	5.2	59.1	34.3	1.5	100.0 (1,100)	2.3
$\chi^2(df) / F$			127.78(3) ^{***}			11.12 ^{***}
후속 출산 계획						
있음	3.3	37.8	53.6	5.3	100.0 (418)	2.6
없음	4.2	50.7	42.8	2.3	100.0 (1,805)	2.4
$\chi^2(df) / t$			31.96(3) ^{***}			5.11 ^{***}

주: 자녀가 있는 2,223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 $p < .01$, *** $p < .001$.

20대 이상 성인남녀 중 자녀가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보육정책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모른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48.3%가 이에 응답하였고, '전혀 모른다'가 4.0%로 유자녀 가구 중 보육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견해가 50%를 상회하였다. 보육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 중에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가 44.8%, '구체적으로 안다'가 2.8%로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 중 보육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며, 이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 연령대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여부별, 현재 막내 자녀의 연령별, 후속출산계획별로 응답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육정책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아, 보육정책에 대해 대략적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여성은 48.1%, 남성은 41.7%로 나타났고, 젊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30대의 젊은 연령대가 보육정책의 수혜 대상인 영유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집단과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한 결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의 보육정책 인지율이 현저히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정책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단,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보육정책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은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인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연령대도 낮고 낮은 경력으로 인해 소득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 가장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보육정책을 알고 있는' 비율도 4.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라서도 보육정책의 인지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후속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보육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9%로 6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후속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45.1%만이 보육정책에 대해 '대체적'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p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은 보육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5.3%로 어떤 집단 구분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바,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현재 또는 미래의 정책 대상자가 많은 관심과 정보로 인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재인 정부 보육정책 공약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요구

문재인 정부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제시하였던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인지도를 본 조사 대상인 2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2-3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조사가 이루어진 2017년 9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공약은 '아동수당'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8.6%에 달하였으며, 모른다는 응답 비율도 제시된 10개 보육 관련 공약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18.7%).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대(이용아동 기준 40% 수준 확대)'(25.6%),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21.0%)도 20대 이상 성인 남녀 중 20% 이상이 인지하는 보육정책 공약이었다. '아동수당'은 그간 우리나라에 없었던 현금 지원이며 소득 등의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을 높인 정책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교육청간 책임 소재의 논쟁이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제이기에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이용률 증대’의 경우도 영유아 부모의 ‘국공립’ 기관에 대한 선호에 비해 입소 기회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부분 이므로 이전보다 대폭 상향된 목표치 등 관심을 끝만한 충분한 요소를 갖추었기에 높은 인지도를 이끌어 낸 것으로 사료된다.

대국민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부분은 전문가 조사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히 높아 전문가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몇 가지 정책은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인지, 즉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문가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우려를 통한 관심이 높았던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그를 통한 보육교사의 관리, 국공립 어린이집 배치’는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모른다는 경우가 55.0%, ‘들어만 봤다’는 경우가 37.4%, ‘잘 알고 있다’가 7.6%로 국민들이 가장 모르는 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전문가 조사에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였던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또한 ‘모른다’는 의견이 각 40%를 넘어, 인지도가 낮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와 국민의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무엇보다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서비스, 현금 등)의 확대나 축소와 관련된 내용에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보육정책 공약 중 추진필요도를 중요한 순서대로 1~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대(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31.6%), 이어 ‘아동수당 도입’(16.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11.6%) 순으로 응답되었다. 1-3순위까지 선택하여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여 집계한 결과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대’가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고(58.6%),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40.9%),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36.4%)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1-3순위를 차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는 1, 2, 3순위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에 고르게 높은 응답률을 보여 1-3순위 응답을 합산한 집계 결과에서도 가장 추진 필요도가 높은 2가지의 보육정책으로 선택되었다.

우선순위가 이보다는 떨어지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 균등화’(1+2+3순위

합계 36.4%),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1+2+3순위 합계 32.7%), '누리과정 예산에 국가 책임 확대'(30.0%), '아동수당 도입'(29.3%)도 우리나라 20대 이상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 공약 중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장 우선순위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4> 문재인 정부 보육정책 관련 공약의 인지도와 추진필요도(일반 국민)

단위: %

공약	인지여부			추진필요도			
	모름	들어만 봤음	내용을 잘 알고 있음	1 순위	2 순위	3 순위	1+2+3순위 (중복)
1)농어촌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9.4	53.0	7.7	6.8	4.2	5.1	16.2
2)아동수당 도입	18.7	52.7	28.6	16.1	6.7	6.5	29.3
3)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대 (이용아동 기준 40%수준)	18.3	56.1	25.6	31.6	16.4	10.7	58.6
4)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40.4	46.1	13.5	8.9	13.3	10.4	32.7
5)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만 12세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33.0	50.8	16.2	11.6	17.0	12.4	40.9
6)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소속직원으로 보육교사를 채용, 지역내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어린이집) 배치	55.0	37.4	7.6	2.3	6.3	6.2	14.9
7)누리과정 예산에 국가 책임 확대	28.4	50.6	21.0	7.2	10.8	12.0	30.0
8)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	41.2	47.0	11.8	7.3	13.0	16.1	36.4
9)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 인증제' 도입	50.0	40.8	9.2	5.7	8.1	12.4	26.2
10)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46.7	43.6	9.7	2.5	4.1	8.2	14.8

주: 전체 3,000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전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IV-2-35>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공약을 거쳐 선정된 구체적인 보육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보육 공약에 대한 인지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아동수당 도입'의 경우 공약이었을 때의 인지도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8년부터 만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라는 구

체화된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도 보육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내용을 잘 알고 있음 29.3%). 역시 문제인 정부 출범 전 보육 관련 공약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에 국가 책임 확대’ 부분도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내용을 잘 알고 있음 15.7%),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내용을 잘 알고 있음 15.9%)이라는 구체화된 국정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동수당 다음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선주자로서 내었던 공약에 비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지도는 다소 하락한 경향을 보였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홍보 보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국민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국정과제인 ‘아동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도 관련 보육 공약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거 공약의 정책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가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약 중 인지도가 가장 낮았던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치와 보육교사 채용, 배치’와 연계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각 국정과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다시 질문하였는데, 이는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국정과제에 대한 ‘지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2-35>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난 국정과제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31.9%이고, 모든 국정과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요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01점에 해당하였다. 이외 ‘보육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향상’ 평균 3.95점,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평균 3.88점,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평균 3.76점,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평균 3.75점, ‘20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만0~5세, 월 10만원)’ 평균 3.48점 순으로,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지지도)가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민의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 정도와 지지가 반드시 일

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 흥미롭다. 즉, 인지도가 높았던 ‘아동수당’의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지지도)는 제시된 국정과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반대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약에서 사용하였던 용어와의 차이점으로 다르게 인식되는 국정과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보육정책 공약에서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지도와 ‘추진필요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으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다소 낮으나 중요도는 비교적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해서는 관심과 인지도가 낮고 그 기능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나, 이를 ‘공공복지 인프라의 일자리 창출’, ‘보육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안정적 제공, 품질 향상’으로 취지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때는 그 취지와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2-35〉 문재인 정부 보육 관련 국정과제 인지도(일반 국민)

단위: %, 점

국정과제	인지여부			중요도					평균
	모름	들어만 봤음	내용을 잘 알고있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공단)									
1)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31.8	58.3	9.9	1.1	4.0	27.8	52.3	14.8	3.76
2) 보육 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27.2	59.8	12.9	0.9	3.4	20.4	50.0	25.2	3.95
1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지원 강화)									
1)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0~5세, 월 10만원)	22.4	48.3	29.3	6.1	11.7	30.7	31.2	20.3	3.48
2) '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34.5	49.8	15.7	1.6	5.3	25.4	39.1	28.6	3.88
1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34.5	49.6	15.9	3.6	7.2	26.9	34.8	27.5	3.75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36.2	52.6	11.2	1.0	3.1	21.7	42.2	31.9	4.01

주: 전체 3,000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육관련 국정과제 발췌함.

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납세 의향

일반 국민 3,000사례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전반적·일반적인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납세 의향과 각각의 일반적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세부 보육 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납세의향 정도, 즉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면 납세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추가 납세 의향은 대체로 '보통(3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보육 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납세의향이 평균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양육 지원 강화)' 3.36점,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충' 3.21점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일반적 보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세부 항목별로 추가 납세 의향을 질문한 결과 '공공 보육인프라 확대'에 대한 추가 납세 의향이 가장 높아(평균 3.44점) 일반적 보육환경 개선 범주로 제시되었던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가장 추가 납세 의향이 높았던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그 외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42점),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3.39점), '어린이집 인적 환경 개선'(3.39점),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3.38점), '보육 교사 처우개선'(3.34점),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지원'(3.32점) 등이 3.3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대부분 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보통' 정도의 납세 의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은 3점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현금 지원의 성격인 '양육수당 인상'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표 IV-2-36〉 보육 환경 개선 재정 마련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일반 국민)

단위: %, 점

구분	추가 납세 의향 (정도)					평균
	전혀 없다(1)	없다(2)	보통 이다(3)	있다(4)	매우 있다(5)	
[일반적 보육환경 개선]						
1)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충	4.1	10.9	48.3	33.2	3.5	3.21
2)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지원강화)	4.3	12.0	35.3	40.6	7.8	3.36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3.1	9.1	39.0	42.3	6.6	3.40

(표 IV-2-36 계속)

구분	추가 납세 의향 (정도)					평균
	전혀 없다(1)	없다(2)	보통 이다(3)	있다(4)	매우 있다(5)	
[세부 분야]						
1)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3.2	10.3	35.7	41.4	9.5	3.44
2)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7.7	23.0	47.2	19.5	2.7	2.87
3) 양육수당 인상	6.3	15.7	41.4	30.4	6.2	3.14
4)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4.0	11.3	38.9	38.1	7.6	3.34
5)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 (시설 환경, 급식, 교재·교구 등)	3.2	10.5	38.1	40.4	7.7	3.39
6) 어린이집의 인적 환경 개선 (보조인력 증가, 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	3.4	10.7	37.9	39.6	8.4	3.39
7)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관리, 보수교육 체계 개선 등)	4.3	11.5	40.1	36.0	8.2	3.32
8)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어린이집 이외 보육서비스 확대 등)	4.2	13.1	42.2	34.0	6.4	3.25
9) 보육 재정 안정화	4.2	11.5	42.5	34.8	6.9	3.29
10)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5	10.2	37.8	38.4	10.1	3.42
11)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	4.0	11.7	37.7	35.5	11.1	3.38
12)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4.1	11.5	44.0	33.4	7.0	3.28
13) 기타(아동수당 도입)	7.6	14.7	43.3	27.1	7.4	3.12

주: 전체 3,000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이러한 납세 의향에 대해 대국민 그룹을 ‘무자녀 집단’, ‘영유아 자녀 집단-보육정책 초점 집단’, ‘초등 이상 자녀 집단’으로 크게 구분하여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납세 의향을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았다. 일반적 보육 환경 개선 범주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제외하면 ‘영유아 자녀 집단’이 추가 납세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무자녀 집단의 추가 납세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표 IV-2-37〉 대국민집단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 차이

단위: 점

구분	대국민집단			F
	무자녀 집단	영유아 자녀 집단 -보육정책 초점집단	초등 이상 자녀 집단	
[일반적 보육환경 개선]				
1)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충	3.28	3.20	3.18	3.45 [*]
2)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지원강화)	3.33	3.38	3.36	0.58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3.36	3.51	3.32	14.54 ^{***}
[세부 분야]				
1)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3.38	3.56	3.36	15.62 ^{***}
2)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2.79	2.97	2.81	11.77 ^{***}
3) 양육수당 인상	3.11	3.39	2.92	70.25 ^{***}
4)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3.26	3.45	3.29	12.90 ^{***}
5)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 (시설 환경, 급식, 교재·교구 등)	3.36	3.51	3.28	17.97 ^{***}
6) 어린이집의 인적 환경 개선 (보조인력 증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37	3.53	3.27	23.39 ^{***}
7)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관리, 보수교육 체계 개선 등)	3.25	3.43	3.26	11.75 ^{***}
8)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어린이집 이외 보육서비스 확대 등)	3.17	3.40	3.16	23.35 ^{***}
9) 보육 재정 안정화	3.28	3.37	3.21	9.53 ^{***}
10)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39	3.50	3.35	7.73 ^{***}
11)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	3.42	3.52	3.21	30.19 ^{***}
12)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3.28	3.34	3.20	6.55 ^{**}
13) 기타(아동수당 도입)	3.10	3.37	2.88	68.94 ^{***}

주: 전체 3,000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일반국민용)」의 결과임.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육관련 국정과제 발췌함.

* $p < .05$, ** $p < .01$, *** $p < .001$.

세부 보육 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추가 납세 의향은 공통적으로 현재 영유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보육정책의 직접적 수혜 대상인 영유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납세 의향이 높은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처럼 대국민 집단별 납세 의향의 높고 낮음의 상대적 차이는 발견되지만, 각 집단별로 가장 납세 의향이 높은 순으로 1~5순위의 보육 환경 개선 분

야를 살펴보면,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 ‘인적 보육 환경 개선’,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는 3개 집단 모두 또는 최소 2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남세 의향을 보이는 분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육 환경 개선 분야는 영유아가 직접 접하는 보육·양육 환경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자녀의 유무, 자녀연령에 관련 없이 국민들이 보육정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개선 요구

1)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된 개선 요구 사항

2014년에 수행된 연구에서(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 2014),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된 요구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78.0%는 급여, 수당, 일일 근무시간, 처우개선비 등 교사 처우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 행정업무간소화 등 근무환경개선을 31.8%의 보육교사가 요구하였으며, 보육정책(21.6%), 인력지원(6.4%) 순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8〉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된 개선 요구 사항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내용	비율	수
교사처우	급여, 수당, 일일 근무시간, 처우개선비 등	78.0	839
근무환경개선	교사 대 아동 비율, 행정업무간소화 등	31.8	839
보육정책	교사제도, 정책 실효성, 보육정책,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21.6	839
인력지원	방과후교사 배정, 보조인력배정, 행정인력지원 등	6.4	839
기타	부모교육 실시, 아동학대 기준마련 등	9.9	839

자료: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67.

2) 보육교사가 바라는 정책적 지원

2015년에는 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김길숙·문무경·이민경, 2015)가 수행되었으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및 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 요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육교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근무환경과 관련된 정책

적 지원 요구를 살펴보면, 70.1%의 보육교사는 대체인력 제공을 가장 높은 비율로 요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63.6%는 근무시간 축소를 요구하였다. 이외에, 업무인력 지원(56.7%), 휴식시간 보장(48.2%), 효율성 있는 근무 환경(25.8%), 교육자율권 보장(14.5%), 휴식공간 제공(13.0%) 순으로 나타났다(김길숙 외, 2015: 235).

어린이집 설립유형 별로 살펴보면, 법인단체등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근무시간 축소(82.2%)를, 직장어린이집의 교사는 휴식시간 보장(60.9%),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업무인력지원(62.7%)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효율성 있는 근무환경(34.0%)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였다(김길숙 외, 236-237).

〈표 IV-2-39〉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정책적 지원(중복응답): 근무환경

단위: %(명)

구분	근무시간 축소	휴식시간 보장	대체인력 제공	업무인력 지원	효율성 있는 근무 환경	휴식시 공간 제공	교육자 율권 보장	(수)
전체	63.6	48.2	70.1	56.7	25.8	13.0	14.5	(906)
설립유형								
국공립	73.0	49.3	70.1	54.6	18.4	11.8	16.4	(152)
사회복지법인	76.2	43.0	68.9	58.3	21.9	13.9	15.2	(151)
법인단체등	82.2	41.1	75.7	59.2	15.1	15.8	9.9	(152)
민간	66.0	48.7	70.7	62.7	15.3	15.3	17.3	(150)
직장	74.8	60.9	53.6	46.4	21.2	16.6	13.2	(151)
가정	59.3	48.0	70.0	53.3	34.0	11.3	12.7	(150)

자료: 김길숙·문무경·이민경(201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pp. 235-237의 그림을 재구성함.

보육교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 요구를 살펴보면, 95.2%의 대다수 보육교사는 급여상향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8.4%의 보육교사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응답하여, 유연한 근로시간제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연수기회 확대(20.0%), 해외 연수제공(16.4%), 고충처리제도 현실화(14.5%), 교원의 단체활동 지원(11.9%), 승진기회 확대(5.0%), 공정한 임용(2.4%) 순으로 응답되었다(김길숙 외, 2015:237).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는 급여 상향(96.0%)을 타 유형의 교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여 급여와 관련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고,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는 연수기회 확대(23.3%)를 요구하여 교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교사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각각 46.7%, 47.0%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여, 근무시간과 관련된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길숙 외, 2015:239).

〈표 IV-2-40〉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정책적 지원(중복응답): 제도관련

단위: %(명)

구분	급여 상향	연수 기회 확대	해외 연수 제공	고충 처리 제도 현실화	교원의 단체활 동 지원	공정한 임용	승진기 회 확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제 확대	(수)
전체	95.2	20.0	16.4	14.5	11.9	2.4	5.0	38.4	(906)
설립유형									
국공립	92.1	11.8	17.8	12.5	11.2	3.9	5.3	46.7	(152)
사회복지법인	92.1	18.5	23.2	11.9	7.9	4.0	5.3	38.4	(151)
법인단체등	91.4	18.4	23.7	10.5	13.2	2.0	2.6	37.5	(152)
민간	96.0	16.7	18.7	10.0	11.3	2.7	5.3	39.3	(150)
직장	95.4	15.9	23.2	9.9	7.3	3.3	7.9	47.0	(151)
가정	95.3	23.3	14.0	18.0	12.7	2.0	4.7	36.7	(150)

자료: 김길숙·문무경·이민경(201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pp. 235-237의 그림을 재구성함.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보육교사 근무 및 처우 개선의 요구를 살펴보면, 급여상향을 통한 처우 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근무시간 축소나 휴식시간의 제공 및 보장, 유연근무제 적용 및 확대, 인력 지원 등 급여 외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설립유형에 따라 근무환경에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 요구는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시설 간 나타나는 격차의 해소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3. 소결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조사와 대국민 조사 결과, 그리고

선행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육교사의 보육정책 개선 요구를 토대로 우리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향성에 따른 목표와 추진 과제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시에 고려해야 할 보육정책 환경으로 '동의함' 이상의 동의도를 보인 환경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4.56점)',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4.42점)',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아동 행복 수준(아동행복과 권리 중심 접근 요구 증대)(4.42점)', '사회구성원 간 소득불평 등 등 양극화 심화(4.31점)', '가족구조의 다양화 추세(4.24점)', '직장,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요구 증대(4.18점)', '유보통합(4.16점)'을 꼽을 수 있다.

초저출산의 지속 경향 속에서 보육정책의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성과나 책임을 어디까지 기대하고 요구해야 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 수요의 감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이며,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는 영유아에 대해 최선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보육정책으로서의 책무가 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행복과 권리' 제고에 대한 요구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하겠다.

이전 어느 정부보다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을 계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 양극화 심화 현상, 양성 간 평등에 대한 고려도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시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유보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육정책 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육정책의 철학과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제2차 계획에서도 주요 전략이었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아동 행복 우선)'이 5점 만점에 4.82점의 가장 높은 동의도 점수를 얻었으며, 반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이었던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은 4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동의도를 얻었다. 이외 '아동 간 생애 초기 경험의 형평성 제고(취약계층에 대한 보육 지원 강화)(4.44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4.42점)', '부모 양육역량 및 책임 강화(4.36점)', '연령에 적합한 양육 지원(4.33점)', '교사가 행복한 보육 기반 조성(4.09점)'이 45명의 전문가로부터 '동의함(4점)' 이상의 동의도를 얻는 방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면에서 1순위 응답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이 82.2%

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보육정책 방향성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된 1~5순위까지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98.8%), 그밖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81.2%)', '아동간 생애 초기 경험의 형평성 제고(77.9%)', '부모 양육 역량 및 책임 강화(49.3%)', '연령에 적합한 양육지원(46.5%)', '교사가 행복한 보육 기반 조성(44.8%)', '보육의 국가 책임실현(43.0%)'도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보육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이 압도적으로 선택되었으나, 다른 방향성들도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보육정책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보육의 역할이고 근본 철학이라는 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부모들이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장 동의하였던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80.7%가 바람직하다고 응답)이었다. 이외 부모의 취업활동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69.7%). 단,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높으면서도, 가구소득 무관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60.7%), 이는 자녀 양육이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영역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방향성이 반드시 '보편적' 무상보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유아 부모들은 연령별로 이상적인 양육 형태로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기관 이용보다는 가정 양육이 적절하고(만0세 99.1%, 만1세 87.0%가 가정양육이 적절하다고 응답), 25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이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만2세 55.4%, 만3세 83.9%, 만4세 95.3%, 만5세 이상 98.5%) 연령에 따라 적절한 양육 형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들은 보육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선택하였고(94.5%가 중요하다고 응답), 일하는 부모의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중요한 효과로 보고 있었다(82.9%). 이외에도 보육정책을 통해 아동의 생애 초기 출발선의 형평성 제고, 여성 취업활동 제고, 출산률 제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육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과 개선

이 필요한 지원 분야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영아/유아를 불문하고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같은 '비용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56.9%), 그 다음으로 다양한 보육기관이나 서비스 제공(11.0%), 지역의 양육지원인프라 확충(9.4%), 어린이집 확충(8.5%)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용 지원 분야는 보육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선도 가장 필요한 분야로 지목되었고(41.9%), 이외 어린이집 공급 분야(지역별 배치, 접근성, 이용 수요 대비 공급 등) 23%, 보육서비스 질 13.3% 순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개선 의견 청취를 위해 자녀가 있는 국민 중 어린이집을 현재 이용하거나 이용한 경험 있는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 이유, 선택의 기준, 만족·불만족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부모들은 최우선적으로는 근로활동 등 대리 돌봄의 욕구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욕구도 어린이집 이용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선택 시에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다. 집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등하원 편의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을 취업중인 부모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만족했던 부분은 어린이집 '선택 기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서, '접근성'을 어린이집에 만족했던 요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33.6%로 가장 높았다. 이용했던 어린이집에 불만족한 요소로는 '비용 부담'이 가장 많이 지목되었고(24.7%), 이외 시설 환경(14.0%), 운영시간(10.0%), 접근성(9.9%), 특별프로그램(8.1%) 순으로 응답되었다. 지속적인 비용 지원의 확대와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함을 알 수 있으며, 시설환경 개선, 운영·이용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부모 중 79.8%가 인지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으로는 맞춤형 보육을 유지하면서 맞춤형 이용 시 추가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 차이에 따른 자부담 체계 도입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전문가 45인으로부터 4점 이상의 동의도를 얻은 목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유보통합 완결',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 발달에 적합한 보육정책 설계', '보육에 대한 국가-부모 역할과

책임 조정, '보육-양육지원 정책간 정합성 제고'의 8가지였으며, 동의도가 높은 목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목표로는 1순위 응답에서 '유보통합 완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순으로 응답되었다. 1~3순위를 모두 합한 결과에서도 이 세가지의 목표에 추진 필요성이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고, 추가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국가-부모역할과 책임조정'의 경우 1순위보다는 2, 3순위의 높은 응답률에 힘입어 상위 5개의 목표에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 공약으로 시작, 현재 국정과제화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포함하여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보육서비스 질'과 관련해 성과가 낮았던 '인력의 질' 제고와 관련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 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보육의 책임과 기능에 대한 혼선(보육정책 철학 부재)과 이로 인한 '부모의 자녀 양육 역할에 대한 혼란'에 대한 조정과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의식과 역할) 회복'이 전문가로부터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013~2016년에 걸쳐 추진되었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해서도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완결 지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목표로 '유보통합 완결'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이러한 보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성, 정책 환경 속에서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하여 유목화된 정책 과제에 대해 2차 조사에서 전문가의 동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 체계 구축', '행복 육아를 위한 부모 역할 수행 지원', '보육 수요 변화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개선', '아동양육·보육정책간 연계와 정합성 제고', '보육지원의 형평성 제고'의 5개 추가목표가 모두 '동의함(4점)'이상의 높은 동의를 얻었으며, 추진 필요도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 체계 구축'(33.3%), '보육 수요 변화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개선'(24.4%), '아동 양육·보육정책간 연계와 정합성 제고'(17.8%), '행복 육아를 위한 부모 역할 수행 지원'(13.3%), '보육지원의 형평성 제고'(11.1%) 순으로 응답되었다.

다섯째, 전문가 조사 결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와 관련해 추가되어야 할 세부과제로는 '추진과제 1: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분야에

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이 93.4%가 동의하여 ‘동의함’(평균 4점 이상) 이상의 지지를 받는 세부과제였으며, ‘추진과제 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의 기반 구축’, ‘보육·양육수요에 맞는 지원 및 프로그램 다양화’, ‘다양한 양육·보육지원 서비스 연계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이 평균 4점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추진과제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에서 제안된 추가되어야 할 세부과제 중에서는 ‘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 ‘공보육 시설 확충 및 어린이집 수급조절’, ‘공공형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 체계 구축’이 평균 4점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추진과제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에서 제안된 추가 과제 ‘보육인력 자격관리 체계 개편’, ‘우수 인력 보육 현장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부적격 인력 조기 발견·관리체계 구축’이 모두 4점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추진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가 제안된 과제 ‘부모,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어린이집 운영 개방성 확대 기반 조성’, ‘어린이집 정보 공개 내실화’도 모두 4점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추진과제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가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안정적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 ‘보육 양육지원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도 모두 4점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여섯째, 보육계획 시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육공공성 확보의 지향점은 단순한 공보육 시설 확충 차원의 논의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지원(보육료,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의 방향성, 일정 수준 서비스 질 담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 또한 보육과정·프로그램의 경우 ‘질 제고, 시설유형별 격차 해소’를 지향 목표로 국가 보육과정은 일정 수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되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시설 환경에서 실행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으로 수렴되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 보다는 ‘부분 보완과 부분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보육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지원하고 비용 지원을 차등하는 취지에 공감하므로 맞춤형 보육이 실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감소시키고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일반-맞춤반 자격 기준의 조정 등을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자격체계의 강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양성 뿐 아니라 ‘현직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처우개선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요 방안으로 제시되어,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따로 떼어 논할 수 없는 연계성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급여, 근무시간, 근로복지, 신분보장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처우 개선의 기반으로 ‘표준보육료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해 대체로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높았으나, 유보통합의 목적의 명확화가 우선되어야 명분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최초로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은 도입 시 바람직한 방식으로 ‘현금’ 방식으로 10만원으로 시작하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하며, 지급대상은 현재 양육수당·보육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수당’, ‘국공립 이용 비율 확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 효과와 방향성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기존의 유사 정책과의 정합성 등 세심한 고려 없이 선심성으로 제안되었는지의 의문, 지나친 목표 제시에 따른 현실성 우려,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신중한 제도 도입과 정책 설계로 현실화 가능성이 제고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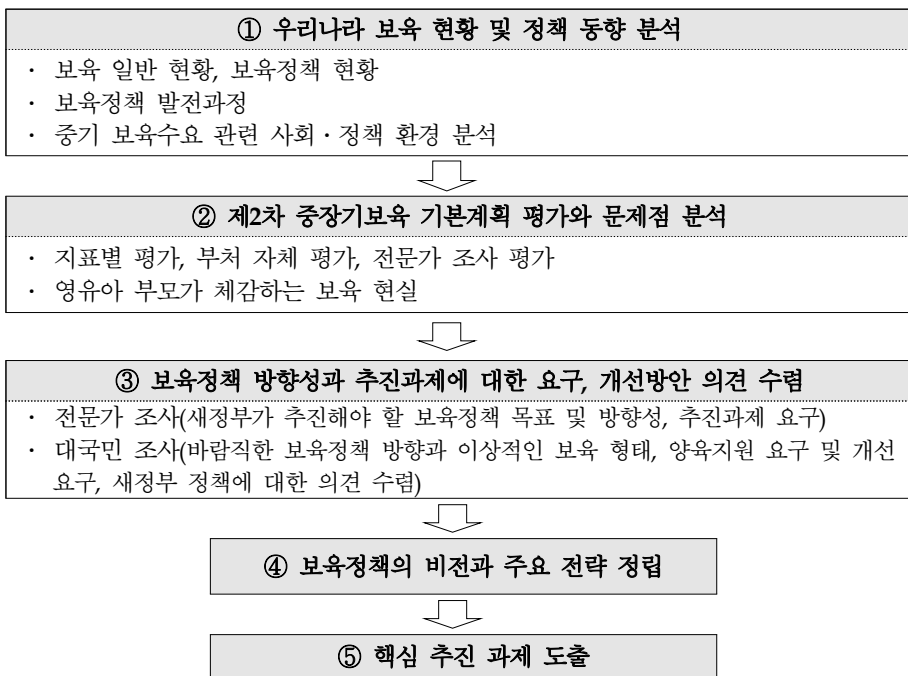
일곱째,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납세 의향을 통해 지지도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보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때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 이상인 보육환경 개선 분야는 없었다. 그중 가장 지지도가 높았던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분야이며, 세부적으로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추가 납세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3.36점), 이외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3.35점), 보육교사 처우 개선(3.29점), 물리적 환경·인

적 환경 개선(각 3.28점, 3.2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반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개선분야로 사료되며,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양육수당 인상'을 위한 납세 의향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영유아가 경험하는 직접적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분야에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현금성 지원의 도입 및 상향, 보육료 인상 등을 위한 납세 의향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납세 의향이 낮은 개선 분야에 대한 재정 확보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부담 체계의 일부 도입이나 기금 조성 등 여타 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V. 중장기 보육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제5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2018-2022년간 우리나라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될 비전과 전략,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본 연구의 전반적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관된 목표 하에 거쳤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통한 결과이다. 즉, 지금까지의 보육계획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의 분석, 보육 현황 및 보육정책 현황 분석, 보육 수요와 관련된 사회·정책 환경 분석을 배경으로 최근접 보육중장기 계획이었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평가,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요구 수렴을 통해 보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성과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제안하였고, 그 절차를 [그림 V-1-1]에 제시하였다.



[그림 V-1-1] 중장기 보육 발전 방안 도출 절차

1.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재 보육정책이 처한 주요 정책 환경과 중기보육수요와 관련한 사회·정책 환경²⁵⁾을 먼저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 개발 및 추진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환경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심화·지속 현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되었던 주요 정책 환경 중 ‘저출산·고령화 심화’ 현상을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저출산 지속 상황은 향후 보육정책 수요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이 무조건적 ‘양적 확대’를 지향해서는 안될 것이며, 인구와 서비스 양 측면에서 모두 ‘양 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보육은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존의 ‘저출산 극복’ 테마를 벗어나, 이제는 태어난 아이에게 ‘최선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질적 측면의 보육 수요와 관련하여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조기 투자와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이는 향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주요한 정책 환경으로 높은 동의를 얻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 증가는 곧 서비스의 ‘양’ 보다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향후 보육정책은 ‘얼마나 싸게 많이 제공받는가’에서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가’가 중시되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그간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를 보육정책의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육 서비스의 질은 결국 보육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부모는 안심하고 취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으며, 이를

25) 본 보고서의 제II장 3절 참조.

행하는 교사들도 행복한 보육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보육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아동의 행복과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가 보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간 아동은 보육정책의 대상이며 최종수요자로서 이들이 경험하는 보육정책의 내용에 따라 수혜자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보육정책의 최종수요자인 아동의 행복과 권리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보육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육정책 수립시에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아동이 이를 통해 행복할 것인지, 아동의 권리가 증진될 것인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보육에 있어서만은 어떤 정책이 도입, 변화될 경우 예를 들면 '아동행복(권리) 영향 평가'와 같은 수준의 고려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보육 정책 개발 및 추진 시에도 사회구성원간 소득불평등 및 사회양극화 심화 양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소득불평등 확대 및 사회양극화 심화는 생애초기 성장 발달에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 있는 영유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므로, 취약한 배경의 영유아를 위한 생애초기 경험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형평성 제고 전략의 추진이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도 특별한 보육 서비스와 정책을 요구하는 사회·정책 환경으로 제시되었는데,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와 한부모 가족과 같은 돌봄 취약 가구의 증가 등은 '보편적 무상 보육' 외에 돌봄 욕구가 큰 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또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같이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은 보육정책 설계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정책 환경으로 제시된다.

여섯째, '유보통합' 또한 보육정책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환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법, 우선순위는 국가의 보육 비전과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인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상기한 주요 정책 환경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가. 보육정책의 비전: 아동 행복, 부모 신뢰, 교사의 자긍심이 균형을 이루는 보육

본 보고서의 제3장을 통해 수행되었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아동과 부모, 보육서비스의 제공자인 보육교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향하였으나 ‘아동의 행복 수준’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이 보고되며,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에 맞추어진 정책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 인식의 부재가 지적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역량 지원이나 처우개선과도 관련되는 안심보육 여건의 조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의 행복과 보육 현장을 신뢰하는 부모, 그리고 아동에게 어린이집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은 서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보육교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동을 대한다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의 일상이 즐겁지 않을 수 없고,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부모는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보육교사 또한 부모와 아동이 보육교사와 기관을 신뢰하며 따른다면 행복한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과 부모를 위해 최선의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아동 또는 부모, 보육교사의 만족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상태는 진정으로 바람직한 보육 현장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과 부모, 보육교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제3차 계획에서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전략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강화

저출산 시대, 아동의 행복과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이 시대 보육정책은 ‘아동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이라는 본

질적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의 출산을 유도하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역할에서 선회하여, '최상의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정 배경에 따라 불리한 생애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구성원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에 따라 '격차 해소'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보육은 가정 환경의 배경에 따라 불리한 생애 초기 경험을 하는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 양육 환경이 불리한 아동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양질의 경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지역과 다니고 있는 기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보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환경의 불리함 극복을 위한 우선적 배려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 지원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추진,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행복 육아 실현

자녀 양육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며, 국가가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출발점에서의 보육은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 저하와 기관에 대한 의존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가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던 이전과 달리 부모가 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약화되었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어려움을 겪는 부모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국가 책임 보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과 부모 역할 수행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없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회복하고 자녀양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아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부모의 행복 육아 실현'을 제안한다.

부모의 행복 육아 실현을 위해 국가와 기관은 예전과 같은 양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모에게 적절한 양육 지식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의 연

령에 적절하며 필요한 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취업 부모의 일-가정이 편안하게 양립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의 비전과 자긍심 제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 행복과 권리 제고를 위해 교사가 직업인으로서 행복한 보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즉 '교사의 비전과 자긍심 제고'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보육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중 하나로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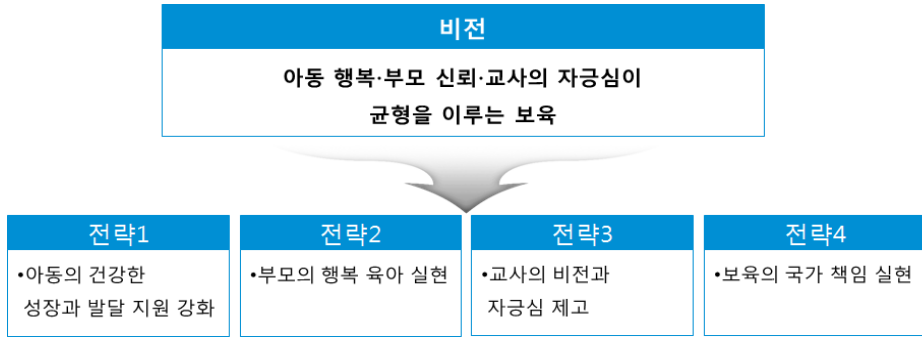
보육교사는 보육 현장에서 수많은 영유아를 직접 대면하는 제 일선의 보육서비스 제공자이나, 그간 영유아를 직접 대면한다는 중요성과 이들이 수많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받는 감정노동자라는 측면이 상당히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보육현장에서의 아동 행복의 실현은 결국 아동을 직접 대하는 보육교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자신을 대하는 보육교사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며 보육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보육교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보다는 보육교사가 스스로 보육교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제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5년간의 주요 전략으로 제안한다. 보육교사의 비전과 자긍심 회복을 위한 행복한 보육활동의 기반 조성은 교사 개인의 행복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는 어린이집에서의 행복한 시간으로 확산되며, 부모에게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유보통합'의 논의, 또는 '유-보 격차 해소' 관점에서도 보육교사에게 비전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행복한 보육 기반의 조성은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보격차 해소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전제가 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4)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보육은 여전히 국가 책임 영역이며, 이는 향후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지속될 보육정책의 전략이자 방향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보육이 국가 책임의 영역임은 분명하되,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양성에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국가 책임 실현의 적절한

방식은 이제 양 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방식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1-2]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안)

2.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의 추진과제

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 지속 필요 과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달성도가 높았던 추진과제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4개 과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와 별개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과제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인지 평가하도록 한 결과, 6대 과제 중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3개 과제가 현시점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도 지속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신규 과제 제안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향후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의 방향성과 연계되는 추진

과제를(세부과제 포함) 제안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를²⁶⁾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목표(문 2)와 향후 추진되어야 할 보육정책 과제(문 3-1-2)를 통해 수렴한 제안 과제들 중 중복 제안을 제외하고 취합한 결과이다.

1) 보육의 공공성 제고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이라는 전략과의 연계에서 보육의 공공성 제고는 주요 추진과제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높은 동의도를 얻었으나, 이는 공공성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 볼 수 있어 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과제명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공공성 제고 방안은 국공립 등 시설 확충이라는 양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질 관리 포함), 비용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공공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인 ‘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을 직접적 목표로 한 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세부과제로 제안한다.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계획에는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용아동 수 기준 연차별 확충 목표 설정(연령별, 지역별 확충 목표)
- 확충 목표 도달을 위한 연차별 확충 시설 수(정원규모, 지역별)
- 확충 방법(신축, 민간시설 매입·전환 등)
- 확충 방법 및 시설 수에 따른 연차별 소요재정
- 우선 확충 기준(우선 확충 추진 지역, 재정 지원 우선순위 등)

나. (1-2) 지역 육아지원 공공인프라 확대

‘어린이집’ 외 육아를 지원하는 지역의 공공인프라 확대를 ‘보육의 공공성 제고’의 두 번째 세부과제로 제안한다. 본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계획에는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본 보고서의 [부록 1], [부록 2] 참조

- 공공인프라 확충 목표의 기준 설정(연차별, 지역별, 이용가정(아동)수 등)
- 주요 기능별 확충 목표(장난감 도서관, 부모교육 상담 등)
- 확충 방법(신축, 분소 설치 등)
- 확충 방법 및 시설 수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 우선 확충 지역 기준 설정

다. (1-3) 공공보육서비스의 품질관리 강화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공공성’은 단지 공공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이 아닌 공공보육서비스 질의 담보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치되었다. 이에 공공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의 확충과 함께 이에 대한 질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공보육서비스의 품질관리 강화’의 세부 과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추진계획이 요구된다.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관리 계획 수립(관리 기구, 관리 방식, 관리 대상 등)
- 부실국공립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방안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평가인증 연계 컨설팅 강화, 피드백·인센티브 방안)

라. (1-4) 공공성 제고를 위한 비용지원의 내실화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무상보육’ 제공이 곧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성 제고는 공공보육서비스 질의 일정 수준 담보와 이를 위한 관리와 연계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비용지원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내에서 추진되었고 현시점에서의 중요도도 높게 평가되나 달성도는 낮았던 ‘보육료 적정화’를 포함하여 소득수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차등지원까지 고려한 보육료 지원의 재설계,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원의 합리적 개선 등을 포함한 ‘비용지원의 내실화 추진’을 공공성 제고를 위한 마지막 세부과제로 제안한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 ‘비용지원의 내실화’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업이 요구된다.

- 표준보육비용 산출 모형의 개선과 표준보육료 재산출

- 부모 보육료 지원 방식의 재설계(표준보육료와 부모 지원 보육료 개념의 분리, 무상보육시간 및 이용자 부담 시간 개념 도입 등)
- 보육 기본운영비용 중 공공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질 담보를 위한 고정비용(인건비)에 대한 지원 방안 설계

2)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보육교사의 비전과 자긍심 제고’의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보육정책의 추진과제로 제안한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최저임금 기준에 저촉되지 않을 최소한의 급여 기준을 보장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전문가로서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2-1) 보육교사 근로복지 환경 개선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주요 내용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포함된 ‘교사처우개선’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내에서도 추진되었고 현시점에서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나 달성도는 낮았던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연계된다. 이에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내에서도 추진되었던 ‘급여 및 근로시간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2018년 파격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²⁷⁾ 등 급여 인상 요인 반영, 단순 근로시간 외 보육교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 차원에서 휴가 및 유연근무 이용 활성화까지 포함한 실질적 ‘보육교사 근로복지 환경 개선’을 세부과제로 제안한다.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사업에는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급여 개선을 위한 재정 소요 추계(최저임금 인상액 반영, 시간외 수당 반영), 재원조달 방안, 표준보육료 산정과의 연계 방안
- 법정 근로시간 준수·유연근무, 휴가 등 복무 환경 개선과 연계된 추가인력 소요 및 관련 재정 소요액, 인력 보완 방식
- 대체교사 인력 소요 추계 및 연차별 양성, 확보 계획

27) 한국정책신문(2017. 7. 16). 「내년 최저임금 7530원 16.4%↑...17년만에 최대 인상률」

3) 교사 전문성 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차원에서 아동 간 생애 초기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가능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을 완수하기 위해 ‘교사 전문성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한다.

보육교사는 보육 현장에서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어 책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를 통해 아동의 생애 초기 경험의 격차가 줄어들 수도,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중요 요인으로서 아동에게 일정 수준 이상 양질의 생애초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국가가 모든 아동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경험을 제공하였을 때 책임을 실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국가서비스의 대리자인 보육교사의 양성과 자격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이 배출되도록 해야 하며, 보육 현장 배치 이후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책임이 막중한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3-1)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추진 내용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포함되며, ‘자격체계개편’은 이 내용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보육인력 자격관리 체계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교사 전문성 제고’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강화’를 제안한다. 본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사업으로는 특히 유치원 교사와의 자격·양성 체계 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양성의 문제점 개선 방안
- 전문성 강화 방안(학과제 도입, 국가고시 도입, 자격 갱신제 도입 등) 및 연차별 추진 계획
- 보조인력 양성과의 연계 방안(비대면 교육, 3급 자격자의 활용 방안 고려)

나. (3-2) 현직교사 역량 강화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주요 내용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에는 ‘교사자질향상’이 포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조사에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내에서 추진되었던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과제의 세부추진과제 중에서 ‘보육인력의 역량지원 강화’는 가장 달성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현시점에서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사 전문성 제고’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현직교사 역량 강화’를 제안하며 본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사업으로는 이하의 내용 포함을 제안한다.

- 보수교육 지원 방안(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비용, 대체인력 등)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소요 재정 추계
- 자발적 역량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포상, 연수 등 기회 제공)
- 교사 스트레스 관리 방안 개발 및 지원 계획(프로그램 수요 파악,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지원 방안)

다. (3-3) 지속적 교사 전문성 지원·관리 강화

보육현장 진입 전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현직교사의 전문성 관리의 한 방안으로 현직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외 교양교육, 인성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지원, 보육교사의 진입과 이직 경로 등 이력관리, 정기적 상담과 직무적성 관리를 통한 부적격 교사의 진로 상담 등 자체적 전문성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포함하는 ‘지속적 교사 전문성 지원·관리 강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업 설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사 전문성 지원·관리 기구 설계(신설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의 보완 등)
-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교양교육, 인성교육, 상담)
- 이력관리 내용(자격취득 경로, 자격취득 후 현장 진입·이직 경로, 이직 사유 등, 교육이수 이력과 성과)
- 보육교사 부적격 인력 관리 사업 계획(상담 등 적성 확인을 위한 필요 프로그램과 인력 지원, 부적격자의 진로 및 이직 상담 등)

4)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유보통합 완결'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의 목표라는 점에 동의도가 높았으나,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는 문재인 정부의 기초를 반영하여 본 과제에서는 '유·보 격차 해소를 염두에 두고 보육 현장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추진과제로 제안한다.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은 앞서 제시한 전략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과 관련된다. 우선, 아동의 성장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간 생애 초기 경험'에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 중 아동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불리한 점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세부방안이 이러한 추진과제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유·보간 격차 외에도 가정양육 환경의 격차로 인한 아동의 생애초기 경험의 격차 발생 등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격차'의 해소를 통해 아동 생애 초기 경험의 형평성 제고까지 목표로 한다.

가. (4-1) 보육 현장의 격차 해소 기반 조성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주요 내용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의 질 균등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교사'의 질 균등화에는 교사 자질 향상, 처우개선, 자격체계의 개편으로 연결되며 이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의 질 균등화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개선' 추진과제와 관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조사에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담아야 할 보육과정·프로그램 관련 내용의 제안 사항과 시설 환경 개선 과제를 세부과제 '보육 현장의 격차 해소 기반 조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세부과제의 구체적 추진사업으로는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보육과정 실행 기반 강화(유·보간 우수 실행 사례·정보 공유, 유·보 공동 장학과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실행계획)
- 유·보간 시설 환경 등 물리적 환경 격차 해소 추진 방안 마련(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상 시설·안전 관련 법령 정비(일원화된 기준 마련), 물리적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 및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나. (4-2) 가정의 양육환경 격차 해소

본 연구의 추진과제 '격차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에서는 '보육 환경'의 유-보간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의 격차 해소를 제안하는 한편(세부과제 4-1), 시설 보육 환경 외 근본적 아동 발달 환경의 격차를 일으키는 가정환경의 발달 영향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부과제를 '가정의 양육환경 격차 해소'로 제안한다. '가정의 양육환경 격차 해소'는 시설보육보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가정의 자녀가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환경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될 경우에도 취약한 인적·물적 환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약 가정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강화
- 양육 환경 취약가정 자녀를 위한 발달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양육 환경 평가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자녀양육 컨설팅 등)

5) 아동 발달에 적합한 양육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부모의 행복 육아 실현'이라는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양육의 형태를 크게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으로 대별하고, 부모의 선호나 조건에 따라 양육의 형태를 선택하여,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간의 보육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태어난 영유아에게, 국가가 최선의 보육(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육정책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 발달에 적합한 양육 지원'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의 특성과 이에 따른 최선의 양육 형태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안한다.

가. (5-1) 아동발달을 고려한 지원체계 설계

아동의 연령별 발달 영향 요인과 적합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연령별로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연령에서는 가급적 가정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유인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기관이용 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유익한 연령에서는 기관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연령별 적절한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설계와 적절한 이용이 유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해당된다.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령별 아동 발달 영향 요인, 적합 환경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계획
- 연령별 적절한 시설 보육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 설계(일하는 부모의 근로시간 및 복무형태 조정,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체계 조정(적절한 이용 시간 내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육아지원체계의 다양성 강화)

나. (5-2) 장애아·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발달적으로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세부과제로 제안한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내에서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추진과제는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고 ‘장애아, 다문화 아동 보육 지원의 미흡성’이 개선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장애아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일반아동과 동일한 보육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발달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어려우므로, 심신·가정환경의 미흡한 발달 영향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특수하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 장애아 보육 지원 기반 조성: 장애아 보육 실태조사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로 장애아 보육 개선 요구를 파악, 근거에 기반한 개선 방안 마련
- 장애아 보육 인력 환경 내실화: 특수교사 등 장애아보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 개선,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등 내실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장애아 보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장애아 보육에 적합한 시설 설비 확보, 개조 지원을 위한 재정 소요액 추계, 재정 지원의 기준 등 마련

-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 지원 기반 조성: 언어·사회성 등 다문화 아동의 발달상 취약점을 자극·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관과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아동 양육 상담, 보육과정·가정과의 연계 설명 등) 지원을 위한 인력 활용(이주여성 인력 등 문화·언어 이해도 높은 인력 활용 지원 등), 다문화·일반 아동의 상호 공감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활동, 교재·교구 개발·보급 등

6) 부모 양육역량 강화 여건 조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부모의 행복 육아 실현’의 전략과 연계한 추진과제로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외에도 부모 양육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은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의 기조 하에 국가가 제공하는 기관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였는 바, 그 결과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약화,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기관에 의존하는 자녀 양육 행태가 감지되고 있다. 부모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약화는 직접적으로 자녀인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부모 자신도 자녀 양육의 행복을 경험할 기회의 상실로 연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기조가 불러일으킨 국민의 오해와 잘못된 행태는 과감히 바로잡고 부모가 자녀 양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역량 강화 여건 조성’을 중요 추진 과제로 제안하며 관련 세부과제로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 양육역량 지원체계 조성’을 제안한다.

가. (6-1) 부모교육 의무화

본 연구에서 보육 정책은 단지 기관보육(어린이집)과 관련한 정책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영유아가 자라나는 양육 환경(‘부모’라는 가정환경 포함)과 관련된 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소자녀화 현상, 비혼, 무자녀 가정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현상과 함께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고 심지어는 가혹하기까지 한 양육 행태가 빈번하게 지적되는 상황에서 부모에게도 자녀 양육역량이 본능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리라는 기대는 어려워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고 부모에게도 자녀 양육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방안으로 최소한의 부

모교육을 의무 교육화 하는 세부과제를 제안한다. 이 세부과제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애주기별 필수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확정
- 의무 부모교육 실시 방안 마련(실시 시기 및 방법 및 인프라: 출생 신고 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신청 시, 취학통지서 수령 시 등 시기, 온라인·오프라인 등 방식, 교육제공 주체 및 강사 등 인프라 등).
- 의무 부모교육 대상(보편적/취약 대상 선정 및 부모교육 제공 우선순위 등) 범위 확정 및 실시 목표 수립
- 근로자인 부모의 교육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마련(특별휴가 제공, 근로시간에 부모 교육 이수 시간 인정 등)

나. (6-2)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체계 조성

‘부모 양육역량 강화 여건 조성’의 두 번째 세부과제는 부모 양육역량을 강화 지원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여 부모의 내부적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별개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시기에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양육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부과제의 추진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인프라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또는 유사 인프라와 제휴, 육아지원 기능 부여로 실질적 접근성 제고, 주요 서비스 위주의 분소 설치·확대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자녀 양육기에 지속적·다양하게 발생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상담 등 정보제공 서비스, 육아스트레스 해소 등 힐링 프로그램, 육아용품 대여 등 물품 지원, 인력 지원 등)

7)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 조성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보육서비스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본질로서 포기될 수 없는 방향성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부모들도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는 보육서비스의 시간과 질에 있어 더 많은 수요를 지니고 있고 이에 만족하지 못할 때 취업활동 혹은 자녀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 조성’을 중요 추진 과제의 하나로 제안하며,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이란 ‘양보다 질’, ‘질보다 양’ 어느 것도 아닌 ‘양과 질’이 동일하게 중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의 추진을 통해 보육정책은 일하는 부모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양적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특히 자녀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 질의 제고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 (7-1) 안심할 수 있는 영아보육 여건 조성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부모 조사 결과, 부모들은 아동 연령 만0~1세까지는 기관(어린이집) 이용 보다는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이처럼 영영아기에 대해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이 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고 가정양육을 대리할 양육자를 구할 여건도 되지 않는 경우 어느 때보다도 보육서비스의 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육서비스 이용이 유일하게 일하는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지일 경우 이는 영아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유치원 등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유아기에 비해 영아기 보육서비스의 질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 조성’에서는 세부추진과제의 하나로 가장 먼저 ‘안심할 수 있는 영아보육 여건 조성’을 제안한다. ‘안심할 수 있는 영아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영아 발달을 고려한 영아보육시설 표준 모형 개발(교사 대 영아 비율, 영아보육교사 자격기준, 시설 기준 등) 및 표준 모형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

28) 만0세에 대해서는 99.1%, 만1세에 대해서는 87.0%의 부모가 기관이용이 아닌 ‘가정양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추계

- 영아 보육 수요 추계 및 영아보육시설의 지역별 수급 계획, 아동 연령별 세부적 국공립이용률 목표치 수립
- 영아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국공립영아보육시설 확충 계획(연차별 국공립영아보육시설 확충 시설 수, 확충 방법: 표준 모형 적용 시설의 신설, 민간 전환)

나. (7-2) 맞춤형 보육 모형 개선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및 영유아 부모 조사 결과, 현재의 맞춤형 보육에는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수요에 따른 이용을 지원한다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보편적으로 12시간의 이용을 보장하던 체계에서 홀대받는 실수요자 ‘일하는 부모’가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맞춤형 보육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본 세부과제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보육서비스에 대해 장시간의 실질 수요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일하는 부모 지원을 위해 개선을 추진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내 ‘보육서비스’의 일하는 부모 지원의 근거 명확화
- 종일반 이용 기준을 ‘장시간 이용 수요’에 한정하여 엄격한 기준 마련.
- 보육료 지원체계의 재설계: 종일반 이용 자격은 일하는 부모 등 장시간 보육 수요자에 한정하되, 무상보육 제공 시간과 수익자 부담 시간을 구분하여 이용 시간별 일부 보육료 부담 체계 도입(예: 맞춤형 이용 시간 등 일정 시간 까지를 무상보육으로 제공, 추가 이용 시간은 보호자의 취업 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등적 수익자 부담 체계 도입 등), 맞춤형 등 단시간 이용 가구의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 해소.

8) 체계적 보육서비스 설계 체계 구축²⁹⁾

‘국가 책임 보육 실현’을 위해 국가는 보육수요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통해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대리 양육(보육) 수요 증가 등 보육수요 변동요인을 보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수급 조절과 새로이 창출되는 보육수요에 적

29) 전문가 조사 문 3-1-2)의(3) 보육수요 변화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개선’ 문구를 수정함.

절한 서비스 유형 발굴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보육서비스 설계 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안한다. 본 추진과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세부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

가. (8-1) 보육수요 변동 요인의 정기적 점검 및 수요 예측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설계를 위해 '보육수요' 점검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서비스 수요를 직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단기적인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결혼률, 출산율 등 관련 통계자료와 연계한 영유아 인구 변동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인구 변동 외 기타 사회 변동으로 인한 보육수요 변동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육수요 변동 요인의 정기적 점검 및 수요 예측'의 구체적 추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점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수요자 조사를 통한 단기 보육서비스 수요 점검: 보육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 조사 결과 점검
- 영유아 인구 변동 관련 통계 점검: 결혼률, 출산율, 출생인구 등
- 돌봄 수요 가구 변동 관련 통계 점검: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 등
- 보육서비스 수요 변동 관련 사회 변동 요인 점검: 육아휴직, 유연근무(재택근무 포함) 등 영유아를 둔 근로자의 근로 형태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근로 유형 변동 요인: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야간근로 등 비정형 근로자의 비중 등)
- 보육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 서비스의 변동: 유아교육계의 변화, 민간돌봄서비스 시장의 변화 등 점검

나. (8-2) 정책의 아동 행복(권리) 영향 평가 실시

보육수요, 보육서비스 선호도 등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 수요 예측과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수요 변동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수정·보완,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할 경우 궁극적 정책 수요자이며 정책의 대상자인 '아동'에게 미칠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변동으로 인해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 행복’ 또는 ‘아동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동 행복(권리) 영향 평가 실시’를 세부과제로 제안한다. ‘아동 행복(권리) 영향 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 평가 주관부서와 추진체계 결정
- 정책의 아동 행복(권리) 영향 평가 범주 및 기준 확정
- 평가 방법 결정
- 재정 소요 추계

다. 최종 제안 추진과제

<표 V-2-1>에서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추진과제로 제시한 지속과제 3건과 신규 제안한 8건의 추진과제의 비교를 통해, 제2차 계획 포함 과제의 세부과제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어 중복되는 지속-제안 과제를 표시하였다.

〈표 V-2-1〉 추진과제 중복성 비교(기존-제안)

구분	추진과제명	비고	최종 제안
기 존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제안 1과 유사	
	2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제안 2, 3이 세부과제로 포함	
	3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제안 1, 제안 4의 세부과제로 포함	
제 안	1 보육의 공공성 제고	기존 1과 유사	○
	2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기존 2 세부과제 포함	○
	3 교사 전문성 제고	기존 2 세부과제 포함	○
	4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	-	○
	5 아동 발달에 적합한 양육 지원	-	○
	6 부모 양육역량 강화 여건 조성	-	○
	7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 조성	-	○
	8 체계적 보육 서비스 설계 체계 구축	-	○

새로 제안된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교사 전문성 제고’ 과제는 기존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의 세부과제로 포함되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 해당 세부과제의 달성도는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과제명을 드러내어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새로 제안된 과제명으로 최종 제안하고자 한다.

2차 계획 내 추진과제였던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와 새로 제안된 '보육의 공공성 제고' 중에서는 새로 제안한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추진 과제명으로 최종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 '보육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 결과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일정 수준 공공서비스의 품질 담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차 계획 내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경우 세부과제 중 현 시점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람직한 유보통합 추진'은 현 정부의 우선순위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보 격차 해소'로 다소 유보된 형태로 포함시키며, '체감도 높은 양육지원 전달체계 구축'은 '보육의 공공성 제고'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한 공공성 제고에 포함시켜 제안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제2차 계획에서 지속되는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8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3.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안)

제5장의 2절에서 제안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토대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될 필요성이 높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V-3-1>과 같다.

<표 V-3-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요청(안)

추진 과제명	2차계획 내 존속 세부과제 및 추가 제안 세부과제	전문가 및 부모 요구에 근거한 세부과제	세부 과제 (일련번호)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1. 보육의 공공성 제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존속)	-	1-1	○
		· 지역 육아지원 공공 인프라 확대(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주요 서비스 제공 분소 설치 확대)	1-2	

(표 V-3-1 계속)

추진 과제명	2차계획 내 존속 세부과제 및 추가 제안 세부과제	전문가 및 부모 요구에 근거한 세부과제	세부 과제 (일련번호)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 (1-3-1) 어린이집 수급 조절 (부실어린이집 퇴출 구조) (추가)	· 공공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1-3	○
	· (1-3-2) 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컨설팅 연계, 피드백 강화)(추가)		1-4	○
2.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2-1-1) 근로환경 및 급여 개선(존속)	· 보육교사 근로복지 환경 개선(근무시간, 휴가, 유연근무, 시간외 근무수당 보장, 최저임금 이상 급여 인상)	2-1	○
	· (2-1-2) 우수인력 보육현장 유인 기반 강화(보육인력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추가)			
3. 교사 전문성 제고	· 보육인력 자격관리체계 개편(비대면 온라인 교육 양성 과정 축소, 자격갱신제 등) (추가)	· 양성·자격체계 강화(유치원 교사 수준의 강화 지향, 보육교사·보조교사 양성 체계 구분)	3-1	○
	· 보육인력 역량 지원 강화 (존속)	· 현직교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강화, 역량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교사 스트레스 관리)	3-2	○
	· (3-3-1) 부적격 교사 조기발견·관리체계 구축(추가)	· (3-3-2) 지속적 전문성 지원·관리 강화(교사 교육, 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3-3	
4. 격차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		· 보육현장의 격차 해소 기반 조성(공통보육과정 실행 기반 확보, 유·보간 우수 실행 사례 공유, 정보 공유, 유·보 공통의 장학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유·보간 시설 환경 등 격차 해소)	4-1	○
		· 가정의 양육환경 격차 해소 (발달환경 평가 수행, 양육 환경 취약가구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4-2	
5. 아동 발달에 적합한 양육 지원		· 아동발달을 고려한 지원체계 설계	5-1	
		· 장애아·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 지원 강화	5-2	

(표 V-3-1 계속)

추진 과제명	2차계획 내 존속 세부과제 및 추가 제안 세부과제	전문가 및 부모 요구에 근거한 세부과제	세부 과제 (일련번호)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6.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여건 조성		· 부모교육 의무화(보육서비스 이용, 양육수당 수령전 등)	6-1	
		· 부모 양육역량 지원체계 조성 (부모교육, 정보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확대 등)	6-2	
7.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 조성		· 안심할 수 있는 영아보육 여건 조성	7-1	
		· 맞춤형 보육 모형 개선	7-2	
8. 체계적 보육 서비스 설계 체계 구축		· 보육수요 변동 요인의 정기적 점검 및 수요 예측	8-1	
		· 정책의 아동 행복(권리) 영향 평가 실시	8-2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통계연보(2008-2015). 교육통계(각년도).
-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국민통합 이슈 모니터링(Vol.9): 가족구조의 변화와 국민통합. 국민대통합위원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이미화·배운진·윤지연(2016).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 현장적합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기현·신인철(2012). 유아교육 및 보육 경험의 장기 효과: 또래 교사관계 및 학업성취도. 한국사회학, 46(5), 259-288.
- 김길숙·문무경·이민경(201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수정(2015). 보육서비스의 트릴레마 구조와 한국 보육정책의 선택-민간의존과 비용중심의 정책. 경제와 사회, 105, 64-93.
- 김영미(2011).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정책개선의 문제인가?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인가?. 황해문화(70), 85-110.
- 김영옥·이승현·이선행(2016).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정책포럼, 246, 1-8.
- 김헌진(2012).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과 사회적 형평성-사회 정의론적 관점의 접근. 한국영유아보육학, 72, 419-445.

- 김현숙·이수진(2012). 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응용경제, 14(2), 5-30.
- 김혜민·임성환·박병식(2016).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 분석과 개선방안: 도·농, 기관유형,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8(3), 465-489.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더불어민주당(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나라를 나라답게.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 보건복지부(2008b-2016b). 보육통계(각년도).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3d-2016d). 성과관리 시행계획(각년도).
- 보건복지부(2014e-2017e).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2015c-2016c).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7a).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7b). 2017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2017c). 2017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안재진·유희정·이세일(2009).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송다영(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 한국여성학, 30(4), 119-152
- 송승민(2010). 보육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경제연구, 23(5), 2713-2731.
- 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201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김아름·박기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이규림·이민경(2016).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이영환·백혜리·이순영·최혜영·송영주·강정원·최은영(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방문면접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2016).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자료집: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여종일·엄지원(2012). 2013-2017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유해미·최효미·조아라(2014).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6). 2015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서영·정효정(2016).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와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249-271.
- 이운선·이영신·김보연(2013).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8, 189-213.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진미(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원(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혜숙·김이선·이택문·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혜선(2003). 환경변화에 따른 보육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숙·이지영(2016). 신문사설에 나타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유아교육연구, 36(6), 299-318.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2).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보도 참고자료.
-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2013).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381-405.
- 천세영·류지은·김병윤(2010). 유아교육의 공적부조 확대 필요성 및 지원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8, 205-224.
- 통계청(2017a). 인구동향조사. 전국 성/월별 출생.
- 통계청(2017b). 인구동향조사. 전국 합계출산율.
- 통계청(2017c). 장래인구추계. (전국) 장래 합계출산율.
- 통계청(2017d). (전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한국보육진흥원(2017).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통합지표) 교육자료.
- Camilli, G., Vargas, S., Ryan, S., Barnett, W. S. (2010).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Early Education Interventions on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Teachers College Record, Volume 112(3), pp.579-620.
- Heckman, J. J. (2006). Skill formation and 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disadvantaged children. Science, 312(5782), 1900-1902.
- Magnusun, Katherine A., Ruhm, Christopher, J., Waldfogel, Jane. (2004). Does Prekindergarten Improve School Preparation and Performance? NBER Working Paper No. 10452.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OECD(2014). Education at glance OECD indicators 2014.

Puma, M., Bell, S., Cook, R., Heid, C., Shapiro, G., Broene, P., ... & Ciarico, J. (2010). Head Start Impact Study. Final Report.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Schweinhart, L. J. (2003). Benefits, Costs, and Explanation of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Sylva, K., Melhuish, E., Sammons, P., Siraj-Blatchford, I., Taggart, B. and Elliot, K. (2003). "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Project: Findings from the Pre-School Period.",
<http://www.education.gov.uk/childrenandyoungpeople/earlylearningandchildcare/evidence/a0068162/effective-provision-of-preschool-education-eppe>.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central.ch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신문기사]

국제신문(2017. 7.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등급제로 변경... 아동학대 발생해도 79%인증에 학부모 불신.

중앙일보(2017. 5. 25). 내년 중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신설.

파이낸셜뉴스(2017. 5. 25). [국정기획위]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부담" 유보통합은 아직(종합).

한국정책신문(2017. 7. 16). 내년 최저임금 7530원 16.4% ↑...17년만에 최대인상률.

KTV 국민방송(2017. 10. 29).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등급제 시행.

[보도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5. 6).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0~1세)에게 양육수당 지원」
- 보건복지부(2010. 12. 30). 「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보건복지부(2011. 6. 28).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 보건복지부(2011. 7. 14). 「이제 '5세 누리과정'으로 불러주세요」
- 보건복지부(2011. 9. 5). 「'5세 누리과정' 고시」
- 보건복지부(2012. 1. 18). 「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2012. 1. 31). 「보육료·유아학비 신청하세요-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 보건복지부(2012. 6. 1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
- 보건복지부(2013. 12. 31).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마련」
- 보건복지부(2013. 2. 1).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2013. 3. 11). 「한국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 보건복지부(2015. 12. 30).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2016. 6. 30).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 통계청(2016. 12. 7).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가입 현황」

Abstract

Mid-and Long-term Developmental Plans of Childcare Policies: 2018-2022

Jeongwon, Lee Yunjin Lee, Heesue, Kim

Childcare law specifies to establish childcare plans of national level every five years. As the 「Second Mid-and Long-term childcare master plan (2013-2017)」 is headed to the end, it is time for us to establish new childcare plans for the next five years(2018-2022).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ther the data and suggest polic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ird Mid-and Long-term childcare master plan(2018-2022).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past childcare policies and gathered the opinions of the Moon government's childcare projects. Also review of child care related statistics, literature review, investigation of related academic and experts in childcare field(45 cases), public survey was done by 3000 men and women over 20s.

First, through the experts' investigation, 'continuation of low birthrate and aging', 'increase of social needs about the improvement of childcare quality', 'increase of needs about the improvement of happiness level of child', 'diversification of family structure', 'unific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reating environment for the gender equality' were the most agreed issues to be considered for the Third Mid-and Long-term childcare master plan.

Second, among the 6 projects, achievement of 'lightening the parents' burden with childcare and child rearing', 'support of customized childcare and child rearing' were rated high, however other 4 projects' achievements were rated low. Among the projects that were rated as high achievements,

Experts and parents' evaluation was low compared to the government's evaluation.

Third, the achievement of 'lightening the parents' burden with childcare and child rearing' was rated the highest however, the experts evaluated that the importance is currently low. 'Publicness of childcare and reinforcement of quality assurance', 'providing reliable childcare of fine quality', and 'improvement in financial affairs and delivery system of childcare service' were evaluated as important projects.

Fourth, when parents with infant and toddler were asked about how they feel about the childcare policies, they felt positive about the reduction of child rearing expenses. However, facility and accessibility of daycare, safety of meal service and the most of the childcare reality were rated below average. Therefore the achievement of childcare plans for the past 5 years considered low.

Fifth, the experts agreed on 'support of child's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fulfillment of nation's duty of childcare', 'improvement of fairness in child's earl-life', 'support of parent's work-family balance', 'reinforcement of parent's capability and responsibility', 'support of age appropriate nurture', 'creation of system for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are the direction that our nation's childcare policy should face. Among these, 'support of child's healthy development'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childcare policy.

Sixth, parents with infants and toddlers saw that 'nation's responsibility of childcare' is most desirable project however, saw 'free childcare regardless of family income' less desirable. Also, they saw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childcare policy is 'creating the environment that child could develop healthy'

Seventh, parents answered the support of 'childcare fee, home care allowance' is most helpful government support, next comes with providing various childcare institutions or services, expansion of community's support of childcare infrastructure, expansion of number of preschools. Supporting the expense is the most helpful support but improvement is necessary at the

same time.

Eighth, parents use childcare service for their employment, needs for surrogate rearing and to promote child's development. 'Geographical accessibility' is the key factor for choosing childcare. Even though the childcare is free of charge, parents are demanding to ease the burden of extra fee and to improve the facility and operation hours.

Based on these main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 for Korea's childcare policies for year 2018-2022 as 'vision', four 'strategies', and eight 'promoting projects' and detail projects within each promoting projects.

Childcare policy's vision contains government's philosophy expert and parents needs so that balance among child rearing and childcare could happen.

Strategy maintained with the nation's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which was emphasized in Second Mid-and Long-term childcare master plan, but newly suggested to emphasize the parent's role and support parents. Improvement of teacher's self-esteem, support of child's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were suggested.

부 록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지(1차 조사)

부록 2. 전문가 의견 조사지(2차 조사)

부록 3. 대국민 의견 조사지

부록 4. 보도자료를 통한 보육정책 동향

부록1. 전문가 의견 조사지(1차조사)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1차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7년 기본과제인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2013-2017년도 보육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우 남 희**

※ 설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4층 육아정책연구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 childcare_plan@kicce.re.kr
연구진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연구위원(02-398-7788, dian74@kicce.re.kr) 이윤진 부연구위원(02-398-7772, leeyj@kicce.re.kr) 김희수 연구원(02-398-7793, heesue@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본 전문가조사의 목적 및 내용

-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보육계획수립이 의무화됨으로써,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4년 법령 개정 후 2006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이 발표되었고, 새싹플랜 추진 중 정권 교체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보육정책 추진방향이 재설정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 마련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 본 조사는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로 수행중인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사입니다. 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종료를 앞두고, 최소한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을 이끌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수립 등 중장기 보육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는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본 전문가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조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조사: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향후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과 보육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조사: 1차 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유사한 답변들을 추려 항목별 문항을 구성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이때, 1차 조사에서 수합된 응답의 결과를 제시하여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본 조사는 1차 조사로서 ①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과 ②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에 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별도 자료로 송부하오니, 이 자료를 보육정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판단과 미래 전망을 위해 활용하시어,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2차 조사 시 결과로 제시되며, 그에 따른 2차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2차에 걸쳐 수행되는 본 조사에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본조사 이후 2차 조사까지 1차 조사의 결과 분석 기간으로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보육정책 및 현황 진단

※ 이 부분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전문가가 느끼는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우리나라 보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2~3가지 이내 답변해 주시면 그 결과를 취합하여 2차 조사에서는 항목별로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여 항목별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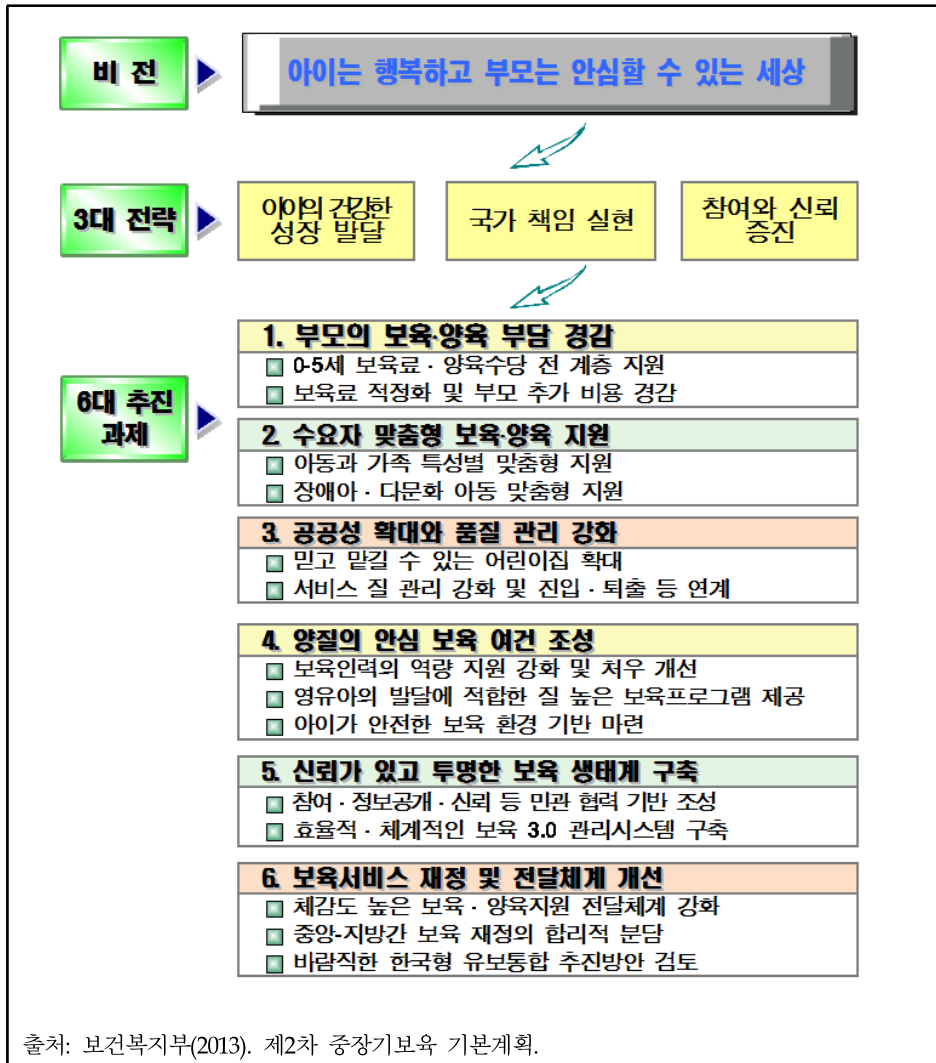
2. 새 정부가 영유아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2~3가지 이내 답변해 주시면 그 결과를 취합하여 2차 조사에서는 항목별로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여 항목별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II. 2013-2017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이 부분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 다음은 [2013-2017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체계도입니다.
 [2013-2017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전문은 별도자료로 첨부하니,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의 목표에 대비하여 보았을 때, 우리의 보육 현실의 수준을 귀하께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체감하시는지를 '추진 과제 목표 달성 정도'에 √표로 답해 주시고, 이 추진과제들의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추진 과제 목표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달성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 됨 ⑤	
(1)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①	②	③	④	⑤	
(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①	②	③	④	⑤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문3-1. 2013년부터 현재(2017년)까지 시행중인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와 관련해 달성도가 특히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과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중장기보육 계획 추진과제의 미흡성]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의 과제]

※ 2013년부터 현재(2017년)까지 시행중인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현재 귀하께서 체감하는 달성 정도를 √표하여 주시고, 이 추진 과제들의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문 4~ 문 9까지 해당)

문 4. 추진과제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목표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달성 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됨 ⑤	
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보육료 적정화	①	②	③	④	⑤	
③ 부모 추가 경비 부담 경감 (특별활동 등 어린이집 이용부모 필요경비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문4-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가 있으시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문 5. 추진과제 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우선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달성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됨 ⑤	
①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② 장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기반 마련(시설, 교사 역량 등)	①	②	③	④	⑤	
③ 다문화 보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교사 연구 등)	①	②	③	④	⑤	

문5-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가 있으시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문 6. 추진과제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우선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달성 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 됨 ⑤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③ 부모선호도·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	①	②	③	④	⑤	
④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설치·인가 기 준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⑤ 평가인증 강화	①	②	③	④	⑤	

문6-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와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가 있으시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문 7. 추진과제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우선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달 성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됨 ⑤	
① 보육인력의 역량지원 강화(진입, 근무, 퇴출 등 단계별 엄격한 자격관리 및 전문성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② 보육교사 처우 개선(근로환경 및 급여)	①	②	③	④	⑤	
③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④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문7-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가 있으시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문8: 추진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전혀달 성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 됨 ⑤	우선순위로 답변 (1~3순위)
① 건전한 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②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③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및 소통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④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효율적 정보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법 위반 의심사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조리 사전 방지 및 효과적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문8-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가 있으시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문 9: 추진과제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전혀달 성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됨 ⑤	우선순위로 답변 (1~3순위)
①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 체계 강화 (보육정보센터 개편 및 명칭 변경, 기능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②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 합리적 분담	①	②	③	④	⑤	
③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	①	②	③	④	⑤	

문9-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가 있으시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III. 보육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

10.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당시의 보육정책이 처한 환경으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의 환경,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경제성장’,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격차 확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외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다음은 지금까지 보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에 관해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 방향성과 관련한 각각의 논의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표해 주시고, 향후 추진해야할 중요성을 고려해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또한 제시된 내용 외 추가적인 목표로 제안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의 목표	동의 정도					우선순위 (1-3순위)
	전혀동 의하지 않음 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으 로 동의함 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아동 행복)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양육 방식에 대한 제검토, 기관의 물리적, 구조적 환경에 대한 고민, 부모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2. 연령에 적합한 양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	①	②	③	④	⑤	
4.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양육부담 경감으로 출산률 제고	①	②	③	④	⑤	
6. 아동간 생애 초기 경험의 형평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추가 목표 제안	(적어주세요)					

IV. 보육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쟁점

12. 향후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지향점은 어떠한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ex. 공공성 확보의 방법과 목표치 등)

13. 향후 보육과정·프로그램 관련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14.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전면 도입·시행중입니다. 향후 '맞춤형 보육'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ex. 종일반, 맞춤형 이용 시간 및 비용 지원 설계, 종일반 자격 기준, 운영 방식 등)

15.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16.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17. 지난 3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은 이원화(주관부처, 근거법률 등)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유보통합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18. 아동수당이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ex. 대상, 금액 수준, 급여 기준 등)

19. 새 정부의 보육정책 공약 중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새 정부 보육정책 공약 참고)

[참고: 문재인 정부 보육(아동) 관련 정책 공약]

12대 약속	주요 공약	보육(아동) 관련 공약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농산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7.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의료비 경감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채용하고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배치 •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을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상향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로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를 통해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자료: 더불어민주당(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발췌, 요약.

※ 귀하의 인적사항을 해당하는 곳에 √표 하거나 적어 주십시오.

연령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분야	① 학계 전문 ② 보육 담당 공무원 ③ 보육현장 전문가
해당 분야 경력	_____년 _____월
전문분야 및 전공	① 아동학, 아동가족학, 보육학 ② 유아교육학 ③ 사회학 ④ 사회복지(아동복지)학 ⑤ 행정학 ⑥ 경제학 ⑦ 기타(_____)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2. 전문가 의견 조사지(2차조사)

2018-2022 보육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2차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7년 기본과제인 「2018-2022 보육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2013-2017년도 보육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제2차 증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하며,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우 남 회**

※ 설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4층 육아정책연구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 childcare_plan@kicce.re.kr
연구진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연구위원(02-398-7788, dian74@kicce.re.kr) 이윤진 부연구위원(02-398-7772, leeyj@kicce.re.kr) 김희수 연구원(02-398-7793, heesue@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본 전문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보육계획수립이 의무화됨으로써,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4년 법령 개정 후 2006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이 발표되었고, 새싹플랜 추진 중 정권 교체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보육정책 추진방향이 재설정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 마련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 본 조사는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인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사입니다. 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종료를 앞두고, 최소한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을 이끌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수립 등 중장기 보육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는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본 전문가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며, 2차 조사의 주요 내용과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조사]

1차 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 중 유사한 답변들을 추려 항목별 문항을 구성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때, 1차 조사에서 수렴된 응답의 결과를 제시하여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1차 조사의 [IV. 보육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쟁점] 부분에 포함된 문 12~문 19의 경우 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목적이므로, 반복 조사에서 제외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제시된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1. 각 문항마다 1차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으니, 조사 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2. 1차 조사 시 귀하께서 선택하셨던 응답을 확인해 주십시오.
3. 다시 한 번 귀하의 의견을 선택해 주십시오.

[참 고]

1. 1차 조사 문항 중 '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 하였습니다.
2. 1차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을 유목화 하여 제시한 문항의 경우, 1차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순으로 추려 제시하였으며, 1~2분이 제시한 의견은 제외하였습니다.

I. 현재 보육정책 및 현황 진단

※ 이 부분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전문가가 느끼는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우리나라 보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10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개선 필요도를 우선순위로 3순위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1차 조사 응답 순위	동의도					개선 필요도 (현시점)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의 함 ⑤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1)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전체 공급 중 낮은 비중)	1	①	②	③	④	⑤	
(2)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	2	①	②	③	④	⑤	
(3) 교사 양성 경로의 다양성에 의한 전문성 저하	3	①	②	③	④	⑤	
(4)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효율성 저하와 혼란	4	①	②	③	④	⑤	
(5) 보육정책 수립에 있어 최종수혜자(아동)에 대한 고려 부족(아동발달과 권리 미 고려)	5	①	②	③	④	⑤	
(6) 보육의 책임과 기능에 대한 혼선 (보육정책의 철학 부재)	6	①	②	③	④	⑤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미흡	7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과 보육 책임에 대한 부모 책임 의식 약화와 기관 의존	8	①	②	③	④	⑤	
(9) 불안정한 보육 재정	8	①	②	③	④	⑤	
(10) 시설위주의 보육 지원체계에 의한 과도한 시설 이용(특히 영아)	8	①	②	③	④	⑤	

2. 새 정부가 영유아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10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추진필요도를 우선순위별로 3순위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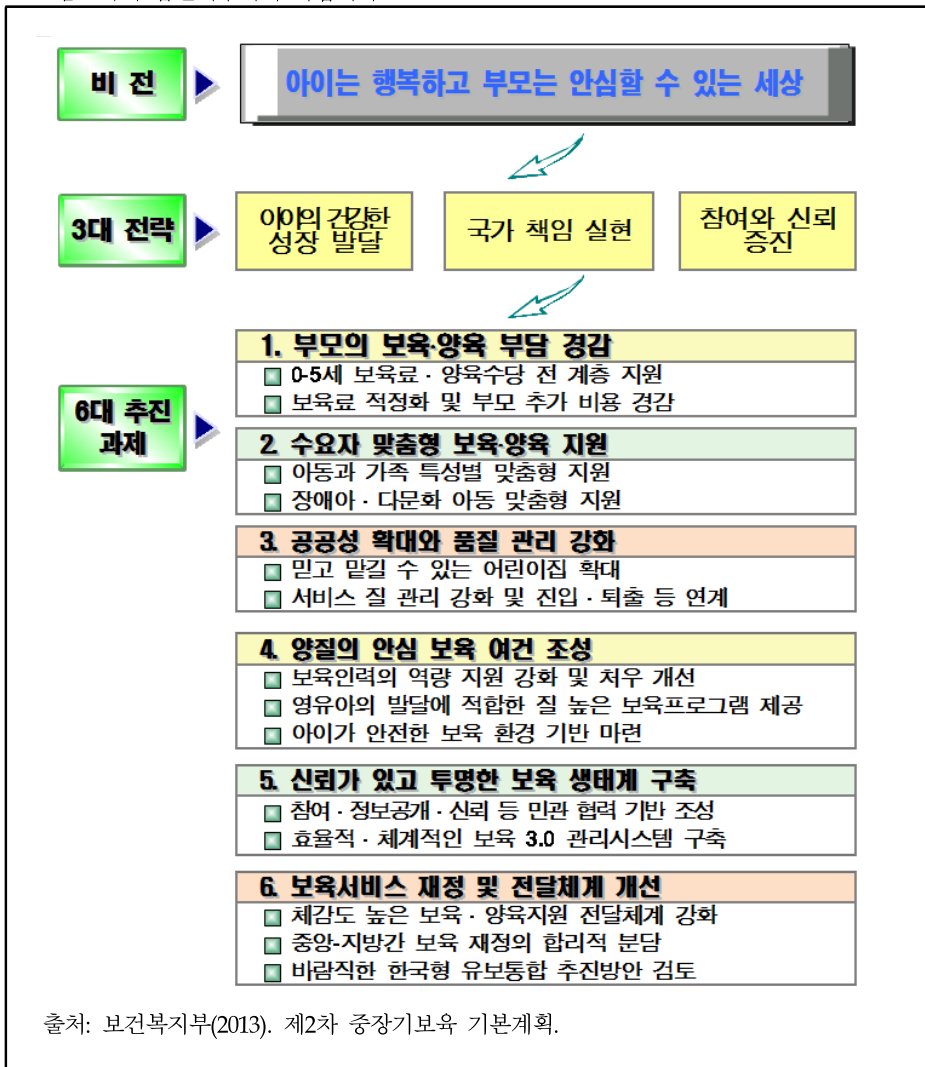
구 분	동의도					추진 필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1차 조사 응답 순위	전혀 동의하 지 않음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의 함 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	①	②	③	④	⑤	
(2)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2	①	②	③	④	⑤	
(3)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3	①	②	③	④	⑤	
(4) 안정적 가정양육환경 기반 조성	4	①	②	③	④	⑤	
(5) 유보통합 완결*	5	①	②	③	④	⑤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6	①	②	③	④	⑤	
(7) 아동 발달에 적합한 보육정책 설계	7	①	②	③	④	⑤	
(8) 보육에 대한 국가-부모 역할과 책임 조정	8	①	②	③	④	⑤	
(9) 보육제정의 안정화	8	①	②	③	④	⑤	
(10) 보육·양육지원 정책간 정합성 제고 (부처별·부처간)	10	①	②	③	④	⑤	

주: '(5) 유보통합의 완결'은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종결까지 포함함.

II. 2013-2017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이 부분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 다음은 [2013-2017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 체계도입니다. 필요하다면 1차 조사 첨부 자료로 제시한 [2013-2017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전문을 참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께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의 목표에 대비하여 보았을 때, 우리의 보육 현실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체감하시는지에 대해 ‘추진 과제 목표 달성 정도’와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3순위까지 답하여 주셨습니다. 표에 제시된 1차 조사의 응답 결과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응답 부탁드립니다.

구 분	추진 과제 목표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1차조사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귀하의 답변	전혀 달성되지 못함 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됨 ⑤	1차조사 1순위 응답 비율 (%)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1)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3.67 (.80)		①	②	③	④	⑤	13.6%	
(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3.04 (.80)		①	②	③	④	⑤	6.8%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2.76 (.96)		①	②	③	④	⑤	29.5%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2.69 (.60)		①	②	③	④	⑤	29.5%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2.71 (.66)		①	②	③	④	⑤	9.1%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2.67 (.74)		①	②	③	④	⑤	11.4%	

3-1. 지난 1차 조사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2017년)까지 시행중인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와 관련해 달성도가 특히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과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차 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조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제2차 중장기보육 계획 추진과제의 미흡성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10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각 항목의 미흡성 정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1차조사 응답 순위	미흡성 정도					개선 필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미흡하지 않음 ①	← ②	보통 ③	→ ④	매우 미흡함 ⑤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1	①	②	③	④	⑤	
(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1	①	②	③	④	⑤	
(3)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3	①	②	③	④	⑤	

(4)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만족도 제고	4	①	②	③	④	⑤	
(5) 유보통합 추진	5	①	②	③	④	⑤	
(6) 신뢰성 있는 민관협력 기반 조성	6	①	②	③	④	⑤	
(7)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7	①	②	③	④	⑤	
(8) 보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8	①	②	③	④	⑤	
(9)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추진과제	9	①	②	③	④	⑤	
(10)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10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추가되어야 할 보육정책의 과제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된 5개의 추가적인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추진 필요성은 우선순위대로 1~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보육정책 과제로서의 동의도					추진 필요도 우선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하지 않음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으 로 동의함 ⑤	
(1)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행복 육아를 위한 부모 역할 수행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보육 수요 변화(ex. 출산률 감소, 맞벌이 증가 등)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양육·보육정책간 연계와 정합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5) 보육지원의 (실질적)형평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현재 귀하께서 체감하는 달성 정도와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우선 순위별로 3순위까지 답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응답 결과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응답 부탁드립니다.
 (문 4 ~ 문 9까지 해당)

문 4. 추진과제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1차 조사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귀하의 답변	전혀달성 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 됨 ⑤	1차 조사 1순위 응답 비율 (%)	순위로 답변 13순위
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4.23 (.83)		①	②	③	④	⑤	20.0%	
② 보육료 적정화	2.91 (1.03)		①	②	③	④	⑤	57.8%	
③ 부모 추가 경비 부담 경감 (특별활동 등 어린이집 이용 부모 필요경비 부담 완화)	2.93 (1.06)		①	②	③	④	⑤	22.2%	

문4-1.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과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4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예를 들어, 제시된 항목이 매우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생각되신다면 '전적으로 동의함'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항목이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1차 조사 응답 순위	동의도					개선 필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 하지 않음①	← 보통 ② ③	→ 전적 으로 동의함 ⑤	④	⑤	
(1)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 존재	1	①	② ③	④	⑤		
(2) 보육료 지원을 기타 보육·교육 비용 전용으로 양육비 경감에 대한 체감도 저하 (ex. 보육료 지원액만큼 사교육, 특별활동 증가)	2	①	② ③	④	⑤		
(3)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양육비부담 경감 체감도 상대적으로 낮음	3	①	② ③	④	⑤		
(4) 어린이집 보육 이용 시간 전후의 양육을 위한 비용 부담 존재(ex. 파견 인력 이용 등)	4	①	② ③	④	⑤		

2)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의 기존의 세부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된 3개의 추가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중요도는 우선순위로 1~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추진 필요 과제로서의 동의도					중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 ②	보 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의 함 ⑤	
(1) 보육료 지원체제 개편(ex 소득계층, 보육수요별 차등 지원 도입, 중점보육시간과 기타 시간 분리 차등지원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2) 추가경비 지원을 포함한 무상보육 실현(ex.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배비서터 등 추가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3)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문 5. 추진과제 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1차 조사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귀하의 답변	전혀 달성 되지 못함 ①	← ②	보통 ③	→ ④	달 성 됨 ⑤	1차조사 1순위 응답 비율 (%)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①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2.82 (.97)		①	②	③	④	⑤	84.4%	
② 장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기반 마련(시설, 교사 역량 등)	2.55 (.82)		①	②	③	④	⑤	13.3%	
③ 다문화 보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교사 연구 등)	2.68 (.80)		①	②	③	④	⑤	2.2%	

문5-1.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과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4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예를 들어, 제시된 항목이 매우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생각되신다면 ‘전적으로 동의함’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항목이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1차조사 응답 순위	동의도					개선 필요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 의 함 ⑤	
(1) 장애아, 다문화 아동 보육 지원 미흡	1	①	②	③	④	⑤	

(2)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기반의 미흡 (ex.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사 교육, 연수 제공, 시설, 교재·교구 지원 등)	2	①	②	③	④	⑤	
(3)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미흡	3	①	②	③	④	⑤	
(4) 취업모(맞벌이) 가정 보육 수요 대응 미흡	4	①	②	③	④	⑤	
(5) 수요자별 보육수요의 차이 파악과 조정 미흡	5	①	②	③	④	⑤	

2)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의 기존의 세부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된 4개의 추가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중요도는 우선순위로 1~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추진필요 과제로서의 동의도					중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하 지 않음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으 로 동의함 ⑤	
(1)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기반 구축 (ex. 인력 양성·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설 구비 등)	①	②	③	④	⑤	
(2)보육·양육 수요에 맞는 지원 및 프로그램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양육 수요의 세분화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양육·보육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문 6. 추진과제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1차조사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귀하의 답변	전혀 달성 되지 못함 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 됨 ⑤	1차조사 1순위 (%)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25 (.81)		①	②	③	④	⑤	48.9%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 도 및 지원 확대	2.95 (.91)		①	②	③	④	⑤	6.7%	
③ 부모선호도·채감도 높은 어 린이집 확충 (공공형 공동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	3.00 (.86)		①	②	③	④	⑤	13.3%	
④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 한 설치·인가 기준 개선	2.91 (.80)		①	②	③	④	⑤	22.2%	
⑤ 평가인증 강화	3.23 (.89)		①	②	③	④	⑤	8.9%	

6-1.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와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5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예를 들어, 제시된 항목이 매우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생각되신다면 ‘전적으로 동의함’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항목이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1차 조사 응답 순위	동의도					전적 으로 동의 함 ⑤	개선 필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 ②	보통 ③	→ ④			
(1)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 부재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미흡	1	①	②	③	④	⑤		
(2) 민간어린이집 품질 관리 정책 미흡	2	①	②	③	④	⑤		
(3) 평가인증의 상시 질 관리 체계 기능 미흡	3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미흡	4	①	②	③	④	⑤		
(5) 공보육 개념의 혼란 존재	5	①	②	③	④	⑤		

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의 기존의 세부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된 4개의 추가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중요도는 우선순위로 1~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추진필요과제로서의 동의도					중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으로 동의함 ⑤	
(1) 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 (ex. 컨설팅 연계, 피드백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평가인증 결과와 부모 지원 연계	①	②	③	④	⑤	
(3) 공보육 시설 확충과 부실어린이집 퇴출의 수급 조절	①	②	③	④	⑤	
(4) 공공형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 체 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문 7. 추진과제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1차 조사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귀하의 답변	전혀달 성되지 못함①	← ②	보통 ③	→ ④	달 성 됨 ⑤	1차 조사 1순위 (%)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① 보육인력의 역량지원 강화(진 입, 근무, 퇴출 등 단계별 업격 한 자격관리 및 전문성 지원 강화)	2.34 (.86)		①	②	③	④	⑤	37.8%	
② 보육교사 처우 개선(근로환경 및 급여)	2.25 (.72)		①	②	③	④	⑤	57.8%	
③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질 높 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2.98 (.82)		①	②	③	④	⑤	2.2%	
④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2.95 (.81)		①	②	③	④	⑤	2.2%	

7-1.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과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6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예를 들어, 제시된 항목이 매우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전적으로 동의함’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항목이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1차 조사 응답 순위	동의도					개선 필요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의 함 ⑤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1)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가시적 성과 미흡	1	①	②	③	④	⑤	
(2)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 정비 미흡으로 전문성 제고 효과 미흡	2	①	②	③	④	⑤	
(3) 물리적 환경, 근로조건 등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심보육 여건 조성 미흡	3	①	②	③	④	⑤	
(4) 현직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노력 미흡	4	①	②	③	④	⑤	
(5) ‘안심보육’의 개념과 조성 여건에 대한 혼란으로 안심보육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총체적 대책 부재	5	①	②	③	④	⑤	
(6)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여건 조성 미흡 (보육교직원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미흡한 기준 등)	5	①	②	③	④	⑤	

2)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의 기존의 세부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된 3개의 추가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중요도는 우선순위로 1~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추진필요과제로서의 동의도					중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하지 않음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으로 동의함 ⑤	
(1) 보육인력 자격관리 체계의 개편 (ex.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한 양성 비중 축소, 국가시험제 도입, 자격갱신제도 도입 등)	①	②	③	④	⑤	
(2) 우수 인력 보육 현장 유인을 위한 기반 조성 (ex. 근로시간 단축, 유 연근무제 활용, 시간선택제 등 보육 인력의 일-가정 양립 지원, 자격 강 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3) 부적격 교사 조기발견·관리체계 구 축 (ex. 인적성 검사 의무화, 부적 절 행위 교사에 대한 징계처리절차 구축)	①	②	③	④	⑤	

문8: 추진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1차조사 평균 (표준 편차)	1차조사 귀하의 답변	전혀 달성 되지 못함 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됨 ⑤	1차조사 1순위 (%)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① 건전한 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2.64 (.75)		①	②	③	④	⑤	39.5%	
②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	3.34 (.86)		①	②	③	④	⑤	23.3%	
③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 영 참여 및 소통 기회 확대	3.11 (.72)		①	②	③	④	⑤	14.0%	

④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효율적 정보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법 위반 의심사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조리 사전 방지 및 효과적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3.02 (.79)		①	②	③	④	⑤	23.3%
--	---------------	--	---	---	---	---	---	-------

8-1.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과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6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예를 들어, 제시된 항목이 매우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전적으로 동의함’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항목이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1차조사 응답 순위	동의도					개선 필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 하지 않음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으로 동의함 ⑤	
(1)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시스템 미흡 (ex.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부족, 소극적 적용, 모니터링, 지도감독 위주의 연계)	1	①	②	③	④	⑤	
(2) 신뢰에 기반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미흡 (ex. 상호소통, 신뢰기반 부족, 정책수요자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부족)	1	①	②	③	④	⑤	
(3) 어린이집 운영 정보공개 불충분 (ex. 정보공개범위의 한정, 정확성, 공개방식의 다양성 부족)	3	①	②	③	④	⑤	
(4) 어린이집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미흡	4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사회 어린이집 지원 인프라 미흡 (ex. 시설, 프로그램, 비품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부족)	5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 경로의 중복적 지도감독으로 인한 효율적 보육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5	①	②	③	④	⑤	

2)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의 기존의 세부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된 3개의 추가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중요도는 우선순위로 1~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동의도					추진 필요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으로 동의함 ⑤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1) 부모, 지역사회 어린이집 운영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ex. 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기회 제공, 참여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①	②	③	④	⑤	
(2)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확대 기반 조성 (ex. 시설환경 개선, 열린 어린이집 및 인센티브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어린이집 정보공개 내실화 (ex. 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 부모들이 원하는 정보 제공, 정보공시의 내용 정확도 관리)	①	②	③	④	⑤	

9: 추진과제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세부추진과제

구 분	달성 정도					중요도 (현시점)			
	1차 조사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귀하의 답변	전혀 달성되지 못함 ①	← ②	보통 ③	→ ④	달성됨 ⑤	1차 조사 1순위 (%)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①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보육정보센터 개편 및 명칭 변경, 기능 확대)	3.09 (.98)		①	②	③	④	⑤	37.8	
②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 합리적 분담	2.36 (.97)		①	②	③	④	⑤	20.0	
③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	1.98 (.73)		①	②	③	④	⑤	42.2%	

9-1.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특히 문제거나 미흡하다고 여기는 점과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1)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추진의 미흡성·문제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5개의 항목을 제시하오니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개선 필요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예를 들어, 제시된 항목이 매우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전적으로 동의함’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항목이 미흡하거나 문제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1차조사 응답 순위	동의도					개선 필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의 함 ⑤	
(1) 유보통합 추진 미흡 (ex. 형식적·부분적 통합 위주로 추진)	1	①	②	③	④	⑤	
(2) 중앙-지방간 재정분담 갈등과 혼란 존재	2	①	②	③	④	⑤	
(3) 유보통합 정보 공개 및 홍보 부족으로 혼란 증가	3	①	②	③	④	⑤	
(4) 보육·양육지원의 실질적 전달체계 구축 미흡(ex.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재정 확대 미흡, 육아종 내 역할 분담 및 위계의 미확립)	4	①	②	③	④	⑤	
(5)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의 부처간, 유사 전달체계 간 연계 및 중복성 조정 미흡	5	①	②	③	④	⑤	

2)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제안

1차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기존의 세부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된 3개의 추가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를 답하여 주시고, 중요도는 우선순위로 1~3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추진필요과제로서의 동의도					중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3순위
	전혀 동의 하지 않음①	← ②	보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의함 ⑤	
(1)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ex. 보육재정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 역할 분담 명확화,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담당 계획의 실질적 추진 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2) 안정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ex. 장기적 청사진, 추진 절차와 로드맵 공개, 홍보)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양육 지원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 (ex.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다양화를 통한 확대, 인력·재정 지원 확대, 유사 기능의 전달체계(ex.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지자체 육아공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간 편차 감축)	①	②	③	④	⑤	

Ⅲ. 보육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

10.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당시의 보육정책이 처한 환경으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의 환경,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경제성장’,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격차 확대’를 고려하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이외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차 조사 결과 전문가들께서 제안하신 향후 ‘3차 계획 수립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과 2차 계획시의 배경이 된 기존의 정책 환경을 제시하오니, 동의 정도와 고려해야 할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1~5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3차 계획시 고려할 보육정책 환경		동의 정도					중요도 우선 순위로 답변 1-5순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①	← ②	보 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의함 ⑤	
기 존	1. 저출산고령화 심화	①	②	③	④	⑤	
	2.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①	②	③	④	⑤	
	3. 낮은 경제성장	①	②	③	④	⑤	
	4.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격차 확대	①	②	③	④	⑤	
1차 조 사 추 가 의 견	5.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추세	①	②	③	④	⑤	
	6. 직장·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요구 증대	①	②	③	④	⑤	
	7. 사회구성원간 소득불평등 확대, 양극화 경향심화	①	②	③	④	⑤	
	8. 가족구조의 다양화 추세	①	②	③	④	⑤	
	9.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응 요구	①	②	③	④	⑤	
	10.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보육환 경의 안전성 확보, 신뢰성 전문성 다양성 등)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양육관의 변화(ex. 영아기 기관보육 이용 에 대한 거부감 약화)	①	②	③	④	⑤	
	12.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아동행복(아동 행복과 권리 중심 접근 요구 증대)	①	②	③	④	⑤	
	13 보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무상 국가책임 형평성 안전성 등)	①	②	③	④	⑤	
	14. 보육 재정 안정성 확보 요구	①	②	③	④	⑤	
	15. 유보통합	①	②	③	④	⑤	

11. 1차 조사에서는 제시하는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 방향성과 관련한 각각의 논의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와 중요도를 3순위까지 선택 및 추가적 목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 제안된 추가적인 보육정책의 목표를 함께 제시하오니, 각가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 해주시고,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1~5순위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 추가 제시한 목표 중 일부 1차 조사에서 기재시된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의 목표(방향성)	1차조사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귀하의 답변	동의 정도					중요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 ②	보 통 ③	→ ④	전적 으로 동의 함 ⑤	1차조사 1순위 응답비율 (%)	우선 순위로 답변 1-5순위
기존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아동 행복)	4.35 (1.04)	①	②	③	④	⑤	59.1%	
	2. 연령에 적합한 양육 지원	4.23 (.95)	①	②	③	④	⑤	2.3%	
	3.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	3.60 (.98)	①	②	③	④	⑤	15.9%	
	4.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개선 등 포함)	4.19 (1.01)	①	②	③	④	⑤	9.1%	
	5. 양육부담 경감으로 출산률 제고	3.56 (1.16)	①	②	③	④	⑤	2.3%	
	6. 아동간 생애 초기 경험의 형평성 제고(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포함)	4.19 (1.07)	①	②	③	④	⑤	11.4%	
1차 조사 추가 의견	7. 부모양육역량 및 책임 강화		①	②	③	④	⑤	-	
	8. 영유아의 학교 준비도 증진		①	②	③	④	⑤	-	
	9. 교사가 행복한 보육 기반 조성		①	②	③	④	⑤	-	
	10. 다각적, 생애주기적 양육부담 경감		①	②	③	④	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3. 대국민 의견 조사지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조사 [일반 국민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부의 보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문의] 이정원 연구위원 02-398-7788, dian74@kicce.re.kr

김희수 연구원 02-398-7793, heesue@kicce.re.kr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시/도 ()시/군/구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읍면지역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삭제

I. 응답자의 일반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귀댁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input type="checkbox"/> 1) 여 <input type="checkbox"/> 2) 남
2	연령	만 ()세
3	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등학교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2~3년제 대학졸 <input type="checkbox"/> 3) 4년제 대학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 이상
		※중퇴의 경우 전단계 학력의 '졸업'으로 표기 예) 대학교 중퇴-> 1)고등학교졸에 표기
4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1) 취업중(☞문5 으로) <input type="checkbox"/> 2) 휴직중(☞문5 으로) <input type="checkbox"/> 3) 학업중(☞문6 으로) <input type="checkbox"/> 4) 미취업(☞문6 으로)
5	현재직업	<input type="checkbox"/> 1)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3) 사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 서비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5) 판매직종사자 <input type="checkbox"/> 6)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input type="checkbox"/>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input type="checkbox"/> 9) 단순노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input type="checkbox"/> 11) 무급가족종사자
6	월 평균 가구 소득	<input type="checkbox"/> 1)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100만원~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 200만원~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 300만원~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 400만원~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6) 500만원~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 600만원~7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8) 700만원~8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9) 800만원~9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900만원 이상
		※'세후' 기준,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 모두를 총합하여 응답(은행 이자 등 금융소득, 상가 임대 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7	결혼 여부	<input type="checkbox"/> 1) 기혼 <input type="checkbox"/> 2) 미혼 <input type="checkbox"/> 3) 이혼 <input type="checkbox"/> 4) 사별
7-1	자녀 유무	<input type="checkbox"/> 1) 있음 (☞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 명) (☞문7-2으로) <input type="checkbox"/> 2) 없음 (☞문8으로)
7-2	자녀 연령	막내 자녀 연령: 만()세 (출생년도_____)
8	(후속) 출산 계획	<input type="checkbox"/> 1) 있음 <input type="checkbox"/> 2) 없음

10-2. 그렇다면, 많은 어린이집 중 현재 이용중인(현재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용한)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만 답해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 ① 집에서 가까워서
 - ②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 ③ 비용이 저렴하여서(특별활동비,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 추가부담 비용)
 - ④ 운영시간이 편리하여서(길어서)
 - ⑤ 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 ⑥ 등하원의 편리성 때문에(차량운행 등)
 - ⑦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기본프로그램, 방과 후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모두 포함)
 - ⑧ 시설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 ⑨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보낼만한 다른 기관이 주변에 없음)
 - ⑩ 안전한 환경이라 생각되어서
 - ⑪ 급간식이 잘 제공되어서
 - ⑫ 주변에서 평판이 좋아서 ⑬ 기타()

10-3. 현재 이용중인(현재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만족하였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환경 ② 교사 ③ 원장 ④ 보육 프로그램
- ⑤ 특별활동/체험 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 ⑥ 접근성(가까운 위치나 교통 편의성) ⑦ 비용 부담 ⑧ 운영시간
- ⑨ 전반적인 분위기 ⑩ 운영의 안정성 ⑪ 급간식
- ⑫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0-4. 현재 이용중인(현재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운(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환경 ② 교사 ③ 원장 ④ 보육 프로그램
- ⑤ 특별활동/체험 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 ⑥ 접근성(가까운 위치나 교통 편의성) ⑦ 비용 부담 ⑧ 운영시간
- ⑨ 전반적인 분위기 ⑩ 운영의 안정성 ⑪ 급간식
- ⑫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ex.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맞춤형 보육 등)

- ① 전혀 모른다 ② 보육정책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
- ③ 보육정책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④ 보육정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Ⅲ. 다음은 보육정책 방향과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 부모)

12.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 온 현재의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여기시는 정도에 √표해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다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①	②	③	④	⑤
2)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차등 없이 제공되는 무상보육	①	②	③	④	⑤
3) 부모의 취업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보육 (맞춤형 보육, 맞벌이 부모 입소 우선순위 부여)	①	②	③	④	⑤
4) 영아(0-2세)기는 어린이집 이용보다는 가정 양육 권장	①	②	③	④	⑤

13. 해당 연령별 아동에게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이용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해 주세요. 만약 기관을 이용한다면 1일 몇 시간 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적어주세요.

연령(월령)	①가정 양육이 적절함	②기관 이용이 적절함 (☞13-1)	적당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1일)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13-1	[보기]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4시간 미만			
	③ 4시간~6시간 미만			
	④ 6시간~8시간 미만			
	⑤ 8시간~10시간 미만			
	⑥ 10시간~12시간			
⑦ 12시간 이상				
0세 (~생후12개월)	①	②		
1세(13~24개월)	①	②		
2세(15~36개월)	①	②		
3세(37~48개월)	①	②		
4세(49~60개월)	①	②		
5세 이상(61개월 이상)	①	②		

17.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맞춤형 보육: 보육료 지원 대상 중 0~2세반 이용 영아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시간 12시간(07:30~19:30)을 종일 이용하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구분, 종일반 이용 자격 조건을 제한하며 종일반과 맞춤반에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하는 체계임.

[종일반 이용 자격]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가 큰 아동

- ① 그렇다(☞ 문 17-1로) ② 아니다(☞ 문 18로)

(문17 맞춤형 보육을 알고 있는 경우)

17-1. 귀댁의 자녀 중 현재 ‘맞춤반’ 또는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현재 맞춤반 이용중)(☞ 문 17-1-1로)
② 그렇다(종일반 이용중)(☞ 문 17-1-1로)
③ 아니다(☞ 문 17-2로)

17-1-1. 현재 맞춤형 보육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문 20-1-1-1로)
② 만족스럽지 않음(☞ 문 17-1-1-1로)
③ 보통(☞ 문 17-2로)
④ 만족함(☞ 문 17-2로)
⑤ 매우 만족함 (☞ 문 17-2로)

(문17-1-1 맞춤형 보육에 불만족하는 경우)

17-1-1-1. 귀하가 ‘맞춤형 보육’에 가장 불만족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맞춤반, 종일반 이용 자격 조건의 구분
② 종일반 이용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함
③ 종일반 이용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음.
④ 종일반 이용 자격에 대한 증빙 어려움
⑤ 맞춤반, 종일반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함께 운영됨
⑥ 종일반에 대한 프로그램 미비
⑦ 맞춤반 이용 시간이 부족함(적절한 시간 1일_____ 시간)
⑧ 맞춤반 이용 시간이 너무 길(적절한 시간 1일_____ 시간)
⑨ 기타()

17-2. 맞춤형 보육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면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지 해당칸에 √표 해주세요.

개선방안		1	2	3	4	5
		전적으로 반대함	반대함	보통	찬성함	전적으로 찬성함
맞춤형 보육 유지	1) 맞춤형 이용 시간까지는 정부가 지원하고, 그 이상 이용할 경우 부모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어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①	②	③	④	⑤
	2) 맞춤형 이용과 종일반 이용 어린이집 분리 운영	①	②	③	④	⑤
맞춤형 보육 폐지	3) 맞춤형보육 폐지하고 전계층 종일반 기준으로 무상보육 제공	①	②	③	④	⑤

IV. 현재 시행중인 보육정책(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현재 이용자)

18. 다음 제시된 내용은 2013년부터 시행중인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3-2017)」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과제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님께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면서 현재의 보육현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1	2	3	4	5	6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1)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비용부담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 부담은 적당하다(특별활동비, 입학금 등 기타필요경비)	①	②	③	④	⑤	⑥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3)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장애아 보육에 적합한 시설, 설비, 특수교사 등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구 분	1	2	3	4	5	6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모르 겠다	
	5) 다문화 영유아 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 교재·교구, 교사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6)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원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취업부모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공공형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어린이집의 환경, 설비, 시설 등은 전반적으로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은 믿을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13) 보육교사는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시설, 급간식 등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17)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19)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접근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V. 새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전체 국민 대상)

19. 귀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육 공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각 보육 공약에 대한 인지 정도, 중요도에 따른 향후 추진 우선순위를 답해 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중 ‘보육정책’ 관련 공약발췌

공 약	인지여부			향후 추진 우선순위
	3 내용을 잘 알고 있음	2 들어만 봤음	1 모름	중요도 순으로 1~3순위로 응답
1) 농어촌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③	②	①	
2) 아동수당 도입	③	②	①	
3)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대(이용아동 기준 40%수준)	③	②	①	
4)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③	②	①	
5)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만12세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③	②	①	
6)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소속직원 으로 보육교사를 채용, 지역내 보육서비스 제 공 시설(어린이집) 배치	③	②	①	
7) 누리과정 예산에 국가 책임 확대	③	②	①	
8)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 시설 등 질의 균등화	③	②	①	
9)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③	②	①	
10)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③	②	①	

20. 귀하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2017. 7. 19)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전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포함된 보육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 여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표 해주세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발췌

국정과제	인지여부			중요도				
	3 내용을 잘 알고 있음	2 들어만 봤음	1 모름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별로 중요하지 않음	3 보통	4 다소 중요함	5 매우 중요함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공단)								
1)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2) 보육 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1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지원 강화)								
1)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2) '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1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2)(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21. 향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추가 납세 부담 의향과 세부 분야 개선을 위한 추가 납세 부담 의향을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구분	추가 납세 의향 (정도)				
	1 전혀 없다	2 없다	3 보통 이다	4 있다	5 많이 있다
[일반적 보육환경 개선]					
1)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충	①	②	③	④	⑤
2)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지원강화)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세부 분야]					
2)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①	②	③	④	⑤
3)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①	②	③	④	⑤
4) 양육수당 인상	①	②	③	④	⑤
5) 보육교사 처우 개선(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6)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시설 환경, 급식, 교재·교구 등)	①	②	③	④	⑤
7) 어린이집의 인적 환경 개선(보조인력 증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①	②	③	④	⑤
8)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관리, 보수교육 체계 개선 등)	①	②	③	④	⑤
9)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어린이집 이외 보육서비스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10) 보육 재정 안정화	①	②	③	④	⑤
11)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12) 가정 내 양육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13)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①	②	③	④	⑤
14) 기타(아동수당 도입)	①	②	③	④	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4. 보도자료를 통한 보육정책 동향(2004년-2017년 11월)

연도	보도일자	제목	
2004	2004-07-29	여성부,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공청회	
	2004-09-24	2005년도 영유아 보육예산 50.1% 증액	
2005	2005-09-13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늘어난다	
	2005-10-05	육아데이 240여개 직장으로 확산	
	2005-11-02	여성가족부, 표준보육과정 개발 보급	
	2005-11-04	여성가족부, “육아데이”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	
	2005-12-02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공무원 늘어난다	
	2005-12-05	정시퇴근부터 마케팅행사까지 기업, 육아데이 참여 활발	
	2005-12-12	신규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도입	
	2005-12-22	627개 보육시설 첫 평가인증	
	2005-12-22	보육유공 공무원 51명 포상	
	2006	2006-01-03	도시공원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가능
2006-01-10		보육료 지원확대 관련	
2006-01-25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브리핑]	
2006-02-01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06-02-08		민간시설 영아보육료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브리핑]	
2006-02-16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안) 공청회 개최	
2006-02-27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본격 시행	
2006-02-27		2006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2006-03-09		주공 임대아파트내 첫 국공립 보육시설 개원	
2006-04-04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결과	
2006-04-1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2006-04-18		학교설립시 국공립보육시설 함께 설치	
2006-04-21		보육행정전산화를 위한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시험운영	
2006-06-08		제 3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신청 접수	
2006-06-09		보육교사 4대 보험 가입률 크게 증가	
2006-07-28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새싹플랜 확정·발표	
2006-07-28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실시	
2006-09-06		제4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접수	
2006-09-18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선정	
2006-09-18		평가인증 본격 시행, 평가인증 인센티브 추진	
2006-11-03		보육업무 이젠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2006-11-08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단계적으로 국·공립화	
2006-12-02		올해 제1기 410개소 보육시설 평가인증 획득	
2006-12-28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77만명까지 확대	
2007		2007-01-04	“보육시설 이용 혜택이 커집니다”
		2007-01-17	평가인증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어 좋아요 ”
		2007-01-31	『24시간 보육』 아동보호 강화
		2007-02-08	평가인증 보육시설 650개소 추가

연도	보도일자	제목
	2007-02-15	어린이집에 『표준보육과정』 보급된다
	2007-02-28	어린이집 원장자격 국가가 관리한다
	2007-03-29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의무이행률 47%
	2007-04-03	제2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접수
	2007-04-06	“제2기 보육정책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2007-05-02	2006년 제3기 평가인증 결과 발표
	2007-05-04	대학내 국공립 보육시설 첫 개원
	2007-05-09	여성가족부-국방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협약식
	2007-05-15	전국 29,000여 보육시설에서 『지진대비 안전훈련』 실시
	2007-08-16	평가인증 보육시설 3천 개소 넘어서
	2007-10-02	2007년도 제4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접수
	2007-10-11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장애아 특수매트 전달식』 참석
	2007-12-03	「2007년 보육사업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
	2007-12-06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전체 40.6%
	2007-12-10	함께하는 보육 나눔의 문화 확산
	2007-12-12	“장애아 보육도우미 너무 좋아요”
	2007-12-20	동사무소가 어린이집으로 바뀐다
	2007-12-26	“어린이집 교사, 온라인 교육으로 접근성·전문성 높인다”
	2008	2008-01-15
2008-02-12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전체 40.6%
2008-12-01		2008년 전국보인대회 개최-보육유공자 정부포상 실시
2009	2009-02-11	복지부, 신한카드와 i-사랑카드 업무제휴 협약
	2009-03-02	보건복지가족부, i-사랑카드 사업 1차 시범지역 선정
	2009-04-29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아이사랑플랜 심의
	2009-04-30	5월 1일부터 i-사랑카드 (보육전자바우처) 1차 시범사업 실시
	2009-05-04	전체 영유아의 40% 어린이집 이용
	2009-07-02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늘어난다
	2009-08-31	“ 보육료,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세요.” - 9월 1일부터 i-사랑카드 (보육전자바우처) 전국 확대 -
	2009-11-18	2009년 『전국보육인 대회』 행사 개최
2010	2010-02-08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및 제2차 평가인증 시행방안 등 심의
	2010-04-26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0-05-24	2009년 795천명에게 보육료지원, 이 중 640천명은 보육료전액지원 (전년대비 48.5% 증가)
	2010-06-17	어린이집, 보육 관련 정보가 궁금할 땐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을 이용하세요 !
	2010-07-15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보육료 지원 아동도 지속적 증가 전액지원아동은 지원아동의 87.3% 달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꾸준히 증가 - 2010년 상반기 아이사랑카드 이용현황 발표-

연도	보도일자	제목
2011	2010-10-20	2010 『전국보육인 대회』 행사 개최 및 직장어린이집 방문
	2011-03-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시행
	2011-04-04	어린이집에 보육 컨설턴트가 간다! - 체계적·전문적 사후관리 「보육 컨설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준 향상 유도 -
	2011-04-21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 2010년 첫 적용한 제2차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연간 평가인증 결과 -
	2011-04-26	민간 어린이집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거듭나는 길!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1-05-0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2011-05-13	만5세 공통과정, 이름을 지어주세요
	2011-06-22	제2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 KB 컨소시엄으로 선정
	2011-06-28	‘만5세 공통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1-07-14	이제5세 누리 과정’으로 불러주세요 - 「만5세 공통과정」 명칭공모 결과 발표 -
	2011-07-29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2011-08-0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
	2011-08-08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서울 강남구가 월 23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 평택·안성시가 월 3만원으로 가장 낮아
	2011-08-12	「5세 누리과정」 제정(안) 마련 - 「5세 누리과정」 공청회 개최 -
	2011-08-29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2011-09-05	「5세 누리과정」 고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같이 배우게 돼
	2011-09-30	‘5세 누리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2011-10-06	행복한 보육, 행복한 대한민국 2011년 전국보육인대회’ 개최
	2011-11-04	어린이집 급식관리기준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2011-12-08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2011-12-21	3만 2천여명의 어린이집·유치원교사, 한자리에 모여 - 5세 담당교사 1인당 총 45시간 교육 실시 -	
2012	2012-01-02	2012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2-01-11	이젠 스마트폰으로 보육료 결제하세요!
	2012-01-18	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2012-02-27	27일 현재,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큰 혼란과 불편은 없음
	2012-03-22	부모는 더 안심, 교사는 더 보람, 아동은 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2012-04-17	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2012-05-14	보육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2012-05-18	보육 제도개선을 위한 학부모, 보육교사,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연도	보도일자	제목
	2012-06-1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
	2012-06-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07-03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시행
	2012-08-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2-08-20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정 결과 발표
2013	2013-02-01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2013-04-03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많아진다
	2013-05-0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2013-05-07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2013-05-09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3-05-28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점검 실시
	2013-05-30	복지부, 『안심』 보육 특별 대책 마련
	2016-06-14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한 눈에 확인
	2016-08-29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2013-09-04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 이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2013-10-02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2013-11-2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3-12-16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부모 동의 의무화
	2013-12-16	경기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위반 시 엄정 조치
	2013-12-3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2014	2014-05-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4-05-29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14년 보육 세부시행계획 확정
	2015-09-19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14-11-18	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2014-12-16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2015	2015-01-16	앞으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2015-01-27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2015-04-3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6-06-1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9-02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2015-09-0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5-09-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15-11-25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 발표
	2015-12-16	정진엽 장관, 내년도 보육정책 방향은 현장!
	2015-12-16	정진엽 장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 참석
2015-12-30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2016	2016-05-19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5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2016-05-31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2016-06-27	보건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불편상황 등 보육상황 현장 점검

연도	보도일자	제목
2016	2016-07-01	맞춤형 보육 시행 첫날, 복지부 장관 영유아 점심배식 참여 등 차분한 시행 현장 확인
	2016-07-15	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현장의 맞춤형 보육 정착 상황 점검
	2016-08-05	복지부 장관, 통학차량 안전 및 맞춤형 보육 현장 점검
	2016-09-19	학부모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입소거부와 퇴소요구 금지
	2016-10-04	복지부 장관,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현장 점검 실시
	2016-10-07	아이보육 걱정 뚫! '맞춤형 보육'에서 답을 찾다
	2016-10-07	맞춤형 보육 100일, 보육현장에서 정착 중
	2016-10-26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고민을 돕는다
	2016-11-21	일·가정양립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발표
	2016-11-26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2017	2017-01-10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정보, 17일부터 공개
	2017-01-17	18시 이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9,723개소) 아이사랑 포털에 공개
	2017-01-20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2017-01-31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이젠 내 손 안에서
	2017-02-05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2017-02-28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 시행
	2017-04-24	"우리 가족에게 온 마을이 되어준 시간제보육" 방문규 차관, 시간제보육 수기 공모전 수상자 간담회 개최
	2017-04-28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2017-05-0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2017-07-03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2017-09-01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2017-09-15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2017-11-23	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2017-11-16	정부, 제 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열어 아동학대 근절 의지 다져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2004-2017 보도자료. (2017. 11. 30. 기준)

연구보고 2017-08

2018-2022 보육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21-3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ChildCare *and* *Institute of*
Educ *on*

